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Comprehensive Analysis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최성민 김윤성 김용오 김국찬 강지혜 이미선
이선화 정금연 안태훈 강만원 최해인 김정훈 예산분석관
박정환 신헌태 추계세제분석관
박승호 황종률 박선우 이진희
최세중 유근식 김상미 경제분석관

지원 |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장유진 행정실무원
최보경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2.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 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I. 개 관

㉠ 2023년도 예산안 개요	3
1. 총수입·총지출	3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9
3.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10
4. 국가재정운용계획	11
5.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3
㉡ 2023년도 경제전망	15

II. 2023년도 예산안 총평

㉠ 총 평	35
1. 세출구조조정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지원강화 검토 필요	35
2. 의무지출 비중 증가문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38
3. 상임위 결산 심사결과와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43
㉡ 중점 투자분야 예산안 분석	45
1. 2023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및 12대 핵심과제	45
2. 분석의견	48
㉢ 개별 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63
1. 세출·지출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63
2. 세입·수입 예산안 조정 검토	71
3.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73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75

㉔ 국회 예산안 심의 내실화 위한 보완사항	78
1. 국유재산 현물출자 국회 사전동의제도 도입 검토 필요	78
2.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 자료 제출 필요	83

Ⅲ. 재정총괄 분석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87
2. 세입예산안 분석	113
3. 12대 분야별 분석	119
4.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241
5. 유사중복 사업 분석	275
6.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314
7.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331
8. 지출 재구조화 분석	413
9.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434
10. 202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480



I. 개 관

1. 총수입·총지출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72.4조원(13.1%),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8조원(2.8%) 증가한 625.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¹⁾은 625.9조원으로, 국세수입 400.5조원, 세외수입 25.2조원, 기금수입 200.3조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57.1조원(16.6%),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8조원(1.0%)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0.9조원(3.3%),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조원(11.1%) 감소하였다. 기금수입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2조원(8.8%)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예산안(C)	본예산 대비		제2회 추경 대비	
	본예산(A)	추경(B)		C-A	(C-A)/A	C-B	(C-B)/B
총수입	553.6	609.1	625.9	72.4	13.1	16.8	2.8
- 회계(세입)	369.5	425.0	425.7	56.2	15.2	0.7	0.2
(국세수입)	343.4	396.6	400.5	57.1	16.6	3.8	1.0
(세외수입)	26.1	28.3	25.2	△0.9	△3.3	△3.1	△11.1
- 기금(수입)	184.1	184.1	200.3	16.2	8.8	16.2	8.8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31.4조원(5.2%) 증가하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40.5조원(6.0%) 감소한 639.0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39.0조원으로, 회계 441.3조원, 기금 197.7조원으로 구성된다. 회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28.3조원(6.9%) 증가하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5조원(1.9%) 감소하였으며, 기금은 전년 당초계획 대비 3.1조원(1.6%) 증가하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수정계획 대비 32.0조원(13.9%) 감소한 규모이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총수입과 총지출은 예산·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 등)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재정총량 지표이다.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예산안(C)	본예산 대비		제2회 추경 대비	
	본예산(A)	추경(B)		C-A	(C-A)/A	C-B	(C-B)/B
총지출	607.7	679.5	639.0	31.4	5.2	△40.5	△6.0
- 회계(세출)	413.0	449.8	441.3	28.3	6.9	△8.5	△1.9
- 기금(지출)	194.6	229.7	197.7	3.1	1.6	△32.0	△13.9

자료: 기획재정부

부처별 총지출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108조 9,918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부(101조 8,442억원), 행정안전부(80조 724억원), 국토교통부(55조 8,885억원), 국방부(41조 9,186억원), 고용노동부(34조 9,923억원), 기획재정부(34조 9,724억원) 순으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부처별 총지출 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

부처명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예산		(B-A)	증감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56	931	1,002	47	4.9
대통령경호처	970	964	1,163	193	19.9
국회	7,038	6,998	7,167	128	1.8
대법원	20,262	20,203	20,816	554	2.7
헌법재판소	531	529	558	27	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726	8,706	4,073	△4,653	△53.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0	337	339	△2	△0.5
감사원	1,363	1,352	1,377	14	1.1
국가정보원	8,312	8,312	8,552	240	2.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559	6,544	6,722	163	2.5
기획재정부	296,249	309,279	349,724	53,474	18.1
교육부	896,251	1,004,954	1,018,442	122,191	1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5,602	183,629	187,952	2,350	1.3
외교부	30,053	29,366	33,206	3,153	10.5
통일부	15,023	15,013	14,521	△502	△3.3
법무부	41,746	41,628	42,286	540	1.3
국방부	397,192	387,673	419,186	21,994	5.5
행정안전부	706,649	826,685	800,724	94,076	13.3
문화체육관광부	73,968	73,920	67,076	△6,892	△9.3
농림축산식품부	168,767	168,956	172,785	4,018	2.4
산업통상자원부	111,571	109,011	107,437	△4,134	△3.7

(단위: 억원, %)

부처명	2022		2023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본예산(A)	추경예산			
보건복지부	974,767	1,014,100	1,089,918	115,152	11.8
환경부	118,529	114,415	129,023	10,494	8.9
고용노동부	365,720	383,559	349,923	△15,797	△4.3
여성가족부	14,289	14,283	15,130	841	5.9
국토교통부	607,995	592,411	558,885	△49,110	△8.1
해양수산부	63,849	61,908	63,814	△35	△0.1
중소벤처기업부	188,412	572,087	135,619	△52,793	△28.0
국가보훈처	58,752	58,737	61,593	2,841	4.8
인사혁신처	224,605	224,085	246,993	22,388	10.0
법제처	432	430	440	8	2.0
식품의약품안전처	6,640	6,606	6,694	54	0.8
국가인권위원회	393	390	407	14	3.4
방송통신위원회	508	505	493	△14	△2.8
공정거래위원회	1,575	1,570	1,579	4	0.3
금융위원회	8,002	15,567	15,239	7,237	90.4
국민권익위원회	933	928	950	17	1.8
원자력안전위원회	1,561	1,560	1,444	△117	△7.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02	500	585	83	16.6
국세청	19,330	19,219	19,256	△74	△0.4
관세청	6,141	6,116	6,383	241	3.9
조달청	2,947	2,936	2,629	△317	△10.8
통계청	3,798	3,778	3,937	139	3.7
병무청	2,730	2,720	3,518	788	28.9
방위사업청	166,813	161,263	170,082	3,269	2.0
경찰청	122,852	122,566	124,383	1,531	1.2
소방청	2,426	2,553	2,963	537	22.1
문화재청	12,014	11,839	12,935	921	7.7
농촌진흥청	11,893	11,471	12,525	632	5.3
산림청	23,903	23,790	24,471	568	2.4
특허청	5,474	5,466	5,400	△75	△1.4
질병관리청	52,202	124,206	31,352	△20,850	△39.9
기상청	4,537	4,521	4,677	140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038	4,036	1,916	△2,122	△52.5
새만금개발청	2,485	2,483	1,447	△1,038	△41.8
해양경찰청	16,857	16,829	18,206	1,349	8.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37	137	133	△5	△3.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38	137	191	53	3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0	198	177	△23	△11.6

주: 2022년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회계·기금별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가 378조 5,418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8조 3,173억원(8.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70억원 감소한 62조 7,813억원, 기금은 197조 7,189억원으로 전년 당초계획 대비 3조 784억원 (1.6%) 증가한 규모이다.

특별회계별 총지출 규모는 교통시설특별회계(14조 8,32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2조 6,55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7조 6,078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5조 7,36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5조 3,971억원) 순이고, 기금은 국민연금 기금(37조 1,206억원), 주택도시기금(33조 3,085억원), 공무원연금기금(24조 4,933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9조 2,283억원), 고용보험기금(16조 9,143억원),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9조 7,004억원) 등의 총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회계·기금별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예산		(B-A)	증감률
일반회계	3,502,245	3,881,911	3,785,418	283,173	8.1
특별회계 소계	627,983	615,924	627,813	△170	△0.0
- 교도작업특별회계	669	666	666	△3	△0.5
- 교통시설특별회계	157,904	151,483	148,320	△9,584	△6.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8,535	108,854	126,551	18,015	16.6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242	6,242	5,991	△251	△4.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079	77,478	76,078	△1,001	△1.3
- 등기특별회계	2,331	2,323	2,376	45	1.9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4,830	23,964	23,425	△1,405	△5.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4	1,407	1,436	12	0.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319	49,363	57,360	6,041	11.8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967	2,955	2,958	△8	△0.3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	38,290	34,700	△3,590	△9.4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329	1,329	1,424	95	7.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38	4,036	1,916	△2,122	△52.5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50	250	194	△56	△22.4
- 환경개선특별회계	64,228	62,581	53,971	△10,258	△16.0
- 양곡관리특별회계	22,428	21,878	23,246	818	3.6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2,534	11,324	14,383	1,849	14.8
- 우편사업특별회계	39,068	39,013	40,382	1,313	3.4
- 조달특별회계	2,947	2,936	2,629	△317	△10.8
- 경찰병원	785	784	786	1	0.1
- 국립공주병원	164	164	169	4	2.5
- 국립과천과학관	339	339	341	2	0.6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증감	
	본예산(A)	추경예산	예산안(B)	(B-A)	증감률
- 국립나주병원	218	216	220	2	1.1
- 국립마산병원	197	197	197	△0	△0.0
- 국립목포병원	124	123	260	136	110.2
- 국립부곡병원	203	202	209	5	2.7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99	598	704	105	17.5
- 국립재활원	551	549	589	38	6.9
- 국립정신건강센터	429	428	435	6	1.4
- 국립중앙과학관	333	333	339	6	1.8
- 국립춘천병원	154	153	158	5	3.1
- 특허청	5,474	5,466	5,400	△75	△1.4
기금 소계	1,946,405	2,297,189	1,977,189	30,784	1.6
- 고용보험기금	188,405	184,874	169,143	△19,263	△10.2
- 공공자금관리기금	156,875	156,875	192,283	35,408	22.6
- 공무원연금기금	222,559	222,059	244,933	22,373	10.1
- 공적자금상환기금	2	2	1	△1	△54.3
- 과학기술진흥기금	1,043	1,043	901	△142	△13.6
- 관광진흥개발기금	13,659	12,659	10,639	△3,020	△22.1
- 국민건강증진기금	34,630	34,630	36,625	1,995	5.8
- 국민연금기금	314,649	314,649	371,206	56,557	18.0
- 국민체육진흥기금	17,726	17,726	16,385	△1,341	△7.6
- 국유재산관리기금	10,372	9,263	10,531	160	1.5
- 국제교류기금	681	681	709	28	4.1
- 국제질병퇴치기금	624	624	376	△248	△39.8
- 군인복지기금	6,099	6,099	6,137	38	0.6
- 군인연금기금	36,569	36,569	38,465	1,896	5.2
- 근로복지진흥기금	2,806	2,806	2,417	△389	△13.9
- 금강수계관리기금	1,269	1,269	1,308	39	3.1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44	2,444	2,372	△72	△2.9
- 남북협력기금	12,714	12,714	12,334	△380	△3.0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294	25,292	21,879	△2,416	△9.9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006	1,006	706	△300	△29.8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3,943	23,943	27,235	3,292	13.8
- 농지관리기금	17,943	17,743	18,118	176	1.0
- 대외경제협력기금	13,844	12,815	15,585	1,741	12.6
- 문화예술진흥기금	3,880	3,880	4,064	184	4.8
- 문화재보호기금	1,477	1,477	1,598	121	8.2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437	1,437	1,787	350	24.3
- 방송통신발전기금	12,539	12,361	11,163	△1,377	△11.0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27	827	825	△2	△0.2
- 보훈기금	1,254	1,254	1,335	81	6.5
- 복권기금	46,560	46,710	49,322	2,761	5.9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증감	
	본예산(A)	추경예산	예산안(B)	(B-A)	증감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6,046	56,046	58,248	2,203	3.9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53	753	750	△3	△0.4
- 사학진흥기금	2,056	2,056	1,794	△261	△12.7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24	424	409	△15	△3.4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8,844	88,844	97,004	8,160	9.2
- 석면피해구제기금	237	237	331	94	39.7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0,292	454,555	40,976	△39,316	△49.0
- 수산발전기금	5,236	5,763	6,699	1,464	28.0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53	953	1,010	56	5.9
- 양성평등기금	5,956	5,956	6,785	829	13.9
- 언론진흥기금	213	213	204	△9	△4.2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91	891	914	23	2.5
- 영화발전기금	1,100	1,100	848	△252	△22.9
- 원자력기금	3,265	3,265	3,328	64	1.9
- 응급의료기금	2,759	2,759	2,352	△406	△14.7
- 임금채권보장기금	7,008	7,008	6,357	△652	△9.3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97	597	606	9	1.5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898	3,817	3,518	△380	△9.8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7,663	7,663	8,357	694	9.1
- 전력산업기반기금	29,079	27,234	23,563	△5,516	△19.0
- 정보통신진흥기금	17,532	17,532	13,094	△4,438	△25.3
- 주택도시기금	356,419	341,909	333,085	△23,334	△6.5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2,987	62,987	55,560	△7,428	△11.8
- 지역신문발전기금	88	88	88	△0	△0.3
- 청소년육성기금	1,493	1,493	1,533	40	2.7
- 축산발전기금	9,622	9,399	9,441	△181	△1.9
- 한강수계관리기금	5,300	5,300	5,635	336	6.3
- 기후대응기금	23,562	22,614	24,317	755	3.2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13.1조원 적자(GDP 대비 0.6%)로 전년 본예산 대비 41.0조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7.3조원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²⁾는 58.2조원 적자(GDP 대비 2.6%)로 전년 본예산 대비 35.9조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2.6조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2023 예산안(C)	본예산 대비 (C-A)	추경 대비 (C-B)
	본예산(A)	추경(B)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54.1 (△2.5)	△70.4 (△3.3)	△13.1 (△0.6)	41.0 (1.9)	57.3 (2.7)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94.1 (△4.4)	△110.8 (△5.1)	△58.2 (△2.6)	35.9 (1.8)	52.6 (2.5)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국가채무³⁾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70.4조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6.0조원 증가한 1,13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본예산 대비 0.2%p 하락하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p 상승한 49.8%로 전망되며, 국가채무 구성은 중앙정부채무 1,102.1조원, 지방정부순채무 32.6조원이다.

[2023년도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2023 예산안(C)	본예산 대비 (C-A)	추경 대비 (C-B)
	본예산(A)	추경(B)			
국가채무 (GDP 대비)	1,064.4 (50.0)	1,068.8 (49.7)	1,134.8 (49.8)	70.4 (△0.2)	66.0 (0.1)
중앙정부채무	1,031.3	1,037.7	1,102.1	70.8	64.4
국채	1,029.3	1,035.8	1,100.7	71.4	64.9
차입금	1.9	1.9	1.2	△0.7	△0.7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2	0.1	0.0
지방정부순채무	31.1	31.1	32.6	1.5	1.5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3)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금전채무를 합산한 지표인 D1을 의미한다.

3.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2023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26.6조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 일반·지방행정(111.7조원), 교육(96.1조원), 국방(57.1조원)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교육(14.2%), 일반·지방행정(13.9%), 외교·통일(7.3%), 국방(4.6%), 보건·복지·고용(4.1%), 환경(3.9%), R&D(3.0%) 등의 순으로 높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규모가 감소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0%), SOC(△10.2%), 문화·체육·관광(△6.5%) 분야가 있다.

[2023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본예산 (A)	2022 추경(B)	2023 예산안 (C)	본예산 대비		추경대비	
				C-A	(C-A)/A	C-B	(C-B)/B
총 지 출	607.7	679.5	639.0	31.4	5.2	△40.5	△6.0
1. 보건·복지·고용	217.7	229.1	226.6	8.9	4.1	△2.5	△1.1
2. 교 육	84.2	95.0	96.1	12.0	14.2	1.1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19.1	19.0	18.9	△0.2	△1.3	△0.1	△0.7
3. 문화·체육·관광	9.1	9.1	8.5	△0.6	△6.5	△0.6	△6.3
4. 환 경	11.9	11.5	12.4	0.5	3.9	0.9	7.9
5. R&D	29.8	29.5	30.7	0.9	3.0	1.2	3.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69.4	25.7	△5.6	△18.0	△43.7	△63.0
7. SOC	28.0	27.6	25.1	△2.8	△10.2	△2.5	△8.9
8. 농림·수산·식품	23.7	23.7	24.2	0.6	2.4	0.5	2.2
9. 국 방	54.6	53.1	57.1	2.5	4.6	4.0	7.6
10. 외교·통일	6.0	5.8	6.4	0.4	7.3	0.6	10.5
11. 공공질서·안전	22.3	22.2	22.9	0.5	2.4	0.6	2.9
12. 일반·지방행정	98.1	110.8	111.7	13.6	13.9	0.9	0.8
(지방교부세 제외)	33.0	33.7	36.4	3.4	10.3	2.7	7.9

자료: 기획재정부

4.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수입은 연평균 6.6% 증가하여 2026년에 715.2조원에 이르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연평균 4.6% 증가하여 2026년에 728.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2026년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13.4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0.5\%$), 관리재정수지 56.6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2.2\%$)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1,343.9조원(GDP 대비 52.2%)으로 전망된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총량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예산					
경상성장률	4.2	4.6	4.5	4.2	4.2	4.0	
총수입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6.6
(증가율)	(14.7)	(26.2)	(13.1)	(4.8)	(4.5)	(4.3)	
- 국세수입	343.4	396.6	400.5	418.8	439.2	459.9	7.6
- 세외수입	26.1	28.3	25.2	26.9	27.7	28.1	1.9
- 기금수입	184.1	184.1	200.3	210.1	218.7	227.2	5.4
총지출	607.7	679.5	639.0	669.7	699.2	728.6	4.6
(증가율)	(8.9)	(21.8)	(5.2)	(4.8)	(4.4)	(4.2)	
- 의무지출	303.2	329.7	341.8	361.8	382.5	405.1	7.5
(비중)	(49.9)	(48.5)	(53.5)	(54.0)	(54.7)	(55.6)	
- 재량지출	304.5	349.8	297.3	308.0	316.8	323.6	1.5
(비중)	(50.1)	(51.5)	(46.5)	(46.0)	(45.3)	(44.4)	
통합재정수지	$\Delta 54.1$	$\Delta 70.4$	$\Delta 13.1$	$\Delta 14.0$	$\Delta 13.7$	$\Delta 13.4$	
(GDP 대비)	($\Delta 2.5$)	($\Delta 3.3$)	($\Delta 0.6$)	($\Delta 0.6$)	($\Delta 0.6$)	($\Delta 0.5$)	
관리재정수지	$\Delta 94.1$	$\Delta 110.8$	$\Delta 58.2$	$\Delta 58.6$	$\Delta 57.4$	$\Delta 56.6$	
(GDP 대비)	($\Delta 4.4$)	($\Delta 5.1$)	($\Delta 2.6$)	($\Delta 2.5$)	($\Delta 2.3$)	($\Delta 2.2$)	
국가채무	1,064.	1,068.	1,134.	1,201.	1,271.	1,343.	
(GDP 대비)	4	8	8	2	9	9	
	(50.0)	(49.7)	(49.8)	(50.6)	(51.4)	(52.2)	

주: 2022년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023년 증가율은 2022년 본예산 대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9.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지방행정(7.7%)이고, 이어 교육(5.9%), 보건·복지·고용(5.5%), 외교·통일(4.7%), 국방(4.0%), R&D(3.7%), 공공질서·안전(3.5%) 분야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Δ 2.6%), SOC(Δ 1.8%), 문화·체육·관광(Δ 0.1%)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2022년 대비 2026년 총지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정부 총지출	607.7	639.0	669.7	699.2	728.6	4.6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238.6	254.4	269.5	5.5
2. 교육	84.2	96.1	100.3	101.7	105.9	5.9
3. 문화·체육·관광	9.1	8.5	8.7	8.9	9.1	Δ 0.1
4. 환경	11.9	12.4	12.9	13.3	13.5	3.2
5. R&D	29.8	30.7	32.0	33.2	34.4	3.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26.6	27.4	28.1	Δ 2.6
7. SOC	28.0	25.1	25.5	25.8	26.0	Δ 1.8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24.5	24.7	24.9	1.3
9. 국방	54.6	57.1	59.5	61.8	63.8	4.0
10. 외교·통일	6.0	6.4	6.7	7.0	7.2	4.7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23.8	24.7	25.6	3.5
12. 일반·지방행정	98.1	111.7	120.3	126.5	132.2	7.7

주: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9.

5.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⁴⁾에 따라 2023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의 총한도액(안)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및 예비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⁵⁾

2023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은 전년 대비 633억원(2.6%) 증가한 2조 4,987억원으로, 국가사업이 전년 대비 1,905억원(17.2%) 감소한 9,201억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이 전년 대비 2,507억원(20.7%) 증가한 1조 4,596억원, 예비한도액⁶⁾이 전년 대비 31억원(2.7%) 증가한 1,190억원이다.

[2023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A)	2023년(B)	증감(B-A)	증감률
총한도액	24,354	24,987	633	2.6
국가사업	11,106	9,201	△1,905	△17.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2,089	14,596	2,507	20.7
예비한도액	1,159	1,190	31	2.7

주: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2.9.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보면, 국가사업은 대학시설 3,597억원, 국방시설 5,315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경찰병원) 289억원으로,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완충저류시설 3,736억원, 하수관거시설 3,282억원, 교육시설 7,578억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5) BTL은 민간의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므로, 시설비·임대료에 대한 정부지급금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6) 예비한도액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 수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한도액
□ 국가사업			
① 대학시설	구 분		한도액
	국립대 기숙사	강원대	317
		전북대	447
		제주대	221
		충북대 외 1교	342
	국립대 시설개선	전북대	268
		전남대	255
		경북대	365
		부산대	254
		부경대	345
		공주대	162
		안동대	211
		한국교통대	130
	서울과기대	280	
② 국방시설	태능 교육시설(730), 장성 교육시설(480), 서화천 관사/간부숙소(463), 동화천 간부숙소(903), 부평 관사(936), 논산 관사(569), 철원 간부숙소(805), 유성 관사(429)	5,315	
③ 공공보건의료시설	경찰병원	289	
소 계		9,201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① 완충저류시설	창원시 산업단지(3,736)	3,736	
② 하수관거시설	대구(910), 의정부(1,128), 여수(1,244)	3,282	
③ 교육시설	서울 5교(1,322), 부산 3교(632), 대구 4교(413), 인천 1교(230), 광주 1교(193), 대전 2교(230), 울산 1교(517), 경기 6교(1,049), 강원 1교(220), 충북 1교(174), 충남 3교(529), 전북 2교(229), 전남 5교(578), 경북 4교(689), 경남 5교(574)	7,578	
소 계		14,596	
□ 예비한도액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1,190
합 계			24,98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2.9.

가.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 경제여건

2022년 세계경제는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모두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던 세계경제는 2022년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 등 지정학적 불안이 표면화되고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장기간 봉쇄되면서 경제성장률도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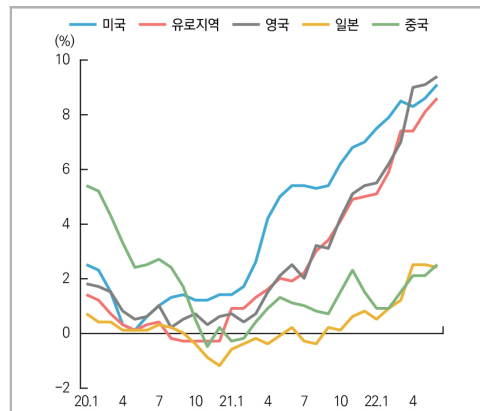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대면 서비스 수요 증대, 이에 대응한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주: 2022년 이후(음영표시)는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2.7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Bloomberg

총괄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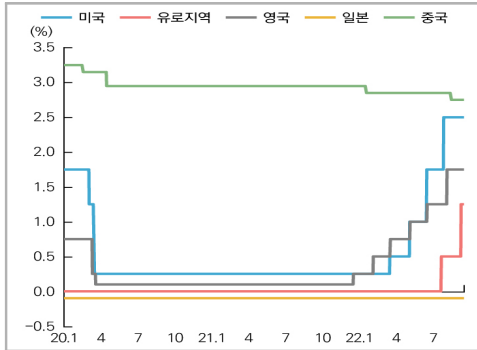
박승호 경제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70),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56),

최세중 경제분석관(sjchoi@assembly.go.kr, 6788-4679),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6788-4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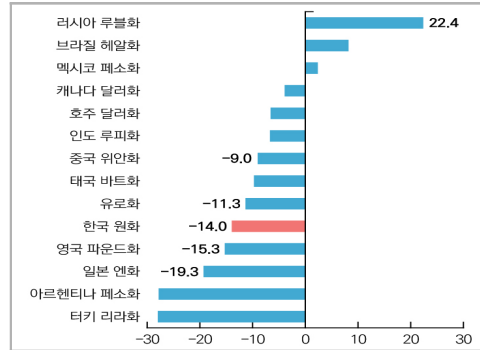
김상미 경제분석관(sangmi@assembly.go.kr, 6788-4752)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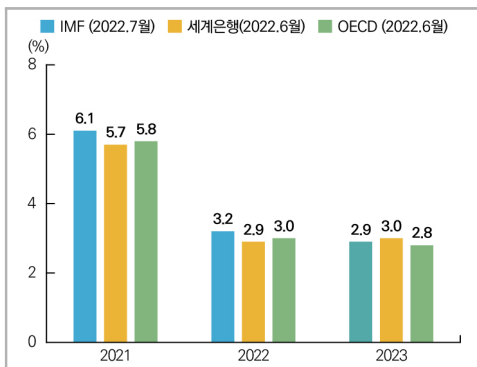
주: 2022년초 대비 절상절하율(%)

자료: Bloomberg

이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다. 긴축적 통화정책은 유동성 축소 등을 통하여 향후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가 자칫 세계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¹⁾ 한편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미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대비 크게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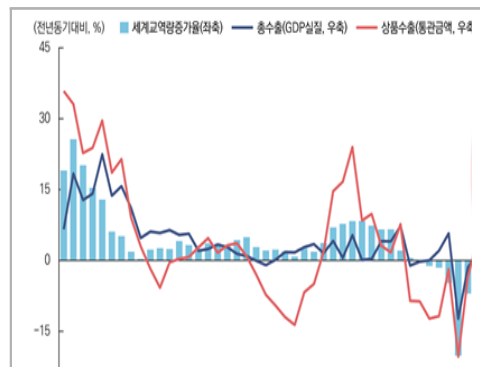
2023년 세계경제는 성장률과 세계교역량이 전년에 비해 둔화될 예정이다. 주요 국 제기구들은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9%, 세계교역량을 3.8%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세계교역량은 2021년 2/4분기(21% 증가) 이후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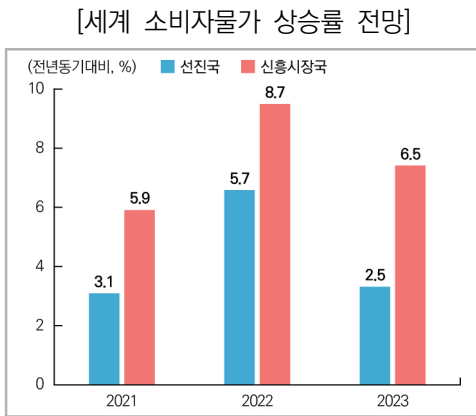
[세계 교역량과 우리나라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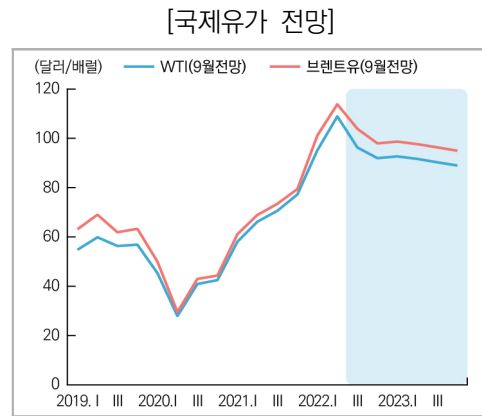
자료: CPB, 통계청, 한국은행

1) World Bank, "Is a Global Recession Imminent?" (2022.9월)

2023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2.5%, 신흥시장국 6.5%로 각각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2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곡물 등 기타원자재가격은 전년대비 8.1% 하락할 예정이다. EIA(미 에너지 정보청, 9월 기준)는 2023년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95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MF와 World Bank는 9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자료: IMF, WEO(2022.7월)



자료: EIA

경제전망의 상방 요인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해제 및 일상회복 진전, 인플레이션 위험 해소 및 통화정책 기조 중립전환 등이 있다. 경제전망의 하방 요인으로서는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 달러화 가치상승에 따른 신흥국 물가불안 심화 위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품 공급차질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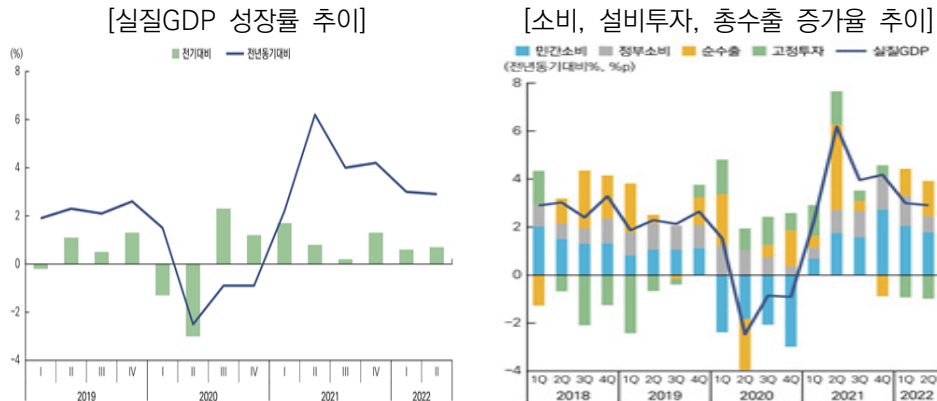
(2) 국내 경제여건

① 거시경제

2022년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민간소비는 일상회복 위주 방역정책,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상

2) IMF는 최신 전망에서 국제 원자재가격 전망치를 재차 하향조정하였다(2022.10.12일). 새로운 전망에서 IMF는 국제유가가 2023년말 90달러/배럴 선을 밑돌고, 기초급속 및 곡물류 가격의 하락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각각 -14%, -7%).

반기중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총수출(GDP 물량 기준)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모두 부진하였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제조업을 크게 앞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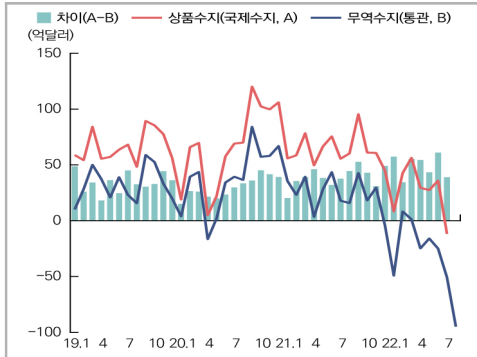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무역수지(통관기준)는 2022년 들어 큰 폭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22.1~9월중 289억달러 적자).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원자재수입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대중 무역에서 최근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무역수지와 달리 흑자를 유지하던 상품수지(국제수지)도 7월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⁴⁾ 이 밖에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를 중심으로 소폭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해외여행객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3) [NABO Focus 제49호]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향후 전망 (2022.8.17.)

4) 상품수지는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는 상품의 수출대금(가공·중개무역)도 포함한다. 가공·중개무역 금액은 무역수지에서 제외되나, 2000년 이후 비중이 빠르게 높아져 전체 교역의 4% (469억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2021년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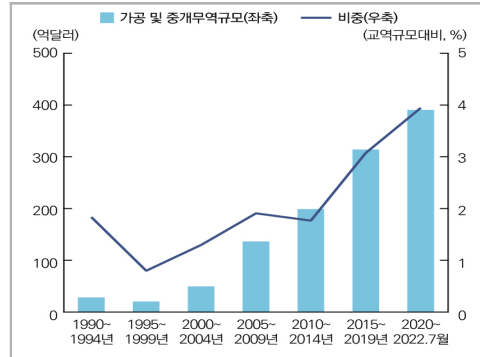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추이]



주: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무역수지(수출입 차)는 통관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가공·중개무역 규모 추정치]



주: 1. 가공·중개무역 = 상품수지 -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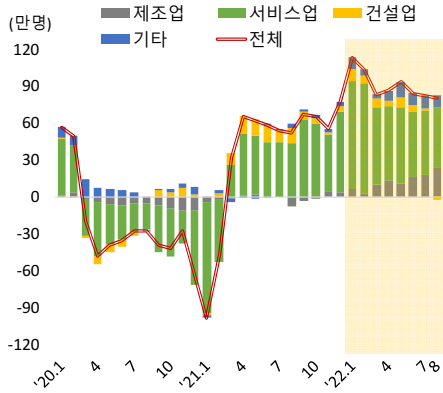
2. 교역규모 = 상품수출 + 상품수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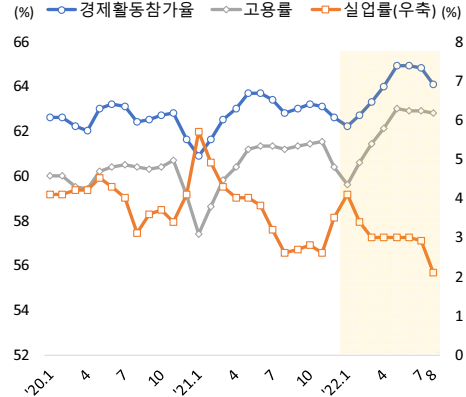
고용은 2022년 1~8월 월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91.0만명 증가하고 고용률도 1.7%p 상승한 61.9%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개선세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비대면·디지털전환 관련 업종(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과 공공비중이 높은 부문(보건·복지업, 공공행정업 등)에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를 주도하였고, 2021년까지 감소세였던 대면서비스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등)의 취업자 수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세계 경제 정상화와 교역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고, 증가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과 기타 산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났다. 2022년 1~8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3.9%로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3.1%를 나타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월별 주요 고용지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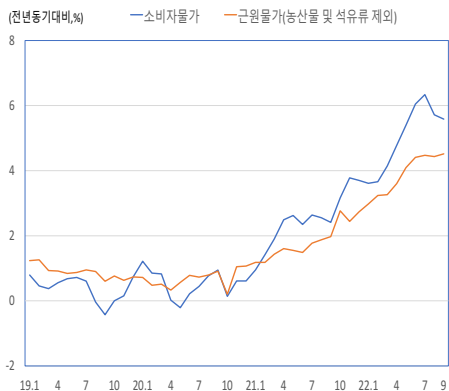
주: 1.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2022년 실측치를 나타냄

2. 기타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수도·가스공급업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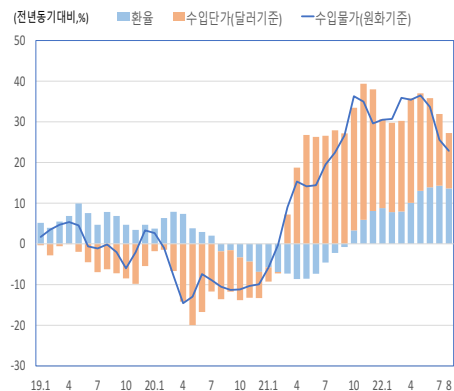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상승 등으로 상승 압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연초대비 오름세가 확대(9월 5.6%, 4.5%)되고 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수입물가⁵⁾(원화기준)를 변동요인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이 컸으나 2022년에는 9월말 환율이 전년말 대비 21.0% 상승하는 등 환율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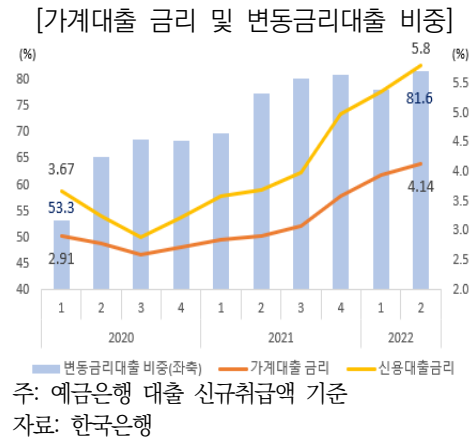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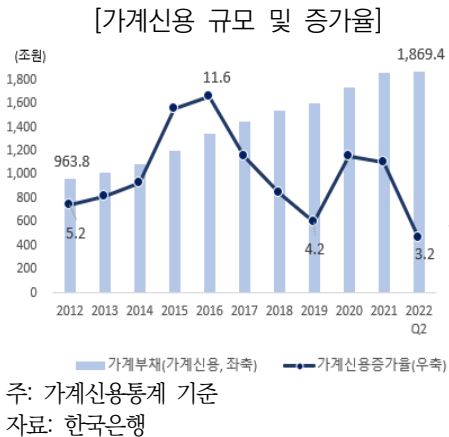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5) 수입물가는 수입단가와 환율을 곱하여 나타낼 수 있다.

② 경제주체(가계·기업)의 부채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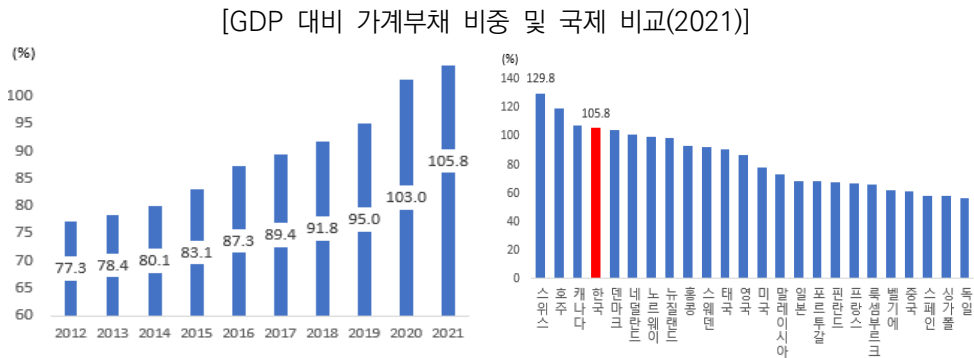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2년 2/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1,869.4조원을 기록했다.⁶⁾ 가계부채는 2019년 4.2% 증가한 이후 2020년 8.1%, 2021년 7.7% 증가하여 주택거래 증가와 더불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2년 1분기 5.4%, 2분기 3.2%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증가추세가 둔화하였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자산 가격 조정 우려 등에 기인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 2/4분기 81.6%에 달하고 있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⁷⁾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 1%에서 9월 2.5%로 1.5%p 상승한 상황이며, 한국은행은 금리 0.25%p 상승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3.3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⁸⁾



202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부채)는 105.8%로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의 가계부채를 기록한 6개국 중 하나이다.⁹⁾ 최근 5년간

-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분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여 가계부분의 부채 규모 및 변동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 최근 금리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상환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총 25조원의 규모의 공급 목표를 설정하였다.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p.19, 2022.6

(2017~2021년) 가계부채는 33.0% 증가하여 같은 기간 명목GDP 증가율(12.9%)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조사대상 43개국 중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8위였으나 2021년에는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86.4%), 미국(78.0%), 일본(68.8%), 프랑스(66.6%)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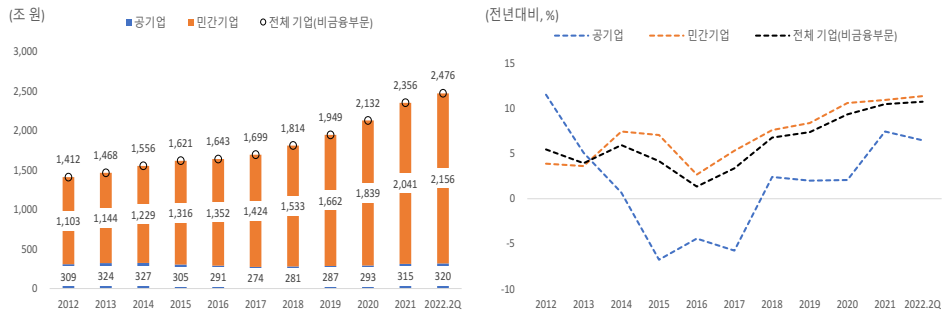
주: 가계 및 비영리 단체 부채 기준(43개국 중 상위 24개국)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기업부채는 2022년 2/4분기말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한 2,476조원을 기록했다. 기업부채는 2017년 3.4% 증가한 이후 2018년 6.8%, 2019년 7.4%, 2020년 9.4%, 2021년 10.5%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상승하고 있다. 기업부채 중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의 부채 비중이 크고, 증가세도 높은 편이다. 2022년 2/4분기말 민간기업 부채는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2,156조원이었으며, 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320조원을 기록했다.

9) 일반적으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모두 포함한 부채 규모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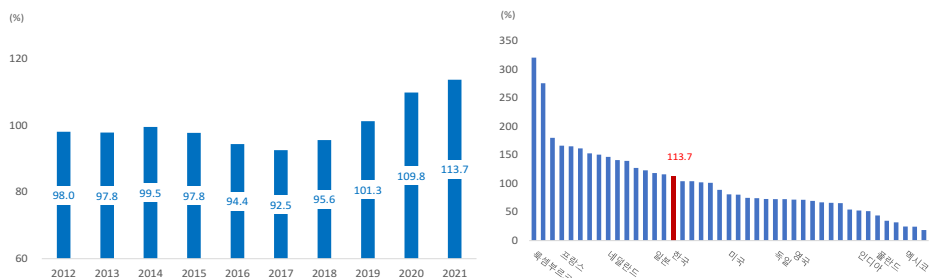
[기업부채 규모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2019년(101.3%)부터 100%를 초과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113.7%)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조사대상 43개국 평균(100.9%)을 12.8%p 상회하는 수준으로 2017년(19위)보다 3단계 상승한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중 프랑스(166.1%), 일본(118.2%) 등보다 낮은 편이지만, 미국(80.8%), 독일(72.5%), 영국(71.9%) 등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94.2%)과 신흥국 평균(110.9%)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 및 국제 비교(2021년)



자료: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나. 2023년 경제전망

202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1% 성장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득여건이 약화되면서 회복세가 둔화할 예정이다. 건설투자는 3기 신도시 착공 등에 힘입어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설비투자는 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 전환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신성장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수요 지속, 신규 콘텐츠 투자 확대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총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지겠으나, 총수입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회복 기대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3년 소폭 높아지겠으나('22년 2.0%p → '23년 2.5%p),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상당폭 하락할 예정이다('22년 +0.5%p → '23년 -0.4%p).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통화긴축, 미 달러화 초강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차질 가능성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명목GDP성장률은 4.6%로 전망하였다.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겠으나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명목GDP 성장률은 전년(4.7%)과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23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억 달러)

	2021	2022	2023
국내총생산	4.1	2.5	2.1
민간소비	3.7	3.7	2.4
설비투자	9.0	-4.9	1.2
건설투자	-1.6	-2.9	0.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3	4.4
총수출	10.8	4.6	4.1
총수입	10.1	4.2	6.1
경상수지(억달러)	883	350	320
상품수출(통관)	25.7	9.9	0.5
상품수입(통관)	31.5	18.4	1.1
취업자증감(만명)	36.9	79.5	8.6
실업률	3.7	3.0	3.4
소비자물가	2.5	5.2	3.3
국고채금리(3년)	1.4	3.0	3.0
GDP디플레이터	2.5	2.2	2.5
명목국내총생산	6.7	4.7	4.6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국고채금리는 연중 평균

2. 2022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고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보다 낮은 연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먼저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실질구매력 약화가 우려된다. 높은 금리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부채 조정 압력을 키워 소비여력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고 명목 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여건도 악화될 예정이다. 다만, 서비스 소비와 거주 자국외소비는 회복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오락·스포츠 및 문화, 음식점 및 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출입국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해외여행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 불확실성 확대, SOC 예산 축소 등으로 2023년 연간 0.4% 증가할 전망이다. 높아지는 금리는 건설사와 발주처의 자금조달 부담을 높여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정부 SOC 예산 감축(2022년 대비 약 10% 감소)은 공공부문의 신규 토목건설 수요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착공과 서비스업 업황 개선은 주거용과 상업용 건설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비투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 둔화, 친환경·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 확대 등으로 2023년 전년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안정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ESG 경영 활성화로 친환경·차세대 기술 관련 설비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 반도체 업황 악화,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계획 등은 국내 설비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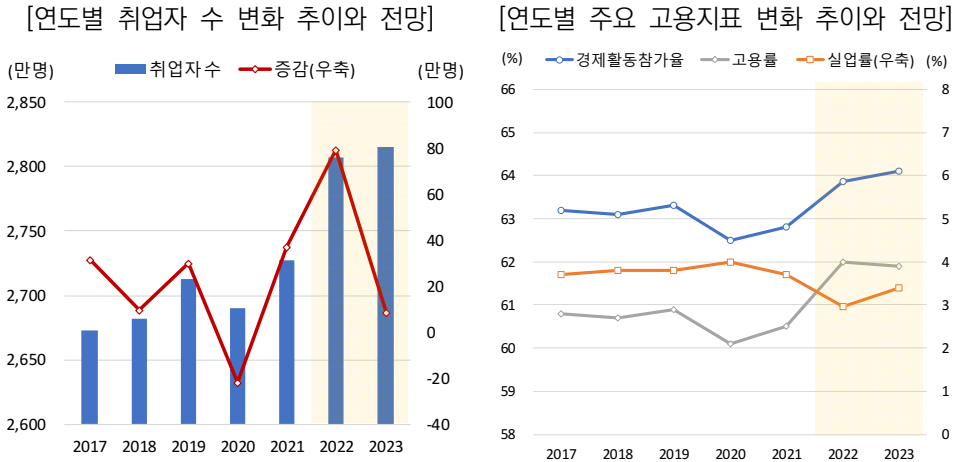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비대면 IT서비스 수요 증가, 주요 미디어 콘텐츠 공급 서비스(OTT, over-the-top) 기업들의 신규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2023년 전년대비 4.4%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통관기준)은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22년 9.9% → '23년 0.5%). 주요 국제기구들은 최근 전망에서 주요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큰 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이 둔화되고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도 약화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D램 등 반도체는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향 안정의 영향으로 단기 하락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미국은 공격적인 금리인상, 유로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2023년 320억 달러 흑자로 2022년(350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둔화로 흑자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다.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겠으나 여행수지는 해외여행객 수가 외국인 관광객 수보다 빨리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본원소득수지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투자수입(이자 및 배당)이 줄어들면서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1.7%로 2022년(2.1% 예상)에 비해 줄어들 예정이다.

2023년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8.6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취업자 수 또한 증가하지만, 증가의 규모는 2022년(79.5만명 증가 전망) 대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둔화와 국제 교역 위축, 자산시장 둔화와 금리 상승 등은 2023년 고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외국인력 도입이 2023년에 정상화된다면 고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3년 고용률은 취업자 수 증가율이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전년대비 0.1%p 하락한 61.9%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대비 0.2%p 상승할 전망이다. 2023년 실업률은 3.4%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지만,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인 3.8%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 회복세 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¹⁰⁾, 글로벌 공급망 차질

10) 2023년 원/달러 환율은 물가 상승세 둔화, 이에 따른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와 관련된 불확실성 완화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대외거래 여건 악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해소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의 요인으로 2023년 3.3% 상승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1.3%p 하락한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으로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들어 수입물가 변동요인 중 환율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2023년 중 세계경기 위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국고채금리(3년)는 글로벌 물가불안 확산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2023년 상반기에도 이어지며 2023년 연평균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물가불안, 미 연준의 양적긴축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은 2023년 국고채금리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및 물가상승세 둔화 가능성, 이에 따른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의 축소 등은 국고채 금리의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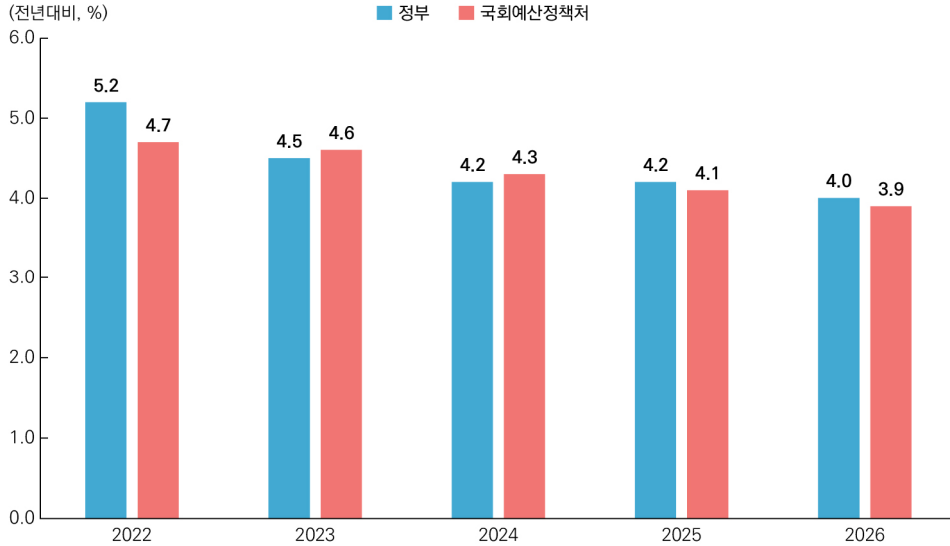
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2022년 실질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2.5%, 정부 2.6%로 정부 전망치가 0.1%p 높았으며,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2.1%, 정부 2.5%로 역시 정부가 0.4%p 높았다. 지출항목별로도 민간소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가 정부보다 낮았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는 2022년 명목GDP 성장률을 각각 4.7%와 5.2%로, 2023년은 4.6%와 4.5%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명목성장률 전망치 간 차이는 교역조건 변동 방향에 대하여 견해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22년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2023년에는 동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데 힘입어 교역조건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이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기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¹¹⁾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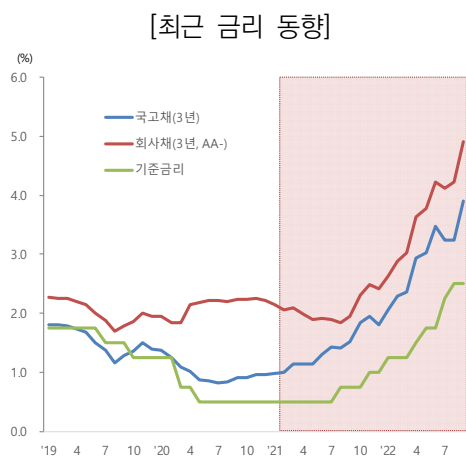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라. 시장금리가 민간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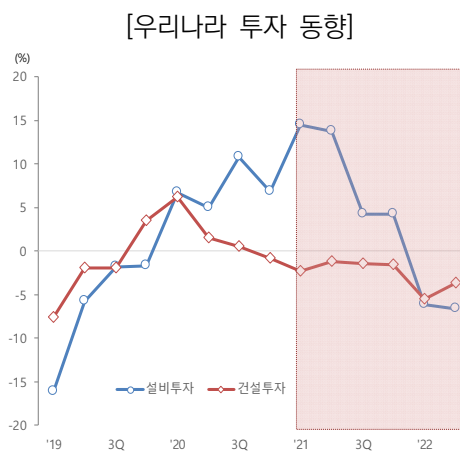
경기회복세 등으로 2021년 2.5%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 영향이 반영되며 2022년 8월 5.7%, 9월 5.6%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물가의 상승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빅스텝(0.50%p) 인상을 포함한 7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국고채금리를 포함한 시장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코로나 19 확산 이후 2020년 5월~ 2021년 7월 0.5%로 유지되었던 기준금리는 2022년 9월 2.5%로 인상되었으며, 국고채금리(3년)는 2021년 7월 1.4% 수준에서 2022년 9월 3.9%로 급등하였다. 기업 조달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회사채금리(AA-, 3년)는 2021년 7월 1.9%에서 2022년 9월 4.9%로 상승하였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2022년 들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분기, 2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6.2%, 6.6%,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5.5%, 3.7% 감소하였다.

1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 성장 및 금융 부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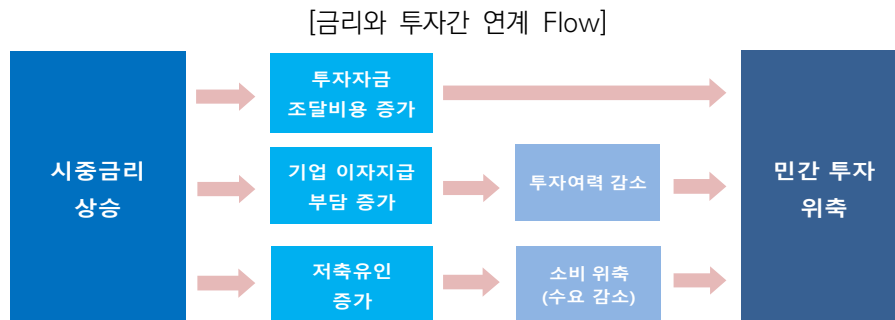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금리와 투자 간 연계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상승은 아래와 같이 소비 수요 감소, 투자의 조달비용 증가 등을 통해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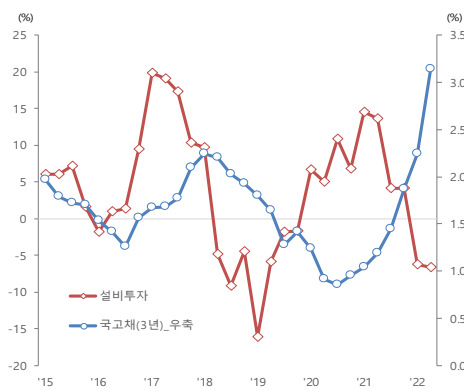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시장금리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국고채금리와 전체 투자의 약 80%를 점유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간 방향성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한 결과, 시점별 차이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상반된 패턴,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2015년 1분기~ 2022년 2분기까지 총 30분기에 대해 국고채 금리(3년)와 투자 증가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고채금리(3년)와 설비투자 증가율 간 상관관계수¹²⁾는 -0.34,

12) 두 변수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양(+)이면 두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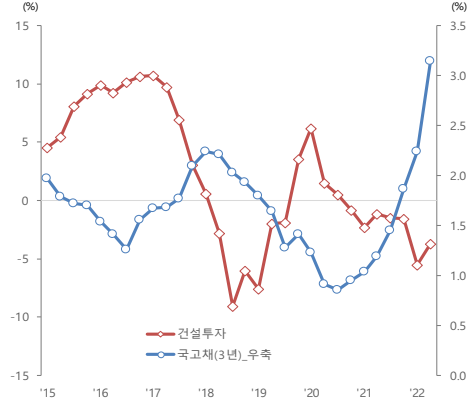
국고채금리(3년)와 건설투자 간 상관계수는 -0.24로 나타났다. 이는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투자 증가율이 하락(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우리나라 설비투자,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와 시장금리 간 연계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건설투자와 시장금리 간 연계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며 1이면 두 변수의 움직임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다. 지표의 값이 음(-)이면 두 변수의 움직임이 역방향임을 의미하며 상관계수가 -1이면 움직임이 완전히 역방향임을 의미한다.



II. 2023년도 예산안 총평

1. 세출구조조정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지원강화 검토 필요

2023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라 가계 이자부담이 증가하며 고용 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예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1% 성장할 전망이다.¹⁾ 특히 민간소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전년(3.7%)보다 낮은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지표를 보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79.5만명) 대비 크게 감소한 8.6만명에 머무르고, 실업률도 3.4%로 전년대비 0.4%p 상승할 전망이다.

2022년에 음(-)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여 2023년에 각각 전년대비 1.2%, 0.4%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리상승과 해외 경기침체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2023년에는 수출 증가율(4.1%)보다 수입 증가율(6.1%)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2년 대비 감소한 32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2022년 실질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2.5%, 정부 2.6%로 정부 전망치가 0.1%p 높았으며,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2.1%, 정부 2.5%로 역시 정부가 0.4%p 높았다. 지출항목별로도 민간소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가 정부보다 낮았다.

[2022~2023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내총생산	4.1	2.5	2.1
민간소비	3.7	3.7	2.4
설비투자	9.0	-4.9	1.2
건설투자	-1.6	-2.9	0.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3	4.4
총수출	10.8	4.6	4.1
총수입	10.1	4.2	6.1
경상수지(억달러)	883	350	320
상품수출(통관)	25.7	9.9	0.5
상품수입(통관)	31.5	18.4	1.1
취업자증감(만명)	36.9	79.5	8.6
실업률	3.7	3.0	3.4
소비자물가	2.5	5.2	3.3
국고채금리(3년)	1.4	3.0	3.0
GDP디플레이터	2.5	2.2	2.5
명목국내총생산	6.7	4.7	4.6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국고채금리는 연중 평균

2. 2022년과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이와 같이 2023년에는 민간소비·투자 위축과 순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지표가 악화될 전망이며,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증가와 고용 둔화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10년(2013~2022년) 간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2013년 489.8조원에서 2022년²⁾ 1,068.8조원으로 579.0조원(118.2%)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2.6%에서 2022년 49.7%로 17.1%p 상승하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도부터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2020~2022년) 간 국가채무가 345.6조원(47.8%) 증가하여 그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2)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013~2022년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채무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GDP대비, %)	(32.6)	(34.1)	(35.7)	(36.0)	(36.0)	(35.9)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안
				본예산	제2회 추경	
국가채무	723.2	846.6	970.7	1,064.4	1,068.8	1,134.8
(GDP대비, %)	(37.6)	(43.8)	(46.9)	(50.0)	(49.7)	(49.8)

주: 2013~2021년은 결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수요나 기존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재정소요가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채 예년과 유사하거나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집행실적 부진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사업 효과 및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로 증액된 사업,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간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의무지출 비중 증가문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2023년도 의무지출 예산 비중이 53.5%로 전년(49.9%)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고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의무지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한다.³⁾ 의무지출과 대비되는 개념인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국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교]

구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개념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3
지출발생요인	지출의무가 명시된 법률	사업추진 근거법 등
지출규모	법령에 의해 결정	국회 심의에 의해 결정
예산변경방법	해당 법률의 개정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 (생략)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023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38.6조원(12.7%) 증가한 341.8조원으로, 총지출(639.0조원)의 53.5%를 차지하고 있고 재량지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2조원(2.4%) 감소한 297.3조원으로서 총지출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총지출	607.7	639.0	31.3	5.2
의무지출	303.2	341.8	38.6	12.7
(비중)	(49.9)	(53.5)	(3.6)	-
재량지출	304.5	297.3	△7.2	△2.4
(비중)	(50.1)	(46.5)	(△3.6)	-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회계연도(2014~2023) 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추이를 보면, 의무지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 다시 증가하고 2023년도 예산안 기준으로는 53.5%까지 올라 최근 10회계연도 중 의무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

[2014~2023년도 의무지출·재량지출 구성]

(단위: 조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지출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558.0	607.7	639.0
의무지출	167.2	172.6	182.6	197.0	217.0	239.3	255.6	266.1	303.2	341.8
(총지출 대비)	(47.0)	(46.0)	(47.3)	(49.2)	(50.6)	(51.0)	(49.9)	(47.7)	(49.9)	(53.5)
재량지출	188.6	202.8	203.8	203.5	211.9	230.3	256.6	291.9	304.5	297.3
(총지출 대비)	(53.0)	(54.0)	(52.7)	(50.8)	(49.4)	(49.0)	(50.1)	(52.3)	(50.1)	(46.5)

주: 2014~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의무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4.6%를 상회하여 2026년에는 의무지출 비중이 5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6.5%,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이 5.5%, 2025년 의무지출 비중은 49.6%로 전망하였으나, 1년 사이에 의무지출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바뀌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1-'25 국가재정 운용계획	총지출	558.0	604.4	634.7	663.2	691.1	-	5.5
	- 의무지출	266.1	301.1	311.7	327.0	342.7	-	6.5
	(비중)	(47.7)	(49.8)	(49.1)	(49.3)	(49.6)	-	-
	- 재량지출	291.9	303.3	323.0	336.2	348.4	-	4.5
	(비중)	(52.3)	(50.2)	(50.9)	(50.7)	(50.4)	-	-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	총지출	-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의무지출	-	303.2	341.8	361.8	382.5	405.1	7.5
	(비중)	-	(49.9)	(53.5)	(54.0)	(54.7)	(55.6)	-
	- 재량지출	-	304.5	297.3	307.9	316.7	323.6	1.5
	(비중)	-	(50.1)	(46.5)	(46.0)	(45.3)	(44.4)	-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의무지출은 크게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 ② 지방이전재원, ③ 이자지출, ④ 기타 의무지출로 나뉘며,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7.9%, 지방이전재원 7.1%, 이자지출 13.0%, 기타 의무지출 △6.2%로, 기타 의무지출을 제외한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7.0%를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지방이전재원의 증가율이 높은 것이 전체 의무지출 증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복지분야 법정지출에서는 4대 공적연금⁴⁾(9.8%), 노인부담⁵⁾(10.5%), 국민기초생활보장⁶⁾(9.6%)의 증가율이 높고,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8.6%)와 지방교부세(7.4%)의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다.

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5)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이 포함

6)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이자지출은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6.2%이나,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지출액 증가로 2026년에는 7.6%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303,137	341,782	361,793	382,153	405,054	7.5
1. 복지분야 법정지출	139,763	154,219	164,393	177,612	189,739	7.9
○국민기초생활보장	157,269	178,803	191,025	208,297	227,259	9.6
○건강보험	115,264	119,942	120,497	127,607	135,479	4.1
○4대 공적연금	589,869	676,915	733,057	802,840	858,200	9.8
○노인부문	181,495	207,751	226,470	247,404	270,315	10.5
○아동·보육부문	56,067	52,633	50,655	49,157	48,007	△3.8
○고용·노동부문	217,328	221,349	232,958	242,726	253,979	4.0
○보훈부문	49,589	51,607	53,901	56,362	58,668	4.3
○기타	32,882	37,219	39,829	42,219	45,488	8.5
2. 지방이전재원	134,541	150,417	163,273	169,360	177,177	7.1
○지방교부세	650,560	752,883	787,304	825,641	864,603	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	772,806	809,974	865,719	906,573	8.6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47,385	43,728	40,995	-	-	-
3. 이자지출	189,082	229,130	257,705	285,255	308,753	13.0
○공공자금관리기금	156,660	192,071	222,071	250,071	273,071	14.9
○주택도시기금	12,292	13,721	10,875	9,506	9,565	△6.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9,801	11,899	11,899	11,899	11,899	5.0
○기타	10,329	11,439	12,859	13,778	14,217	8.3
4. 기타 의무지출	94,752	73,063	73,602	71,927	73,251	△6.2
○농업 공익기능증진직불	23,610	26,868	26,850	26,850	26,850	3.3
○유엔 PKO 예산분담금	1,857	2,031	2,031	2,031	2,031	2.3
○기타	69,285	44,165	44,721	43,046	44,370	△10.5

주: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지출대상 등이 결정되는 등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므로, 의무지출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향후 경기침체, 재난·재해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량지출 확대를 통한 신축적인 재정운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무지출 자원 마련을 위하여 국채발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의무지출 규모와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상임위 결산 심사결과와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임위 의결사항을 고려하여 결산 심사결과와 예산안 심의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국회 결산 심사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진행상황을 보면, 상임위원회⁷⁾는 2022년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결산 심사결과를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상정 후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나 2022년 10월 현재까지 결산 심사결과를 의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진행상황]

구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2022.8.17.~9.15. ¹⁾	2022.8.29.
소위 심사	2022.8.18.~9.6.	2022.9.15.~9.20.
의결	2022.8.19.~9.27.	미의결

주: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15일 상정 후 소위원회 심사 없이 9월 26일에 의결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다만,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① 집행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을 시정요구한 경우, ②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요구한 경우, ③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④ 관련 법령 또는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그 밖의 사유로 예산 규모 조정을 요구한 경우로 유형화 할 수 있다.⁸⁾

2023년도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편성 및 제출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상임위 결산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결산 심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결산 심사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7) 정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제외

8)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참조

결산 심의·의결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의2⁹⁾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이는 결산 심사결과를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정기회 개회 전인 8월 말까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는 경우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결산 심사결과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결산 심사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⁰⁾

9)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0) 참고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의 심의·의결을 매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2117116호)이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및 12대 핵심과제

정부는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2022.8.)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은 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②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③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에 투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을 위해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R&D 고도화’,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산업·기업 역동성 제고’,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 ‘일류 보훈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투자중점	세부과제	주요 내용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27.4→31.6조원)	- 기준중위소득 5.47%(4인가구 기준) 인상 - 특고 등 취약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사각지대 완화 - 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신설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23.2→26.6조원)	- (장애인) 장애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보장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의료비 신규 지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52→60% 이하)
	생활물가 안정 지원 (4.7→5.5조원)	- 핵심품목 비축 확대 등 주요품목 수급안정 유도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국제곡물 유통망 투자 지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11.0→12.1조원)	- 정부 직접지원(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축소, 민간일자리 연계(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지원 강화

투자중점	세부과제	주요 내용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6.0→8.0조원)	-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완화(+56만 가구),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4.7만 가구) - 지방소비세와 특별양여금 등 지방재정 1.2조원 순증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 (6.0→7.4조원)	-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도입(만 0~1세 아동) - 돌봄·고용유지·건강관리 등 지원 확대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반도체 등 미래전략 산업 집중 육성 (2.8→3.7조원)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뒷받침 위해 1조원 투자 - 원전 생태계 회복 위해 인력·R&D·인프라 등 지원 - 양자·우주 등 유망분야 혁신인재 20.3만명 양성
	R&D 고도화 (4.9→6.0조원)	- 7대 핵심전략기술과 6대 미개척 도전분야** 투자 확대 * 반도체, 5G·6G·양자,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 등 생활안전, 로봇 등 일상혁신, 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주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8.1→8.9조원)	- AI·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경제·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 지원으로 新 성장동력 확보
	산업·기업 역동성 제고 (5.0→5.6조원)	-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R&D, 공공비축 등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자동차·조선·콘텐츠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8→4.6조원)	- 민간투자 유치 벤처기업 종합지원(TIPS) 확대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온라인판로·스마트화 지원 강화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 (54.6→57.1조원)	- 한국형 3축체계*,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 증강 지원 * 장사정포 요격체계,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등 - 병 봉급 인상, 급식·주거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 (4.0→4.5조원)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위한 ODA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외교 지원 강화
	일류 보훈체계 구축 (5.9→6.2조원)	- 보상금 등 5.5%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6.9→4.5조원)	- 「사전예방(백신 구매·접종 등) → 방역대응(진단검사, 치료제 구입 등) → 사후보상(생활지원·유급휴가비 등)」 전반의 고위험군 집중 관리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 (6.3→7.3조원)	- 수해 등 재난 예보·예방·대응·복구지원체계 고도화 - 소방·군·경찰 등의 개인장비 품질개선·신속 보급 -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 변호 등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함께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총 135조원 규모의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2대 핵심과제는 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②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 ③ 생활물가 안정 지원, ④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지원, ⑤ 농산 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⑥ 반도체산업 초격자 확보 투자, ⑦ 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⑧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⑨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⑩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체계 구축, ⑪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적극적 ODA, ⑫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이다.

[2023년도 예산안 12대 핵심과제(총 135조원)]

(단위: 조원)

과제	규모	주요 내용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31.6	·소득(18.7), 주거(11.8), 일자리(1.2)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26.6	·노인(20.1), 장애인(5.8), 아동·청소년(0.2)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5.5	·수급안정(3.9), 생계비 경감(1.1) 등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지원	24.1	·자산형성(2.5), 주거(6.8), 일자리(4.3), 사회·복지(10.4)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8.0	·농산어촌 지원(5.4), 지방재정 지원(2.0) 등
반도체산업 초격자 확보 투자	1.0	·인력양성(0.4), R&D(0.4), 인프라 등(0.2)
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6.0	·7대 전략(4.5), 6대 미개척(0.4), 민간역량 활용(1.1)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3.1	·국산화R&D(2.2), 공공비축 등(0.6) 해외자원개발(0.2)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6	·중소기업(2.4), 벤처·창업(0.6), 소상공인(1.0)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체계 구축	13.1	·병 봉급 및 급식·주거여건 개선(6.9), 보훈(6.2)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적극적 ODA	4.5	·국내기업 해외진출(1.5), 개도국 협력(2.0), 국제기구 협력(1.0)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7.2	·수해 등 재난대응(5.8), 생활안전(1.1) 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가. 투자중점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1) 사회안전망 구축¹⁾

정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① ‘소득’ 측면(16.4→18.7조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등을, ② ‘고용’ 측면(1.1→1.2조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사각지대 완화(+28만명),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을, ③ ‘주거’ 측면(9.9→11.8조원)에서 취약지 거주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분석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2022년 8월 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023년 예산안 산출내역에 따른 예상 수급자 수를 초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²⁾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에서 일반수급자는 86만 1,409가구에서 2022년 114만 1,253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생계급여 예산안 산출내역에 따르면, 2023년 예상 수급자 가구를 2021년 12월 말 대비 1%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라 2022년 8월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141,253명으로 2023년 예측치 1,092,472명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2022년 8월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예산상 추계된 2023년 수급자 예상치를 이미 상회하고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감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미루어보면 예측치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II(사회안전망 구축·강화 사업 분석)」 참조

2) 과거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를 충족했어야 하나, 2017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다. 우선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이거나 노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2019년 1월부터 수급권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노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2021년 1월부터 수급권자가 노인·한부모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확대하였다.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둘째, 기존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던 개별 공공임대주택사업(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공공임대사업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정책대상을 살펴보면, 영구임대는 소득 1분위, 국민임대는 소득 2~4분위,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층이 대상으로 소득 6분위까지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각 임대주택사업을 통합하면서 정책대상을 소득 7분위까지 넓히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우선공급(60%)과 일반공급(40%)으로 나뉜다. 저소득층 등 기존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우선 공급³⁾하고 우선 공급의 대상에는 기존 영구·국민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⁴⁾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40%의 일반 공급은 중위소득 150%까지 포함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는 점에서 일부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은 보편적인 주거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에 따라 기존 영구·국민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이었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취약해질 우려가 없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이 60%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특정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⁵⁾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 임대주택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우선 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4) 철거민 등(1%), 국가유공자 등(5%),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3%), 다자녀가구 등(4%), 장애인(5%), 급여수급자(9%), 청년(보호종료아동 포함)(11%), 신혼부부(7%), 고령자(10%), 비주택 거주자 등(5%)으로 대상에 따라 공급비율을 정하고 있다.

5)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공급 내에서의 대상자별 세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유형의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우선 공급 대상자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호되는 대상과 비선호되는 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생활물가 안정 지원⁶⁾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① 핵심품목 비축 확대 등 주요품목 수급안정 유도(3.5→3.9조원), ②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및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을 통한 필수생계비 경감(0.8→1.1조원), ③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국제곡물 유통망 투자 지원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0.4→0.6조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분석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품목 수급·가격안정과 관련하여, 밀·콩 등 농산물 수매 비축사업이 「공공비축 시행계획」 대비 수매실적이 저조하고, 국내 생산량 대비 수매량과, 수요량 대비 방출량 비중이 낮아 사업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수매 비축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매년 「공공비축 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수립하고 식량작물 비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공공비축 시행계획」 대비 수매실적을 보면, 콩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 대비 실적이 20.0%에 불과하고, 특히 2020년에는 매입계획(6만톤)의 0.9%인 557톤만을 수매하였다.

밀은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안보상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2014년부터 공공 비축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포함된 2019~2021년 기간 중 누적 시행계획(1만 3,300톤) 대비 수매실적은 1만 1,054톤(83.1%)이다.⁷⁾

한편, 공공비축제도(국내 수매비축)의 목적은 수확기에 생산농가로부터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거나 부족한 양곡을 수입하여 비축하였다가 이를 다시 소비자와 수요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나, 국내 생산량 대비 수매량의 비중 및 수요량 대비 방출량의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비축효과가 높지 못한 측면이 있다.

6)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생활안정 물가 지원)」 참조

7)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 시행계획 대비 수매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국산콩 비축 계획량을 지속 확대 중이나 실제 콩 수매량은 콩 작황과 시장 수급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향후 수매비축, 두류계약재배사업, 시설장비 지원 등 국산콩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국산콩 생산소비를 증대시키고, 이에 맞추어 수매비축량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콩은 2014~2020년 기간 중 국내 생산량은 총 67만 9,539톤이었으나 수매량은 5만 1,542톤으로 비중은 7.6%에 그쳤고, 같은 기간 중 (식용) 수요량은 50만 3,000톤이었으나 방출량은 4만 3,167톤으로 비중은 8.6%에 불과하다. 밀은 2014~2020년 기간 중 국내 생산량은 총 2만 7,466톤이었으나 수매량은 1만 1,054톤이었으며, 같은 기간 중 (식용) 수요량은 107만 4,000톤이었으나 방출량은 1,057톤으로 비중이 0.1%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콩과 밀 등 농산물 수매비축은 그동안 「공공비축 시행계획」 대비 수매 실적이 저조하였고 국내 생산량 대비 수매량과, 수요량 대비 방출량의 비중이 낮아 수매 비축의 효과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품목별 수매실적 추이와 재정여건 등을 면밀하게 살펴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가격안정을 위한 적정물량 비축과 방출 등을 통해 수매 비축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필수생계비 경감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배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의 유통경로는 대형마트, 민간 온라인쇼핑몰, 중소유통경로(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등)으로, 사용처별 비중을 보면, 2022년 기준 농산물은 대형마트(51.7%)가 가장 높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36.3%), 민간온라인몰(12%)의 순이며, 수산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49.0%)로 가장 높고 대형마트(37.2%), 민간온라인몰(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대형마트 및 민간온라인몰의 비중이 줄어들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긴 하나, 여전히 중소유통경로의 비중이 50%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당시 코로나19에 따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소비촉진 목적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쿠폰 배분이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유통경로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정책목적과 상반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경로에서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중소유통경로의 물량확대를 시정요구(제도개선)한 바 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나, 대형

마트, 민간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중소기업경로 등 사용처별 비중에 관한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의 도입목적과 국회 시정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등 중소기업경로에 대한 배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일자리 창출⁸⁾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직접지원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은 축소하고, 민간일자리 연계(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분석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직접일자리·고용장려금 예산 비중을 감소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비중을 증가할 계획이나,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고용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액(31조 5,809억원→30조 340억원)되었고, 유형별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인 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이 증액된 반면,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 규모가 컸던 직접일자리·고용장려금 유형은 감액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 예산’에서 ‘미래 대비 직접투자’ 방향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⁹⁾

2022년 8월 말 기준 고용률 62.8%, 실업률 2.1%로 양호한 고용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나 2020~2021년 대비 위기상황이 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예산안 편성방향이 ‘직접지원 일자리 확대’에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재편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직접일자리 유형은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층, 청

8)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II(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참조

9) 최근 5년 간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배분 추이를 보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보다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일자리사업 예산안의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훈련·창업지원 유형은 예산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은 2022년도 대비 일부 감액되었으나,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비중이 상승하여 2023년도 예산안 대비 44.7%를 차지하고 있다.

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온다는 점에서 고용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2023년도 직접일자리 유형의 지원 목표인원이 전년 대비 4.5% 감소(102.9만명→98.3만명)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효과가 저하될 우려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유형은 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 창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직자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실제 구직자의 민간 일자리로 매칭 및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흐름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의무지출) 유형의 예산액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9년 37.3%→2023년 44.7%), 구직급여 지출규모도 급격하게 확대(2018년 6.5조→2021년 12조)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투자중점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1)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¹⁰⁾

정부는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①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려는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고(0.65→1.01조원), ②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인력·R&D·인프라 등을 지원하며(0.54→0.67조원), ③ 양자·우주 등 유망분야 혁신 인재 20.3만명 양성(1.6→2.0조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분석의견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여러 부처의 다수 사업에서 동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교육내용 및 대상의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보다 일원화된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규사업인 인공지능반도체고

10)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사업 분석)」 참조

급인재양성 사업, 기존사업인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양성,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사업에서 교육내용 및 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설계 분야 인력 양성 사업에서는 교육부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통해 학부생에 대한 반도체 교육과정 전반을 지원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반도체설계구현인재양성 사업을 별도 추진 시 지원대상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간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직자 및 취업자 대상 단기인력양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다수 인력양성 사업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교육 내용 및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¹⁾

(2)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¹²⁾

정부는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① AI·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구현(0.3→0.4조원)하고, ② 경제·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지원(7.8→8.5조원)으로 新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관련 주요 분석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사업의 로드맵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사업범위·방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복·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다양하고 과제별로 복수의 부처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11)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 시스템반도체설계실무인력양성 사업, 반도체 아카데미구축 사업은 교육대상이 재직자 및 취업준비자로 유사하고,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이 공정·설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성대상에서의 유사성도 존재한다. 또한,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및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 간의 교육범위 상에서도 소부장(제조) 및 패키징(후공정) 분야에서의 중복 우려가 존재한다.

12)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안 분석)」 참조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2년 9월 2일에 출범하여, 2023년도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편성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계획은 2023년 1분기 내 수립될 예정으로, 2022년 9월말 기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목표·방향성과 그에 따른 실천과제에 관한 정보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상위계획의 부재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 및 사업범위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¹³⁾¹⁴⁾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명확한 목표나 방향성 없이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수행될 우려가 있으며,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이 편성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각 부처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등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범위를 확정하여 사업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중 일부 사업은 보안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보안성 확보를 위한 국가정보원과의 협의 및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므로, 보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책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세부내역인 Any-ID 구축사업을 예로 들면, Any-ID가 도입되는 경우 다수의 민간 플랫폼 ID를

13)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총 규모를 0.4조원으로 발표하고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상위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그 사업범위 및 예산규모를 판단한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 사업 주무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4) 2022년 10월초 기준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사업의 주요 추진주체 중 하나임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으로 분류되는 주요 사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지는데, 해당 플랫폼의 보안성은 각각의 민간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 이용자 ID의 해킹, 피싱사이트를 통한 정보유출 등과 같은 정보침해와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상 취약점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통해 별도의 보안성 검증을 수행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향후 보안성 문제 등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레이크 운영사업은 민간 클라우드에 기존 데이터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레이크를 만들고 이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이관하고 축적하기 위하여 기존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과정과 민간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축적·개방하는 과정에서 보안성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 이관·축적 등의 과정에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민간클라우드 저장여부 및 위치를 정하고, 비식별화를 통해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며, 데이터 이관 등의 과정에서 보안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관하는 기관과 함께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2022년 9월말 기준 2023년도에 데이터 이관 대상이 되는 사업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각 데이터별 이관·저장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데이터레이크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국가정보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데이터레이크 운영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성 확보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중 보안성 우려가 존재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절차 등을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산업·기업 역동성 제고: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¹⁵⁾

정부는 산업·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①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R&D, 공공비축 등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하고(2.7→3.2조원), ② 기업들의 수출·투자여건을 개선하며(1.1→1.1조원), ③ 자동차·조선·콘텐츠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1.2→1.4조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관련 주요 분석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산화 R&D사업 중 소재부품기술개발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충분한 성과검증 없이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성과검증과 연계한 점진적인 R&D 예산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추경예산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된 이후 매년 대규모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¹⁶⁾ 2019년 이후 매년 많은 규모의 신규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 일몰대상 계속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재조사 등의 조치 없이 신규과제를 지원하고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9년 이후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성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신규과제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서는 1년 안에 20개 핵심품목, 5년 안에 80개 핵심품목의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2019년 이후 집중적인 R&D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 일부 품목에서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 성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발생 성과¹⁷⁾를 기준으로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 사업화 성과가 발생한 품목은 25개이며, 사업화 매출액은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아직 상당수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이후 선정된 R&D 과제가 현재 대규모로 수행 중이며, 예산 증액에 따른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과제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성과 검증과 연계하여 보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

15)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사업 분석)」 참조

16) 내역사업 중 2020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추진된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내역사업의 예산은 2019년 2,910억원에서 2023년 9,37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17)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2021년 발생 사업화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9월 현재 검증중이기 때문에 2020년 발생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비축과 관련하여, 희소금속을 포함한 광물 비축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비축계획에 따라 연차별 비축대상 및 물량 등의 비축목표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비축대상 광물은 크게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으로 구분되며,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달청은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비축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비축하고 있다.¹⁸⁾ 그리고 2023년에는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2021.8.)¹⁹⁾이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²⁰⁾에서 제시한 핵심품목 중심으로 비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비철금속은 국내 수요 및 비축재고량에 따라 연차별 비축대상과 목표가 정해져 있다. 반면, 희소금속은 대한 연차별 비축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및 2023년 예산안에서는 단기 수급불안을 고려하여 비축 대상 희소금속이 결정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은 대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화텅스텐과 마그네슘합금, 2023년 예산안은 이차전지와 연계하여 수급안정이 필요한 코발트를 비축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에 시행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²¹⁾에 대한 對한국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 및 자립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정부의 관리대상은 소재·부품·장비에서 희소금속 등 원재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희소금속 비축이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2021.8)이나 경

18) 광산물비축 사업은 2007년 (구)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크롬 등 4광종 3,346톤을 비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에는 크롬 등 10광종 7만 7,895톤(64.5일분)을 비축하였다. 이후 2017년부터는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하였고, 2019년에는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 9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19) 2021년 8월 수립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은 2021년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으며, 35종의 희소금속을 선정하여 비축량을 대책 수립 당시 평균 56.8일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2021년에 발생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관리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에 출범하였으며, 동 TF에서는 100~3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21) 수출규제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이다.

제안보 핵심품목 TF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철금속이나 희소금속에 대한 연차별 비축계획 등이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

비철금속이나 희소금속 비축이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 등에 따라 시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속 구입가격 증가에 따른 비용 증대, 비축 물자 조달의 어려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²²⁾ 특히 대량 생산이 어려운 희소금속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급 불안과 가격변동이 크게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큰 희소금속 등의 광물 비축은 보다 장기적인 비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 투자중점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1)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²³⁾

정부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을 위해 ① 한국형 3축체계,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 증강을 지원하고(5.9→6.9조원), ② 병 봉급 인상, 급식·주거여건 개선 등을 통한 장병 사기진작(5.5→6.9조원)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분석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병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과 달리 2023년에 병 봉급을 급격하게 인상할 계획이나, 이 경우 국방분야 경직성 예산비중 증가에 따른 첨단무기체계 획득 지연, 초급간부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과 함께, 국방분야 중장기 운영방향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 봉급 인상률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3년 병사 봉급(병장 기준)을 2017년 최저임금(월 환산 135만원)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하사봉급(1호봉²⁴⁾)의 40%를 목

22) 이와 관련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비축 중인 마그네슘합금은 톤당 가격이 2021년 3분기 626만원에서 2021년 4분기 톤당 95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점인 1분기에 톤당 1,03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3)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국방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참조

24)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 하사 1호봉의 봉급은 170만 5,400원이다.

표로 하며, 2024년에는 하사봉급의 45%, 2025년에는 하사봉급의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방부는 이과 달리 2023년 병 인건비 예산의 봉급 단가를 병장 기준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7.9% 인상하고,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병사 봉급 인상은 병사들의 국가헌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 취업준비 등 사회진출을 위한 자금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예산 중 경직성 경비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방위력개선투자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여건 상 국방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규모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병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는 경우 부대 개편과 첨단전력화 등 국방분야의 다른 재원배분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병사 봉급 인상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의 봉급과 병사 봉급 간 차이가 줄어 초급간부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병사 중에서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상위 계급의 봉급 인상률이 높아 병사의 계급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함께, 국방분야의 인력구조 개편과 첨단무기체계 획득 등 중장기 운영방향 및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병 봉급 인상계획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첨단전력 증강과 관련하여, 무기체계 획득사업 중 상당수가 소요결정이 수정되거나 시험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전력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적기에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 소관 2022년도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소요결정 당시 목표한 전력화 시기 달성여부를 살펴본 결과, 20개의 종료사업 중 목표 전력화시기를 달성한 사업이 10개(50.0%)에 그쳤으며, 전력화 지연 기간이 1년에서 7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요 지연 사유는 작전운용성능 변경 등의 소요결정 수정²⁵⁾으로 인한 전력화 시기 조정, 시험평가 등에서의 문제 발생에 따른 평가기간 연장 및 후속조치 등이다. 이와 같이 전력화 지연이 반복되는 경우 소요군에게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달할 수 없으며, 이는 기술

25) 단순히 소요량 증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건의 경우 전력화지연에서 제외하였다.

진부화 및 안보공백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목표 전력화시기에 맞추어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²⁶⁾

정부는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를 위해 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ODA사업을 확대하고, ②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외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ODA사업 확대 관련 주요 분석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ODA예산을 전년 대비 14.2% 확대 편성하였으나, 기존 ODA사업의 집행실적, 수원국의 수요, 재외공관의 집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ODA사업 중 기획재정부 소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 사업(2023년 1.5조원 편성)은 수원국의 정치·경제·환경 등 여건에 따라 수요가 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후보사업 발굴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 심사 및 승인, 정부 간 협정 및 차관공여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사유로 집행부진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아시아 차관사업의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49.6%이고²⁷⁾ 2022년 7월 말 기준 집행률도 31.6%에 그치고 있으며, 중동-CIS 차관사업도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7%의 집행률을 보였고,²⁸⁾ 2022년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6.2%에 불과한 상황이나,²⁹⁾ 이 사업들의 예산이 2023년도에 증액되었다.

또한, 외교부 소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수원국 수요 증가,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 강화 필요성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78.3%(665억원) 증액되었으나, 최근 5년(2018~2022년) 간 연도별 수원국의 수요가 60~70건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2023년에 수원국의 수요가 예산 규모만큼 증가한다고 해도 재외공관에서 매년 집행하는 규모의 6배 이상을 집행해야 하므로 재외공관의 집행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26)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참조

27)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없는 내역사업도 총 52개였다.

28) 집행률이 0%인 내역사업도 6개다.

29) 중남미 차관사업 역시 집행률이 2021년 32.2%, 2022년 7월 말 기준 31.8%에 그치고 있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들의 집행실적, 우리나라 ODA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수요, 재외 공관의 집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ODA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세출·지출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¹⁾

가. 사업수요 및 예산 소요 과다 추계

산업통상자원부 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1차 연도 지원과제수와 사업비를 확대하여 편성하였으나, 민간기업의 공동투자 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연차별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인증지원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수요 확대를 예상하여 단품·모듈 성능 평가와 전자파 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시스템반도체 사업에서 수요와 연계한 R&D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사업에 비해 과제당 지원액이 크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기술개발 과제의 특성 및 기존 유사 사업의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스타트업리프30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1차 연도 과제별 정부지원금을 2~3차 연도에 비해 높게 산출하여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반도체 개발 단계별 비용을 고려할 때 2~3차 연도에 더 많은 비용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 연도 정부지원금을 줄이고 이와 연계한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예산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고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666억원(95.2%)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전 연도의 사업비 편성추이와 여유자금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적정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 예산에 관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또는 공공기관별) 분석」 참조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최대 3년 재연장됨에 따라 초기 채무조정 실적이 저조하고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무조정 수요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예상 부채비율 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대위 변제 사업**도 2022년 9월에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2023년 보증 사고율도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지출액 대비 수입액 규모가 커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결산상 잉여금이 총 5,187억원이 적립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적금 가입률 95%, 월 40만원 납입액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의 적금 가입률이 각각 54%, 73% 수준이고, 월평균 가입액은 35만원 수준이므로 가입률, 가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 사회복지준비금 사업** 역시 예산편성내역에는 소집해제 인원의 95%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월 평균 납입액이 40만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8월 기준 실제 가입률은 70.7%에 그치고 있고 평균 납입액도 36만원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클라우드 미전환 물량이 다수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전조사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보된 실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연차별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무인단속장비 우편요금은 예산 편성 시 실제 무인단속장비 설치시기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고지서 발급량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측면이 있고 향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지서 발급량 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중 한국선거방송 운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부터 한국선거방송 TV방송채널 송출을 중단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므로, 2023년도 예산안 중 방송송

출 대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상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계획 물량 대비하여 실제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수요에 맞춰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의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에 구직촉진수당 1회분 수급 후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12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계획수립 후 가장 빨리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2회분을 지급받게 되므로 구직촉진수당 1회분 수급 후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안에 2022년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잔여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예측치에 비해 실제 채용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년도 지원인원 12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인원으로 보이므로, 채용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지원인원을 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 중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사업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다른 일경험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발생하고 유사한 사업이 각각 추진됨에 따라 참여기업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액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사업수요 저조에 따라 2022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0.2%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 중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저축장려금 지급소요가 2024년 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2023년도 출연예산 중 특별중도해지 지급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2024년도 예산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사업**은 출연금 중 인건비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높지 않고 편성단가도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집행가능한 수준으

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집행실적 부진 및 이월 예상

기획재정부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아시아차관과 증동-CIS차관 등 최근 집행실적 부진한 내역사업들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정부간 협정 등 총 8개 단계로 구성된 대개도국 차관 사업 절차를 고려하면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더라도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구·지검 이전신축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을 전제로 공사비 등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설계와 공사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고 유사규모 사업 사례에 비추어 볼 때, 2024년 이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공사비 등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중 하절기바우처의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추경예산에서의 지원단가 인상(0.9 → 4만원)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나, 2022년 추경예산 471억원 중 6~7월에 137억원만이 집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인하와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수탁기관에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의 잦은 이월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회계연도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1차 연도 사업비 연부율을 조정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사업 중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는 2022년도 수립한 사업계획 대비 2년차와 3년차 비중을 높게 설정하였는데, 1년차·2년차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변경한 사업계획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 사업은 2022년 KPS개발사업본부장 선정, 협약 체결 등의 지연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2023년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구매지원 계획물량 대비 실제 지원물량이 저조하여 예산 집행 및 실집행 실적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므로,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추진지연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2022년에도 집행 및 실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의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중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해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목표인원 확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유형별로 집행실적 편차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실적 편차 최소화 등 전반적인 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사업효과·성과 저조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은 2022년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기존 사업보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사업추진의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출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모(母)리츠로 출자한 이후 사업발굴의 어려움으로 모리츠에서 자(子)리츠로의 출자가 연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모리츠 유보금이 2,243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2023년도 출자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사업은 기존 펀드의 투자실적 저조에 따른 미투자액 규모와 2023년 예상되는 회수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자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도 기존 자펀드의 미투자액 규모가 많고 2023년 신규 펀드와 출자목적이 유사한 펀드가 운용 중인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중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은 2022년에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참여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2023년에 사업물량을 크게 확대 편성

하였으므로, 시범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 중 **청년도전지원사업**에는 청년도약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 인센티브 2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프로그램 운영 비로 1인당 400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청년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수당이 별도로 편성되어 청년들의 참여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관 인센티브 지급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라. 사업계획 미흡

국토교통부 청년원거주택 사업 및 **역세권첫집** 사업은 2023년도 계획안이 1조 720억원에 달하는 신규 내역사업이나, 총사업비·지원조건·주택공급지역·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 등 세부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의 타당성 및 공급규모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조속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사업은 기존의 뉴딜펀드를 재편하여 운영하는 것이나, 지원 분야 및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액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사업 중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예산 증액 규모가 큰 신규 내역사업임에도 사업계획이 미비하며,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타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중 **반도체 기자재 확충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 특성화 교육 및 중점연구 추진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과 연계성을 감안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긴급차

관 등의 예산 규모가 1천억원 이상으로 편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관련 사업은 추진체계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의 방향성·전략이 불분명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복·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 예비타당성조사, ISP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결과 반영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중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원**은 전문적인 반도체 장비 및 장비전담인력,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과정, 연구기능 등을 갖춘 연구소 운영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과는 차별화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장비비, 운영비, 연구비 등을 포함하여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 조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구축사업은 2023년 계획 안에 ISP 수립비용과 인프라 시범 구현을 위한 시스템구축 예산이 함께 편성되었으나, 이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SP 수립 완료 이후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ISP 제도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인프라확충사업 중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구축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관련 IS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바. 법적 근거 미흡 또는 법률안 처리결과 반영 필요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 소음저감매트 구입비용을 용자하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기금법」에 명시된 주택사업 용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사업은 당초 도입하려던 병사 단체보험 사업 대신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 성격이 강하고, 민간병원 진료비의 지원대상과 한도 및 범위, 절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의 분쟁이나 혼란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근거법률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동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을 전제로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개정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규 편성된 조기취업성공수당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고용보험법」 상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이 근거법률에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사업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안이 처리되어 시행 유예가 확정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인프라확충사업 중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법」 상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2. 세입·수입 예산안 조정 검토²⁾

가. 일반회계 전입금

주택도시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금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것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사업비 지출이 감소한 반면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지출 감소분만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전년도 세계잉여금³⁾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기획재정부의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른 2022년도 농어촌특별세 초과수납분 규모가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농어촌특별회계 전년도 세계잉여금 규모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주식거래세 등 주요 세입원의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추계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세종계정의 2023년도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안은 2021년도 결산 결과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2년도에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각 계정의 세입이 안정적으로 수납되고 매년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2022년에도 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정별 집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2)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 예산에 관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또는 공공기관별) 분석」 참조

3)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차감)을 법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과목으로, 각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편성된다.

4)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3조 1,004억 4,400만원이 전출되면서 동시에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조 6,507억 4,500만원이 전입될 예정으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 수정시 구조개선사업계정 일반회계전입금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이 경우 계정별 수지균형을 맞추고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줄이기 위해 각 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세입예산

일반회계 국세물납주식매각대는 2023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최근 수납추이 및 물납주식 위탁보유 규모, 정부의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조치 등을 고려할 때, 2023년도 세입예산안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자금 기타민간이자수입(주택계정) 계획안은 과소하게 추정된 예상 금리에 근거한 점을 고려하여 수입계획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은 최근 3년(2019-2021)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3년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지급·선지급 등의 환수가 본격화되어 수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입계획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3.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⁶⁾

가. 특별회계·기금 사업 감액 시 해당 회계·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등 조정 검토 필요

특별회계·기금에 편성된 지출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회계·기금의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조정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회계·기금이 자체수입으로 지출소요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이 편성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편성되기도 한다. 이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회계·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규모가 증가할 경우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세수입 등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은 2018년 300.4조원에서 2022년 610.8조원(전망)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는 금액 역시 2021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⁷⁾

[일반회계에 전출금 및 공자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회계 → 타 회계·기금	465,618	453,343	457,869	562,184	670,875
공자기금 → 일반회계	200,000	150,000	343,000	1,028,000	882,000

자료: 기획재정부

반대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안이 감액되는 경우 해당

6)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참조

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증가는 일반회계의 자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액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가 감소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규모도 줄일 수 있다.

회계 또는 기금의 재원 소요는 감소하게 된다.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이 당초 부족한 재원 소요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출 소요 감소분만큼 전입금 또는 예수금 규모를 줄임으로써 국채발행 규모도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회계·기금의 지출사업을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분을 해당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 확대 또는 다른 지출사업 증액에 활용하기에 앞서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감액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입확대나 지출절감 등으로 재원 여력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입·수입예산을 확대하거나 세출·지출예산을 절감하여 재원의 여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재원을 시급한 사업에 추가 편성하거나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의 활용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정부의 전적인 결정에 따라 정해질 때가 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축소를 통해 국채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음에도 여유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금 운용의 장기적인 효율화 관점에서 보면 여유자금 운용이 그 자체로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입 확대와 지출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정 회계·기금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을 연계하여 감액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할 것인지, 또는 보다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의 장기적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⁸⁾

가. 개 요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설하기 위해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이하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받아야 하고,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 중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분석’과 정부 재정사업 대비 BTL 사업의 비교우위 여부를 판단하는 VfM 분석은 BTL 한도액 편성의 타당성·적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⁹⁾

VfM 분석은 민간이 시행하는 BTL사업(민간투자대안, PFI)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재정사업(정부실행대안, PSC)의 실제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둘 중 소요비용이 더 적은 방식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¹⁰⁾

나. 분석의견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VfM 분석 시 적용하는 민간투자대안(PFI)의 추정 낙찰률, 정부실행대안(PSC)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낙찰률, 할인율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비용우위 유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VfM 분석에서 일부 **민간투자대안(PFI)의 추정 낙찰률**이 BTL 사업의 실제 낙찰률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BTL사업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대안 낙찰률을 최근 BTL사업의 낙찰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상세한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분석)」 참조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은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할 경우 경제적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으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VfM 분석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은 정부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간투자대안은 정부실행대안 공사비¹¹⁾에 ‘유사 BTL사업의 평균 낙찰률’인 ‘PFI 적용률’을 곱하여 실제 소요비용을 추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PFI 적용률이 저평가되어,¹²⁾ 최근 높아진 ‘BTL사업 낙찰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시설 BTL사업은 최근 5년간 평균 낙찰률 97.87%을 PFI 적용률로 채택한 반면, 국방부는 2010~2021년 자료, 경찰청은 2007~2017년 자료에 근거하여 PFI 적용률을 채택하였으며, 국방시설 BTL사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낙찰률은 99.03% 수준이나, 민간투자대안(PFI) 추정 낙찰률은 97.86%로 설정함에 따라 실제 낙찰률보다 약 1.17%p 낮게 책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대안 추정 낙찰률이 실제 낙찰률보다 낮게 책정되면 민간투자대안의 소요비용이 정부실행대안보다 적게 산출되어 민간투자대안 방식이 비용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② VfM 분석에서 **정부실행대안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낙찰률(PSC 낙찰률)**은 모든 BTL 사업에 대해 턴키(Turn-Key) 낙찰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턴키발주가 부적절한 BTL 사업인 경우에는 턴키 낙찰률이 아니라 종합심사제 등의 낙찰률을 PSC 낙찰률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은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을 위해 ‘PSC 낙찰률’에 ‘턴키 낙찰률’을 적용하고, ‘PFI 낙찰률’을 ‘PSC 낙찰률’에 ‘PFI 적용률’¹³⁾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VfM 분석에 적용하는 PFI 낙찰률은 BTL 대상사업의 추정 턴키 낙찰률에 PFI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¹⁴⁾ PFI 낙찰률은 PSC 낙찰률에 PFI 적용률을 곱한 값이므로, PSC 낙찰률보다 항상 낮게 산정된다.

그런데 2023년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들은 재정사업으로 발주 시 턴키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고 낙찰률도 턴키 낙찰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1) PSC 공사비는 추정공사비(설계가 기준)에 PSC 낙찰률을 곱한 값이다.

12) 2019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의 PFI 적용률은 90.5~95.94%였다.

13) 사업별 BTL 한도액은 PSC 낙찰률을 적용한 ‘총사업비의 추정치’이므로, PFI 적용률은 BTL 사업의 추정낙찰률이다.

14) BTL 한도액은 설계가에 PSC 낙찰률을 반영한 총사업비이므로, BTL 사업의 낙찰률은 PFI 적용률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VfM 분석 과정에서 PFI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PFI 낙찰률은 PSC 낙찰률에 PFI 적용률을 곱한 값이다.

국방부는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주방식을 ‘종합심사제(500억 이상 공사), 간이종합심사제(100억 ~ 500억 미만)’¹⁵⁾ 혹은 턴키(Turn Key)¹⁶⁾로 발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사업을 종합심사제로 발주할 경우 종합심사제의 예상낙찰률은 86.98%이므로 정부실행대안 공사비는 민간투자대안 공사비보다 약 10% 낮아질 수 있다.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들의 가능한 발주방식 및 예상 낙찰률]

(단위: %)

구분	예상 낙찰률	비고
종합심사제	86.98	시설본부 건설계획과 자료
턴키방식	98.82	시설본부 민자사업과 자료
민자사업(BTL)	96.70	98.82%(턴키 낙찰률) × 97.86%(PFI적용율)

자료: 국방부

국방부 종합심사제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PSC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2023년 BTL 한도액에 포함된 사업 대부분이 VfM 미흡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3년 BTL 한도액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적정한 PFI 적용률과 PSC 낙찰률을 적용하여 VfM 분석을 재수행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외에도 **VfM 분석을 위한 할인율**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재정지출의 현재가치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BTL사업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할인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④ VfM 분석에서는 **정부실행대안의 재원을 5년 만기 국고채로 조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고채의 만기가 다양하고 차환을 통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실행대안의 정부부담액 흐름을 5년 만기 원리금 상환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한 시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 선 설계후 시공사 선정시 입찰금액심사(재정단) 및 공사수행능력평가(평가교육과) 후 최종 낙찰자mf 선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최저가 낙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16)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입찰 방식이며, 200억원 이상 사업중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1. 국유재산 현물출자 국회 사전동의제도 도입 검토 필요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효과가 유사함에도 국회 심의절차가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법」 제60조¹⁾에 근거하여 정부는 ①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②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현물 출자할 수 있다.²⁾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³⁾에 따르면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고, 이에 정부는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전에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고 국회 결산보고서 제출 이후에 현물출자 규모와 방식을 사후 확인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61조에 따른 현물출자 절차를 보면, 정부출자기업체가 주무기관의 장에게 현물출자를 신청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현물출자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3)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규모가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회의 사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을 보면, 2016년, 2019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현물출자가 이뤄졌으며, 연간 출자가액이 적게는 907억원(2010년)에서 많게는 3조 4,969억원(2015년)일 정도로 현물출자 규모가 큰 상황이며, 2022년에도 10월 중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0억원 상당의 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할 계획이다.

[2011년 이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내역	
		출자재산	출자가액
2011	한국전력공사	군 배전선로 및 전신주 등	106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생활공업용수 댐사용권	121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설관리권, 건물, 공작물	15,523
	울산항만공사	시설관리권, 건물, 공작물	2,860
	부산항만공사	토지, 건물, 공작물	1,743
	소 계		20,353
2012	한국수출입은행	도로공사 주식, 자산관리공사 주식	8,793
2013	한국공항공사	토지	2,606
	한국수자원공사	댐사용권	167
	소 계		2,773
2014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3,800
2015	한국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한국전력공사 주식	2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도로공사 주식	1,500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차량(22편성)	3,469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0,000
	소 계		34,969
2017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자증권	5,000
2018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항만공사 출자증권	13,500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0,970
	소 계		24,470
2021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공사 주식, 한국공항공사 주식	6,500
	한국철도공사	토지, 건물, 차량정비기구 등	1,804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403
	소 계		8,707
2022 (예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공사 주식	5,000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특정 정부출자기관의 지분취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국유재산 처분업무보다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와 유사한 교환·양여·매각 등은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물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을 전제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특정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정부출자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현금출자와 자본확충 효과가 동일하고 한번 출자한 이후에는 정부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동일한 지위를 가짐에도 국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부가 국회 예산안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현물출자 규모는 현금출자 필요성 및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⁵⁾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 현물출자여부 및 규모는 국회의 출자금 예산안 심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셋째, 현물출자를 통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물출자를 받은 기관과 다른 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현물출자대상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⁶⁾

4)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일본은 총무대신이 현물출자를 승인하고, 독일은 현물출자 후 국회에 사후보고를 하고 있어 현물출자 제도가 있는 세계 주요국가에서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현물출자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고, 독일과 폴란드 등 예외적으로 정부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경우에 개별법을 근거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일본 등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과 관련된 현물재산을 출자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법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한 현물출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 2021.6.).

5)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출자대상기관의 자본 확충에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출자대상기관 입장에서 볼 때, 현물출자를 받으면 해당 출자가액 만큼 현금출자를 덜 받아도 된다.

넷째, 현물출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4호7)에 따라 처분에 해당함에도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 제9조8)에 따라 작성한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의 처분계획에 현물출자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사전에 현물출자 계획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물출자의 필요성, 출자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 증대를 위해 유가증권을 출자하였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건물 등의 현물을 출자하였으나, 국회는 사전에 현물출자 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해당 기관들에 토지나 건물 또는 유가증권을 출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물출자 외에 다른 합리적 지원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제시의 기회가 없었다.

6)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를 하였으나, 이 기관들 외에도 코로나19에 따라 재무여건이 악화된 기관들이 있음에도 두 기관에 대해서만 현물출자가 실시되었다.

7)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별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한국자산관리공사	6,500	-	-	6,500
한국철도공사	1,804	1,623	181	-
인천국제공항공사	403	-	403	-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정부출자기관별 현물출자 사유]

(단위: 억원)

출자대상기관	출자가액	현물출자 사유
한국자산관리공사	6,500	자본 확충을 통한 공사의 금융지원 규모 증대
한국철도공사	1,804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손실 일부 보전
인천국제공항공사	403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손실 일부 보전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현행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명시된 현물출자 요건이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물출자 시행에 관한 정부의 재량이 큰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9)10)11)

9)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629호)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10)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사후보고 방식으로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현재에도 정부는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후 보고하고 있으므로, 사후보고 방식은 현행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1)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해 국회 심의나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시정요구(제도개선)를 하였다.

2.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 자료 제출 필요

정부는 국회에서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현 회계연도의 예비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¹²⁾은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52조¹³⁾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 국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2022년 5월 31일에, 2022년 예비비사용현황은 2023년 5월에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조항이고,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승인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들이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정보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예산안 심사 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가 현 회계연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 문제제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 예비비가 제외되어야 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나, 예비비 사용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

12)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사업으로 배정되면 집행단계에서는 일반사업 예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됨에도 일반예산과 달리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일반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국회의 총액심의만을 받고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이 없는 특성상 현 회계연도의 집행현황과 집행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는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정 시점 기준의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¹⁴⁾

14) 참고로, 국회의원이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집행실적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41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28)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Ⅲ. 재정총괄 분석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중기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나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중기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6.6%)보다 낮은 4.6%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차 추경					
경상성장률	4.2	4.6	4.5	4.2	4.2	4.0	.
총수입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6.6
(증가율)	(△3.0)	(6.8)	(13.1)	(4.8)	(4.5)	(4.3)	.
- 국세수입	343.4	396.6	400.5	418.8	439.2	459.9	7.6
(증가율)	(21.4)	(40.3)	(16.6)	(4.6)	(4.9)	(4.7)	.
- 세외수입	26.1	28.3	25.2	26.9	27.7	28.1	1.9
(증가율)	(△9.7)	(△1.8)	(△3.3)	(6.8)	(2.9)	(1.4)	.
- 기금수입	184.1	184.1	200.3	210.1	218.7	227.2	5.4
(증가율)	(7.7)	(7.7)	(8.8)	(4.9)	(4.1)	(3.9)	.
총지출	607.7	679.5	639	669.7	699.2	728.6	4.6
(증가율)	(1.1)	(13.1)	(5.2)	(4.8)	(4.4)	(4.2)	.
- 의무지출	303.2	329.7	341.8	361.8	382.5	405.1	7.5
(비중)	49.9	48.5	53.5	54	54.7	55.6	.
- 재량지출	304.5	349.8	297.3	307.9	316.7	323.6	1.5
(비중)	50.1	51.5	46.5	46	45.3	44.4	.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14.0	△13.7	△13.4	.
(GDP 대비)	(△2.5)	(△3.3)	(△0.6)	(△0.6)	(△0.6)	(△0.5)	.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58.6	△57.4	△56.6	.
(GDP 대비)	(△4.4)	(△5.1)	(△2.6)	(△2.5)	(△2.3)	(△2.2)	.
국가채무	1,064.4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
(GDP 대비)	(50.0)	(49.7)	(49.8)	(50.6)	(51.4)	(52.2)	.

주: 증가율은 2022년 본예산 대비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9.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중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13.1조원 적자(GDP 대비 △0.6%)에서 2026년 △13.4조원 적자(GDP 대비 △0.5%)로 GDP 대비 적자폭은 감소하나 적자 규모는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¹⁾는 2023년 △58.2조원 적자(GDP대비 △2.6%)에서 2026년 △56.6조원 적자(GDP대비 △2.2%)로 적자 규모 및 GDP 대비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 중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대 중반 이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9.8%에서 2026년 52.2%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2)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²⁾에 따라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2022년 계획)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2021년 계획)과 대비하여 분석한다.

2021년 계획 수립 당시 정부는 2021년 글로벌 경제 회복 및 백신보급 확대 등을 바탕으로 경기·고용의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2년 계획에서는 2022년 국제원자재·곡물가격 상승 등 해외발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계획에서 당초 세계경제는 2021년에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내수 회복세 둔화가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개선에 따라 수출·투자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인구

1)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2)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구조 등의 구조적 대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제여건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2021년의 향후 경기 회복 흐름 예상과 달리, 202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으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의 긴축기조 강화, 중국의 코로나 대응에 따른 봉쇄조치 및 글로벌 공급차질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2023년 이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등에 따른 내수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 및 성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내 여건 또한 2021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 회복 및 백신보급 확대 등을 바탕으로 경기·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2년 해외발 물가상승 압력 속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출 및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이후에는 해외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 경제 성장 위축 및 금리 인상 영향 등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계획에서 제시한 2022년 경상성장률은 5.2%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계획에서 제시한 2022년 성장률(4.8%)에 비해 0.4%p 증가한 수치이다. 물가상승압력 완화 등에 따라 2023년 경상성장률은 4.5%로 2021 계획 수치(4.0%) 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2025년 경상성장률 또한 2021 계획 대비(4.0%) 0.2%p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계획과 2022년 계획의 경상성장률 전망 비교]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1~2025년 계획	0.6	4.8	4.0	4.0	4.0	-
2022~2026년 계획	6.4 ¹⁾	5.2 ²⁾	4.5	4.2	4.2	4.0

주: 1) GDP 실적치

2) 2022.6.16. 발표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이와 같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 변동사항과 함께 2021년도 결산결과 및 추경예산 편성 등³⁾을 2022년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총량계획이 변화하였다.

정부는 2021년 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 등으로 인해 총수입이 2020년 계획상 예측경로(3.5%) 대비 증가할 전망이며 연평균 증가율도 4.7%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포용적 경제회복 및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여 총지출은 2020년 계획 대비 2021년 계획에서 2021년 49.1조원~2024년 22.9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총지출 증가율은 초기 연도 규모의 차이로 5.7%에서 5.5%로 하향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에 109.2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4.6\%$)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2025년 1,408.5조원(GDP 대비 58.8%)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2022년 계획에서는 국세수입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수입이 2021년 계획상 예측경로(4.7%) 대비 증가할 전망이며 연평균 증가율도 6.6%로 상향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등에 따른 한시지출 소요 감소 및 재정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지출관리 강화 필요 등을 강조하여 총지출은 2021년 계획과 대비하여 2023년 4.4조원~2025년 8.1조원의 지출 감소를 계획하였다. 총지출 증가율도 2021년 계획상 예측경로(5.5%) 대비 감소할 전망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하향되었다.

3) 2021회계년도 결산 결과 국세 수입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55.9조원 증가되었고, 총지출은 이월·불용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3.9조원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GDP의 1.8%p($\Delta 6.2\% \rightarrow \Delta 4.4\%$)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의 0.3%p($47.3\% \rightarrow 47.0\%$) 하락하였다. 2022년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방역추경 및 코로나19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내용이 2022년 계획 작성에 반영되었다.

[2021년 계획과 2022년 계획의 재정총량 비교]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수입	2021년 계획(A)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4.7
	2022년 계획(B)			553.6	609.1	625.9	655.7	685.6	715.2	6.6
	차이(B-A)			4.7	60.3	55.8	61.9	67.1		
총지출	2021년 계획(A)	558	604.9	604.4		634.7	663.2	691.1		5.5
	2022년 계획(B)			607.7	679.5	639	669.7	699.2	728.6	4.6
	차이(B-A)			3.2	75.1	4.4	6.5	8.1		
관리 재정 수지	2021년 계획(A)	△1125 (△5.6)	△1266 (△6.2)	△94.7 (△4.4)		△104.7 (△4.7)	△108.4 (△4.7)	△109.2 (△4.6)		
	2022년 계획(B)			△94.1 (△4.4)	△110.8 (△5.1)	△58.2 (△2.6)	△58.6 (△2.5)	△57.4 (△2.3)	△56.6 (△2.2)	
	차이(B-A)			0.6 (0.1)	△16.1 (△0.6)	46.5 (2.2)	49.8 (2.2)	51.9 (2.2)		
국가 채무	2021년 계획(A)	956 (47.3)	965.3 (47.3)	1083.0 (50.2)		1175.4 (53.1)	1291.5 (56.1)	1408.5 (58.8)		
	2022년 계획(B)			1064.0 (50.0)	1068.8 (49.7)	1134.8 (49.8)	1201.2 (50.6)	1271.9 (51.4)	1369.0 (52.2)	
	차이(B-A)			△3.9 (△0.2)	0.5 (△0.5)	△40.6 (△3.3)	△90.3 (△5.5)	△136.6 (△7.4)		

주: 1. 괄호는 GDP 대비 비중

2. 2021년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은 추경예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제2회 추경 △110.8조원 적자 (GDP 대비 △5.1%)로 2021년 계획보다는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2023년부터 2021년 계획보다 크게 감소하여 2023년 46.5조원~ 2025년 51.9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감소를 전망하였다. 국가채무도 2022년 제2회 추경 1,068.8조원(GDP 대비 49.7%)으로 채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중은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 2021년 계획대비 크게 감소하여 2023년 40.6조원 ~ 2025년 136.6조원 규모로 국가채무의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재정정책 기조 분석

2023년 예산안은 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재정기조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때 해당년도 재정기조지표인 FIS에 따르면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FI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긴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 기조는 총수입 · 총지출 증가율, 재정수지, 재정기조지표(a measure of fiscal stance: FIS) 및 FIS의 전년도와의 차이를 의미하는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 등 여러 가지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정책 기조를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본예산 대비 5.2%(제2회 추경 대비 △6.0%)이다. 2023년 총수입 증가율(전년 본예산 대비 13.1%, 추경예산 대비 2.8%)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따라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2년 제2회 추경 GDP 대비 △5.2%에서 2023년 예산안은 △2.6%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개년도는 총지출 증가율(각각 4.8%, 4.4%, 4.2%)이 수입 증가율(각각 4.8%, 4.5%, 4.3%)보다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운용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GDP의 2%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단순히 총지출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 확장적이고 감소하면 긴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총수입도 마찬가지로이다. 총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총지출이 더 증가하였다면 확장적이고, 총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총지출이 더 감소하였으면 긴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재정지표를 통한 재정기조 분석 결과]

(단위: 조원, %)

구분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2023		2024	2025	2026
				본예산	추경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총수입 (증가율)	473.1 (1.7)	478.8 (1.2)	570.5 (19.2)	553.6 (△3.0)	609.1 (6.8)	625.9 (13.1)	(2.8)	655.7 (4.8)	685.6 (4.5)	715.2 (4.3)
총지출 (증가율)	485.1 (11.7)	549.9 (13.4)	601 (9.3)	607.7 (1.1)	679.5 (13.1)	639.0 (5.2)	(△60)	669.7 (4.8)	699.2 (4.4)	728.6 (4.2)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54.4 (△2.8)	△120 (△5.8)	△126.6 (△6.2)	△94.1 (△4.4)	△108 (△5.2)	△58.2 (△2.6)		△58.6 (△2.5)	△57.4 (△2.3)	△56.6 (△2.2)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48.2 (△2.5)	△92.9 (△4.8)	△114 (△5.5)	△80.5 (△3.8)	△97.2 (△4.6)	△45.4 (△2.1)		△45.2 (△2.0)	△43.4 (△1.8)	△41.4 (△1.7)
FIS	43.18	92.14	110.36	79.76	96.46	44.09		43.97	42.07	39.99
FI	2.22	2.52	0.64	△1.66	△0.87	△1.75	△2.54	△0.07	△0.14	△0.14

- 주: 1. 구조적 재정수지 및 FI 산출 시 적용된 2022~2026년 GDP 및 잠재GDP의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므로 정부의 산출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자동적인 증감 부분을 제외한 재정수지
 3. 2022년 추경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9.을 바탕으로 작성

그러나 위의 재정기조지표에는 경기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재정기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매 해당연도의 재정기조는 IMF의 FIS를 통해, 전년 대비 상대적 기조 변화분은 FIS의 전년대비 증감분인 F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F의 FIS 및 FI는 잠재GDP⁵⁾ 등을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자동적인 증감 부분을 제외하고 얻어지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다.⁶⁾ FIS의 경우 산출된 지수가 정(+)의 값을 가지면 해당 연도의 재정 기조가 확장적, 부(-)의 값을 가지면 긴축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FI의 경우 산출된 지수가 정(+)의

5) 잠재GDP는 2022~2026년 연평균 2.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9.)

$$6) FI = \Delta \left(\frac{FIS}{Y} \right), FIS = B^n - B, B^n = t_0 Y - g_0 Y^*$$

여기서 FIS는 재정기조지표(a measure of fiscal stance)이며, Y는 GDP, B는 재정수지, Bⁿ은 구조적 재정수지, t₀는 기준시점의 GDP 대비 세수입, g₀는 기준시점의 GDP 대비 총지출, Y*는 잠재GDP를 의미한다. 즉, FIS는 (t₀×경상GDP - g₀×경상잠재GDP) - 관리재정수지로 산출되며, FI는 (급년 FIS / 급년 경상GDP) - (전년 FIS / 전년 경상GDP) × 100으로 산출된다.

값을 가지면 전년도에 비하여 확장적, 부(-)의 값을 가지면 전년도에 비하여 긴축적임을 의미한다.

2023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긴축적인 기조(FI<0)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년도 기준으로는 경기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확장적인 재정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FIS>0). 2023년 예산안의 FI는 2022년 본예산 대비 $\Delta 1.75$, 2022년 추경예산 대비 $\Delta 2.54$ 로, 전년보다 긴축적인 재정기조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전년대비 긴축적인 기조는 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FIS를 통해 2023년도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44.09로 확장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 정부의 재정목표 분석

(1) 중기 재정 총량 목표 분석

정부의 중기재정목표는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은 수행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할 계획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 둔화 시 총수입 감소, 총지출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및 국가채무 증가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경기 하방 위험 및 불확실성 관리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압력에 대응하고, 재정중심 경제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는 민간 중심 역동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할 것으로 중기 재정목표를 수립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기간 내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4년 이후 균형재정목표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2016년까지는 재정목표 관리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규율을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중기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선회하여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중기 총지출 증가율(4.6%)이 총수입 증가율(6.6%)보다 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 수준은 GDP의 Δ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①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증가율(A, %)	총지출 증가율(B, %)	차이 (A-B, %p)
2005~2009	7.2	6.3	0.9
2006~2010	7.1	6.4	0.7
2007~2011	7.4	6.9	0.5
2008~2012	7.6	6.2	1.4
2009~2013	5.6	4.2	1.4
2010~2014	7.7	4.8	2.9
2011~2015	7.2	4.8	2.4
2012~2016	6.3	4.6	1.7
2013~2017	5.0	3.5	1.5
2014~2018	5.1	4.5	0.6
2015~2019	4.0	2.6	1.4
2016~2020	5.0	3.5	1.5
2017~2021	5.5	5.8	Δ 0.3
2018~2022	5.2	7.3	Δ 2.1
2019~2023	3.9	6.5	Δ 2.6
2020~2024	3.5	5.7	Δ 2.2
2021~2025	4.7	5.5	Δ 0.8
2022~2026	6.6	4.6	2.0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이러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년대비 경상성장률 상향 전망과 그에 기반한 총수입 증가율 상승 및 총지출 증가율의 감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경상성장률 추세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한국의 물가 상승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 경기 하방 위험 및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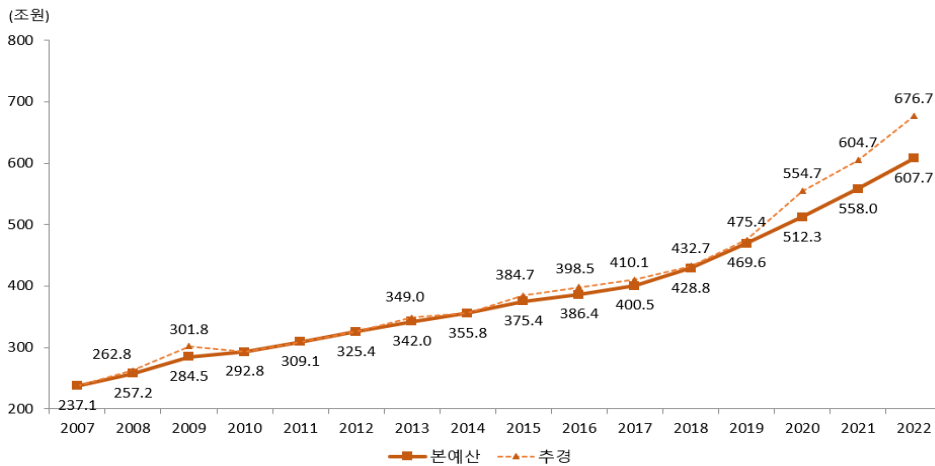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2년 실질GDP의 경우 정부 전망치(2.6%)에 비해 0.1%p 낮은 2.5%를 제시하고 있으며, 명목GDP 성장률의 경우 2022년 정부 전망치(5.2%) 보다 0.5%p 낮은 4.7%를 제시하고 있다.⁷⁾

경상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경우 총수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총지출 증가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2년의 경우 총수입·총지출 모두 NABO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으나, 2023년 이후는 총수입·총지출 모두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⁸⁾

또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급증할 수 있다. 2007~2022년까지 추경이 편성된 연도는 2008년~2009년, 2013년과 2015~2022년으로 최근 8년간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왔다. 또한 추경 편성 이후 차년도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그 이상으로 증가해왔다.

[2007~2022년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재구성

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2022. 10, pp. 15~31.

8) 재정수지의 경우 NABO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으나, 중기재정전망의 총수입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은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소폭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②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분석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운용 목표로 2022~2026년 관리재정수지 Δ 2% 중반 수준과 국가채무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운용 목표]

국가재정 운용계획	관리재정수지/GDP 비율		국가채무/GDP 비율	
	수준	표현	수준	표현
2004~2008	2008년까지 균형 회복	계획	2006년 수준 이하	관리
2005~2009	2007년 이후 Δ 1% 내외	전망	2006년 이후 감소	전망
2006~2010	2007년 이후 Δ 1% 수준	관리	2007년 이후 감소	전망
2007~2011	2008년 이후 Δ 1% 내외	관리	2007년 이후 감소	전망
2008~2012	2012년까지 균형	관리	2012년 30% 수준	관리
2009~2013	2013~2014년 균형	전망/관리	2013년 30%대 중반	관리
2010~2014	2013~2014년 균형	전망	2014년 30%대 초반	전망
2011~2015	2013년 균형	전망	2014년 이후 20%대 후반	관리
2012~2016	점진적으로 개선	관리	점진적 하락(30% 이내)	전망
2013~2017	2017년 균형 수준	관리	30%대 중반	관리
2014~2018	점진적으로 개선	관리	30%대 중반	관리
2015~2019	점진적으로 개선	관리	40%대 초반	관리
2016~2020	단계적으로 회복	관리	40%대 초반	관리
2017~2021	Δ 2% 내외	관리	40% 초반	관리
2018~2022	Δ 3% 이내	관리	40% 초반	관리
2019~2023	연평균 Δ 3% 중반	관리	40%대 중반 이내	관리
2020~2024	Δ 5% 중반	관리	50% 후반 이내	관리
2021~2025	2022~2025년 Δ 4%대 (통합재정수지 Δ 3% 수준)	전망	50% 후반	전망
2022~2026	2026년 Δ 2%내외	전망/관리	50%대 중반 이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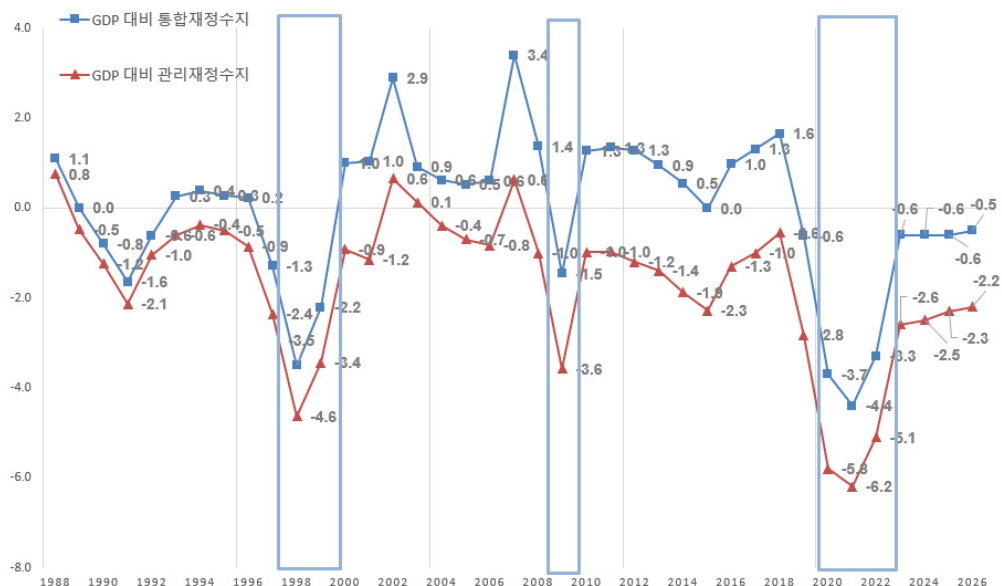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그러나 경기가 둔화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및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경기침체 시기의 관리재정수지는 Δ 3% 수준을 초과하여 왔다. 2019년 이전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Δ 3%를 초과한 것은 IMF 구제금융 시기였던 1998~1999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이었다.

2010년 이후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GDP의 $\Delta 3\%$ 를 처음 초과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Delta 6\%$ 내외를 기록하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Delta 4\%$ 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선회하여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Delta 2\%$ 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 주: 1. 그림의 박스 부분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Delta 3\%$ 이하 부분
 2. 1988~2021년은 실적치, 2022~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3. 2022년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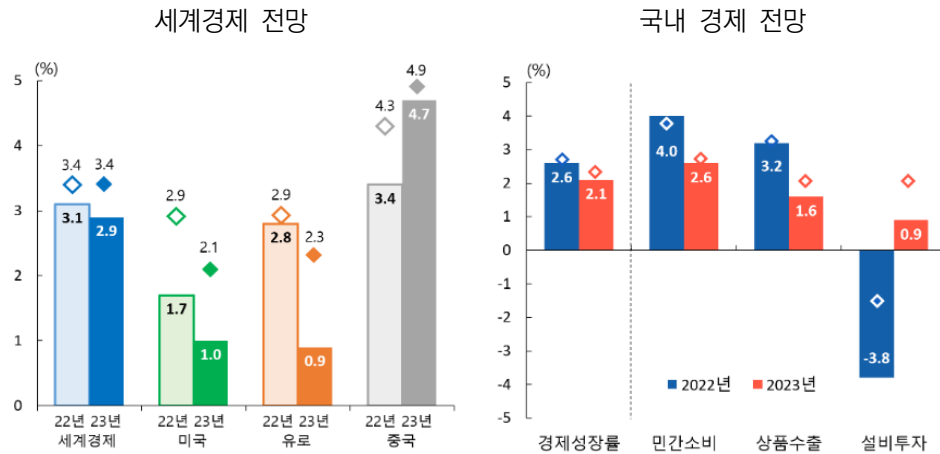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의 경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경상성장률 변동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의 변화 없이도 변동이 가능하다. 즉 국가채무의 증가 없이도 경상성장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GDP 대비 50%대 중반 이내의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은행의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⁹⁾, 물가 상승률에 따라

9) 한국은행, 「2022. 8월 경제전망」. 2022.8.

경상성장률은 증가할 수 있으나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2022년 내 세계 경제 및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 총수입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경제 전망 및 국내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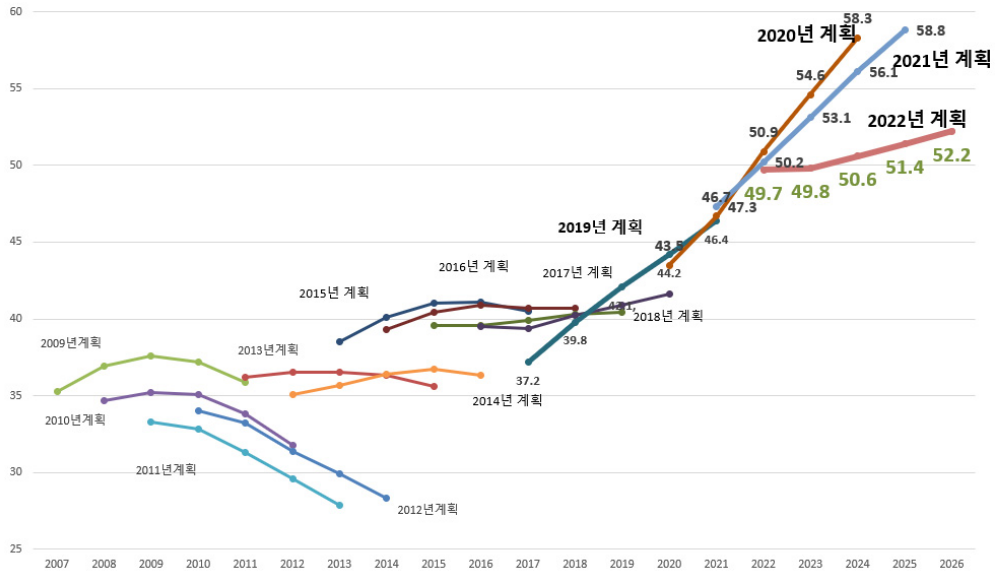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는 2022년 8월 전망치이며 ◇는 2022년 5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전망 기간 중 국가채무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획을 제시한바, 경기 하방 위험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이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했었다. 하지만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으로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지속세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국가채무 목표 비율이 축소되어 2025년 국가채무 비율 기준 전년도 계획에 비해 7.4%p 축소될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중기 기간 중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 NABO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¹⁰⁾

(1) NABO 중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을 전망한다.¹¹⁾ 총수입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며, 총지출의 경우 의무지출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전망하고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GDP 대비 28.7%)에서 2026년 703.2조원(GDP 대비 27.5%)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2년 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26년 721.1조원(GDP 대비 28.2%)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3.2%, 2023년 △0.6%, 2026년 △0.7%로 전망되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5.4%, 2023년 △2.6%, 2026년 △2.3%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26년 1,348.8조원(52.7%)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은 10년 기간(2022~2031년) 기간에 대해 재정총량을 전망하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를 위해 5년(2022~2026년) 기간의 전망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10년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2. 10.)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 재정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2021.12.), 거시경제변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전망치를 사용한다.

[NABO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2022~2026년)]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23.2	622.6	647.7	673.9	703.2	3.1
(GDP 대비 비율)	(28.7)	(27.4)	(27.4)	(27.4)	(27.5)	
국세수입	394.9	399.4	413.2	432.3	453.8	3.5
(전년 대비 증가율)	(14.8)	(1.2)	(3.4)	(4.6)	(5.0)	
국세외수입	228.3	223.1	234.5	241.5	249.4	2.2
(전년 대비 증가율)	(0.9)	(-2.3)	(5.1)	(3.0)	(3.2)	
총지출	691.8	636.6	664.8	692.0	721.1	1.0
(GDP 대비 비율)	(31.9)	(28.1)	(28.1)	(28.1)	(28.2)	
의무지출	342.0	339.3	356.8	375.3	397.5	3.8
(전년 대비 증가율)	(22.4)	(-0.8)	(5.2)	(5.2)	(5.9)	
재량지출	349.8	297.3	307.9	316.7	323.6	-1.9
(전년 대비 증가율)	(9.7)	(-15.0)	(3.6)	(2.8)	(2.2)	
통합재정수지	-68.6	-14.0	-17.1	-18.1	-17.9	
(GDP 대비 비율)	(-3.2)	(-0.6)	(-0.7)	(-0.7)	(-0.7)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5	44.2	42.8	41.7	39.9	
(GDP 대비 비율)	(2.3)	(1.9)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8.1	-58.2	-59.8	-59.8	-57.8	
(GDP 대비 비율)	(-5.4)	(-2.6)	(-2.5)	(-2.4)	(-2.3)	
국가채무	1,068.8	1,134.8	1,202.4	1,275.5	1,348.8	6.0
(GDP 대비 비율)	(49.3)	(50.0)	(50.8)	(51.8)	(52.7)	

주: 2022년 의무지출에는 2022년 지방이전재원 정산분(11.2조원)이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의무지출 관련 제도변화, 재량지출 감축 계획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지만,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변수와 전망모형 등이 정부와 다르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가 있다.

총량 수준에서 NABO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총수입의 경우 5년 동안 NABO가 정부보다 21.0조원 낮으며, 총지출은 NABO가 정부보다 9.9조원 낮은 수준이다. 총지출의 차이보다 총수입의 차이가 크므로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보다 12.3조원 크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기준으로 0.5%p 높다.¹²⁾

다만, 2022년의 경우는 총수입·총지출 모두 NABO가 정부보다 높은데, 총수입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이 정부 예산(20.5조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31.3조원)되고, 총지출은 2022년 4월에 정산된 지방이전재원(11.2조원)을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¹³⁾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단위: 조원, %p)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총수입	14.1	-3.4	-8.0	-11.7	-12.0	-21.0
국세수입	-1.8	-1.0	-5.6	-6.8	-6.1	-21.3
국세외수입	15.9	-2.3	-2.5	-4.9	-5.9	0.3
총지출	12.3	-2.5	-5.0	-7.2	-7.6	-9.9
의무지출	12.3	-2.5	-5.0	-7.2	-7.6	-9.9
복지분야	3.4	-0.9	-0.1	-0.5	-0.5	1.3
지방이전재원	8.9	0.0	-1.7	-2.2	-1.7	3.3
이자지출	0.0	-1.5	-3.2	-4.5	-5.4	-14.5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재량지출	0.0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1.8	-0.9	-3.1	-4.4	-4.5	-11.1
(GDP 대비 비율)	(0.1)	(-0.0)	(-0.1)	(-0.2)	(-0.2)	
관리재정수지	-7.3	-0.1	-1.3	-2.4	-1.3	-12.3
(GDP 대비 비율)	(-0.4)	(-0.0)	(-0.1)	(-0.1)	(-0.1)	
국가채무	0.0	0.0	1.2	3.6	4.9	
(GDP 대비 비율)	(0.2)	(0.2)	(0.2)	(0.3)	(0.5)	

주: 1. GDP 대비 비율은 중기재정전망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에 근거하며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에 근거함

2.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12) 이러한 차이에는 국가채무 금액 차이뿐 아니라 NABO와 정부의 경상GDP 차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2년 추경(2회) 기준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49.7%이나, 2022년 경상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최근 경제전망(「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2. 6. 16.)을 고려할 때 정부의 2022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추정된다.

13) 전년도 초과세수 등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정산분은 “세출외”로 운영되므로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면, 국세수입의 경우 NABO가 정부보다 연도별로 1.0~6.8조원 낮으며, 2022~2026년 동안 총 21.3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전망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연도별로 △5.9~15.9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NABO가 정부보다 5년 동안 총 0.3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납 실적 등을 고려한 2022년 전망치는 NABO가 정부보다 높으나, 2023년 이후는 NABO가 정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NABO의 경상GDP 전망이 정부보다 낮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

재량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정하였으므로 총지출의 차이는 의무지출에서 비롯된다. 복지 분야의 경우 2022년은 NABO가 정부보다 높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지출이 2022년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예산 대비 각각 2.9조원, 0.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2023년 이후는 NABO가 정부보다 낮는데 이는 주로 사학연금, 산재보험,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의 급여지출이 정부 계획보다 낮게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2022년은 NABO가 정부보다 높는데, 이는 정부가 2022년 4월에 정산한 지방이전재원(11.2조원)을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3년 이후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는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전망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자지출의 경우 NABO가 정부보다 낮는데, 이는 국고채 이자지출에서 비롯된다. NABO는 최근 국고채 이자율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3~2026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46.0~60.6조원 수준임을 고려하여 2022년 15.7조원에서 2026년 21.9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이자지출이 2022년 15.7조원에서 2026년 27.3조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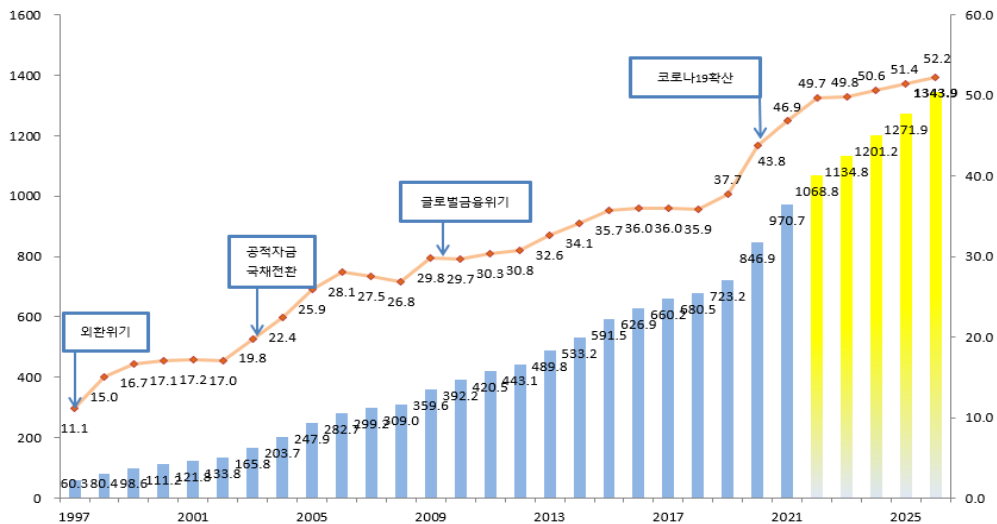
라. 국가채무 분석

(1)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국가채무는 2023년 1,134.8조원(GDP 대비 49.8%)에서 2026년 1,343.9조원(GDP 대비 52.2%)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과거 국가채무는 1997년 GDP 대비 11.1%에서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2003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요된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으로 인해 2006년 GDP 대비 28%까지 도달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 2015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6%까지 증가하였다. 정부는 2022년부터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 1,343.9조원(GDP 대비 52.2%)이 될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2016년(626.9조원)부터 2026년(1,343.9조원)까지 10년간 114.4% 상승하는 것으로 연간 7.9%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주: 2022년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2.9.

적자성 채무는 2016년 359.9조원(전체 국가채무의 57.4%)에서 2026년 866.1조원(전체 국가채무의 64.5%)으로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9.2% 증가하여 증가속도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이다. 이에 반해,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국민 부담으로 바로 연결되는 채무이다. 최근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세가 적자성 채무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국가 채무												
		적자성 채무					지방 정부 순채무	금융성 채무					
일반 회계	적자 보전		공적 자금	기타 적자 성	외환 시장	국민 주택			공자 기금 여유재 원조정	기타 금융 성			
2016	626.9	359.9 (57.4)	271.3 (43.3)	48.5	5.1	35.0	267.0 (42.6)	209.8	64.0	△39.6	32.8		
2017	660.2	374.8 (56.8)	289.6 (43.9)	47.5	4.9	32.8	285.4 (43.2)	222.3	69.4	△32.9	26.6		
2018	680.5	379.2 (55.7)	300.4 (44.1)	45.3	4.7	28.7	301.3 (44.3)	234.9	73.3	△34.1	27.2		
2019	723.2	407.6 (56.4)	334.7 (46.3)	44.1	4.6	24.2	315.6 (43.6)	247.2	76.4	△34.9	26.9		
2020	846.9	512.7 (60.6)	437.5 (51.7)	42.8	5.2	27.5	333.9 (39.4)	256.4	78.9	△39.5	38.1		
2021	970.7	597.5 (61.6)	523.1 (53.9)	38.6	4.2	31.5	373.2 (38.4)	263.8	82.2	△23.7	50.9		
2022	1068.8	678.2 (63.5)	610.8 (57.1)	32.2	4.1	31.1	390.6 (36.5)	271.0	85.9	△24.5	58.3		
2023	1,134.8	721.5 (63.6)	656.8 (57.9)	28.0	4.1	32.6	413.3 (36.4)	279.0	86.8	△14.4	61.8		
2024	1,201.2	785 (64.0)	709.9 (59.1)	22.9	4.0	31.7	432.7 (36.0)	284.2	89.4	△9.1	68.2		
2025	1,271.9	816.5 (64.2)	766.8 (60.3)	16.6	2.9	30.3	455.4 (35.8)	289.5	88.8	2.2	74.9		
2026	1,349.9	866.1 (64.5)	826.1 (61.5)	10.2	1.9	28.0	477.7 (35.5)	295.4	88.0	12.7	81.6		
'16~'26 증가율	7.9	9.2	11.8	△14.4	△9.5	△2.2	6.0	3.5	3.2	△14.4	9.5		

주: 1. 괄호 안은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율

2. 2022년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치임

3. 공공자금 여유재원 조정의 음수 부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각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수 받은 여유자금을 활용함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재원으로 발행했어야 하는 국고채를 적게 발행한 것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2.9. 등

특히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2016~2026년 동안 연평균

11.8% 증가하며 2020년부터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 이상(51.7%)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 기간 국가채무 증가분 717조원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 증가분이 554.8조원에 달해 국가채무 증가분의 77.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의 구성별로 살펴보면 국채는 2016년 587.5조원에서 2026년 1,314.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2016년 516.9조원에서 2026년 1,211.8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성별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6~'26 증가율
국가채무	626.9	660.2	680.5	723.2	846.6	970.7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7.9
국채	587.5	623.3	648.4	696.3	815.2	937.0	1,035.8	1,100.7	1,168.1	1,240.3	1,314.6	8.4
국고채	516.9	546.7	567.0	611.5	726.8	843.7	937.5	999.0	1,064.1	1,137.1	1,211.8	8.9
국민 주택채	64.0	69.4	73.3	76.4	78.9	82.2	85.9	86.8	89.4	88.8	88.0	3.2
외평채	6.7	7.2	8.0	8.3	9.5	11.2	12.3	14.9	14.6	14.4	14.8	8.3
차입금 (국내)	3.9	3.8	3.2	2.6	3.3	2.0	1.9	1.2	1.2	1.1	1.1	△12.1
국고채무 부담행위	0.5	0.2	0.2	0.1	0.7	0.1	0.1	0.2	0.2	0.2	0.2	△8.2
지방정부 순채무	35.0	32.8	28.7	24.2	27.5	31.5	31.1	32.6	31.7	30.3	28.0	△2.2

주: 2022년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2.9. 등

(2) 국고채 규모 증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지출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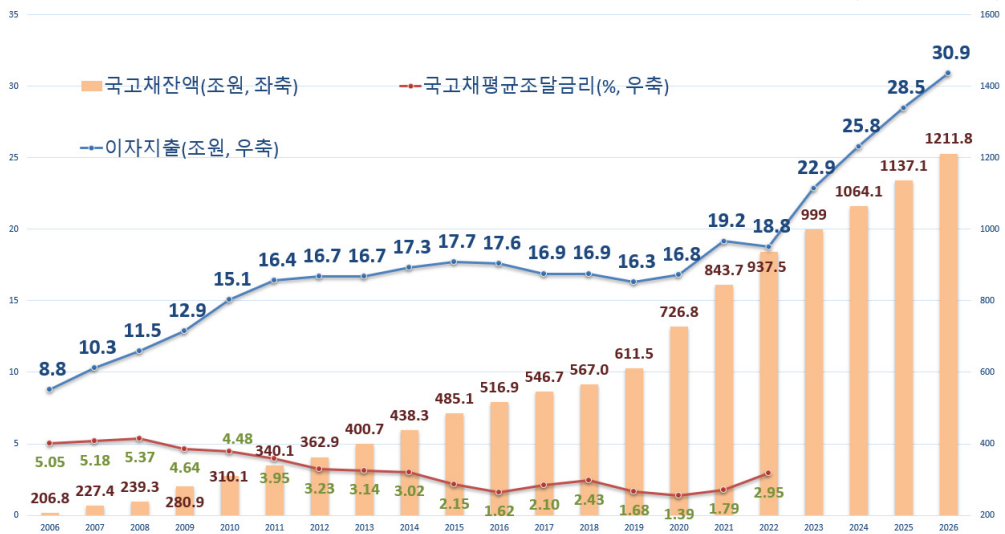
국가채무 규모 증가와 더불어 최근 금리 상승 추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재정당국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규모에 따른 이자지출 부분을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국가채무 이자지출의 92.4%를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국고채 잔액은 국가채무 중 89.8%)의 경우, 2000년대에는 낮은 수준의 국고채 잔액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로 인

해 국고채 이자지출액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고채 잔액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통화 긴축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가 인상되었다. 2021년 기준 1.79%의 조달금리 수준이 2022년 8월말 기준 2.95%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이자지출은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18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19.2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국고채 잔액, 평균 조달 금리 및 이자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출 비용은 총 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3% 증가하여 2026년에는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14) 다만,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연도별 국고채 이자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어 왔다. 2014~2021년 저금리 기조하에서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의 불용액은 최저 2018년 5,167억 7,000만원에서 최대 2020년 1조 6,318억 3,600만원 등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어 왔으며, 국고채 금리에 대한 정부안은 국회확정 및 평균 조달 금리에 비해 높게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NABO 중기 재정전망에서는 연례적 이자비용 과다 편성 및 적자국채 발행 규모 등을 반영하여 국고채 이자지출 전망을 2022년 15.7조원에서 2026년 21.9조원으로 정부치보다 낮게 전망하였다.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이자지출 전망]

(단위: 억원, %)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A)					
합계	189,082	187,882	229,130	257,705	285,255	308,753	13.0
공공자금관리기금	156,660	156,660	192,071	222,071	250,071	273,071	14.9
국채이자							
주택도시기금	12,292	12,292	13,721	10,875	9,506	9,565	△0.3
국공채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9,801	8,601	11,899	11,899	11,899	11,899	5.0
지급이자							
기타	10,329	10,329	11,439	12,859	13,778	14,217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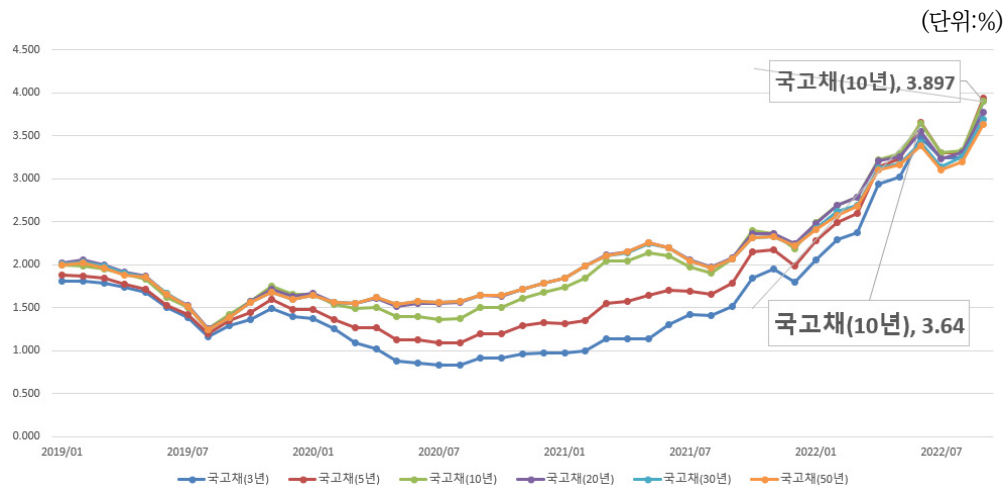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2.9. 등

이러한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국가채무 규모의 급증 없이도 최근 국고채 시장금리 증가와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추후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2022년 9월 까지의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단기물과 장기물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였다. 경기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21년 국고채 금리는 3년 만기채의 경우 전년 1.0%에서 1.4%, 10년 만기채의 경우 1.5%에서 2.1%로 상승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 3년만기 국고채 금리의 경우 2021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2년 3.0%로 상승하며, 2023년 평균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¹⁵⁾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현재 3년만기 국고채 시장금리의 경우 3.9%에 이르며, 주요국 국채금리 비교시 많이 사용되는 국고채 10년 만기 금리는 3.897% 수준이다.¹⁶⁾

[2019.1.~2022.9. 만기물별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1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2. 10, pp. 15~31.

16)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첨부서류인 「2022~2026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잔존만기별 국가채무 비중은 10년물 이상이 32.4%로 구성되며, 5~10년물이 24%, 1~3년물이 21.4% 순으로 많다.



자료: 한국은행

향후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고채 잔액이 유지되더라도 조달금리 수준에 따라 이자지출 규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2022년 8월말 기준 평균 조달금리가 2.95%이며, 2023년 예산안 편성 금리가 4%인 점¹⁾ 등을 감안하여 3~4% 수준의 평균 조달금리를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평균 신규 국고채 발행분에 대한

17) 2012년부터 연도별 신규 국고채 금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신규 국고채 금리 현황]

(단위: %)

구 분	정부안	국회 확정(A)	평균조달금리(B)	차이 (A-B)
2012	5.0	4.5	3.23	1.27
2013	4.8	4.0	3.14	0.86
2014	4.8	4.0	3.02	0.98
2015	4.5	3.5	2.15	1.35
2016	3.5	2.8	1.62	1.18
2017	2.3	2.3	2.10	0.20
2018	2.7	2.7	2.43	0.27
2019	3.5	3.5	1.68	1.82
2020	2.6	2.6 ¹⁾	1.38	1.22
2021	2.4	2.4	1.79	0.61
2022	2.6	2.6	2.95 ²⁾	△0.35
2023	4.0			

주 1) 2020년 국회확정금리는 2.6%에서 2차 추경 이후 2.1%로 하향 조정됨

2) 2022년 8월 기준(22.1월~8월)

자료: 기획재정부

이자지출은 2.53조원에서 3.37조원에 이르며, 2022~2026년 평균 국고채 잔액에 대한 이자지출 금액은 23.13조원에서 30.84조원 규모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2022 계획 연평균 국고채 이자비용 민감도 테스트]

(단위: 조원)

조달금리	신규 국고채 증가분 ¹⁾	국고채 잔액 ²⁾
3.0%	2.5298	23.1275
3.5%	2.9514	26.9821
4.0%	3.3730	30.8366

주. 1) 2022~2026 계획 평균 국고채 증가액 84.3조원

2) 2022~2026 계획 평균 국고채 잔액 914.2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기업 및 가계의 자금 조달 시 기준 금리로 작용하므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과 가계의 조달 금리 및 이자비용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이는 가계부채가 2021년 기준 GDP 대비 105.8%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3.0% 증가세를 보인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 구축 등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기업 부채의 경우에도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2019년부터 100%를 초과하여 2021년 기준 113.7%를 기록, 선진국(94.2%) 및 신흥국 평균(110.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¹⁸⁾

한편, 국고채 시장에서는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라 주요 국고채 투자기관의 수급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금리의 상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된다.¹⁹⁾ 주요 국고채 투자 기관인 은행, 보험사, 연기금 및 증권사의 경우, 2020년(18.8%)과 2021년(16.9%) 국고채 잔액 증가율이 최근 연평균 자산 증가율(7.1~14.4%)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수급 여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연기금은 국내채권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²⁰⁾, 주요국에 비해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여력도 상대

18)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2. 10, pp. 15~31.

19)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포커스, 최근 국고채 시장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 참고. 2021.12호

20)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내채권 투자비중이 2011년 64%에서 2020년 39%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채권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하는 물량의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한 가운데 외국인 보유 비중은 주요 선진국 평균(23.2%)에 비해 18.7%로 낮은 상황이다.²¹⁾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해당기간 동안 연평균 84.3조원의 국고채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채권시장에서 신규발행 국고채가 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국고채 발행 시 상반기와 하반기 연물 구성 등을 달리하는 등 관리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5년에는 25% 내외로 더욱 축소될 예정이다. (『자본시장포커스』 재인용)

21)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22.9.

가. 2023년도 총수입 전망

(1) 총수입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총수입을 전년 대비 0.6조원(△0.1%) 감소한 622.6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625.9조원)을 3.4조원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3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0.6조원(△0.1%) 감소한 622.6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625.9조원 대비 3.4조원 낮은 수준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경기회복세 둔화로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세가 완만한 가운데, 자산시장 부진에 따른 자산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6조원(1.2%) 증가에 그친 399.4조원으로 전망되며, 예산안을 1.0조원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외수입은 기금운용수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2조원(△2.3%) 감소한 223.1조원으로 전망되며, 예산안보다 2.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2			2023				
	본예산	추경 예산	NABO 전망(A)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차이 (C-B)
						증감액	증감률	
총수입	553.6	609.1	623.2	625.9	622.6	△0.6	△0.1	△3.4
국세수입	343.4	396.6	394.9	400.5	399.4	4.6	1.2	△1.0
국세외수입	210.2	212.4	228.3	225.5	223.1	△5.2	△2.3	△2.3
세외수입	26.1	28.3	31.9	25.2	25.1	△6.8	△21.4	△0.1
기금수입	184.1	184.1	196.4	200.3	198.0	1.6	0.8	△2.2
(사회보장기여금)	80.7	80.7	82.0	86.1	86.3	4.3	5.2	0.2

주: 2022년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 국세수입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국세수입을 2022년 전망 대비 4.6조원(1.2%) 증가한 399.4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국세수입(400.5조원)을 1.0조원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3년 국세수입은 399.4조원으로, 2022년 전망(394.9조원) 대비 4.6조원(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미국의 통화 긴축기조 강화 등 대내외 경제의 하방 위험 증대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인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변화에 따른 세수 감소도 국세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400.5조원) 대비 1.0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자산세수가 정부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32.4조원으로, 전년 대비 2.9조원(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명목임금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와 2022년 소비회복에 따른 2023년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화 긴축기조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106.0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법인 영업실적이 상반기까지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세수증가율은 전년 45.3%에서 3.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82.7조원으로 전년 대비 2.6조원(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 등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과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¹⁾으로 인한 국세분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세수 증가가 일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부분의 기타 세목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

1) 2021년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을 '21년 21%에서 '22년 23.7%, '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21.9.13.가결)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21.12.2.가결)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나,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는 3.9조원으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증권거래 규모 위축과 세율 인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7조원(△41.0%) 감소가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는 5.7조원으로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조원(△16.9%) 감소할 전망이다.

[2023년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2		2023				
	추경 예산 ¹⁾	NABO 전망(A)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차이 (C-B)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396.6	394.9	400.5	399.4	4.6	1.2	△1.0
일반회계	386.2	384.2	390.3	390.0	5.8	1.5	△0.3
내국세	351.9	350.6	358.0	357.3	6.7	1.9	△0.6
1. 소득세	127.8	129.5	131.9	132.4	2.9	2.2	0.5
2. 법인세	104.1	102.3	105.0	106.0	3.7	3.6	1.0
3. 상속증여세	15.9	15.4	17.1	16.5	1.1	7.2	△0.6
4. 부가가치세	79.3	80.1	83.2	82.7	2.6	3.2	△0.5
5. 개별소비세	10.1	9.2	10.2	10.3	1.1	12.6	0.1
6. 증권거래세	7.5	6.5	5.0	3.9	△2.7	△41.0	△1.1
7. 인 지 세	0.9	0.8	0.8	0.8	0.0	△3.7	△0.0
8. 과년도수입	6.2	6.8	4.8	4.8	△2.0	△29.8	0.0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1.4	11.1	11.4	0.0	0.1	0.2
관 세	8.7	10.7	10.7	10.8	0.1	0.8	0.1
교 육 세	5.3	4.6	4.7	4.8	0.2	4.1	0.1
종합부동산세	7.4	6.9	5.7	5.7	△1.2	△16.9	△0.0
특별회계	10.4	10.7	10.2	9.4	△1.3	△11.8	△0.8
주 세	3.7	3.5	3.2	3.1	△0.3	△9.1	△0.1
농 특 세	6.7	7.2	7.0	6.3	△0.9	△13.1	△0.7

주: 1) 추경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3) 국세외수입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국세외수입을 2022년 전망 대비 5.2조원($\Delta 2.3\%$) 감소한 223.1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국세외수입(225.5조원)을 2.3조원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3년 국세외수입은 223.1조원으로, 2022년 전망(228.3조원) 대비 5.2조원($\Delta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225.5조원) 대비로는 2.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세외수입 변화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화 긴축기조 강화 등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의 영향으로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운용수익이 감소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

회계·기금별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23년 25.1조원으로 대내외 금리와 환율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한국은행 잉여금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8조원($\Delta 2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산안 대비로는 0.1조원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수입은 기타 기금수입 감소에도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23년 198.0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타 기금수입에 대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차이 등으로 기금수입은 정부 예산안을 2.2조원 하회할 전망이다.

기금의 성질별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023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86.3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원(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여금과 사학연금기여금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는 감소하지만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증가로 전반적인 기여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이전수입에 수납되는 2023년 공무원과 군인 연금수입은 18.5조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납부 부담금 증가가 반영된 결과 2022년 전망 대비 1.9조원(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기타 기금수입은 전기요금 판매단가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인 전력사업 기반기금부담금 증가 등이 예상됨에도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2022년 전망 대비 4.5조원($\Delta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도 국세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2		2023				
	추경 예산 ¹⁾	NABO 전망(A)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차이 (C-B)
					증감액	증감률	
국세외수입	212.4	228.3	225.5	223.1	△5.2	△2.3	△2.3
세외수입	28.3	31.9	25.2	25.1	△6.8	△21.4	△0.1
기금수입	184.1	196.4	200.3	198.0	1.6	0.8	△2.2
사회보장기여금	80.7	82.0	86.1	86.3	4.3	5.2	0.2
연금수입	16.6	16.6	18.5	18.5	1.9	11.2	0.0
기타	86.8	97.8	95.7	93.3	△4.5	△4.6	△2.4

주: 1) 추경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나. 2022~2026년 총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을 2022년 623.2조원에서 2026년 703.2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2022년 609.1조원에서 715.2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도별로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전망의 차이는 △12.0~14.1조원이며, 5년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1.0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을 2022년 623.2조원에서 2026년 703.2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수입을 2022년 609.1조원에서 715.2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총수입 전망 차이는 연도별로 △12.0~14.1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5년 누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21.0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 국세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5년 합계 21.3조원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세외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5년 합계 0.3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은 정부 전망을 하회한다.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면,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크게 전망²⁾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기준이 되는 2022년 국세수입을 경상GDP 성장률 전망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1.8조원 낮게 전망한 것도 일부 기인한다. 한편, 국세외수입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전망 차이는 2022년 국세외수입 수납실적의 호조세 반영³⁾과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2022~2026년 총수입 전망 비교: NABO vs 정부]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22~'26 증감률/평균 [합계]
NABO	총수입	623.2	622.6	647.7	673.9	703.2	(3.1)
	국세수입	394.9	399.4	413.2	432.3	453.8	(3.5)
	국세외수입	228.3	223.1	234.5	241.5	249.4	(2.2)
	세외수입	31.9	25.1	26.8	26.9	27.0	(△4.1)
	기금수입	196.4	198.0	207.8	214.7	222.4	(3.2)
	경상성장률	4.7	4.6	4.3	4.1	3.9	(4.2)
정부	총수입	609.11)	625.9	655.7	685.6	715.2	(4.1)
	국세수입	396.61)	400.5	418.8	439.2	459.9	(3.8)
	국세외수입	212.41)	225.5	237.0	246.4	255.3	(4.7)
	세외수입	28.31)	25.2	26.9	27.7	28.1	(△0.2)
	기금수입	184.11)	200.3	210.1	218.7	227.2	(5.4)
	경상성장률	5.2	4.5	4.2	4.2	4.0	(4.2)
차이 (NABO -정부)	총수입	14.1	△3.4	△8.0	△11.7	△12.0	[△21.0]
	국세수입	△1.8	△1.0	△5.6	△6.8	△6.1	[△21.3]
	국세외수입	15.9	△2.3	△2.5	△4.9	△5.9	[0.3]
	세외수입	3.6	△0.1	△0.2	△0.8	△1.1	[1.4]
	기금수입	12.3	△2.2	△2.3	△4.0	△4.9	[△1.1]

주: 1) 제2회 추경예산기준임

1. ()는 연평균 증감률, []는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효과 추정치는 2023~2026년간 △56.4조원으로, 정부 추정치인 △47.2조원 대비 9.2조원 크게 전망하였다.

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7월까지의 수납실적 등을 반영하여 2022년 국세외수입을 전망하였다.

1. 개 관

정부는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발표 시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639.0조원의 분야별 자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총 226.6조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전년 대비 13.6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액 규모를 보였으며 교육 분야가 전년 대비 14.2%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SOC 분야의 재정규모가 축소되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5.6조원 감액하여 18.0% 감소하였는데, 이는 12대 분야별 가장 큰 감액 규모이며 감소율 역시 가장 크다.

[2023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 총지출	607.7	639.0	31.4	5.2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8.9	4.1
2. 교육	84.2	96.1	12.0	14.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1	77.3	12.2	18.8
3. 문화·체육·관광	9.1	8.5	△0.6	△6.5
4. 환경	11.9	12.4	0.5	3.9
5. R&D	29.8	30.7	0.9	3.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5.6	△18.0
7. SOC	28.0	25.1	△2.8	△10.2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0.6	2.4
9. 국방	54.6	57.1	2.5	4.6
10. 외교·통일	6.0	6.4	0.4	7.3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0.5	2.4
12. 일반·지방행정	98.1	111.7	13.6	13.9
※ 지방교부세	65.1	75.3	10.2	15.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2022. 9.

2014~2023년 기간 동안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재원배분 규모가 증가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R&D, 농림·수산·식품, 국방, 일반·지방행정 등 5개 분야이며,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6.7%)을 상회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환경, 일반·지방행정 등 4개 분야이다.

[2014~2023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안)	연평균 증가율
정부 총지출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558.0	607.7	639.0	6.7
1. 보건·복지·고용 (총지출 대비)	106.4 29.9	115.7 30.8	123.4 31.9	129.5 32.3	144.7 33.8	161.0 34.3	180.5 35.2	199.7 35.8	217.7 35.8	226.6 35.5	8.8
2. 교육 (총지출 대비)	50.7 14.3	52.9 14.1	53.2 13.8	57.4 14.3	64.2 15.0	70.6 15.0	72.6 14.2	71.2 12.8	84.2 13.9	96.1 15.0	7.4
3. 문화·체육·관광 (총지출 대비)	5.4 1.5	6.1 1.6	6.6 1.7	6.9 1.7	6.5 1.5	7.2 1.5	8.0 1.6	8.5 1.5	9.1 1.5	8.5 1.3	5.2
4. 환경 (총지출 대비)	6.5 1.8	6.8 1.8	6.9 1.8	6.9 1.7	6.9 1.6	7.4 1.6	9.0 1.8	10.6 1.9	11.9 2.0	12.4 1.9	7.4
5. R&D (총지출 대비)	17.7 5.0	18.9 5.0	19.1 4.9	19.5 4.9	19.7 4.6	20.5 4.4	24.2 4.7	27.4 4.9	29.8 4.9	30.7 4.8	6.3
6. 산업·중소·에너지 (총지출 대비)	15.4 4.3	16.4 4.4	16.3 4.2	16.0 4.0	16.3 3.8	18.8 4.0	23.7 4.6	28.6 5.1	31.3 5.2	25.7 4.0	5.9
7. SOC (총지출 대비)	23.7 6.7	24.8 6.6	23.7 6.1	22.1 5.5	19.0 4.4	19.8 4.2	23.2 4.5	26.5 4.8	28.0 4.6	25.1 3.9	0.6
8. 농림·수산·식품 (총지출 대비)	18.7 5.3	19.3 5.1	19.4 5.0	19.6 4.9	19.7 4.6	20.0 4.3	21.5 4.2	22.7 4.1	23.7 3.9	24.2 3.8	2.9
9. 국방 (총지출 대비)	35.7 10.0	37.5 10.0	38.8 10.0	40.3 10.1	43.2 10.1	46.7 9.9	50.2 9.8	52.8 9.5	54.6 9.0	57.1 8.9	5.4
10. 외교·통일 (총지출 대비)	4.2 1.2	4.5 1.2	4.7 1.2	4.6 1.2	4.7 1.1	5.1 1.1	5.5 1.1	5.7 1.0	6.0 1.0	6.4 1.0	4.8
11. 공공질서·안전 (총지출 대비)	15.8 4.4	16.9 4.5	17.5 4.5	18.1 4.5	19.1 4.5	20.1 4.3	20.8 4.1	22.3 4.0	22.3 3.7	22.9 3.6	4.2
12. 일반·지방행정 (총지출 대비)	57.2 16.1	58.0 15.5	59.5 15.4	63.3 15.8	69.0 16.1	76.6 16.3	79.0 15.4	84.7 15.2	98.1 16.1	111.7 17.5	7.7

주. 본예산 기준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및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2~2026년 기간 동안의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4.6%)을 상회하는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분야이며, 일반·지방행정의 연평균 증가율이 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체육·관광($\Delta 0.1\%$), 산업·중소기업·에너지($\Delta 2.6\%$), SOC($\Delta 1.8\%$)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음의 값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6년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안)	2024(안)	2025(안)	2026(안)	2022~2026 연평균 증가율
정부 총지출	607.7	639.0	669.7	669.2	728.6	4.6
(전년 대비 증감률)	8.9	5.2	4.8	$\Delta 0.1$	8.9	.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238.6	254.4	269.5	5.5
(전년 대비 증감률)	9.0	4.1	5.3	6.6	5.9	.
2. 교육	84.2	96.1	100.3	101.7	105.9	5.9
(전년 대비 증감률)	18.3	14.2	4.4	1.4	4.1	.
3. 문화·체육·관광	9.1	8.5	8.7	8.9	9.1	$\Delta 0.1$
(전년 대비 증감률)	7.1	$\Delta 6.5$	2.4	2.3	2.2	.
4. 환경	11.9	12.4	12.9	13.3	13.5	3.2
(전년 대비 증감률)	12.3	3.9	4.0	3.1	1.5	.
5. R&D	29.8	30.7	32.0	33.2	34.4	3.7
(전년 대비 증감률)	8.8	3.0	4.2	3.8	3.6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26.6	27.4	28.1	$\Delta 2.6$
(전년 대비 증감률)	9.4	$\Delta 18.0$	3.5	3.0	2.6	.
7. SOC	28.0	25.1	25.5	25.8	26.0	$\Delta 1.8$
(전년 대비 증감률)	5.7	$\Delta 10.2$	1.6	1.2	0.8	.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24.5	24.7	24.9	1.3
(전년 대비 증감률)	4.4	2.4	1.2	0.8	0.8	.
9. 국방	54.6	57.1	59.5	61.8	63.8	4.0
(전년 대비 증감률)	3.4	4.6	4.2	3.9	3.2	.
10. 외교·통일	6.0	6.4	6.7	7.0	7.2	4.7
(전년 대비 증감률)	5.3	7.3	4.7	4.5	2.9	.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23.8	24.7	25.6	3.5
(전년 대비 증감률)	0.0	2.4	3.9	3.8	3.6	.
12. 일반·지방행정	98.1	111.7	120.3	126.5	132.2	7.7
(전년 대비 증감률)	15.8	13.9	7.7	5.2	4.5	.

주: 2022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12대 분야 분류체계 분석

가. 현 황

정부는 2006년도 예산안 개요 및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부터 국가 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부터 현재와 같은 12대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 한 프로그램예산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을 16대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 회 계연도 결산보고서 역시 16대 분야로 작성하고 있다.

12대 분야의 단순합계(647.7조원)와 16대 분야를 통해 산출한 총지출(639.0조 원)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12대 분야 중 R&D 분야와 타 분야의 R&D 예산이 중 복 계상되며, 12대 분야 중 국방 분야는 총지출이 아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일반회 계 총계로 산출되는 것에 기인한다.

[국가재정 분류체계 비교]

(단위: 조원)

12대 분야			16대 분야(프로그램예산제도)		
연번	분야	2023 예산안	연번	[코드번호] 분야	2023 예산안
1	보건·복지·고용	226.6	1	[080] 사회복지	205.8
			2	[090] 보건	20.7
			소 계		226.6
2	교육	96.1	3	[050] 교육	96.1
3	문화·체육·관광	8.5	4	[060] 문화및관광	8.5
4	환경	12.4	9	[070] 환경	12.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7	5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7
7	SOC	25.1	6	[120] 교통및물류	20.9
			7	[140] 국토및지역개발	4.3
			소 계		25.1
8	농림·수산·식품	24.2	8	[100] 농림수산	24.2
9	국방	57.1	10	[040] 국방	55.4
10	외교·통일	6.4	11	[030] 통일·외교	6.4
11	공공질서·안전	22.9	12	[020] 공공질서및안전	22.9
12	일반·지방행정	111.7	13	[010] 일반·지방행정	111.7
5	R&D	30.7	14	[150] 과학기술	9.8
-	-		15	[130] 통신	9.0
-	-		16	[160] 예비비	5.2
12대 분야 단순합계		647.7	합 계(총지출)		639.0

자료: 「2023년도 예산안」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2대 분야와 16대 분야의 분류체계가 상이한 R&D 및 국방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R&D 분야

첫째, 12대 분야 중 R&D 분야 구성방식으로 인해 R&D 예산이 12대 분야 총 재정지출에 중복 계상되며, 16대 분야 구성과 일치하지 않아 R&D 예산과 결산 간 연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12대 중 R&D 분야는 타 분야의 R&D 예산을 계상한 분야로, 16대 분야로는 과학기술 분야와 그 외 분야의 R&D사업 예산을 포함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2대 분야의 R&D 분야 예산안(30.7조원)보다 16대 분야를 통해 산출한 R&D 예산안(32.8조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R&D 분야에 포함되는 연구개발예산이 사업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분류하고 그에 속하는 사업 예산의 합을 R&D 분야 예산으로 계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12대 분야 예산 산출방식에 따른 R&D 예산 비교]

(단위: 조원)

12대 분야			16대 분야(프로그램예산제도)		
연번	분야	2023 예산안	구분	[코드번호] 분야	2023 예산안
	R&D	30.7	R&D 사업 ¹⁾	[150] 과학기술	9.8
				[010] 일반·지방행정	0.6
				[020] 공공질서및안전	0.3
				[030] 통일·외교	0.0
				[040] 국방	5.2
				[050] 교육	3.7
				[060] 문화및관광	0.3
				[070] 환경	0.4
				[080] 사회복지	0.0
				[090] 보건	1.0
				[100] 농림수산	1.5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5
				[120] 교통및물류	1.1
				[130] 통신	1.4
				[140] 국토및지역개발	0.0
				계	23.0
				합 계	32.8

주: 1)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명에 “R&D”로 구분명기되어 있는 사업을 의미

자료: 「2023년도 예산안」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연구개발예산은 ①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 연구개발기반조성 등은 전액 연구개발예산에 포함하고, ② 국립대학 등의 일반 운영지원,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연구개발활동을 병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은 관련 예산 중 연구개발예산만을 분리하며, ③ 시험분석, 품질인증, 일반목적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예산 등은 연구개발예산에서 제외한다.¹⁾

이처럼 R&D 예산을 별도의 분야로 재분류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산재된 R&D 사업들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인 운용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12대 분야에 R&D예산이 중복 계상됨에 따라 12대 분야의 총합과 총지출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시 16대 분야별 분류(프로그램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들로 인해 12대 분야 분류체

1) 연구개발예산 구분 유형

계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R&D 자원배분과 결산보고서의 결과가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R&D 분야 분류방식 상 16대 분야의 통신분야 비R&D 예산은 타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통신분야 비R&D 예산이 분야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12대 분야의 R&D 분야는 16대 분야 중 과학기술 분야와 그 외 분야의 R&D사업 예산을 포함하는데, 2023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12대 분야와 16대 분야 간 지출규

구 분	내 용
연구개발예산 전액 포함	- 국책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서비스 R&D 포함) 및 연구기획평가관리비 - 연구기관지원: 연구개발이 주목적인 국립연구기관, 출연(연) 및 대학연구소 및 연구기획·평가·관리가 주목적인 전문기관 등의 모든 지원경비(이공계, 인문사회계 모두 포함) - 연구개발기반조성: 연구개발시설, 연구동건립, 연구단지조성, 지역연구개발센터 등의 예산은 모두 포함 - 정책연구: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연구목적의 정책연구는 모두 포함
관련예산 중 연구개발예산만 분리 포함	- 국립대학 등의 일반 운영지원: 대학 일반지원금 중 교수 인건비에 대해 연구시간 계수를 적용하여 분리 포함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0.5 - 전문대·개방대·교육대: 0.3 -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연구목적이 명확한 대학연구시설, 대학연구소, 박사과정 연구지원 등은 전액 포함 - 특수고등교육기관(산업기술대학 등): 전체 지원금에 대해 대학의 연구시간계수를 적용 -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0.5 - 대학원과정이 없는 대학 및 전문대학: 0.3 - 연구활동을 병행하는 국립 시험검사기관 : {(인건비 + 기준성기본사업비) × 연구계수(연구인력 수/전체 인력 수)} + 주요사업비 중 연구개발사업 - 기타 출연·보조기관: 정부지원예산×연구계수(해당기관 연구개발비/전체 예산)
연구개발예산 제외	- 시험분석, 품질인증, 일반적인 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일반목적의 데이터, 수집·처리·분석 - SOC 설계 검토 등 타당성 조사 - 연구개발과 관계없는 특허 및 라이선스 관련 업무 - 일상적인 의료행위 - 용자지원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2022. 2.

모를 비교하면 예비비 5.2조원을 제외하고도 16대 분야 중 통신 분야의 비R&D 예산 7.6조원이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R&D · 통신 분야를 고려한 12대 분야 및 16대 분야 분류체계 비교]

(단위: 조원)

12대 분야			16대 분야(프로그램예산제도)		
연번	분야	2023 예산안	연번	[코드번호] 분야	2023 예산안
1	보건·복지·고용	226.6	1	[080] 사회복지	205.8
			2	[090] 보건	20.7
			소 계		226.6
2	교육	96.1	3	[050] 교육	96.1
3	문화·체육·관광	8.5	4	[060] 문화및관광	8.5
4	환경	12.4	5	[070] 환경	12.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5.7	6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7
7	SOC	25.1	7	[120] 교통및물류	20.9
			8	[140] 국토및지역개발	4.3
			소 계		25.1
8	농림·수산·식품	24.2	9	[100] 농림수산	24.2
9	국방	57.1	10	[040] 국방	55.4
10	외교·통일	6.4	11	[030] 통일·외교	6.4
11	공공질서·안전	22.9	12	[020] 공공질서및안전	22.9
12	일반·지방행정	111.7	13	[010] 일반·지방행정	111.7
5	R&D	30.7	14	[150] 과학기술	9.8
			15	[130] 통신 - R&D 예산	1.4
				그 외 분야 R&D 예산	21.6
			소 계		32.8
12대 분야 단순합계		647.7		합 계	647.8
			15	[130] 통신 - 비R&D 예산	7.6
			16	[160] 예비비	5.2
			총 지 출		639.0

자료: 「2023년도 예산안」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통신 분야 비R&D 지출이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기업특별회계 세출사업이 포함되는바 일반적인 재정투자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가 12대 분야에 통신 분야의 비R&D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기준 우편사업특별회계 4.0조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조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0.3조원 등 총 5.8조원을 제외하고 도, 일반회계 ·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비R&D 사업 지출 1.9조원이 12대 분야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2023년도 통신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회계명	2023예산안	R&D	
		R&D	비R&D
일반회계	9,589	5,304	4,28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89	146	1,844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66	12	154
기후대응기금	101	101	0
방송통신발전기금	7,054	4,118	2,936
정보통신진흥기금	13,401	3,830	9,571
우편사업특별회계	40,382	32	40,35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383	-	14,38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958	-	2,958
계	90,023	13,541	76,482

주: 1. 총지출 기준

2. R&D 사업은 세부사업명에 “R&D”로 구분명기되어 있는 사업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2) 국방 분야

12대 분야 분류체계에서 국방 분야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일반회계 총계 기준으로 발표되고 병무청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총지출 기준 12대 분야별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2대 분야 중 국방 분야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총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그에 따라 특별회계 및 군인복지기금 등 특별회계와 기금 사업비가 제외되며 병무청 소관 예산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방 관련 예산 구분]

(단위: 억원)

소관	16대 분야	회계/기금	사업구분	2023 예산안	총계	총지출	12대 분야
국방부	국방	일반회계	사업비	367,169	○	○	○
			내부거래	33,921	○	×	○
		국방·군사 시설이전특별회계	사업비	5,991	○	○	×
			내부거래	36	○	×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사업비	1,424	○	○	×
			내부거래	7,535	○	×	×
		군인복지기금	사업비	6,137	○	○	×
			내부거래	10	○	×	×
			여유자금	2,000	○	×	×
	사회복지	군인연금기금	사업비	38,465	○	○	△ ¹⁾
			여유자금	728	○	×	×
방위사업청	국방	일반회계	사업비	170,082	○	○	○
			내부거래	97	○	×	○
병무청	국방	일반회계	사업비	3,518	○	○	×
기획재정부	국방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비	45	○	○	×

주: 1)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16대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동 기금의 사업비는 12대 분야에 포함

2)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은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신축, 병무청 청사시설 취득 사업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이에 따라 12대 분야 중 국방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① 내부거래인 국방부의 군인연금기금 전출(3조 1,017억원) 및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공무원연금기금 전출(2,903억원, 97억원) 일부가 12대 분야 기준 총지출에 중복 계상된다.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 또는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전출은 일반회계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국방 분야의 예산안이 일반회계 총계를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해당 전출금(4.4조원)은 일차적으로 국방 분야 예산안에 계상된다.

한편, 현 12대 분야 분류체계에서 군인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과 함께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분류된다. 즉, 위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포함된 군인연금사업비(3.1조원) 및 공무원연금사업비(1.3조원)가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에 계상되며, 이로 인해 군인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이 국방 및 보건·복지·고용 두 개 분야에 중복된다.

[2023년도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내 내부거래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소관	사업명 (코드)	이전경로	2023예산안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전출 (군인연금 부담금)(8101-882)	일반회계 → 군인연금기금	31,017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 부담금) (8101-883)	일반회계 → 공무원연금기금	2,903
방위사업청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8810-880)	일반회계 → 공무원연금기금	9,70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②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업비(5,991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사업비(1,424억원), 군인복지기금 사업비(6,137억원) 및 병무청 일반회계 예산(3,518억원) 등이 국방전력 및 병력운영에 해당하는 지출임에도 총지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예산 및 자원배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12대 분야 분류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방비의 큰 변동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방비는 IMF·UN 등 국제기구에서 군사력 비교의 척도로 사용하는 지표로도 사용되어 장기시계열 간 통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총계를 사용하는 현 분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2005~2007년에 국방 분야 자원배분에 대하여 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 등을 포함하여 발표하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반회계로 국방비를 별도 제시한 바 있다.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국방 분야 자원배분 계획]

(단위: 억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 국방분야	238,761	259,894 (8.9)	283,115 (8.9)	308,598 (9.0)	336,207 (8.9)	8.9
- 예 산	234,922	255,974	279,125	304,456	332,034	9.0
- 기 금	3,839	3,920	4,030	4,142	4,173	2.1
※ 국방비 ¹⁾ (일반회계 기준)	244,972	267,082 (9.0)	291,025 (9.0)	317,278 (9.0)	345,270 (8.8)	9.0
• 국방부	178,165	189,238	200,421	211,912	223,545	5.8
• 방위사업청	66,807	77,844	90,604	105,366	121,725	16.2

주: 1)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자료: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한 IMF의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 2014)²⁾에 따르면, 정부 재정 중 국방 분야에 포함되는 항목은 육·해·공군 및 예비군 운영 등 군사방어, 민방위, 해외 군사원조, 국방 R&D 외에 국방 관련 정책·계획 등에 관계된 관리·운영·지원 등 기타 국방 업무이며, 군인연금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미 일반회계 기준 국방비와 국방분야를 별도로 제시한 전례가 있고, 정부기능별 국제분류기준에 따라서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일반회계만 국방분야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12대 분야의 대외 공개성 기능을 감안할 때 병력 운영 및 군인복지 등에 대한 사업비를 포함하고 내부거래는 제외하는 방식이 보다 정확한 군사비 규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거래 중복계산 및 16대 분야와의 불일치 등을 고려하여 12대 분야 중 국방 분야 예산 집계방식을 총지출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12대 분야별 예산분류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종합 검토

자원배분 체계를 12대 분야와 16대 분야 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분야별 예산과 결산 간 연계성을 저하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12대 분야의 세부 구성이 프로그램 예산제도 및 dBrain과 연계되지 않아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정보를 정부 측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s 2014」

이상의 12대 분야와 16대 분야 간 비교 내용을 종합하면, 12대 중 R&D 분야는 타 분야 R&D 예산을 포함함에 따라 12대 분야 지출에 중복으로 계상되고 16대 분야 기준 통신 분야의 비R&D 예산이 12대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다. 12대 중 국방 분야는 총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16대 분야 집계방식과 달리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과 중복계상되며 오히려 군인 복지 및 군사시설 이전 등의 재정지출을 포함하지 않아 12대 분야를 통해서는 군사비 규모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12대 분야와 16대 분야 간 분류체계가 상이함에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예산안과 결산을 각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발표하는 등 12대 분야와 16대 분야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 예산과 결산 간 연계성을 저하시켜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자원배분에 관한 국회의 심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12대 분야의 세부 구성이 프로그램예산제도 및 dBrain과 연계되지 않아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정보를 정부 측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결산 분류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12대 분야별 분석

가. 보건·복지·고용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9조원(4.1%) 증가한 226.6조원이 편성되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총 1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2.4조원(14.1%)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이유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요건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등을 통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2023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보건·복지·고용	2,176,659	2,265,701	89,042	4.1
고용	259,383	236,137	△23,246	△9.0
고용노동일반	6,045	6,340	295	4.9
공적연금	630,096	713,236	83,140	13.2
기초생활보장	167,638	191,355	23,717	14.1
노동	100,736	107,876	7,140	7.1
노인	204,592	231,143	26,551	13.0
보훈	59,308	62,182	2,874	4.8
사회복지일반	9,473	10,103	630	6.7
아동·보육	91,827	98,218	6,391	7.0
여성·가족·청소년	14,289	15,130	841	5.9
주택	358,263	334,600	△23,663	△6.6
취약계층지원	47,884	52,045	4,161	8.7
건강보험	119,242	124,102	4,860	4.1
보건의료	101,264	76,541	△24,723	△24.4
식품의약품안전	6,619	6,693	74	1.1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26.6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7.7조원 대비 8.9조원(4.1%) 증가하여 과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11.4%)에 비해 증가율이 하락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따라 2023년도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게 산출되어 총지출 내 보건·복지·고용 분야 비중은 2022년 35.8%에서 2023년 35.5%로 일부 감소되나, 2024년부터는 계속 증가하여 2026년에는 37.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보건·복지·고용(A)	129.5	144.6	161.0	180.5	199.7	11.4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32.3	33.7	34.3	35.2	35.8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보건·복지·고용(A)	217.7	226.6	238.6	254.4	269.5	5.5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35.8	35.5	35.6	36.4	37.0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제작됨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4.6% 보다 0.9%p 높다. 다만,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보건·복지·고용 분야 연평균증가율은 6.7%,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5%로, 그 차이가 1.2%p였는데, 이에 비해서는 0.3%p 감소한 수치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18~'22	144.6 (11.7)	162.2 (12.2)	179.0 (10.4)	196.4 (9.7)	214.3 (9.1)					(10.3)
'19~'23		161.0 (11.3)	181.6 (12.8)	198.4 (9.3)	213.2 (7.4)	229.1 (7.5)				(9.2)
'20~'24			180.5 (12.1)	199.9 (10.7)	217.4 (8.8)	230.2 (5.9)	242.7 (5.4)			(7.7)
'21~'25				199.7 (10.6)	216.7 (8.5)	232.2 (7.2)	246.1 (6.0)	259.3 (5.4)		(6.7)
'22~'26					217.7 (9.0)	226.6 (4.1)	238.6 (5.3)	254.4 (6.6)	269.5 (5.8)	(5.5)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제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안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18년 이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의 기간 동안 노인 부문의 비중이 7.6%에서 9.4%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기초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지급액 수준도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매년 1.5~1.7%의 비중을 차지하던 보건의료 부문이 2022년 4.7%까지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응을 위한 예산이 급증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비중 상승이다.³⁾

3) 부문별 지출 추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지출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 실제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비비 배정에 따라 2021년에도 지출액 및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18~2022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보건·복지·고용	1,446,166	1,609,972	1,805,430	1,997,427	2,176,658
기초생활보장	110,152 (7.6)	127,046 (7.9)	139,659 (7.7)	153,243 (7.7)	167,638 (7.7)
취약계층지원	26,204 (1.8)	34,019 (2.1)	39,603 (2.2)	45,132 (2.3)	47,884 (2.2)
공적연금	478,007 (33.1)	503,116 (31.2)	554,491 (30.7)	600,408 (30.1)	630,096 (28.9)
보 훈	55,256 (3.8)	55,588 (3.5)	57,345 (3.2)	58,866 (2.9)	59,308 (2.7)
주 택	233,870 (16.2)	257,309 (16.0)	297,314 (16.5)	335,184 (16.8)	358,263 (16.5)
사회복지일반	11,268 (0.8)	12,958 (0.8)	14,215 (0.8)	13,710 (0.7)	9,473 (0.4)
아동·보육	64,625 (4.5)	81,297 (5.0)	85,127 (4.7)	85,582 (4.3)	91,827 (4.2)
노 인	110,293 (7.6)	139,776 (8.7)	166,323 (9.2)	188,723 (9.4)	204,592 (9.4)
여성·가족·청소년	7,371 (0.5)	10,475 (0.7)	10,950 (0.6)	12,001 (0.6)	14,289 (0.7)
고 용	166,983 (11.5)	194,598 (12.1)	222,759 (12.3)	258,402 (12.9)	259,383 (11.9)
노 동	66,573 (4.6)	67,138 (4.2)	77,133 (4.3)	92,595 (4.6)	100,736 (4.6)
고용노동일반	4,548 (0.3)	5,449 (0.3)	5,291 (0.3)	5,574 (0.3)	6,045 (0.3)
보건의료	111,015 (7.7)	25,930 (1.6)	27,694 (1.5)	34,232 (1.7)	101,264 (4.7)
건강보험		90,187 (5.6)	101,956 (5.6)	107,688 (5.4)	119,242 (5.5)
식품의약품안전		5,086 (0.3)	5,568 (0.3)	6,086 (0.3)	6,619 (0.3)

주: 괄호 내 수치는 교육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2018년까지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부문이 별도 구분되지 않아 통합 표기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5.5%인데 반해 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노인 부문은 각각 9.6%, 9.5%, 9.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및 은퇴 후 공적연금 지급액의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

보건의료 부분의 경우 이례적으로 연평균 18.7%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생긴 2022년의 급격한 예산 증가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2026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고용	2,176,658	2,265,700	2,385,606	2,543,646	2,695,479	5.5
기초생활보장	167,638 (7.7)	191,355 (8.4)	206,288 (8.6)	222,013 (8.7)	241,601 (9.0)	9.6
취약계층지원	47,884 (0.8)	52,045 (2.3)	53,491 (2.2)	55,950 (2.2)	59,007 (2.2)	5.4
공적연금	630,096 (28.9)	713,236 (31.5)	767,222 (32.2)	835,860 (32.9)	905,161 (33.6)	9.5
보 훈	59,308 (2.7)	62,182 (2.7)	65,536 (2.7)	69,887 (2.7)	71,788 (2.7)	4.9
주 택	358,263 (16.5)	334,600 (14.8)	373,167 (15.6)	377,684 (14.8)	391,192 (14.5)	2.2
사회복지일반	9,473 (0.4)	10,103 (0.4)	10,401 (0.4)	10,740 (0.4)	11,060 (0.4)	3.9
아동·보육	91,827 (4.2)	98,218 (4.3)	104,020 (4.4)	109,035 (4.3)	110,176 (4.1)	4.7
노 인	204,592 (9.4)	231,143 (10.2)	250,110 (10.5)	271,314 (10.7)	294,507 (10.9)	9.5
여성·가족·청소년	14,289 (0.7)	15,130 (0.7)	15,986 (0.7)	16,956 (0.7)	18,000 (0.7)	5.9
고 용	259,383 (11.9)	236,137 (10.3)	246,949 (10.4)	259,386 (10.2)	260,877 (9.7)	0.1
노 동	100,736 (4.6)	107,876 (4.8)	113,818 (4.8)	120,780 (4.7)	128,327 (4.8)	6.2
고용노동일반	6,045 (0.3)	6,340 (0.3)	6,628 (0.3)	7,017 (0.3)	7,426 (0.3)	5.3
보건의료	101,264 (4.7)	76,541 (3.4)	38,840 (1.6)	41,608 (1.6)	44,170 (1.6)	△18.7
건강보험	119,242 (5.5)	124,102 (5.5)	124,657 (5.2)	131,664 (5.2)	139,434 (5.2)	4.0
식품의약품안전	6,619 (0.3)	6,693 (0.3)	7,086 (0.3)	7,749 (0.3)	8,283 (0.3)	5.8

주: 괄호 내 수치는 교육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건분야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관련하여 코로나 19 진행 상황, 백신 접종률, 위증증화율 및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잔여 백신 도입시기 및 물량을 조정하고, 백신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해외공여 등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백신 잔여 물량에 대한 활용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백신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⁴⁾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편성되고 있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총 9,318억 1,110만원이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사업 7,166억 9,500만원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내 내역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내용	2023년 예산안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 면역력 확보 등을 위한 '23년도 백신 구매 추진	716,695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150,599
백신유통관리	접종기관까지 백신이 안전하게 배송을 되도록 백신 전문유통업체에 대한 용역 시행, 백신접종을 위한 주사기 구입 등	27,585
이상반응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콜센터 운영 등	32,936
예방접종시스템 구축 및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	2,253
예방접종 홍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불안감 해소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	1,000
추진단 운영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운영비	743
합 계		931,811

자료: 질병관리청

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2. 10, pp. 154~159.

2022년 9월 기준으로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2억 6,270만회분이며, 이중 도입물량은 1억 5,688만회분, 접종에 활용된 백신은 1억 2,257만회분이다. 또한 백신 폐기 물량은 전체 도입 물량(1억 5,688만회분)의 3.9%인 610만회분이며, 잔여 백신은 총 1,852만회분이며 향후 1억 582만회분이 20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2022년 도입예정 백신 물량의 유효기간 및 코로나 유행 불확실성⁵⁾ 및 접종률⁶⁾ 등을 고려하여 2023년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1,500만회분 신규백신 구매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2가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며, 백신별 도입 물량 및 도입시기는 제약사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미 기존 도입 예정인 백신 물량이 1억 582만회분 남아있고, 백신의 유효기간(6개월~24개월)에 따라 백신 폐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3년 신규 백신 1,500만회분까지 도입된다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가 접종 등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잔여 물량이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코로나 19 진행 상황, 백신 접종률, 위중증화율 및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잔여 백신 도입시기 및 물량을 조정하고, 백신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백신 잔여 물량에 대한 활용대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분야 법정 의무지출 예산 중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 간 정합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기초연금(18.5조원), 의료급여(9.1조원), 생계급여(6조원)이다. 동 사업들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사업들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5) '23년 동절기 대비 접종 가능성, 오미크론 이후 '23년 신규 변이 대응 개량백신 개발 가능성 등

6) 18세 이상 국민 4,430만명 중 접종률 37.4%(22. 8. 1일 기준 60세 이상 4차 접종률) 적용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규모 상위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초연금지급 (2131-300)	14,962,931	16,114,031	16,289,504	18,530,432	2,240,928	13.8
의료급여 (1132-302)	7,650,439	8,123,234	8,123,234	9,098,368	975,134	12.0
생계급여 (1131-300)	4,654,086	5,264,772	5,264,772	6,014,148	749,376	14.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건강보험 지원 사업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한국은행 등의 전문기관이 이미 2%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0.5%로 물가상승률을 산정하였고, 결국 기초연금 예산이 부족해지자 약 1,700억원을 증액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바 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추계로 2022년 8월 기준 수급자가 예산 상의 2023년 수급자 예측치에 비해 이미 4.4%p 이상 증가하는 등 예산 산출에 있어서 정확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규모가 큰 법정 의무지출 예산의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추계와 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법정 의무지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⁸⁾,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의 생계지원 등이 지속적인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본래 제도의 목적과 다른 형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긴급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일시적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의도가 있지만, 현행 제도 설계 상 지원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⁹⁾으로 이용될 유인이 있는 상황이다.¹⁰⁾ 긴급복지 생계지원 후 기초생활

7)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경우 최근 10년간 감소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사업은 아니다.

수급권자로서 생계급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다 지원된 금액에 대한 환급¹¹⁾ 등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3년도에는 고용장려금 유형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 유형인 직업훈련·창업지원 유형 등이 증액되고 있는데, 실제 구직자의 민간 일자리로 매칭 및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예산안 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유형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2,486억원)하였고, 그 뒤로 창업지원(1,021억원), 지원고용 및 재활(880억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다.

반면, 고용장려금 유형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액(△1조 4,282억원)되었으며,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3,364억원), 고용서비스(△1,307억원), 직접일자리(△902억원) 유형에서도 예산액이 감소하였다.

[연도별·유형별 일자리 사업 예산 및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안)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직접일자리	20,779	9.8	28,587	11.2	31,599	10.4	32,079	10.2	31,177	10.4
직업훈련	19,610	9.2	22,434	8.8	22,648	7.4	24,785	7.8	27,271	9.1
고용서비스	9,867	4.6	11,994	4.7	17,330	5.7	18,922	6.0	17,615	5.9
고용장려금	57,883	27.3	64,950	25.5	76,002	24.9	65,263	20.7	50,981	17.0
창업지원	25,097	11.8	23,585	9.2	24,071	7.9	28,376	9.0	29,397	9.8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79,139	37.3	103,447	40.6	133,481	43.7	137,715	43.6	134,351	44.7
지원고용 및 재활							8,668	2.7	9,548	3.2
합계	212,374	100.0	254,998	100.0	305,131	100.0	315,809	100.0	300,340	100.0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이며, 22년부터 장애인사업 특성으로 고려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이 생계급여액보다 크다.

10) 2021년에만 2만 6,141가구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이후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였다. 이러한 인원이 전체가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이 처음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였다면 더 적은 지원액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11) 긴급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과다 지급액에 대한 환급 제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창업지원 유형의 예산이 증액되고, 고용장려금·고용서비스·직접일자리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중심 예산에서 신기술·신산업 인력양성 등 미래 대비 일자리 예산으로 일자리예산의 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직업훈련·창업지원 유형은 간접적으로 구직자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직자의 민간 일자리로 매칭 및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 성과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고물가, 금리인상 기조 지속 등으로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일자리 지속가능성 등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유형별 재원 배분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2.0조원(14.2%) 증가한 96.1조원이 편성되었다. 교육 분야는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이 11.7조원(16.5%)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고등교육 부문은 2,391억원(2.0%) 증가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68억원(2.2%) 증가하였다.

교육 분야 예산안 증가율이 높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이 전년대비 18.8% 증가했기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2023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오히려 1.3% 감소하게 된다.

[2023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육	841,571	961,383	119,812	1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190,975	188,577	△2,399	△1.3
유아및초중등교육	707,301	824,324	117,024	1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	772,806	122,210	18.8
고등교육	120,894	123,285	2,391	2.0
평생·직업교육	11,983	12,251	268	2.2
교육일반	1,394	1,523	129	9.3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교육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교육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96.1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4.2조원 대비 12.0조원(14.2%) 증가하여 과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5.5%)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교육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5.9%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교육 분야 비중이 2022년 13.9%에서 2023년 15.0%로 증가하였다가 2026년에는 14.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교육(A)	57.4	64.2	70.6	72.6	71.2	5.5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14.3)	(15.0)	(15.0)	(14.2)	(12.8)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교육(A)	84.2	96.1	100.3	101.7	105.9	5.9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13.9)	(15.0)	(15.0)	(14.5)	(14.5)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9%으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4.6% 보다 1.3%p 높다. 반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교육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은 6.0%이나 동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5%으로 그 차이가 0.5%p에 불과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교육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64.2 (11.8)	70.9 (10.4)	76.0 (7.2)	80.1 (5.4)	84.0 (4.9)					(7.0)
2019~2023		70.6 (10.1)	72.5 (2.6)	76.0 (4.9)	79.1 (4.1)	82.0 (3.5)				(3.8)
2020~2024			72.6 (2.8)	71.0 (Δ2.2)	74.2 (4.4)	75.4 (1.6)	77.9 (3.4)			(1.8)
2021~2025				71.2 (Δ1.9)	83.2 (16.9)	84.8 (1.9)	87.4 (3.1)	90.0 (3.0)		(6.0)
2022~2026					84.2 (18.3)	96.1 (14.1)	100.3 (4.4)	101.7 (1.4)	105.9 (4.1)	(5.9)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지출 예산안, 음영 얇은 해당연도 본예산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결정(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는 유아·초중등교육 부문과 그렇지 않은 고등·평생교육 부문간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은 2018년 83.7%에서 2022년 84.0%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 비중은 동기간 15.1%에서 14.4%로 하락하였다.

[2018~2022년 교육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	641,898	706,490	726,344	712,076	841,571
유아및초중등교육	537,165 (83.7)	593,832 (84.1)	604,126 (83.2)	586,375 (82.3)	707,301 (84.0)
고등교육	96,742 (15.1)	102,576 (14.5)	110,139 (15.2)	113,270 (15.9)	120,894 (14.4)
평생·직업교육	6,726 (1.0)	8,771 (1.2)	10,715 (1.5)	11,052 (1.6)	11,983 (1.4)
교육일반	1,265 (0.2)	1,312 (0.2)	1,365 (0.2)	1,380 (0.2)	1,394 (0.2)

주: 괄호 내 수치는 교육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교육분야의 부문별 자원배분 추이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유지되어 교육분야에서 유아·초중등교육 부문 비중은 2022년 84.0%에서 2026년 86.5%로 상승하고, 고등교육 부문 비중은 2022년 14.4%에서 2026년 12.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연계하여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여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2026년 교육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교육	841,571	961,383	1,003,402	1,017,218	1,058,979	5.9
유아및초중등교육	707,301 (84.0)	824,324 (85.7)	861,294 (85.8)	876,153 (86.1)	916,539 (86.5)	6.7
고등교육	120,894 (14.4)	123,285 (12.8)	128,203 (12.8)	127,022 (12.5)	128,360 (12.1)	1.5
평생·직업교육	11,983 (1.4)	12,251 (1.3)	12,364 (1.2)	12,427 (1.2)	12,385 (1.2)	0.8
교육일반	1,394 (0.2)	1,523 (0.2)	1,540 (0.2)	1,615 (0.2)	1,695 (0.2)	5.0

주: 괄호 내 수치는 교육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교육 분야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관련 사업은 소요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사업효과를 검토하기 어려운 점, 사업간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 편성 방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며, 2023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이 전년대비 2,391억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예산안 증액 규모가 1,751억원 (73.2%)이다.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예산안은 11개 사업에 2,7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82.6% 증가한 규모이다.

[2023년도 교육부 반도체 인재양성 예산안]

(단위: 억원, 명, %)

구분	2022 예산(A)	2023		증가액 (B-A)	증가율 (B-A)/A
		예산안(B)	양성인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신규)	0	480	300	480	순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 캠프(신규)	0	150	2,000	150	순증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111	222	2,500	111	100.0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2	75	140	63	525.0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리모델링)	35	55	-	20	57.1
국립대학 시설확충 (반도체 공동연구소)	0	27	-	27	순증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46	560	-	514	1,117.4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109	399	2,100	290	266.1
4단계 두뇌한국 21	624	685	3,792	61	9.8
신산업 특화 선도전문대학지원	20	40	200	20	100.0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2	17	350	15	750.0
합 계	959	2,710	11,382	1,751	182.6

주: 세부사업 예산 중 반도체 관련 예산만 기재
자료: 교육부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사업 예산안은 2023년 2,710억원 규모이지만 향후 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2023년 480억원 규모이지만 2023~2030년간 소요되는 총 재정소요는 9,6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의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연구비 등을 포함하는 총사업비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2023~2027년 공사비 및 장비·기자재 예산만 총 1,12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 편성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소요예산 증액 규모가 큰 신규 내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미비하며,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타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사업과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2. 10, pp. 14~20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원은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유사 연구소를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통상의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과는 다른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비 이외에 장비비, 운영비, 연구비 등을 포함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

국립대학 반도체 기자재 확충 예산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 특성화 교육 및 중점연구 추진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편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과 연계성을 감안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³⁾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교육부 기존 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사업이며 타 부처의 유사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2023년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사업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학사운영 모델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타 부처의 신기술 직업훈련 사업 등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과 내용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⁴⁾

따라서 교육부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관련 사업은 예산소요 규모가 크다는 점,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사업효과를 검토하기 어려운 점, 사업간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2. 10, pp. 29~32

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2. 10, pp. 21~28

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2. 10, pp. 36~41

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937억원(6.5%) 감소한 8조 5,038억원이 편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문화재 부문이 921억원(7.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과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이 53억원(1.4%)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 부문 1,490억원(3.6%), 관광 부문 2,235억원(15.4%), 체육 부문 3,185억원(16.5%) 등 세 부문은 모두 감소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은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 감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각 부문에 신규 편성되었던 한시 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관광산업 융자 지원 등 증액 편성 사업이 감액 되었으며, 문화시설확충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2023년도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콘텐츠 산업, 관광시장 회복,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문화·체육·관광분야	90,975	85,038	△5,937	△6.5
문화예술	41,423	39,933	△1,490	△3.6
관광	14,496	12,261	△2,235	△15.4
체육	19,303	16,118	△3,185	△16.5
문화 및 관광 일반	3,739	3,792	53	1.4
문화재	12,014	12,935	921	7.7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문화·체육·관광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8.5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조원 대비 0.6조원(6.5%) 감소하여, 과거 2017~2021년 연평균 5.4% 증가하였던 것과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0.1% 감소하는 반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문화·체육·관광 분야 비중은 2022년 1.5%에서 2023년 1.3%, 2026년 1.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문화·체육·관광(A)	6.9	6.5	7.2	8.0	8.5	5.4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1.7)	(1.5)	(1.5)	(1.6)	(1.5)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문화·체육·관광(A)	9.1	8.5	8.7	8.9	9.1	△0.1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1.5)	(1.3)	(1.3)	(1.3)	(1.2)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0.1%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4.6% 보다 4.7%p 낮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은 3.6%로 동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 5.5% 보다 1.9%p 낮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더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 연평균증가율 간 차이가 확대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6.5 (1.5)	7.1 (10.1)	7.4 (4.2)	7.8 (5.4)	8.0 (2.6)					(5.5)
2019~2023		7.2 (12.2)	8.0 (9.9)	8.3 (4.6)	8.6 (3.8)	9.0 (3.6)				(5.4)
2020~2024			8.0 (10.6)	8.4 (5.1)	8.8 (4.7)	9.2 (4.0)	9.4 (3.0)			(4.2)
2021~2025				8.5 (5.8)	8.8 (3.9)	9.1 (3.5)	9.4 (3.5)	9.8 (3.4)		(3.6)
2022~2026					9.1 (7.3)	8.5 (△6.5)	8.7 (2.7)	8.9 (1.9)	9.1 (1.8)	(△0.1)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제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은 8조 5,038억원이며, 비중이 큰 순서대로 각 부문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 부문이 47%(3조 9,933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부문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증가율 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2023년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체육 부문은 19%(1조 6,118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증가율이 3.2%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26년에는 18.7%에 이를 전망이다. 동 부문에서는 2023년에 저소득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관광 부문 15.9%, 문화재 부문 13.2%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관광 부문은 연평균증가율이 4.1% 감소하는 반면 문화재 부문은 연평균증가율이 3.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문화재 부문 15.2%, 관광 부문 14.4%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하여 문화재 부문에서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관광 부문에서는 테마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 및 관광 일반의 2023년도 예산안은 3,792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가장 작은 비중인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증가율은 4%이다.

[2018~2022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체육·관광분야	6,461	7,250	80,181	84,816	90,975
문화예술	2,720 (42.1)	3,107 (42.9)	35,371 (44.1)	37,226 (43.9)	41,423 (45.5)
관광	1,402 (21.7)	1,414 (19.5)	13,491 (16.8)	14,998 (17.7)	14,496 (15.9)
체육	1,185 (18.3)	1,465 (20.2)	16,961 (21.2)	17,594 (20.7)	19,303 (21.2)
문화 및 관광 일반	352 (5.4)	363 (5.0)	3,447 (4.3)	3,582 (4.2)	3,739 (4.1)
문화재	802 (12.4)	901 (12.4)	10,911 (13.6)	11,416 (13.5)	12,014 (13.2)

주: 괄호 내 수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문화·체육·관광분야	90,975	85,038	87,329	88,996	90,564	△0.1
문화예술	41,423 (45.5)	39,933 (47.0)	41,312 (47.3)	42,480 (47.7)	43,223 (47.7)	1.1
관광	14,496 (15.9)	12,261 (14.4)	12,261 (14.0)	12,260 (13.8)	12,247 (13.5)	△4.1
체육	19,303 (21.2)	16,118 (19.0)	16,501 (18.9)	16,556 (18.6)	16,952 (18.7)	△3.2
문화 및 관광 일반	3,739 (4.1)	3,792 (4.5)	3,972 (4.5)	4,163 (4.7)	4,367 (4.8)	4.0
문화재	12,014 (13.2)	12,935 (15.2)	13,283 (15.2)	13,537 (15.2)	13,775 (15.2)	3.5

주: 괄호 내 수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2억원 증액된 2,2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투자실적이 2020년 58.4%, 2021년 37.4%로 저조하므로 투자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여력이 잔존하고 2023년 신규 펀드와 출자 목적이 유사한 펀드가 운용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증액분(812억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¹⁾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은 정부 출자금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2억원 증액된 2,2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114,800	138,800	138,800	220,000	81,200	58.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K-콘텐츠 IP 펀드, K-유니콘 펀드, K-소외장르 펀드, K-벨류 펀드, K-M&A펀드 등 5종의 펀드에 2,200억원을 출자하여 3,666억원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K-문화일반펀드에 500억원을 재출자하여 1,000억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에 편성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이 대비 가장 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도별 결성액과 투자액으로 산출한 투자여력이 6,253억원 규모이며, 같은 기간 동안 투자액이 가장 많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 10, pp. 89~94

은 2021년의 투자액은 2,496억원 수준이다.

또한 운용 중인 펀드 중 콘텐츠 IP 펀드 등 4종의 펀드는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펀드 K-콘텐츠 IP 펀드 등 4종과 출자 목적이 유사하며, 결성시기 및 운용 기간을 고려할 때 2022년 7월말 기준 투자여력이 3,773억원이다.

이와 같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2억원 증액된 2,2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투자실적이 2020년 58.4%, 2021년 37.4%로 저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년 7월말 기준 투자여력이 6,253억원이고 2023년 신규 펀드와 출자 목적이 유사한 펀드가 운용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증액분(812억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화재청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테마관광 거점 조성(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되므로, 홍보물 제작 사업은 연계하여 추진하고 교통편의 제고 사업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²⁾

문화재청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전면 개방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의 시설조경관리, 개방운영, 관람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에 217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	-	-	21,762	21,762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문화재청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관광 거점 조성 사업은 청와대 사랑채를 거점으로 한국문화관광을 홍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청와대

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 10, pp. 164~167

개방과 관련하여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안내센터로의 재개편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71억 1,300만원 증액된 9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두 사업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이 청와대를 관리·운영하는 것이고, 테마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청와대를 포함한 인근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 사랑채를 운영하는 것으로, 두 사업의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사업의 홍보물 제작 사업 추진시, 청와대 관련 중점 홍보 대상과 시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청와대 및 인근 권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사업에 편성된 관람객 교통편의 제고 관련 사업은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청와대와 인근 권역이라는 가까운 지점 내에서 운행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하여 신규 편성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과 증액 편성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테마관광 거점 조성(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되므로, 홍보물 제작 사업은 연계하여 추진하고 교통편의 제고 사업은 통합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라. 환경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환경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0.5조원(3.9%) 증가한 12.4조원이 편성되었다. 환경 분야는 물환경,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이 0.3조원(7.1%)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자연환경 부문의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2.0%(0.1조원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환경 분야의 2023년 예산안 규모 증가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과 녹색금융 지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폐기물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노후화된 국립공원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 등에서 기인한다.

[2023년도 환경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환경	119,365	124,075	4,710	3.9
물환경	43,388	42,932	△456	△1.1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3,712	14,491	779	5.7
기후대기및환경안전	45,006	48,200	3,194	7.1
자연환경	9,058	10,141	1,083	12.0
환경일반	4,897	5,015	118	2.4
해양환경	3,304	3,296	△8	△0.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환경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환경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2.4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9조원 대비 0.5조원(3.9%) 증가하여 과거 2017~2021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던 연평균 증가율(11.7%)을 하회하고 있다. 환경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3.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환경 분야 비중은 2022년 2.0%에서 2023년 1.9%로 감소한 후 2026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환경(A)	6.9	6.9	7.4	8.8	10.6	11.7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1.7)	(1.6)	(1.6)	(1.7)	(1.9)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환경(A)	11.9	12.4	12.9	13.3	13.5	3.2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2.0)	(1.9)	(1.9)	(1.9)	(1.9)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2%으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4.6%이 비해 1.4%p 낮은 상황이다. 반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환경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은 8.2%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환경 분야 총지출 증가율(Δ5.0%p)이 크게 감소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환경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6.9 (0.0)	7.1 (2.9)	7.0 (△1.4)	6.9 (△1.4)	6.7 (△2.9)					(△0.7)
2019~2023		7.4 (7.2)	8.8 (18.9)	9.6 (9.1)	10.1 (5.2)	10.6 (5.0)				(9.4)
2020~2024			9.0 (21.6)	10.5 (16.7)	11.4 (8.6)	12.1 (6.1)	12.6 (4.1)			(8.8)
2021~2025				10.6 (17.8)	11.9 (12.3)	12.9 (8.4)	13.7 (6.2)	14.5 (5.8)		(8.2)
2022~2026					11.9 (12.3)	12.4 (4.2)	12.9 (4.0)	13.3 (3.1)	13.5 (1.5)	(3.2)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제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안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23년도 환경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은 12조 4,070억원으로, 그 중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이 4조 8,195억원(38.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부문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평균 증가율이 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물환경 부문은 전체 환경 분야 예산안 중 34.6%(4조 2,932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26년에는 30.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조 4,491억원으로 1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녹색경제 전환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예산 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에는 환경 분야 중 16.8%(2조 2,781억원)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일반 부문은 2023년 예산안 기준 5,015억원으로 예산 규모는 작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13.9%로 환경 분야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환경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환경	68,984	73,972	88,259	106,157	119,365
· 물환경	40,146 (58.2)	39,463 (53.3)	40,060 (45.4)	44,015 (41.5)	43,388 (36.3)
· 자원순환및환경경제	6,551 (9.5)	6,708 (9.1)	8,177 (9.3)	11,913 (11.2)	13,712 (11.5)
· 기후대기및환경안전	9,646 (14.0)	13,808 (18.7)	26,371 (29.9)	34,102 (32.1)	45,006 (37.7)
· 자연환경	5,847 (8.5)	6,379 (8.6)	6,360 (7.2)	8,317 (7.8)	9,058 (7.6)
· 환경일반	4,165 (6.0)	4,739 (6.4)	4,638 (5.3)	4,976 (4.7)	4,897 (4.1)
· 해양환경	2,629 (3.8)	2,875 (3.9)	2,653 (3.0)	2,834 (2.7)	3,304 (2.8)

주: 괄호 내 수치는 환경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환경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환경	119,365	124,070	129,077	132,732	135,365	3.2
· 물환경	43,388 (36.3)	42,932 (34.6)	43,426 (33.6)	41,063 (30.9)	41,150 (30.4)	△1.3
·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3,712 (11.5)	14,491 (11.7)	18,676 (14.5)	21,500 (16.2)	22,781 (16.8)	13.5
· 기후대기및환경안전	45,006 (37.7)	48,195 (38.8)	48,101 (37.3)	49,179 (37.1)	48,795 (36.0)	2.0
· 자연환경	9,058 (7.6)	10,141 (8.2)	10,202 (7.9)	10,391 (7.8)	10,768 (8.0)	4.4
· 환경일반	4,897 (4.1)	5,015 (4.0)	4,929 (3.8)	7,009 (5.3)	8,243 (6.1)	13.9
· 해양환경	3,304 (2.8)	3,296 (2.7)	3,743 (2.9)	3,591 (2.7)	3,627 (2.7)	2.4

주: 괄호 내 수치는 환경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환경 분야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실제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의 집행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및 물량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¹⁾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²⁾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³⁾ 등에 의거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무공해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2조 1,827억 6,100만원 대비 5,574억 6,300만원(25.5%) 증액된 2조 7,40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무공해차 보급	1,258,635	2,407,761	2,182,761	2,740,224	557,463	25.5
전기자동차 보급	1,027,463	1,719,000	1,719,000	2,093,000	374,000	21.8
수소차 보급	229,010	679,505	454,505	633,400	178,895	39.4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2. 10, pp. 39~44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그러나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경우, 매년 관련 예산 규모 및 보급 계획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보급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예산의 집행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을 합한 부처 단위 불용액 규모(결산 기준)를 살펴보면, 2019년 45억원, 2020년 791억 4,200만원에서 2021년은 1,120억 1,000만원으로 불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수소차 보급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조정된 예산 규모가 2,250억원 수준으로 별도의 감액 조정을 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불용액 규모가 전년 대비 더욱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주체(지자체, 민간) 단위의 실집행률은 2020년 66.9%에서 2021년 82.2%로 증가하는 등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동 사업의 부처 단위 불용액 규모가 확대된 것에 더해 사업시행주체 단위의 이월액·불용액 또한 2020년 3,273억원, 2021년 2,661억원 등으로 예산의 실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 집행(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537,000	594,128	589,628	4,500	616,345	449,303	102,740	64,301	72.9
2020	962,600	1,058,100	978,958	79,142	1,080,199	723,050	190,448	136,841	66.9
2021	1,390,700	1,390,700	1,258,635	112,010	1,406,266	1,230,194	126,699	139,373	82.2
2022	2,407,761	2,182,761	1,157,650	미정	1,275,572	740,067	미정	미정	미정

자료: 환경부

특히, 무공해차 유형별 실제 보급 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종의 다변화 및 전 기차 성능개선에 따른 주행거리 확대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수소차(승용차 기준)의 보급 실적은 2020년 총 보급계획 물량 11,255대

중 5,783대, 2021년은 16,876대 중 8,473대가 보급되었으며, 2022년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지방비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 보급 물량을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말 기준 총 보급계획 물량 17,941대 중 5,219대만이 보급되는 등 수소차 보급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2017~2022년 무공해차 보급 현황(승용차 기준)]

(단위: 대)

차종	연도	보급계획 물량	전년이월 물량	추경증가 물량	총 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출고기준)	다음연도 이월물량
전기 승용차	2017	14,100	5,519	-	19,619	13,826	5,197
	2018	20,150	5,197	6,535	31,882	31,696	1,480
	2019	42,000	1,336	-	43,336	33,423	5,482
	2020	36,085	5,482	-	41,567	31,329	1,164
	2021	70,255	1,164		71,419	71,517	3,880
	2022.7	164,500	3,880		168,380	60,186	-
수소연료 전지차	2017	130	14	-	144	51	85
	2018	159	104	500	763	712	51
	2019	4,000	51	1,467	5,518	4,179	1,155
	2020	10,100	1,155	-	11,255	5,783	1,876
	2021	15,000	1,876	-	16,876	8,473	291
	2022.7	27,650	291	△10,000	17,941	5,219	-

주: 1. 실제 보급물량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기준

2. 보급계획은 연도 중 내역조정 등이 반영된 물량 현황으로 예산 기준과 다를 수 있음

자료: 환경부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수소차 보급 사업의 지원 물량 및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바,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및 물량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예산상 계획 물량과 실제 수요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고 사업 참여유인 또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춰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⁵⁾의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⁶⁾ 등에 근거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등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예산안부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조기폐차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동 내역사업의 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4334억 4,800만원 대비 370억 3,200만원(8.5%) 증액된 4,70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640,553	509,464	464,577	504,619	40,042	8.6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617,357	478,198	433,448	470,480	37,032	8.5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덤프, 펌프,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2022년 8월 17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⁷⁾이 개정(2023.1.1.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4등

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2. 10, pp. 17~22

5)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생략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급 경유차⁸⁾와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조기폐차 등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바,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연저감장치(DPF)가 미장착된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 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등급 경유차 지원 물량은 9만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지원 물량은 1만대 등 총 10만대를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및 2023년 조기폐차 지원 단가 및 대수]

(단위: 천원, 대)

구분	년도	지원 단가 (국비+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원율	지원대수
5등급 경유차	'22년	1,600	960	640	60%	340,000
	'23년	1,600	800	800	50%	250,000
4등급 경유차	'23년	4,000	2,000	2,000	50%	90,000
비도로용 건설기계	'23년	3,730	1,865	1,865	50%	10,000

자료: 환경부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 8. 17.>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8)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등급별 배출가스 기준(참고)]

배출가스 등급	적용 기준	해당 조문 (별표17 제2호 각목)	배출기준 적용 시기
5등급	Euro3 이전	가~라 목	~'05.12.31.
4등급	Euro4	마 목	'06.1.1.~'09.8.31.
3등급	Euro5 이후	바~아 목	'09.9.1.~

자료: 환경부

그러나 실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출한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요청 대수는 64,210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참여요청 대수는 4,494대로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지원 물량과는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2023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단가 및 대수]

(단위: 대, 천원, %)

구분		4등급 경유차 운행대수 ¹⁾	시범사업 참여요청 대수 및 예산(국비)			
			신청대수	지원단가	전체예산	운행대수 대비 신청비율
4등급 경유차	총계	844,493	64,210	2,000	128,420,000	7.6
	수도권	323,846	32,200	2,000	64,400,000	9.9
	수도권 외	520,647	32,010	2,000	64,020,000	6.1
구분		건설기계 (‘04 이전) 운행대수	시범사업 참여요청 대수 및 예산(국비)			
			신청대수	지원단가	전체예산	운행대수 대비 신청비율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총계	85,854	4,494	1,865	8,381,310	5.2
	수도권	24,965	2,420	1,865	4,513,300	9.7
	수도권 외	60,889	2,074	1,865	3,868,010	3.4

주: 1) 4등급 경유차 운행대수는 2022년 5월 기준

자료: 환경부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⁹⁾ 등에 근거하여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운행 제한을 비롯한 별도의 규제 조항이나 조기폐차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신청 또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한 물량에 비해 실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2023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도록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 R&D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R&D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0.9조원(3.0%) 증가한 30.7조원이 편성되었다. R&D 분야는 크게 6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증액규모 면에서 국방·국민 안전 등 기타 부문이 전년대비 4,153억원 확대되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과학기술 부문 2,462억원(2.9%), 교육 부문 1,256억원(4.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604억원(0.82%)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R&D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R&D	297,770	306,574	8,804	3.0
과학기술	83,772	86,234	2,462	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4,545	75,149	604	0.8
교육	25,436	26,692	1,256	4.9
사회복지·보건·환경	15,407	15,519	112	0.7
SOC	10,794	11,009	215	2.0
기타	87,817	91,970	4,153	4.7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올해 초에 「202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022.3.8.)」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 국민 삶의 질 제고, 대전환 시대의 혁신 선도, 포용적 혁신 강화 등에 대한 R&D투자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부투자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3년도 R&D 예산안은 ① 반도체·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강화, ② 우수항공 등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확대, ③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 등 디지털전환 촉진, ④ 탄소중립, ⑤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반도체 등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의 5개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다.

①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강화 분야는 2022년 예산 1조 178억원 보다 833억원

증가한 1조 1,011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분야에서는 반도체 분야 연구를 2022년 3,582억원에서 4,380억원으로 전년대비 22.3% 확대하였고, 차세대원전·이차전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②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의 경우 2022년 예산 2조 1,526원에서 2,431억원 증가한 2조 3,957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 정지궤도복합공공위성 개발 등을 위해 전년대비 12.5% 증가한 8,338억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첨단바이오(전년대비 9.1% 증), 인공지능·로봇(전년대비 12.1% 증), 양자기술(전년대비 36.3% 증) 등 분야에 예산안을 확대하였다.

③ 디지털전환의 경우 디지털기반기후변화예측 및 피해최소화기술개발('23년 신규, 69억원),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23년 신규, 45억원) 등 공공산업의 디지털화 가속화를 위한 R&D 사업을 중심으로 2022년 예산 2조 652억원에서 3,818억원 증액한 2조 4,470억원을 편성하였다.

④ 탄소중립 분야는 2022년 2조 2,511억원에서 5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구조개편탄소중립기술개발('23년 신규, 53억원),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23년 117억원, +64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⑤ 인력양성 분야는 2022년 5,419억원 보다 377억원 증가한 5,79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23년 583억원, +171억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23년 1,283억원, +209억원) 등 반도체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의 예산안이 증액되었다.

[2023년 R&D 중점투자 분야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①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10,178	11,011	833	8.2
- 반도체	3,582	4,380	798	22.3
- 차세대원전	198	297	99	50.0
- 이차전지	757	966	209	27.6
②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21,526	23,957	2,431	11.3
- 우주·항공	7,411	8,338	927	12.5
- 양자기술	699	953	254	36.3
- 첨단바이오	6,379	6,958	579	9.1
- 인공지능·로봇	6,791	7,613	822	12.1
③ 디지털전환	20,652	24,470	3,818	18.5
④ 탄소중립	22,511	23,095	584	2.6
⑤ 인력양성	5,416	5,793	377	7.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R&D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R&D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30.7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9.8조원 대비 0.9조원(3.0%) 증가하여 과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8.9%)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R&D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3.8%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R&D 분야 비중이 2022년 4.9%에서 2023년 4.8%로, 2026년에는 4.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R&D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R&D(A)	19.5	19.7	20.5	24.2	27.4	8.9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4.9)	(4.6)	(4.4)	(4.7)	(4.9)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R&D(A)	29.8	30.7	32.0	33.2	34.6	3.8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4.9)	(4.8)	(4.8)	(4.7)	(4.7)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R&D 분야 예산은 지속 증가하여 2017~2021년 연평균 8.9% 성장률을 나타냈다. 당초 정부는 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 상 R&D 분야 연평균 증가율을 0.7%로 설정했었고, 2016~2018년 R&D 분야 본예산 역시 19.1조원에서 19.7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혁신성장 정책 추진 등을 통해 2019년 R&D 예산이 최초로 20조원을 초과하였다.

이후 2020년에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사업 지원,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을 위해 R&D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 예산안에는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선도기술, 디지털전환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 R&D 분야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0조원을 초과한 R&D 예산은 4년이 지난 2023년 정부안 기준 30.7조원으로 30조원을 초과하였다.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R&D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8%으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4.6% 보다 0.8%p 낮다. 반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R&D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은 6.6%으로 동기간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5.5%보다 1.1%p 높을 것으로 계획한 바 있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R&D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19.7 (1.0)	20.4 (3.6)	21.4 (4.9)	22.6 (5.6)	24.0 (6.2)					(5.4)
2019~2023		20.5 (4.4)	24.1 (17.3)	26.7 (10.7)	28.7 (7.7)	30.9 (7.6)				(10.8)
2020~2024			24.2 (18.0)	27.2 (12.3)	29.1 (6.9)	30.7 (5.4)	32.0 (4.3)			(7.2)
2021~2025				27.4 (13.2)	29.8 (8.8)	32.3 (8.5)	34.0 (5.2)	35.4 (4.0)		(6.6)
2022~2026					29.8 (8.8)	30.7 (3.0)	32.0 (4.2)	33.2 (3.8)	34.6 (4.2)	(3.8)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재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R&D 분야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까지 기술분야별 부문¹⁾ 구분을 적용하였으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부터 12대 분야의 구분을 적용하고 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R&D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은 과학기술(연평균 5.6% 증),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연평균 5.0% 증), 사회복지·보건·환경(연평균 4.5% 증) 부문은 R&D 연평균 증가율 3.7%를 초과하여 중점 투자될 전망이고, 교육(연평균 2.2% 증), 기타(연평균 2.1% 증) 부문은 연평균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SOC 부문 R&D는 2022년 1조 794억원에서 2026년 7,498억원으로 연평균 8.7%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R&D 분야 중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학기술의 경우 2022년 28.1%에서 2026년 30.3%로 2.2%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역시 2022년 25.0%에서 2026년 26.4%로 1.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교

1) 기술분야별 부문은 ① ICT·SW, ② 생명·의료·농식품, ③ 에너지·환경, ④ 소재·기계·건설, ⑤ 우주·항공·해양, ⑥ 기타로 구분하여 적용

육 부문은 2022년 8.5%에서 2026년 8.1%로 0.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SOC 부문은 2022년 3.6%에서 2026년 2.2%로 1.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년 부문별 예산안은 중기 지출 계획과 방향성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학기술 부문의 경우 전체 R&D 예산안 30조 6,574억원의 28.1%인 8조 6,23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편성되었으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의 경우 2022년 전체 R&D의 25.0%에서 24.5%로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22년 종료, △545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23년 2,737억원, 전년대비 △235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23년 458억원, 전년대비 △311억원),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22년 종료, △214억원) 등 종료사업 및 계속사업 감액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 부문의 경우 2022년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였고, 2026년 8.1%로 줄여나갈 예정이나 2023년 예산안에는 8.7%로 증가하였는데, 반도체 분야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부의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23년 5,512억원, +1,153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23년 8,583억원, +633억원) 등 대학재정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의 예산안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2019~2022년 R&D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R&D	205,328	242,195	274,005	297,770
과학기술	63,732 (31.0)	72,225 (29.8)	78,903 (28.8)	83,772 (28.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867 (21.9)	58,230 (24.0)	67,866 (24.8)	74,545 (25.0)
교육	20,392 (9.9)	23,105 (9.5)	24,368 (8.9)	25,436 (8.5)
사회복지·보건 · 환경	9,391 (4.6)	10,457 (4.3)	14,140 (5.2)	15,407 (5.2)
SOC	7,973 (3.9)	8,883 (3.7)	10,137 (3.7)	10,794 (3.6)
기타	58,975 (28.7)	69,295 (28.6)	78,591 (28.7)	87,817 (29.5)

주: 1. 괄호 내 수치는 R&D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2. R&D 분야의 6개 부문은 202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적용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R&D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R&D	297,770	306,574	320,287	331,969	343,988	3.7
과학기술	83,772 (28.1)	86,234 (28.1)	89,998 (28.1)	98,938 (29.8)	104,091 (30.3)	5.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4,545 (25.0)	75,149 (24.5)	76,740 (24.0)	81,835 (24.7)	90,735 (26.4)	5.0
교육	25,436 (8.5)	26,692 (8.7)	26,750 (8.4)	27,125 (8.2)	27,706 (8.1)	2.2
사회복지·보건 · 환경	15,407 (5.2)	15,519 (5.1)	15,331 (4.8)	16,546 (5.0)	18,380 (5.3)	4.5
SOC	10,794 (3.6)	11,009 (3.6)	13,977 (4.4)	10,820 (3.3)	7,498 (2.2)	△8.7
기타	87,817 (29.5)	91,970 (30.0)	97,491 (30.4)	96,705 (29.1)	95,577 (27.8)	2.1

주: 괄호 내 수치는 교육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R&D 분야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 사업(100억 4,600만원)은 기업이 기술개발 수요를 제안하면 정부와 민간기업이 1:1로 공동 투자하여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2년 5월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는 153억 9,000만원(36개 과제)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47개 과제에 총 200억 9,2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편성되었으므로, 민간기업의 공동투자 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연차별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1차년도 사업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2032	합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총사업비	15,390	23,420	32,540	34,120	117,320	222,790
	정부출연금	7,940	12,085	16,790	7,605	60,535	114,955
	산업계투자금	7,450	11,335	15,750	16,515	56,785	107,835
2023년 예산안 사업계획	총사업비	20,092	24,138	33,058	34,688	117,934	229,910
	정부출연금	10,046	12,069	16,529	17,344	58,967	114,955
	산업계투자금	10,046	12,069	16,529	17,344	58,967	114,95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와 근접한 수준으로 총사업비를 설정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가 있고, 일부는 유사한 내용의 R&D 사업을 기존 사업 종료 시점에 신규로 추진하여 관련 사업들의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18~21 참조

① R&D 사업 중 일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와 근접한 수준으로 총사업비를 설정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 사업(48억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94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 핵심기술개발’ 사업(15억 9,000만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총사업비 475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R&D사업(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2023예산	총사업비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	2023~2026	4,800	49,450
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핵심기술개발사업	2023~2027	1,590	49,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신규 R&D 사업 기획 시 총사업비 규모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근접하게 설정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이나 지방비 투자 규모의 변화 또는 예기치 못한 사유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균형발전 SW·ICT 융합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어 왔고, 2019~2020년에 선정한 16개 과제의 당초 연구기간이 2023년말(6개)과 2024년말(10개)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2022년까지 지원 후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지역균형발전SW·ICT 융합기술개발 사업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사업비	4,018	14,700	17,203	17,212	53,133

주: 연도별 사업비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의 합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2023년 신규 R&D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근접하게 총사업비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은 총사업비 규모를 면밀하게 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확보 후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조달 연계 R&D 사업**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기존 사업 종료 시점에 신규 추진하였으므로, 기존 사업 추진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반영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³⁾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에 처음으로 조달 연계 R&D 사업을 추진하며, 혁신조달연계형 신기술사업화 사업을 2019년 예산에 19억 9,600만원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2019~2021년까지 3년간 국비 기준 총 240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동 사업의 마지막해인 2021년에 공공혁신 수요기반 신기술사업화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2021~2023년 국비 기준 총사업비는 255억원이다. 2023년 예산안에는 다시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 사업화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기준 총사업비 27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3개 사업의 2019~2023년까지의 사업비는 국비 기준 총 522억 2,700만원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달 연계 지원 R&D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사업화	1,996	11,134	10,879	0	0	24,009
공공혁신 수요기반 신기술사업화	0	0	6,390	12,378	6,750	25,518
수요기반 조달연계 혁신제품사업화	0	0	0	0	2,700	2,700
합 계	1,996	11,134	17,269	12,378	9,450	52,22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달 연계 3개 R&D 사업은 공기업 등 공공분야 수요와 연계한 제품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R&D 사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조달 연계 R&D 사업은 2019년 이후 기존 사업의 종료 연도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사업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고 유사한 사업이 반복하여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달

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121~123 참조

연계 R&D 사업은 보다 기존 사업의 성과 등을 반영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최근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왔으나, 평가 결과 ‘미흡’인 일부 사업의 차년도 예산안이 증액 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과 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⁴⁾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⁵⁾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 하기 위해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R&D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최종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인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R&D성과평가 제도개선 주요사항]

연도	주요 개선사항
2021년	- 부처 자체평가 후 2회 적절성 점검 추진, 최종 적절/부적절 확정 - 평가등급 간소화(5등급→3등급)를 통한 자체평가 결과 신뢰성 확보 - 최종 상위평가 결과 ‘미흡’ 및 ‘부적절’ 사업은 차년도 예산 삭감 원칙
2022년	- ‘미흡’ 등급 사업 수를 ‘우수’ 등급 사업 수의 30% 이상으로 연동하여 등급부여 시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 방지 및 신뢰성 확보 - 최종 상위평가 결과 ‘미흡’ 및 ‘부적절’ 사업은 차년도 예산 삭감 원칙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인 사업의 차년도 예산안 편성 결과를 살펴본 결과, 총 3개 사업의 예산안이 증액 편성되었고, 2개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어,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환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평가결과 미흡·부적절 사업 중 차년도 예산 미감액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명	사업명	평가 연도 예산(A)	차년도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
2020	해수부	수산생물방역체계구축	9,028	9,039	11	0.1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	7,480	7,480	0	0.0
2021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27,732	29,525	1,793	6.5
	해수부	수산전문인력양성	6,040	7,204	1,164	19.3
2022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유형 I)	397,500	429,142	31,642	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정부는 R&D 성과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과 함께 성과 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조 6,232억원(18.0%) 감소한 25조 7,038억원이 편성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부문이 5조 419억원(35.5%)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과 감소율을 보였으며, 창업및벤처 부문이 2,646억원(6.2%) 감소하여 두번째로 높은 감소폭과 감소율을 보였다.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으로 ① 주력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혁신하고, ② 원전·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합리적 에너지 믹스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③ 민간중심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생태계 활력을 제고하고, ④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집중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270	257,038	△56,232	△18.0
무역및투자유치	9,096	9,083	△13	△0.1
에너지및자원개발	50,795	48,201	△2,594	△5.1
산업혁신지원	58,313	57,834	△479	△0.8
창업및벤처	42,397	39,751	△2,646	△6.2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141,851	91,432	△50,419	△35.5
산업·중소기업일반	7,141	7,169	28	0.4
지식재산일반	3,678	3,568	△110	△3.0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5.7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1.3조원 대비 5.6조원(18.0%) 감소하여 과거 2017~2021년의 증가기조에서 (연평균 증가율 17.7%)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2.6% 감소할 전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와 대비된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산업·중소기업 분야 비중이 2022년 5.2%에서 2023년 4.0%로 감소하고, 2026년에는 3.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산업·중소기업·에너지(A)	16.3	18.8	23.7	28.6	31.3	17.7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4.1	4.4	5.0	5.6	5.6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산업·중소기업·에너지(A)	31.3	25.7	26.6	27.4	28.1	△2.6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5.2	4.0	4.0	3.9	3.9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을 6.2%로 계획하여 총지출 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이었으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023년 총지출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동 분야 총지출 증가 기조가 감소로 전환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16.3 (1.9)	18.6 (14.1)	19.4 (4.3)	19.9 (2.6)	20.2 (1.5)					(5.5)
2019~2023		18.8 (15.4)	23.9 (27.5)	26.4 (10.3)	28.0 (6.1)	29.9 (6.9)				(12.4)
2020~2024			23.7 (26.4)	29.1 (22.9)	32.3 (10.9)	34.2 (5.8)	35.6 (4.0)			(10.7)
2021~2025				28.6 (6.0)	30.4 (6.0)	32.6 (7.5)	35.0 (7.2)	36.4 (4.1)		(6.2)
2022~2026					31.3 (9.4)	25.7 (Δ17.1)	26.6 (3.5)	27.4 (1.4)	28.1 (4.1)	(Δ2.6)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지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안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23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은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은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지출이 감소하였다. 부문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부문의 예산안이 2022년 14조 1,851억원에서 2023년 9조 1,432억원으로 7개 부문 중에 가장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5.3%에서 35.6%로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었던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지원 용자사업 증액분이 2023년 예산안에서 감액됨에 기인한다.

[2018~2022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090	187,641	237,154	286,487	313,270
무역및투자유치	6,200 (3.8)	6,705 (3.6)	10,182 (4.3)	11,519 (4.0)	9,096 (2.9)
에너지및자원개발	32,680 (20.0)	34,194 (18.2)	38,751 (16.3)	45,872 (16.0)	50,795 (16.2)
산업혁신지원	31,710 (19.4)	38,049 (20.3)	47,325 (20.0)	55,893 (19.5)	58,313 (18.6)
창업및벤처	27,800 (17.0)	32,369 (17.3)	44,011 (18.6)	44,617 (15.6)	42,397 (13.5)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56,230 (34.5)	65,331 (34.8)	84,448 (35.6)	117,970 (41.2)	141,851 (45.3)
산업·중소기업일반	5,720 (3.5)	6,146 (3.3)	6,575 (2.8)	6,779 (2.4)	7,141 (2.3)
지식재산일반	2,750 (1.7)	2,848 (1.5)	3,223 (1.4)	3,472 (1.2)	3,678 (1.2)
산업금융지원	- -	2,000 (1.1)	2,640 (1.1)	365 (0.1)	-

주: 괄호 내 수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270	257,038	266,148	274,238	281,364	△2.6
무역및투자유치	9,096 (2.9)	9,083 (3.5)	9,627 (3.6)	9,305 (3.4)	8,347 (3.0)	△2.1
에너지및자원개발	50,795 (16.2)	48,201 (18.8)	49,380 (18.6)	45,578 (16.6)	41,511 (14.8)	△4.9
산업혁신지원	58,313 (18.6)	57,834 (22.5)	59,050 (22.2)	64,432 (23.5)	70,362 (25.0)	4.8
창업및벤처	42,397 (13.5)	39,751 (15.5)	40,805 (15.3)	41,934 (15.3)	42,069 (15.0)	△0.2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141,851 (45.3)	91,432 (35.6)	95,900 (36.0)	99,920 (36.4)	103,920 (36.9)	△7.5
산업·중소기업일반	7,141 (2.3)	7,169 (2.8)	7,616 (2.9)	9,287 (3.4)	11,362 (4.0)	12.3
지식재산일반	3,678 (1.2)	3,568 (1.4)	3,771 (1.4)	3,782 (1.4)	3,793 (1.3)	0.8

주: 괄호 내 수치는 산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주요 재원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2023년에 계획 대비 법정부담금 수입 감소 및 여유자금 부족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출구조 조정으로 안정적 회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

에특회계의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순세입은 2조 6,340억원으로 순세출 5조 7,360억원 대비 적자가 예상되며,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한 자금 부족분은 공자기금 예수금 1조 7,577억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 1조 3,074억원 등 정부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에특회계는 순세입 대비 순세출이 적자인 상황에서 2023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규모의 순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에특회계의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2023년 순세출 예산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1조 7,943억원, 환경부 등 타 부처 사업에 3조 9,418억원 등 전년대비 7,997억원(16.2%) 증가한 5조 7,360억원이 편성되었다.

에특회계의 2023년 예산안은 석유수입부과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법정부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1,713억 5,000만원(1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되었다. 그러나 에특회계의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법정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감소할 경우 에특회계 세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에특회계는 안정적인 회계 운영을 위하여 과거 3년 평균 법정부담금 수입을 초과하는 예산액 2,186억원에 해당하는 세출 사업 예산에 대한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10, pp. 50~55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2023년 예산안은 2022년 12월에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

이번 정부의 첫 번째 에너지 분야 법정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은 2022년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2022년 8월에는 계획 확정 이전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동 실무안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이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비해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2036년까지의 전력수요를 고려하여 2030년 기준 정격용량 기준 설비용량 목표를 196.8GW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71.5GW이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목표치 58.0GW를 크게 상회한다.

2023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³⁾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2023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549억원 감액된 4,173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744억원 감액된 2,470억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2021년에 지원한 태양광 발전의 설비용량은 356MW이며, 이는 해당연도 전체 신규 인허가 태양광 발전의 설비용량 중 11.2%에 이른다. 태양광 기준으로 2023년에는 예산안 감액에 따라 신규 설비용량이 288MW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사업은 향후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동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사업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은 이러한 계획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10, pp. 91~97

3)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4

4) 코드: 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3

셋째,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단기간에 R&D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성과검증과 연계한 점진적인 R&D 예산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⁵⁾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⁶⁾은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해소 및 미래시장 선점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66억 700만원 증액된 9,37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2019년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여 2020년 이후 매년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신규과제 지원 규모는 2020년 1,924억원, 2021년 2,993억원, 2022년 1,064억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1,005억원 규모의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서 신규과제를 선정 이후 4~5년간 지원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3년 1,005억원 규모의 신규과제 지원으로 향후 4~5년간 약 4,000~5,00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26년 일몰대상 사업으로 그 이전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19~2023년에 총 7,935억원의 신규과제가 지원될 계획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2019년 이후 선정된 R&D 과제가 현재 대규모로 수행 중이며, 예산 증액에 따른 성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 검증과 연계한 보다 점진적인 예산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신규과제	94,465	192,740	299,318	106,442	100,532	793,497
계속과제	196,537	239,992	389,833	734,514	837,031	2,397,907
합계	291,002	432,732	689,151	840,956	937,563	3,191,404

주: 1. 기획평가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2. 2022년 이후 별도 분리된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제외한 금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10, pp. 98~106

6) 코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3573-302

넷째,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액되었던 소상공인 대상 현금성 지원 및 융자 지원액이 감액되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경영개선 및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23년도 지출계획안은 2022년 본예산 기준 9조 7,649억원(추경기준 49조 6,561억원)에서 6조 4,216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증액한 재난지원금(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손실보상금(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이 감액된 것에 기인한다.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4,025,643	9,764,946	49,656,120	6,421,575	△43,234,545	△87.1
소상공인성장지원	13,942,539	146,278	35,427,368	141,654	△35,281,114	△99.6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	2,426,312	2,243,584	7,393,584	-	△7,393,584	△100.0
소상공인지원(융자)	3,760,976	4,200,000	3,508,200	3,000,000	△508,200	△14.5

주: 1)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을 축소하고, 절감재원으로 소상공인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여 자생력 강화 등에 재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2027년까지 10만개 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스마트 상점·공방을 7만개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계획안에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예산 944억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예산 313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72,550	90,460	112,810	94,400	△18,410	△19.5
스마트상점기술보급	20,400	28,000	35,000	31,300	△3,700	△11.8

주: 1)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은 업종이 다양하고,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창업한 소상공인과 전문적 지식이 아닌 자기 경험에 의존한 창업을 한 소상공인이 혼재하는 등 경영역량 수준의 편차가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소상공인의 규모·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판로지원 10만개, 스마트상점 7만개 등 양적 목표를 사업의 주요 목표로 두는 것은 정책의 추진력 확보에는 의미 있는 목표라 할 수 있겠으나, 개별 소상공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계하여 실질적인 자생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상점기술보급” 사업은 서비스·경영혁신이라는 본래의 사업목표를 실현하기보다는 단순 기기보급사업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⁷⁾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누적되어왔고, 경영환경 또한 크게 변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⁸⁾에 따르면 동향조사 응답자 중 80.1%가 코로나 이후 경영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63.2%가 경영개선을 “계획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가속화하도록 관련 사업이 수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10, pp. 252~257

8) 소상공인진흥공단,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경영개선 동향조사」(2022.4)

사. SOC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SOC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조원(10.2%) 감소한 25.1조원이 편성되었다. SOC 분야는 교통 및 물류에 5개 부문과 지역개발에 3개 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교통 및 물류에서는 철도·도시철도 부문이 8,212억원(9.6%)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지역개발에서는 지역 및 도시 부문은 7,696억원(25.3%) 감소하였다.

정부는 SOC 예산으로 ① 국가 주요 기간망을 구축하고 광역간 이동성을 강화하며, ② 대중교통지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수단지원을 강화하고, ③미래 모빌리티 혁신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전략산업화하며, ④ 도로, 철도 등 SOC를 선제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도 SOC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SOC	279,683	251,213	△28,470	△10.2
교통 및 물류	228,491	208,677	△19,814	△8.7
도로	85,478	77,828	△7,650	△8.9
철도·도시철도	85,756	77,544	△8,212	△9.6
해운·항만	20,320	18,740	△1,580	△7.8
항공·공항	4,237	3,398	△839	△19.8
물류 등 기타	32,700	31,167	△1,533	△4.7
지역개발	51,193	42,536	△8,657	△16.9
수자원	16,055	16,518	463	2.9
지역 및 도시	30,439	22,743	△7,696	△25.3
산업단지	4,699	3,275	△1,424	△30.3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SOC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SOC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5.1조원으로, 과거 2017~2021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4.6%였으나, 전년도 본예산 28.0조원 대비 2.9조원(10.2%) 감소하였다. SOC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1.8% 감소할 전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SOC 분야 비중이 2022년 4.6%에서 2023년 3.9%로 감소하였다가 2026년에는 3.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OC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SOC(A)	22.1	19.0	19.8	23.2	26.5	4.6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5.5	4.4	4.2	4.5	4.7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SOC(A)	28.0	25.1	25.5	25.8	26.0	△1.8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4.6	3.9	3.8	3.7	3.6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SOC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은 3.3%이나 동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2%p 높은 5.5%로 나타나, SOC 분야 총지출은 정부 총지출에 비해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22.1 (△6.8)	17.7 (△19.9)	17.0 (△4.0)	16.5 (△2.9)	16.2 (△1.8)					(△7.5)
2019~2023		19.8 (4.0)	22.3 (12.9)	23.4 (4.9)	23.7 (1.4)	23.7 (△0.3)				(4.6)
2020~2024			23.2 (17.6)	26.0 (11.9)	27.8 (6.8)	28.7 (3.4)	29.3 (2.0)			(6.0)
2021~2025				26.5 (14.1)	27.5 (3.8)	28.7 (4.4)	29.5 (2.5)	30.2 (2.4)		(3.3)
2022~2026					28.0 (5.5)	25.1 (△10.2)	25.5 (1.5)	25.8 (1.1)	26.0 (1.0)	(△1.8)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제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교통 인프라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신규 건설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SOC 질 제고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은 사업 여건을 점검하여 완공 지원을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간 빠른 연결과 대도시권 주변의 교통 혼잡을 개선해 국민편의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5개 부문의 예산은 감소하고, 3개 부문은 증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도로 부문 예산은 SOC 분야 예산 중 비중이 31.3%로 가장 컸고, 2022년까지 SOC 분야 예산 중 비중은 29.4~31.3%가량으로 유지되어왔으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도로 부문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2026년에는 SOC 분야 예산 대비 비중 27.3%로 낮아질 예정이다.

그리고 2018년 철도·도시철도 부문 예산은 519억 6,900만원으로 SOC 분야 예산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인 27.4%를 차지하였고, SOC 분야 예산 대비 비중은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0.9%에 달했다. 이후 2026년까지 예산

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26년에는 781억 2,900만원(2026년 SOC 분야 예산 대비 30.0%)으로 배분될 계획이다. 다만, 철도·도시철도부문은 GTX 건설 등 주요 국가기간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로 부문에 비해 예산 감소율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해운·항만과 항공·공항 부문은 2022~2026년간 예산이 증가할 예정인데, 특히 항공·공항 부문은 신공항 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소요가 반영되어 연평균 증가율이 26.8%로 높게 나타난다.

[2018~2022년 SOC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OC	189,916	197,531	232,311	265,090	279,683
도로	59,382 (31.3)	58,742 (29.7)	72,588 (31.2)	77,829 (29.4)	85,478 (30.6)
철도·도시철도	51,969 (27.4)	55,163 (27.9)	69,474 (29.9)	80,956 (30.5)	85,756 (30.7)
해운·항만	17,644 (9.3)	17,172 (8.7)	18,974 (8.2)	21,099 (8.0)	20,320 (7.3)
항공·공항	1,435 (0.8)	1,561 (0.8)	2,691 (1.2)	3,564 (1.3)	4,237 (1.5)
물류 등 기타	22,826 (12.0)	23,908 (12.1)	28,097 (12.1)	30,192 (11.4)	32,700 (11.7)
수자원	16,779 (8.8)	17,311 (8.8)	12,909 (5.6)	16,517 (6.2)	16,055 (5.7)
지역 및 도시	16,670 (8.8)	20,205 (10.2)	24,474 (10.5)	30,693 (11.6)	30,439 (10.9)
산업단지	3,209 (1.7)	3,469 (1.8)	3,103 (1.3)	4,239 (1.6)	4,699 (1.7)

주: 괄호 내 수치는 SOC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SOC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SOC	279,683	251,213	255,022	257,907	260,496	△1.8
도로	85,478 (30.6)	77,828 (31.0)	73,252 (28.7)	70,030 (27.2)	71,168 (27.3)	△4.5
철도 · 도시철도	85,756 (30.7)	77,544 (30.9)	74,686 (29.3)	82,996 (32.2)	78,129 (30.0)	△2.3
해운 · 항만	20,320 (7.3)	18,740 (7.5)	21,703 (8.5)	22,790 (8.8)	23,183 (8.9)	3.4
항공 · 공항	4,237 (1.5)	3,398 (1.4)	6,508 (2.6)	7,827 (3.0)	10,950 (4.2)	26.8
물류 등 기타	32,700 (11.7)	31,167 (12.4)	35,564 (13.9)	32,344 (12.5)	32,387 (12.4)	△0.2
수자원	16,055 (5.7)	16,518 (6.6)	16,666 (6.5)	16,680 (6.5)	16,694 (6.4)	1.0
지역 및 도시	30,439 (10.9)	22,743 (9.1)	20,653 (8.1)	20,706 (8.0)	23,929 (9.2)	△5.8
산업단지	4,699 (1.7)	3,275 (1.3)	5,989 (2.3)	4,535 (1.8)	4,057 (1.6)	△3.6

주: 괄호 내 수치는 SOC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SOC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SOC 분야 예산은 감소할 예정인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후 SOC 유지보수 사업 및 안전관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철저한 재정 지출관리가 필요하다.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시설물이 2026년에 21.41%에 달할 전망으로, 향후 노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SOC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SOC 시설물 노후화 추세 전망]

(단위: 개, %)

구 분		1996	2006	2016	2026	2036
공공	수량	7,518	17,674	26,930	35,120	39,817
30년이상	수량	671	1,267	2,744	7,518	17,674
	비율	8.93	7.17	10.30	21.41	44.39

자료: 국토교통부,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 2017.12.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SOC 분야의 재정투자 계획은 2022년 28.0조 원, 2023년 25.1조원, 2024년 25.5조원, 2025년 25.8조원, 2026년 26.0조원으로 연평균 1.8% 감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019.1.29.)¹⁾를 발표하였고, 이 중 SOC분야에 해당하는 1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약 21조원 규모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1조 2,30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22년 8월말 현재 상당수 사업은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하여 2023년부터 착공할 계획이고, 그 외 서남해안 관광도로, 남북내륙철도 등 도로 2개, 철도 4개 사업은 착공 중이어서 20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공사비 지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SOC 유지보수·안전관리 사업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1) 동 프로젝트는 ①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②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③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④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이 중 직접 SOC 건설 사업은 ②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③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④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영역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교통시설 건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2년 예산(A)	'23년 예산(B)	비고
총 15개(도로6, 철도8, 공항1)		211,071	8,147	12,307	
도로		61,726	1,915	6,279	
1	울산 외곽순환 건설사업	13,647	161	1,477	
1-1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미호~가대)	3,685	39	573	
1-2	울산외곽(농소~강동) 혼잡도로	4,956	100	120	
2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5,006	22	784	
3	서남해안 관광도로(국도건설)	9,881	443	1,348	
3-1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화원	5,058	229	708	착공
3-2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4,823	214	640	착공
4	세종~청주 고속도로	5,296	59	1,003	
5	제2경춘국도	12,862	2	766	
6	국도위험구간	15,034	1,228	901	
6-1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달방	1,097	34	32	
6-2	국도21호선 천안 동면~진천 진천	2,723	225	115	
6-3	국도77호선 태안 고남~창기	2,372	133	90	
6-4	국도7호선 경주 농소~외동	1,676	297	174	착공
6-5	국도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1,861	213	180	착공
6-6	국도21호선 순창 인계~쌍치	1,870	100	75	
6-7	국도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1,654	57	64	
6-8	국도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1,781	169	171	착공
철도		141,268	6,032	5,893	
7	석문산단 인입철도	10,719	178	210	
8	대구산업선 철도	15,511	438	1,576	
9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9,438	541	1,686	착공
10	충북선철도고속화(청주공항~제천)	12,807	280	87	
11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31,816	1,100	1,440	착공
12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4,347	2,924	155	착공
13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	4,360	131	203	착공
14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2,270	440	536	
공항		8,077	200	135	
15	새만금 국제공항	8,077	200	135	

주: 비고는 2022년 8월말 기준 착공 여부

자료: 국토교통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SOC 분야의 재정투자 계획은 2022~2026년간 연평균 1.8% 감소할 예정인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SOC 건설 사업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출 소요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노후 SOC 유지보수·안전관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철저한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많으므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²⁾

① 우선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의 신규 세부사업은 실집행률 0%인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세부사업의 실집행률 저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예산 편성 등을 위해 공사 발주를 위한 최소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신규 공사 착공을 위한 지자체의 설계도서 검토 및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거나 설계완료가 예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실시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어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엄격하게 사전검토하여 교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2023년도 예산안으로는 4개 세부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2. 10, pp. 145~148

[2018~2022년간 신규 세부사업의 실적행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신규 세부사업	국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A)	교부액(B)	교부율(B/A)	실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2018	3	600	600	100.0	0	600	0	0
2019	8	2,500	800	32.0	0	800	0	0
2020	4	1,000	1,000	100.0	0	1,000	0	0
2021	9	2,000	1,700	85.0	156	1,544	0	7.8
2022.8.	8	1,600	1,464	91.5	0	0	0	0

자료: 국토교통부

② 그리고 2023년에 계속사업 48건, 준공사업 13건이 보조될 예정인데, 2021년 결산 현황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히 사전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결산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단위사업의 교부액 대비 실적행률은 82.7%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내 전체 61개 세부사업 중 43개 세부 사업은 교부현액 대비 실적행률이 70% 미만이었으며, 13개의 사업은 실적행 실적이 전혀 없었다.

2021회계연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 중 실적행률 70% 미만인 43개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지연) 8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한 지연 2건, 보상협의 지연 11건, 민원에 따른 지연 5건, 도로구역 결정 변경으로 인한 지연 4건, 민원에 따른 지연 1건, 시설물 이설 협의에 따른 지연 1건 및 지방자치단체·타부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3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실행 실적 70% 미만 사업의 지연 유형]

구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수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협의기간 소요	8	경기광주-양평, 마령재터널, 밀양무안-신법, 부여임천-논산 강경, 성환-입장, 우성-이인, 운문-도계, 홍성은하장착-목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	경기도계-인천마전, 화성장지-용인남사
보상협의 지연	11	도척-실촌, 실촌-만선, 갈천-가수, 길상-선원, 외부-화도, 도계-영월, 양주장흥-광적, 포천군내-내촌, 칠북-북면, 매 리-양산, 산청-금서
민원에 따른 지연	5	대곡-반곡, 포진-문막, 상촌-황간, 연금-금성, 쌍백-봉수
도로구역 결정 변경	4	상원-청하, 광주진업-여주상품, 양근대교, 화성우정-향남
시설물 이설협의	1	봉강-무안
지자체/타부처 인허가 지연	3	가남-상수, 당진-서산, 대동-매리
기 타	9	
합계	43	-
전체사업수	61	-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자치단체보조사업에 대하여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에 대해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고, 특히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 중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과도하게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건설비 외에 용지보상비는 100%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보상비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 농림·수산·식품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580억원 (2.4%) 증가한 24조 2,402억원이 편성되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농업·농촌 부문이 4,151억원(2.4%)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수산·어촌 부문은 524억원(1.8%) 증가하였으며, 식품업 및 임업·산촌 부문은 소폭 감소하였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으로 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여건에 기인한 식량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주요 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강화를 도모하고, ② 농어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어업,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미래성장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농림·수산·식품	236,822	242,402	5,580	2.4
농업·농촌	172,466	176,617	4,151	2.4
수산·어촌	28,841	29,365	524	1.8
식품업	8,849	8,843	△6	△0.1
임업·산촌	27,599	27,576	△23	△0.1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농림·수산·식품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4.2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3.7조원 대비 0.5조원(2.4%) 증가하여 과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3.7%)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 총

지출 증가율 4.6%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농림·수산·식품 분야 비중이 2022년 3.9%에서 2023년 3.8%로 낮아지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6년에는 3.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농림·수산·식품(A)	19.6	19.7	20.0	21.5	22.7	3.7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4.9)	(4.6)	(4.3)	(4.2)	(4.1)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농림·수산·식품(A)	23.7	24.2	24.5	24.7	24.9	1.3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3.9)	(3.8)	(3.7)	(3.5)	(3.4)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4.6% 보다 3.3%p 낮다. 반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은 2.4%이나 동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5%으로 그 차이가 3.1%p로 더 적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총지출 증가 추이는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19.7 (0.5)	19.9 (1.0)	19.8 (△0.5)	19.7 (△0.5)	19.6 (△0.5)					(△0.1)
2019~2023		20.0 (1.5)	21.0 (4.7)	21.5 (2.3)	21.9 (1.9)	22.2 (1.6)				(2.6)
2020~2024			21.5 (7.4)	22.4 (4.0)	23.0 (2.7)	23.3 (1.3)	23.5 (1.1)			(2.3)
2021~2025				22.7 (5.3)	23.4 (3.4)	24.0 (2.3)	24.4 (2.0)	24.9 (1.8)		(2.4)
2022~2026					23.7 (4.4)	24.2 (2.1)	24.5 (1.2)	24.7 (0.8)	24.9 (0.8)	(1.3)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지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율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수산물 소비 위축 및 농어촌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였다. 이를 위해 공익직불제 개편 등 농업·수산 부문에 이어 임업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임업·산촌 부문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0.6%에서 2022년 11.7%로 1.1%p 상승하였다.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농수산물 물가안정 및 주요 작물에 대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스마트 농어업, 청년 농어업인 육성에 중점적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인데, 이에 따라 농업·농촌 및 수산·어촌 부문의 재정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식품 및 임업·산촌 부문의 경우 재정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림·수산·식품	197,256	200,303	215,153	226,558	236,822
농업·농촌	147,652 (74.9)	149,143 (74.5)	160,705 (74.7)	164,991 (72.8)	172,466 (72.8)
수산·어촌	21,573 (10.9)	22,448 (11.2)	24,218 (11.3)	26,736 (11.8)	28,841 (12.2)
식품업	7,088 (3.6)	6,970 (3.5)	7,394 (3.4)	8,930 (3.9)	8,849 (3.7)
임업·산촌	20,943 (10.6)	21,743 (10.9)	22,836 (10.6)	25,899 (11.4)	27,599 (11.7)

주: 괄호 내 수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농림·수산·식품	236,822	242,402	244,764	247,269	249,464	1.3
농업·농촌	172,466 (72.8)	176,617 (72.9)	178,621 (73.0)	180,534 (73.0)	181,951 (72.9)	1.5
수산·어촌	28,841 (12.2)	29,365 (12.1)	30,320 (12.4)	30,574 (12.4)	31,512 (12.6)	2.6
식품업	8,849 (3.7)	8,843 (3.6)	8,112 (3.3)	8,087 (3.3)	7,788 (3.1)	△1.7
임업·산촌	27,599 (11.7)	27,576 (11.4)	27,574 (11.3)	28,028 (11.3)	27,213 (10.9)	△0.4

주: 괄호 내 수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외 여건상 밀 자급률 제고가 시급한 가운데 국내 밀 산업 육성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인데, 밀 재배 직불금은 ha당 50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쌀 재배 대체효과가 불분명한 하계작물(가루쌀·콩) 재배에 대한 직불금 단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100만원)되어 있어 책정한 직불금 단가 수준이 각각의 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1년~2022년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밀 선물가격도 2020년 178\$/톤에서 2022년 5월 457\$/톤으로 상승⁴⁾하는 등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밀 수급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밀 자급률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1월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밀 자급률 목표를 2020년 기준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 수준으로 올리고, 밀 전문 생산단지 확대, 국산 밀 비축제도 운영⁵⁾ 등을 통해 밀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밀 생산 관련 자급 실적을 살펴보면 밀의 재배면적은 2020년 5,224ha, 2021년 6,224ha, 2022년 8,259ha로서, 2022년 기준으로는 밀 재배면적 목표 1만 5,000ha 대비 6,741ha가 부족하여 밀 산업 육성이 계획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10, pp. 13~17

4) [밀 선물가격]

(단위: US\$/톤)

'19년	'20년	'21년	'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1	178	251	290	306	405	413	457	400

자료: KCBT No2 경질밀 월별 평균 가격

5)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밀 비축물량을 2021년 대비 8,400톤 증가한 1만 4,000톤까지 확대하여 국산 밀 생산·공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국산 밀 정부 비축 대 폭 늘린다!', 2022.3.15.)

[국산 밀 생산 관련 계획 및 실적]

(단위: ha, %, 천톤)

구 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재배면적(A)	5,224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자급률	1.0	1.7	2.5	3.3	4.2	5.0
	생산량	21	40	60	80	100	120
실적	재배면적(B)	5,224	6,224	8,259	-	-	-
차 이(A-B)		0	3,776	6,741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2020.11월)

통계청 「2022년 맥류, 봄간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2022.6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동계작물(밀·조사료) 재배 농가에 ha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논활용직불’ 사업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동계작물로 조사료·밀을 재배(ha당 50만원)하거나 하계에 콩·가루쌀을 재배(ha당 100만원)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며, 각각의 동계·하계 작물을 이모작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ha당 250만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전략작물직불 세부 산출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예산 규모	산출내역	예산 규모	산출내역
46,200	동계작물 지원 (산출) $92,400\text{ha} \times 50\text{만원/ha}$ = 46,200백만원	72,000	동계작물(밀·조사료) 지원 (산출) $88,000\text{ha} \times 50\text{만원/ha}$ = 44,000백만원
			하계작물(가루쌀·콩) 지원 (산출) $8,000\text{ha} \times 100\text{만원/ha}$ = 8,000백만원
			동계-하계 이모작 (산출) $8,000\text{ha} \times 250\text{만원/ha}$ = 20,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전략작물직불 단가를 설계한 목적은 전략작물 재배 확대와 동시에 하계 작물(가루쌀·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 재배를 대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쌀 재배가 콩 재배에 비해 면적당 수익⁶⁾이 높고, 가루쌀 품종의 수발아⁷⁾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작물 간 수입-생산비 차이가 발생하는 가운데 논벼 외 작물 재배의 기계화 확대, 재배기술 향상 등 작물 간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않는 한 직불금 지급에 따른 쌀 재배 대체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밀 자급률 제고에 대한 요구는 시급한 상황이므로, 책정한 직불금 단가 수준이 각각의 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총허용어획량(TAC) 경영개선 자금(용자) 사업은 2021년부터 보다 직접적인 지원제도인 TAC 참여 어선에 대한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이 신설되었고, 다른 이차보전사업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또는 중장기적인 사업간 통합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⁸⁾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여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TAC 경영개선 자금(용자) 사업은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TAC 도입에 따른 어민들의 수입 감소분을 직접적으로 보전해주지 못하고, 현금유동성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TAC 참여어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6)

[2020년 논벼 및 콩 생산비 및 소득 현황]

(단위: 원/10a)

작물	총수입(A)	생산비(B)	순수익(A-B)
논벼	1,216,248	773,658	442,591
콩	809,514	657,986	151,52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7) 수발이란 종자가 이삭에 붙은 채로 썩어 나는 현상을 의미함

8)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10, pp. 71~77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TAC 제도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수산공익직불제⁹⁾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설하였고, TAC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일부 수산자원보호의무를 함께 이행하는지 관리하여 평균 800만원¹⁰⁾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다른 세부사업인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¹¹⁾의 내역사업인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사업'으로 일반적인 어선어업인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용자)사업과 유사사업간 비교]

사업명	지원한도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용자)	어업별 소요액 ¹⁾ 130% 범위 내	○ (사업내용) TAC참여어업인(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포함)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조건) 금리 - 2.5%~3.0%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사업내용)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금리 - 2.5~3.0%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가능

주: 1) 집행주체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포함) 조사결과 보고서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두 사업은 각각 지원방식(용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한도, 대출기간이 일부 상이하지만¹²⁾, 어업인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저금리의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 대상, 효과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2021년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방식인 수산보호직불제가 신설되었는데 유사한 지원사업이 병존하고 있어 동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필요성이 불분명하다.

9)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60-310

10)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 :

연근해어선 1,467척 × 평균 지급단가 8백만원 × 국비100% + 행정비(직불금1.7%) = 11,934백만원

1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50-301

12)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지원한도가 어업별 소요액 100% 범위를 초과한 소요액(130% 내)이므로 동 사업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TAC 대상 어종·업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승인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동 사업에 따른 대출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별도 세부사업 등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7~2022년 8월말 현재까지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신청·승인현황]

(단위: 개, 척, 백만원, 명)

구 분	TAC대상 어종/업종	TAC 대상어선	당초 계획액	대출신청		대출승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7	11/13	-	9,174	63	8,877	52	7,341
2018	11/13	-	8,274	66	8,179	48	4,379
2019	12/14	-	8,274	39	7,912	37	7,752
2020	12/14	-	8,274	36	8,274	36	8,274
2021	12/14	-	9,450	32	8,779	32	8,579
2022.8.	15/17	-	10,500	38	10,500	27	6,310
평 균(2017~2021)			8,689	47	8,404	41	7,265

자료: 해양수산부

자. 국방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특징

2023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5조원(4.6%) 증가한 57.1조원이 편성되었다. 국방 분야는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부문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전력운영 부문이 2.2조원(5.8%) 증가하였고, 방위력개선 부문이 0.4조원(2.4%) 증가하였다.

정부는 병 봉급 인상, 개인전투장비 품질개선 및 병영생활간 신축 등을 통해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부대 등 국방운영을 첨단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방	546,112	571,268	25,156	4.6
전력운영	379,195	401,089	21,894	5.8
방위력개선	166,127	170,179	4,052	2.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재정지출 추이 및 향후 계획

국방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7.1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4.6조원 대비 2.5조원(4.6%) 증가하여 과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7.0%)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국방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4.0%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국방 분야 비중이 2022년 8.9%, 2023년도의 경우에도 8.9%를 유지하다가 2026년에는 8.7%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국방(A)	40.3	43.2	46.7	50.2	52.8	7.0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10.0)	(10.0)	(9.9)	(9.8)	(9.4)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국방(A)	54.6	57.1	59.5	61.8	63.8	4.0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8.9)	(8.9)	(8.8)	(8.8)	(8.7)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방분야 재정지출은 전방위 위협 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와 병 봉급 인상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2~2026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4.0% 증가할 전망이다.

방위력개선 부문은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를 위해 수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수출연계 부품 국산화 등 방산수출 지원 확대,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 등 방산 중소기업 전략적 육성에, **전력운영 부문**은 병영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 및 사회진출 지원금을 2025년까지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수통·헬멧 등 개인전투장비 품질개선과 병영 생활관 신축 등 군 병영생활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방 분야 지출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18~'22	43.2 (7.2)	46.7 (8.1)	49.9 (6.9)	52.8 (5.8)	55.5 (5.1)					(6.5)
'19~'23		46.7 (8.2)	50.2 (7.4)	53.4 (6.5)	56.4 (5.7)	59.5 (5.4)				(6.2)
'20~'24			50.2 (7.4)	52.9 (5.5)	56.1 (6.0)	58.6 (4.5)	60.9 (4.0)			(5.0)
'21~'25				52.8 (5.4)	55.2 (4.5)	57.7 (4.4)	60.3 (4.6)	63.1 (4.5)		(4.5)
'22~'26					54.6 (3.4)	57.1 (4.6)	59.5 (4.2)	61.8 (3.8)	63.8 (3.4)	(4.0)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제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국방 분야의 2018~2022년 국방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도 국방분야 예산 43조 1,581억원 중 전력운영비는 29조 6,378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3조 5,203억원으로, 전력운영비 비중이 68.6%,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운영비는 2018~202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력운영비는 37조 9,195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917억원으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69.4%, 방위력개선비 30.6%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는 감소하였다.

[2018~2022년 국방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방	431,581	466,971	501,527	528,401	546,112
전력운영비	296,378 (68.6)	313,238 (67.0)	334,723 (66.7)	358,437 (67.8)	379,195 (69.4)
방위력개선훁	135,203 (31.4)	153,733 (33.0)	166,804 (33.3)	169,964 (32.2)	166,917 (30.6)

주: 괄호 내 수치는 국방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본예산 기준)

국방 분야의 2022~2026년 국방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 국방분야 예산 54조 6,112억원 중 전력운영비는 37조 9,195억원, 방위력개선훁는 16조 6,917억원으로, 전력운영비 비중이 69.4%, 방위력개선훁 비중이 30.6%를 차지한다.

전력운영비는 2022~2026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전력운영비는 44조 8,853억원, 방위력개선훁는 18조 9,577원으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70.3%, 방위력개선훁 29.7%로,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훁의 비중이 차이가 지난 2018~2022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6년 국방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국방	546,112	571,268	595,135	617,592	638,430	4.0
전력운영비	379,195 (69.4)	401,089 (70.2)	416,442 (69.9)	433,537 (70.2)	448,853 (70.3)	4.3
방위력개선훁	166,917 (30.6)	170,179 (29.8)	178,693 (30.1)	184,055 (29.8)	189,577 (29.7)	3.2

주: 괄호 내 수치는 국방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국방 분야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군 간부 지원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병사의 봉급 인상은 군 간부와 병사의 봉급 격차가 좁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 및 사기저하를 심화시켜 군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을 위해 2023년 병 인건비 사업²⁾ 예산을 5,200억 2,900만원이 증액된 2조 8,52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병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 인건비	2,265,331	2,332,432	2,332,432	2,852,461	520,029	22.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국방부

병사 봉급 인상의 계급별 단가를 살펴보면, 병장의 경우 전년대비 32만 3,900원(47.9%)이 오른 100만원, 상병은 18만 9,800원(31.1%)이 오른 80만원, 일병은 12만 7,900원(23.2%)이 오른 68만원, 이병은 8만 9,900원(17.6%)이 오른 6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2년 및 2023년 계급별 단가 비교]

(단위: 원, %)

구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022	676,100	610,200	552,100	510,100
2023	1,000,000(47.9%)	800,000(31.1%)	680,000(23.2%)	600,000(17.6%)

자료: 국방부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2. 10, pp. 115~118

2) 코드: 일반회계 1101-153

반면, 국방부는 하사기본급을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23년 181만원, 2025년에는 19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인 바, 병사 수령액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더욱이 전 부처 공통사항으로 하위직급 공무원 1.7% 처우개선분만 반영됨에 따라 국방부의 하사 기본급 인상계획(전년대비 6%)에 상당 수준 못 미치게 됨에 따라 병사 수령액과 차이는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병 봉급 수령액 인상안 및 하사 기본급 비교(월기준)]

(단위: 천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병사 수령액	병사봉급 (병장 기준)	676	1,000 (47.9)	1,250 (25)	1,500(20)
	장병내일준비 적금지원금	140	300	400	550
	소계	816	1,300	1,650	2,050
하사 기본급	하사 1호봉(*)	1,705	1,815	1,869	1,925

주: (*) 국방중기계획 22~26년

자료: 국방부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작전·전투조직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투·작전 숙련도가 높은 군 간부 비중을 확대하는 간부 중심의 계급구조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사사관후보생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학사사관후보생의 경우 2017년 5.2:1의 경쟁률이 2021년 2.6:1의 경쟁률로,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3.6:1의 경쟁률에서 2021년 2.6:1의 경쟁률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사 사관후보생 선발 경쟁률]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학 사	5.2 : 1	4.0 : 1	3.3 : 1	2.7 : 1	2.6 : 1
학 군	3.6 : 1	3.3 : 1	3.1 : 1	2.7 : 1	2.6 : 1

자료: 국방부

한편, 부사관 운용률(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중사 이상의 경우 95% 이상의 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하사의 경우 85.4%으로 타 부사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임기제 부사관³⁾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83% 수준에 그치는 등 초급 간부인 하사의 운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운용률]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사	98.2	99.1	99.0	99.9	99.8
상사	95.8	95.6	109.3	99.7	96.0
중사	104.6	99.2	98.8	96.9	97.8
하사	81.1	81.4	84.9	84.3	85.4
임기제부사관	45.3	44.6	63.0	74.9	83.0

자료: 국방부

이렇게 군 간부 지원을 및 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고, 병사 급여수준이 최근 상당부분 개선되어 군 간부에 지원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로,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인 반면, 학군장교(육군)는 2년 4개월, 학사장교는 3년⁴⁾이다.

3) 「병역법」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장교 등은 6~17주의 후보생 교육을 거쳐 임용되므로 의무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제외되어 실제 복무기간은 더 길 수밖에 없다. 반면, 병사는 훈련기간에 의무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고 있다.

[의무복무 기간 비교]

구 분	병	학군장교	학사장교
의무복무기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육군 2년 4개월 해군·해병 2년 공군 3년	3년

자료: 국방부

이러한 상황에서 병사의 봉급을 향후 2025년까지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면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현직 군 간부들의 사기저하가 심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가 부사관 및 위관장교 등 군내 구성원의 계급 간 봉급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⁶⁾

최근 5년간 이등병에서 병장 간 봉급 차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병 봉급을 100%로 봤을 때, 일병 108%, 상병 120%, 병장 133%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2023년의 경우 이병 봉급을 100%로 봤을 때, 일병 113%, 상병 133%, 병장 166%로 기존에 국방부가 유지했던 계급 간 봉급 차이 비율이 보다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

(단위: 원,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18	306,100(100)	331,300(108)	366,200(120)	405,700(133)
2019	306,100(100)	331,300(108)	366,200(120)	405,700(133)
2020	408,100(100)	441,700(108)	488,200(120)	540,900(133)
2021	459,100(100)	496,900(108)	549,200(120)	608,500(133)
2022	510,100(100)	552,100(108)	610,200(120)	676,100(133)
2023	600,000(100)	680,000(113)	800,000(133)	1,000,000(166)

자료: 국방부

5) 이에 대해 대책으로 국방부는 단기복무장교 장려금(1회 지급)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1회 지급)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증액하는 분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나, 병사의 급격한 봉급인상과 단축된 의무복무기간을 감안할 때, 군간부 획득의 개선방안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2. 10, pp. 119~12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2022년에는 계급별 봉급 차이 비율이 이병과 일병 8%p, 일병과 상병 12%p, 상병과 병장 13%p이며, 이병과 병장 간의 차이는 33%p로, 국방부는 계급 간의 봉급 차이 비율을 줄곧 유지해 왔다

반면, 2023년 예산안의 경우 계급 간 봉급 비율은 이병과 일병 13%p, 일병과 상병 20%p, 상병과 병장 33%p이며, 이병과 병장 간의 차이는 66%p 차이가 나는 등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18~2022	100	108(8%p)	120(12%p)	133(13%p)
2023	100	113(13%p)	133(20%p)	166(33%p)

자료: 국방부

더욱이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과 2025년 이병과 병장 간의 봉급차이는 74%p로, 2023년의 70%p 보다 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급별 병사 봉급 인상계획안]

(단위: 천원,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	510(100)	552(108)	610(120)	676(133)
2023	600(100)	680(113)	800(133)	1,000(166)
2024	720(100)	800(111)	1,000(139)	1,250(174)
2025	864(100)	960(111)	1,200(139)	1,500(174)

자료: 국방부

반면,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의 기본급을 살펴보면, 부사관의 경우 2022년 기준 하사(1호봉) 170만원, 중사(1호봉) 179만원, 상사(1호봉) 222만원으로, 하사와 중사 간의 기본급 차이는 5%p, 중사와 상사 25%p, 하사와 상사 30%p 차이가 난다.

위관급 장교의 경우 2022년 기준 소위(1호봉) 175만원, 중위(1호봉) 192만원, 대위(1호봉) 247만원으로, 소위와 중위 간의 기본급 차이는 9%p, 중위와 대위 32%p, 소위와 대위 41%p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사관 및 위관 장교의 계급 간 차이가 약 40%p인 반면, 국방부의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서의 병사 간 봉급 차이는 약 70%p로 군 내 구성원 집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봉급 차이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사 계급 간 봉급 차이의 적정성을 확보⁷⁾할 필요가 있다.

[군 간부의 기본급 비교]

(단위: 만원, %)

구 분	부사관(2022년 기준)			위관장교(2022년 기준)		
	하 사	중 사	상사	소 위	중위	대위
기본급	170.5 (100)	179.1 (105)	222 (130)	175.5 (100)	192 (109)	247.6 (141)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을 바탕으로 재작성

7) 한편, 부사관 및 장교들은 진급심사 시에 수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에 따라 진급하게 되는 병의 진급구조와 다르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차. 외교·통일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337억원(7.3%) 증가한 6조 3,880억원이 편성되었다. 외교·통일 분야는 외교 부문과 통일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외교 부문이 전년 대비 4,840억원(11.0%) 증가하였고, 통일 부문은 전년 대비 503억원(3.3%) 감소하였다.

정부는 ODA 대폭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북한 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외교·통일 분야	59,543	63,880	4,337	7.3
외교	44,180	49,020	4,840	11.0
통일	15,363	14,860	△503	△3.3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외교·통일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외교·통일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6.4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0조원 대비 0.4조원(7.3%) 증가하여 과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5.7%)을 상회하고 있다. 외교·통일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외교·통일 분야 비중이 2022년 1.0%에서 2026년 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외교·통일(A)	4.6	4.7	5.1	5.5	5.7	5.7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1.1)	(1.1)	(1.1)	(1.1)	(1.0)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외교·통일(A)	6.0	6.4	6.7	7.0	7.2	4.7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1.0)	(1.0)	(1.0)	(1.0)	(1.0)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외교·통일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4.6%보다 0.1%p 높다. 반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외교·통일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은 3.8%이나 동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5%로 그 차이가 1.7%p로 나타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외교·통일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4.7 (3.5)	5.1 (7.5)	5.4 (6.8)	5.7 (5.7)	6.0 (5.1)					(6.3)
2019~2023		5.1 (7.2)	5.5 (9.2)	5.9 (6.2)	6.3 (6.5)	6.6 (5.6)				(6.9)
2020~2024			5.5 (8.8)	5.7 (4.3)	6.0 (4.0)	6.2 (4.0)	6.5 (3.9)			(4.1)
2021~2025				5.7 (3.5)	6.0 (5.7)	6.2 (3.3)	6.4 (3.2)	6.6 (3.2)		(3.8)
2022~2026					6.0 (4.4)	6.4 (7.3)	6.7 (5.4)	7.0 (3.5)	7.2 (2.8)	(4.7)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지출 예산안, 음영 얇은 해당연도 본예산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외교·통일 분야의 2018~2022년 부문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 4조 7,238억원 중 외교 분야는 3조 4,980억원, 통일 분야는 1조 2,258억원으로, 외교 분야 비중이 74.1%, 통일 분야 비중이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일 분야의 2022~2026년 부문별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 5조 9,543억원 중 외교 부문은 4조 4,180억원, 통일 부문은 1조 5,363억원으로, 외교 분야의 비중이 74.2%, 통일 분야의 비중이 25.8%를 차지한다.

[2018~2022년 외교·통일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외교·통일	47,238	50,648	55,092	57,037	59,543
외교	34,980	37,026	40,505	41,958	44,180
	(74.1)	(73.1)	(73.5)	(73.6)	(74.2)
통일	12,258	13,621	14,587	15,079	15,363
	(25.9)	(26.9)	(26.5)	(26.4)	(25.8)

주: 괄호 내 수치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 부문은 2022~2026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외교 부문은 5조 6,404억원, 통일 부문은 1조 5,200억원으로 외교 부문의 비중이 78.8%, 통일 부문의 비중이 21.2%로, 외교 부문과 통일 부문의 비중 간 차이가 지난 2018~2022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6년 외교·통일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외교·통일	59,543	63,880	67,299	69,632	71,604	4.7
외교	44,180	49,020	52,133	54,446	56,404	6.3
	(74.2)	(76.7)	(77.5)	(78.2)	(78.8)	
통일	15,363	14,860	15,166	15,186	15,200	△0.3
	(25.8)	(23.3)	(22.5)	(21.8)	(21.2)	

주: 괄호 내 수치는 교육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외교·통일 분야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수직 설치 사업은 예산 확정 전에 신규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회 예산 확정 이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 신청기관이 2개교 접수되어 계획(4개교)보다 저조하므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¹⁾

교수직 설치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대학과의 다년 협약을 통해 ‘계속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시에, 집행 전년도에 ‘신규사업’을 공모(7.1.~9.15.)하여 심의(9월~10월) 및 선정(12월 초)한 후 당해연도에 시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즉, 교수직 설치 사업은 예산 확정 전에 신규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신규사업 공고 및 심의절차 진행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규사업을 포함한 차년도 사업계획은 국회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는 시점인 12월말에 확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규사업 신청은 9월 중으로 마감되고 신청결과를 토대로 9월~12월 초에 심의·선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신규사업 공고, 심의 및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2. 10, pp. 26~31

한편, 교수직 설치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119.8%) 5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한국학기반확대 사업²⁾의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해외 유력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학기반확대 사업 예산 증액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편성사유
한국학기반확대	15,736	18,644	해외 유력대학 내 한국학 석좌교수직 설치 (기금 설치형 4개교, 급여지원형 5개교 추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8.3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산출근거를 보면, 신규사업(기금 설치형 4개교, 급여 지원형 5개교) 대상 30억 600만원, 계속사업(기금 설치형 3개교, 급여 지원형 17개교) 대상 28억 400만원으로 총 58억 7,000만원 규모이다.

[2023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구분	신규사업	계속사업	합계
기금 설치형	4개교*694백만원 =2,776백만원	3개교*536.3백만원 =1,609백만원	4,385백만원
급여 지원형	5개교*58백만원 =290백만원	17개교*70.3백만원 =1,195백만원	1,485백만원
총계	3,066백만원	2,804백만원	5,870백만원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규사업 신청은 2022년 9월 15일자로 마감되었는데, 기금 설치형은 2개교, 급여 지원형은 12개교에서 지원하여 당초 계획(4개교)보다 기금 설치형이 2개교 적게 접수되었으므로, 2개교 지원예산 규모(13억 8,800만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신규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 신청기관이 2개교 접수되어 계획(4개교)보다 저조하므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교수직 설치 사업은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둘째,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통일부내 기존 사업 및 타 부처와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처와 협의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 계획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³⁾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사업추진에 앞서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특성상 개성공단 중단 등과 같은 남북관계 경색 이슈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규모는 1조 8,003억 8,800만원이며, 전년대비 2,432억원(15.6%) 증가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인 민생협력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1.9% 증가한 6,259억원 규모로 내역사업인 보건의료협력사업은 51.1% 증액한 1,442억 규모,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사업은 14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주요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결산	2022		2023 예산(B)	증 감	
		당초	수정(A)		B-A	(B-A)/A
남북협력기금 지출 총계	492,933	1,557,128	1,557,128	1,800,388	243,260	15.6
민생협력지원	1,708	513,092	513,092	625,915	112,823	21.9
보건의료협력	199	95,459	95,459	144,244	48,785	51.1
협력적북한인권증진지원	-	-	-	1,454	1,454	순증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보건의료협력지원 사업은 남북 간 합의로 구체화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며, 북한의 협력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역·진단물품 제공, 방역·위생 교육 등 기술협력 등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1년도 결산 기준 집행률이 0.2% 이고, 북한 당국이 대외적 지원에 호의적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액 편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2. 10, pp. 68~76

한편,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사업의 경우 국제기구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국제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산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동 사업의 교육자료 개발, 인권자료 개발 및 인권 보고서 작성 사업은 통일부의 기존 사업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의 예산 조정이나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남북협력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정부내부수입인 공자기금 예수금과 일반 회계 전입금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타 부처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카. 공공질서·안전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396억원(2.4%) 증가한 22조 8,580억원이 편성되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난관리 부문이 1,834억원(13.1%)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 및 증가율을 보였으며, 해경 부문이 1,249억원(7.3%) 증가하여 다음으로 큰 증가 폭 및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예방 인프라투자 강화 및 ICT기술 활용 재난대응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3년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질서·안전	223,184	228,580	5,396	2.4
법원 및 헌재	21,763	22,333	570	2.6
법무 및 검찰	43,848	44,329	481	1.1
경찰	126,461	127,723	1,262	1.0
해경	17,107	18,356	1,249	7.3
재난관리	14,005	15,839	1,834	13.1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공공질서·안전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22.9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3조원 대비 0.6조원(2.4%) 증가하여 과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5.4%)을 하회하고 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공공질서·안전 분야 비중이 2022년 3.7%에서 2023년 3.6%로 감소하였다가 2026년에는 3.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공공질서·안전(A)	18.1	19.1	20.1	20.8	22.3	5.4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4.5)	(4.5)	(4.3)	(4.1)	(4.0)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공공질서·안전(A)	22.3	22.9	23.8	24.7	25.6	3.5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3.7)	(3.6)	(3.6)	(3.5)	(3.5)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안전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으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4.6% 보다 1.1%p 낮다. 이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공공질서·안전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은 3.0%로 동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5% 보다 2.5%p 낮다는 점에서 동 분야와 정부 총지출 간의 증가율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공공질서·안전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19.1 (5.5)	20.0 (4.7)	20.9 (4.5)	21.7 (3.8)	22.6 (4.1)					(4.3)
2019~2023		20.1 (5.6)	20.9 (4.0)	21.8 (4.2)	22.7 (3.9)	23.5 (3.7)				(4.0)
2020~2024			20.8 (3.5)	21.8 (4.4)	22.8 (4.8)	23.7 (4.1)	24.6 (3.4)			(4.2)
2021~2025				22.3 (7.0)	22.4 (0.3)	23.4 (4.4)	24.3 (4.1)	25.1 (3.1)		(3.0)
2022~2026					22.3 (0.1)	22.9 (2.4)	23.8 (3.9)	24.7 (3.8)	25.6 (3.6)	(3.5)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지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23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안은 법원 및 헌재 부문, 해경 부문, 재난관리 부문의 경우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법무 및 검찰 부문, 경찰 부문의 경우 비중이 감소하였다. 특히 가장 큰 비중 변화(+0.6%p)가 발생한 재난관리 부문의 경우,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며 민간의 사전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2022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질서·안전	190,677	201,317	208,371	223,050	223,184
법원 및 헌재	19,608 (10.3)	20,652 (10.3)	21,660 (10.4)	21,788 (9.8)	21,763 (9.8)
법무 및 검찰	37,635 (19.7)	40,615 (20.2)	40,737 (19.6)	42,246 (18.9)	43,848 (19.6)
경찰	108,349 (56.8)	113,558 (56.4)	120,206 (57.7)	123,723 (55.5)	126,461 (56.7)
해경	12,671 (6.6)	13,845 (6.9)	15,238 (7.3)	15,779 (7.1)	17,107 (7.7)
재난관리	12,414 (6.5)	12,647 (6.3)	10,529 (5.1)	19,513 (8.7)	14,005 (6.3)

주: 괄호 내 수치는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공공질서·안전	223,184	228,580	237,713	247,055	256,396	3.5
법원 및 헌재	21,763 (9.8)	22,333 (9.8)	23,117 (9.7)	24,313 (9.8)	25,370 (9.9)	3.9
법무 및 검찰	43,848 (19.6)	44,329 (19.4)	46,884 (19.7)	48,808 (19.8)	50,566 (19.7)	3.6
경찰	126,461 (56.7)	127,723 (55.9)	134,580 (56.6)	139,582 (56.5)	145,058 (56.6)	3.5
해경	17,107 (7.7)	18,356 (8.0)	18,190 (7.7)	18,824 (7.6)	19,291 (7.5)	3.0
재난관리	14,005 (6.3)	15,839 (6.9)	14,942 (6.3)	15,528 (6.3)	16,111 (6.3)	3.6

주: 괄호 내 수치는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관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난대책비는 그 성격상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출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속한 재난지원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비비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¹⁾

재난대책비²⁾는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를 복구하고,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2. 10, pp. 56~59

2) 코드: 일반회계 2734-300

[2023년도 재난대책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난대책비	842,500	100,035	100,035	150,035	50,000	50.0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 이후 당해 연도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상황으로, 2020년도의 경우 당해 연도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360억원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500억원, 2022년도에는 1,0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1,500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다.

[2020~2023년도 당해 연도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복구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안)
전체 예산액	436,000	820,000	100,000	150,000
당해 연도 재난대책비 ¹⁾	36,000	50,000	100,000	150,000

주: 1)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재난대책비 4,000억원, 2021년도의 경우 전년도 수해피해 복구비 7,700억원을 제외한 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재난대책비를 통해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복구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재난대책비의 경우 그 성격상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 예산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난대책비의 본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³⁾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3) 재난대책비의 경우 사전에 그 소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는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해당 연도의 재난피해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였을 때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
- 4)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피해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재난대책비의 본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⁵⁾은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도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하여 500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것은 태풍피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9월 7일이었다.⁶⁾

이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도 본예산 편성 시와 유사한 속도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과 동시에, 신속한 재난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 확대가 아닌 재난복구계획의 신속한 수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대한 재난대책비 교부 경과]

구분	주요내용
2022.9.6.	태풍 힌남노 한반도 통과
2022.9.7.	예비비(500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9.16.	재난대책비 중 일부(185억원) 선교부
~2022.10.	재난복구계획 확정 및 재난대책비 교부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난대책비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산 및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시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난대책비 본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5) 「국가재정법」

제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6) 다만, 2022년 9월말 기준 재난복구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재난복구 절차에 따르면 재난복구계획이 확정된 이후 재난대책비가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9월말 기준 예비비를 통해 편성된 500억 원 중 185억만 지자체로 선교부되고 나머지 금액은 10월 초 재난복구계획 확정 이후 교부될 예정이다.

크지 않다고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2022.6.30.기준)]

(단위: 억원)

구분	당초 누적적립액	상반기 지출액	상반기 잔액
재난관리기금	39,361	15,548	23,813
재해구호기금	16,102	12,273	3,829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사전에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대책비의 특성상 본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난규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재난대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밖의 부분은 예비비 등을 통해 복구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찰청이 운영하는 안전가옥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피해자 등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는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높다는 점과 경찰청 소관의 유사사업의 경우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유사사업에 통합하거나 운영 주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사업⁸⁾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2. 10, pp. 81~85

8) 코드: 일반회계 1335-303

[2023년도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2,967	12,121	11,710	12,429	719	6.1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333	333	333	333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신변안전조치를 위하여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각 1개소 등 총 4개소의 신변보호시설(이하 ‘안전가옥’)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동 안전가옥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2021년 집행률은 23.3%에서 32.8%로 저조한 수준이며, 2022년에도 9월말 기준 26.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19년 n명에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⁹⁾이다.

[최근 4년간 안전가옥 관련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8월말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신변보호업무위탁비	20	12	20	5	20	5	20	3
공공요금	10	1	10	2	10	3	10	2
임차료	150	46	150	35	150	34	100	30
합계	180	59	180	42	180	42	130	35
집행률	32.8		23.3		23.3		26.9	
이용자 수	n		0		0		0	

자료: 법무부

그러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제도인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임시안전숙소 사업(2023년 예산액 6억 8,200만원), ② 경찰청 소관의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사업(2023년 예산액 3,200만원)의 경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수요가

9)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용자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안전가옥 이용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의 안전가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지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제도 홍보 미비 등으로 인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 등이 안전가옥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 사례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수요 대비 추가적인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소관 임시안전숙소 사업 및 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사업 개요]

구분	임시안전숙소 사업				신변안전조치 사업			
‘23예산안	6억 8,200만원				3,200만원			
집행내역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구 분	’19년	’20년	’21년
	예산액	475	475	595	예산액	32	32	32
	집행액	575	475	627	집행액	32	32	32
이용인원	구 분		’19	’20	’21	’22.8.		
	임시안전숙소	건수(건)	5,027	4,668	6,569	3,602		
		박수(박)	7,858	7,385	9,979	5,380		
	신변안전조치	건수(건)	-	166	110	37		
		박수(박)	-	414	544	194		
근거법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등			
대상	범죄피해 발생 후 추가 피해 우려 되거나 임시숙소 필요한 자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 자, 증인 등			
보호기간	기본 1일, 최대 5일(일부 예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 내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검찰청과 경찰청의 신변보호 관련 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동 사업의 수요가 주로 경찰청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청이 운영하는 안전가옥 관련 예산은 경찰청 소관의 유사사업에 통합¹¹⁾하거나 운영 주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조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변안전조치 수요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경찰청의 사업으로 충족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 일반·지방행정 분야

(1) 현 황

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3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3.6조원(3.4%) 증가한 111.7조원이 편성되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정부자원관리, 국정운영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이 전년 대비 13.6조원(13.9%)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재정·금융 부문이 18.4%(4.4조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예산규모 증가는 지방교부세가 2021년 본예산 65조 560억원에서 10조 2,323억원(15.7%)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3,568억원이 감소하였다.

정부는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으로 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교부하고 지방교부세를 증가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②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도 일반·지방 행정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지방행정	980,939	1,117,135	136,196	13.9
(교부세, 국고채이자 제외)	(173,718)	(172,181)	(△1,537)	(△0.9)
지방행정·재정지원	673,219	771,974	98,755	14.7
(교부세 제외시)	(22,659)	(19,091)	(△3,568)	(△15.7)
재정·금융	237,996	281,877	43,881	18.4
일반행정	33,353	33,936	583	1.7
입법 및 선거관리	15,870	11,404	△4,466	△28.1
정부자원관리	13,887	11,124	△2,763	△19.9
국정운영	6,587	6,750	163	2.5

자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② 일반·지방행정 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11.7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8.1조원 대비 13.6조원(13.4%) 증가하여 과거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은 2022~2026년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지출 내 일반·지방행정 분야 비중이 2022년 16.1%에서 2026년 1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자원배분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 연평균증가율
일반·지방행정(A)	63.3	69.0	76.6	79.0	84.7	7.6
총지출(B)	400.5	428.8	469.6	512.3	558.0	8.6
- 비중(A/B)	(15.8)	(16.1)	(16.3)	(15.4)	(15.2)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2026 연평균증가율
일반·지방행정(A)	98.1	111.7	120.3	126.5	132.2	7.7
총지출(B)	607.7	639.0	669.7	699.2	728.6	4.6
- 비중(A/B)	(16.1)	(17.5)	(18.0)	(18.1)	(18.1)	

주: 2017~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023~2026년은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코로나로 인해 한시 증가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프라 등 투자, 접경권·서해5도·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등을 통해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하여 진상규명활동과 추모·기념 및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정부 총지출 연평균증가율 4.6%보다 3.1%p 높다. 반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 연평균증가율은 5.7%이나 동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5%로 그 차이가 0.2%p에 불과하다.

2022~2026년 기간 동안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이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채이자의 규모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고채이자의 지출이 증가하고, 내국세 확대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도 커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추이 및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2018~2022	69.0 (8.3)	77.9 (12.9)	84.1 (8.0)	89.2 (6.1)	94.0 (5.4)					(8.0)
2019~2023		76.6 (9.9)	80.5 (5.1)	82.4 (2.4)	84.3 (2.3)	86.1 (2.1)				(3.0)
2020~2024			79.0 (3.2)	86.5 (9.5)	87.6 (1.3)	92.0 (5.0)	94.9 (3.2)			(4.7)
2021~2025				84.7 (7.2)	96.8 (14.3)	100.4 (3.7)	103.0 (2.6)	105.8 (2.7)		(5.7)
2022~2026					98.1 (15.8)	111.7 (13.8)	120.3 (7.7)	126.5 (5.2)	132.2 (4.5)	(7.7)

주: 1. 음영(굵은 숫자)은 정부제출 예산안, 음영 앞은 해당연도 본예산을 의미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각 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③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18~2022년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부문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각 부문별로 그 비중이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개 부문 중 부문별 비중이 가장 큰 쪽으로 증가한 것은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으로, 2018년 67.7%에서 2022년 68.6%로 1.1%p 증가하였다. 반면, 재정·금융 부문은 그 비중이 2018년 25.7%에서 2022년 24.3%로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6개 부문 중 부문별 비중의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국고채이자 등 의무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2022년 기준 65조 560억원으로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지출의 96.6%, 전체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의 약 66.3%를 구성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외에 다른 지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도 그것이 각 부문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지방행정	690,211	765,597	790,129	846,766	980,939
지방행정·재정지원	467,439 (67.7)	532,631 (69.6)	537,039 (68.0)	557,303 (65.8)	673,219 (68.6)
재정·금융	177,377 (25.7)	183,262 (23.9)	195,829 (24.8)	229,893 (27.1)	237,996 (24.3)
일반행정	21,578 (3.1)	25,128 (3.3)	28,249 (3.6)	29,432 (3.5)	33,353 (3.4)
입법 및 선거관리	10,479 (1.5)	10,289 (1.3)	14,184 (1.8)	12,690 (1.5)	15,870 (1.6)
정부자원관리	7,701 (1.1)	8,425 (1.1)	8,702 (1.1)	11,009 (1.3)	13,887 (1.4)
국정운영	5,638 (0.8)	5,861 (0.8)	6,125 (0.8)	6,438 (0.8)	6,587 (0.7)

주: 괄호 내 수치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지방행정	980,939	1,117,135	1,202,543	1,265,209	1,321,845
지방행정·재정지원	673,219 (68.6)	771,974 (69.1)	805,890 (67.0)	844,241 (66.7)	883,597 (66.8)
재정·금융	237,996 (24.3)	281,877 (25.2)	326,622 (27.2)	354,026 (28.0)	370,585 (28.0)
일반행정	33,353 (3.4)	33,936 (3.0)	34,536 (2.9)	35,223 (2.8)	35,246 (2.7)
입법 및 선거관리	15,870 (1.6)	11,404 (1.0)	15,977 (1.3)	12,399 (1.0)	13,293 (1.0)
정부자원관리	13,887 (1.4)	11,124 (1.0)	12,455 (1.0)	12,537 (1.0)	12,542 (0.9)
국정운영	6,587 (0.7)	6,750 (0.6)	6,992 (0.6)	6,783 (0.5)	6,581 (0.5)

주: 괄호 내 수치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2026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와 관련하여서는, 재정·금융 부문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24.3%에서 2026년 28.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가 2022년 15.7조원에서 2026년 27.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도 각 부문별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증·감요인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종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사업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요인에 따른 지출 증·감 규모는 의무지출의 증·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각 부문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분석의견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추진체계 및 상위계획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사업의 방향성·전략이 불분명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복·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조정·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은 각 세부과제별로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 등으로 상이하고 과제별로 복수의 부처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확립되고 중장기적·통합적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상위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실천과제]

연번	실천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1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2	AI·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통계청
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
4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위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2년 9월 2일에 출범하여, 2023년도 예산안은 각 부처별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편성된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각 부처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상위계획 없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2. 10, pp. 12~17.

상위계획이나 전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될 경우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목표나 방향성 없이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으며,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 사업 간 중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추진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상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구축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관련 IS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²⁾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220억 4,300만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발급시스템 구축 개발비용, HW 및 SW 구매비용, 발급장비 설치비용 등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준비를 위한 예산 총 1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당초 정부가 수립한 ‘모바일 신분증 확대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도민증 등 7종류의 신분증이 모바일로 제공될 계획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및 기술적 구현성에 대한 검토와 각 시스템 간 연계방식에 대한 검토와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경우 당초 ISP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ISP는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방향·일정 등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임을 고려하면 ISP를 거치지 않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이전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경우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발급받는 신분증으로서 모바일 제공에 따른 영향이 다른 신분증보다 크고, 주민등록시스템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의 연계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이를 발급하고 있어 장비 도입·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

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2. 10, pp. 18~23

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시 참고사례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2022년 6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상황으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운영한 후 그에 대한 충분한 환류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4조³⁾는 실물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셋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10년간 운영되는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총 재정규모와 사업기간·대상·효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기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금리수준·지급구조와 그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조속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⁴⁾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내용의 타당성 및 공급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국회의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그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2027년(5년) 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고 2032년까지 동 상품을 운영·관리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는 2.4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할 것

3)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⑦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2. 10, pp. 104~111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27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032년까지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는바, 2023년도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총량적 차원에서 총 재정투입규모와 사업기간, 사업대상 및 사업효과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의 사례를 감안하면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금융기관의 이자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수준 및 지급구조와 그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상품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총 예산규모와 사업기간·대상·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수준 및 지급구조와 그에 따른 예산 규모의 적정성도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20개) 및 기금(68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지분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성질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재정구조]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20개)		기금(68개)
세입	기업특별회계(5개)	기타특별회계(15개)	사회보험성기금(6개)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 ※부족시 국채발행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	• 교도작업 • 국가균형발전 • 농어촌구조개선 • 등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에너지및자원사업 • 우체국보험 • 주한미군기지이전 • 환경개선 • 국방군사시설이전 • 혁신도시건설 • 교통시설 • 유아교육지원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 국민연금기금 • 고용보험기금 등
세출			금융성기금(8개)
• 보건/복지/고용 • 교육 • 문화/체육/관광 • 환경 • R&D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SOC • 농림/수산/식품 • 국방 • 외교/통일 • 공공질서/안정 • 일반/지방행정 등			• 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기금 등
			계정성기금(5개)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사업성기금(49개)
			• 주택도시기금 • 남북협력기금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을 토대로 재작성

4-1. 회계·기금 간 거래 개요

가. 법적 근거

특별회계 및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¹⁾에 따라 특정 사업 및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계·기금 간 지나치게 제한적인 재정은 운용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13조²⁾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³⁾는 기업특별회계의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⁴⁾, 「복권 및 복권기금법」⁵⁾ 등의 개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법률에서도 회계·기금 간 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내부거래 의의

회계·기금 간 거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부족한 자금의 보전이나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회계·기금 간 전입·전출, 예탁·예수 등 자원 이전을 “내부거래”라고 하는데, 내부거래는 단순히 회계·기금 간 자원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고 회계·기금 간 거래를 단순 합산할 경우 실제 수입과 지출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표되는 총수입·총지출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일반회계에서 8개 금융성기금⁶⁾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이전되는 자원은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총지출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 이하 분석에서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 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6) 보증·보험 등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그 수입과 지출이 실질적인 재정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수입·총지출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내부거래 관련 세입과목 및 세출과목]

세 입			세 출	
관	항	목	목	세목
(34) 세계 잉여금	(89) 세계 잉여금 이입액	(892)세계잉여금이입액		
(40) 정부내 부수입 및 기타	(91) 전입금	(911)일반회계전입금	(610) 전출금 등	(610-01)일반회계전출금
		(912)특별회계전입금		(610-02)특별회계전출금
		(913)기금전입금		(610-03)기금전출금
		(915)계정간전입금	(710) 예비비 및기타	(610-04)계정간전출금
	(92) 예탁원금 회수	(921)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510) 상환지출	(510-04)예수금원금상환
		(922)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		
		(923)기금예탁원금회수		
		(924)계정간예탁원금회수		
		(926)타회계전대차관원금회수		(510-06)전대차관원금상환
		(927)기금전대차관원금회수		
	(94) 예수금	(941)일반회계예수금	(480) 예탁금	(480-01)일반회계예탁금
		(942)특별회계예수금		(480-02)특별회계예탁금
		(943)기금예수금		(480-03)기금예탁금
		(945)계정간예수금		(480-04)계정간예탁금
	(95) 예탁 이자수입	(951)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	(510) 상환지출	(510-05)예수금이자
		(952)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		
		(953)기금예탁이자수입		
		(955)계정간예탁이자수입		
		(956)타회계전대차관이자수입		(510-07)전대차관 이자
		(957)기금전대차관이자수입		
	(96) 기타	(961)당기순이익전입금	(610) 전출금 등	(610-07)당기순이익
		(962)감가상각비전입금		(610-06)감가상각비
		(963)제충당금전입금		

주: 목별 일반적인 분류를 표시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4-2. 회계·기금 간 거래 현황

가. 전체 현황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계 규모는 전년대비(추경 기준, 이하 같음) 23조 6,919억원(1.7%) 증가한 1,418조 7,786억원이고, 정부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3조 1,736억원(6.4%) 감소한 340조 5,954억원으로, 총계의 2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계의 유형별 현황]

(단위: 억원, %, %p)

구 분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B)	증 감	
	본예산 (당초)	제2회 추경 (수정)(A)		(B-A)	(B-A)/A
예산 및 기금 총계(a)	12,540,106	13,950,867	14,187,786	236,919	1.7
일반지출 ¹⁾	6,204,636	6,949,469	6,532,271	△417,198	△6.0
정부내부거래(b)	3,027,485	3,637,690	3,405,954(100.0)	△231,736	△6.4
회계기금 간	1,287,184	1,835,411	1,006,735(29.6)	△828,676	△45.1
회계 간	385,812	352,076	367,803(10.8)	15,727	4.5
기금 간	1,312,957	1,387,415	1,968,305(57.8)	580,890	41.9
계정 간	41,531	62,788	63,111(1.9)	323	0.5
보전거래	3,307,985	3,363,708	4,249,560	885,852	26.3
차입금원금상환	1,052,186	1,127,245	1,391,123	263,878	23.4
여유자금운용 등 기타	2,255,799	2,236,463	2,858,438	621,975	27.8
비율(b/a)	24.1	26.1	24.0	△2.1	

주: 1) 일반지출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총지출규모와 차이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의 내부거래 지출은 총 67조 8,57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총계) 446조 3,993억원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4%p 감소하였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32조 2,703억원, 기금으로의 전출금 및 상환지출은 35조 5,872억원으로 구성된다.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의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출금	345,899	311,916	322,703(47.6)	10,787	3.5
일반회계→기금	전출금	243,526	611,248	210,981(31.1)	△40,267	△65.5
	상환지출	122,491	147,258	144,891(21.4)	△2,367	△1.6
	소계	366,017	758,506	355,872(52.4)	△40,264	△53.1
합계(a)		711,915	1,070,422	678,575(100.0)	△31,847	△36.6
일반회계 예산 규모(b)		4,214,160	4,952,333	4,463,993	△483,400	△9.9
비율(a/b)		16.9	21.6	15.2	△6.4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기준 특별회계의 내부거래 지출은 총 11조 9,703억원으로 특별회계 총계(78조 8,329억원)의 15.2% 수준이다.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조 1,409억원, 기금으로의 전출금 3조 7,10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예산안 특별회계의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특별회계→일반회계	전출금	2,156	2,183	3,690(3.1)	1,507	69.0
특별회계→특별회계	전출금	37,758	37,977	41,409(34.6)	3,432	9.0
특별회계→기금	전출금	34,017	35,813	37,108(31.0)	1,295	3.6
	예탁금	19,819	29,144	29,318(24.5)	174	0.6
	상환지출	6,705	6,601	8,178(6.8)	1,577	23.9
	소계	60,541	71,558	74,603(62.3)	3,045	4.3
합계(a)		100,454	111,718	119,703(100.0)	7,985	7.1
특별회계 예산 규모(b)		762,609	783,082	788,329	5,247	0.7
비율(a/b)		13.2	14.3	15.2	0.9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기금의 내부거래 지출은 총 256조 8,900억원으로 기금 총계 893조 5,464억원의 28.7% 수준이다. 기금 간 상환지출 99조 5,603

억원, 기금 간 예탁금 93조 775억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46조 6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2년 기금운용계획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B-A)/A
기금→일반회계	전출금	3,474	3,474	524(0.0)	△2,950	△84.9
	예탁금	761,759	911,917	460,066(17.9)	△451,851	△49.5
	상환지출	-	-	-(-)	-	-
	소계	765,233	915,391	460,590(17.9)	△454,801	△49.7
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627	15,671	15,288(0.6)	△383	△2.4
	예탁금	14,841	9,237	22,410(0.9)	13,173	142.6
	상환지출	64,926	65,047	77,971(3.0)	12,924	19.9
	소계	95,394	89,955	115,669(4.5)	25,714	28.6
기금→기금	전출금	57,169	57,169	66,263(2.6)	9,094	15.9
	예탁금	635,207	705,198	930,775(36.2)	225,577	32.0
	상환지출	629,521	630,156	995,603(38.8)	365,447	58.0
	소계	1,321,897	1,392,523	1,992,641(77.6)	600,118	43.1
합계(a)		2,182,524	2,397,869	2,568,900(100.0)	171,031	7.1
기금운용계획 규모(b)		7,563,337	8,219,183	8,935,464	716,281	8.7
비율(a/b)		28.9	29.2	28.7	△0.5	

자료: 기획재정부

동일 회계·기금 내 계정 간 내부거래 지출은 특별회계 계정 간 전출금 3조 8,095억원, 기금 계정 간 내부거래 2조 1,636억원이다.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계·기금 내 계정 간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B)	증 감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A)		(B-A)	(B-A)/A
특별회계 계정 간	전출금	30,576	51,825	38,095	△13,730	△26.5
기금 계정 간	전출금	8,822	8,822	15,221	6,399	72.5
	상환지출	118	118	6,415	6,297	5336.4
	소계	8,940	8,940	21,636	12,696	142.0
합 계		39,516	60,765	59,731	△1,034	△1.7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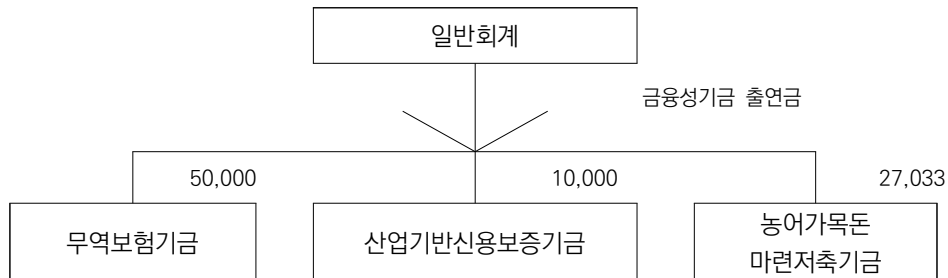
한편, 8개 금융성기금⁷⁾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보증·보험 등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그 수입과 지출이 실질적인 재정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 기금 자체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정부 총수입·총지출 산정 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 이들 기금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실질적 지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으로의 재원 이전에 해당하므로 민간에 재원을 이전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고, 기금전출금(610-03)이 아닌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으로 편성하여 해당 재원은 정부 총지출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금융성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기금전입금(91-913)이 아닌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에 계상한다.

2023년 일반회계로부터 금융성기금으로 지출되는 출연금은 총 870억 3,300만원이고, 금융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없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금융성기금과의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7)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일반회계는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 회계 및 기금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탁금과 구분된다.

먼저, 일반회계는 특허청 계정을 제외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전출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의 특정 세입재원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출하거나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전출금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등이 편성되어 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은 53조 4,419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5조 5,646억원(9.4%) 감소하였다.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현황]

(단위: 억원, %)

회계구분	회계/기금명	2019	2020	2021	2022	2023(안)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32,773	31,272	39,377	41,840	60,368
	교통시설	138,495	136,868	132,847	122,169	94,519
	농어촌구조개선	41,567	53,847	19,382	37,319	31,724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0	20,353	25,141	24,359	22,5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08	1,010	1,384	1,310	1,212
	양곡관리	17,669	15,810	16,154	17,734	18,925
	에너지및자원사업	-	-	-	-	-
	우편사업	101	108	115	123	153
	유아교육지원	38,153	39,019	37,076	36,534	33,583
	조달	-	253	-	-	-
	책임운영기관(특허청계정 제외)	2,890	3,087	2,904	2,796	2,97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599	3,088	4,317	3,917	1,884
	혁신도시건설	370	187	805	240	163
	환경개선	39,849	50,899	53,449	57,557	54,679
기금	고용보험	1,402	11,502	10,654	13,000	3,000
	공공자금관리	423	152	213	284	192
	공무원연금	30,586	33,651	38,707	44,304	52,813
	공적자금상환	21,000	21,000	26,000	26,000	21,600
	과학기술진흥	-	-	-	-	-
	관광진흥개발	304	304	378	110	174
	국민연금	102	102	102	103	105
	군인연금	-	-	-	29,220	31,017
	남북협력	27,278	27,826	28,182	1,000	1,000
	농어업재해보험	1,000	1,500	1,000	-	-

(단위: 억원, %)

회계구분	회계/기금명	2019	2020	2021	2022	2023(안)
	대외경제협력	2,033	-	-	7,529	8,873
	문화예술진흥	7,800	5,881	7,529	300	300
	문화재보호	500	210	204		
	범죄피해자보호	-	-	-	942	942
	보훈	824	824	1,0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0	0	9,877	10,900
	사학진흥	8,959	8,959	9,407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	1	-	-	219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230	230	223	183	200
	소상공인시장진흥	155	155	163	38,548	5,69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8,249	50,997	155,177	888	927
	수산발전	762	767	808	-	-
	양곡증권정리	-	-	-	1,915	1,609
	양성평등	3,052	1,946	1,955	-	-
	언론진흥	472	71	-	-	-
	외국환평형	-	-	-	-	-
	응급의료	-	-	-	2,136	2,339
	임금채권보장	1,844	1,807	1,994	-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0.8	0.8	0.8	-	-
	주택도시	-	-	-	42,781	45,589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17,368	24,240	35,936	11,820	11,397
	지역신문발전	8,270	14,178	17,361	83	25
	축산발전	80	80	87	-	-
	기후대응	-	-	784	10,766	12,223
	군인복지	-	-	-	200	-
	영화발전	-	-	-	-	800
	정보통신진흥	-	-	-	1,958	-
	합 계	457,869	562,184	670,875	590,065	534,419

주: 1.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제2회 추경, 2023년은 예산안 기준

2. 8개 금융성기금에 대한 전출금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등기특별회계에서 17억 200만원, 조달특별회계에서 4억 7,5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에서 15억 1,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며,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각각 6,300만원, 4억 6,100만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다.

[타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현황]

(단위: 억원, %)

회계/기금명	2019	2020	2021	2022	2023(안)
등기특별회계	746	765	957	495	1,70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00	-	-	-	-
조달특별회계	1,469	1,161	959	606	47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	875	732	571	1,055	1,513
공공자금관리기금	-	-	-	-	-
공무원연금기금	637	531	696	669	63
군인복지기금	620	620	450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20	522	625	486	461
합 계	5,367	4,331	4,257	3,310	4,214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제2회 추경,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용자계정, 차관계정의 3개 계정으로 구분된다. ① 총괄계정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의 관리, 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② 용자계정은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회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③ 차관계정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차관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규모는 284.3조원이며, 총괄계정의 운용규모가 9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별 운용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안)
총괄계정	267.5	267.1	283.3
(비중)	(99.7)	(99.7)	(99.6)
용자계정	0.4	0.4	0.7
(비중)	(0.2)	(0.1)	(0.3)
차관계정	0.3	0.3	0.3
(비중)	(0.1)	(0.1)	(0.1)
계	268.3	267.8	2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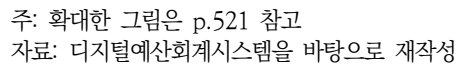
주: 1. () 안은 해당연도의 계정별 운용규모 비중을 나타냄

2. 2021년은 결산 기준, 2022년은 9월말 기준 수정계획, 2023년은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47개 기금과 예수·예탁 방식의 내부거래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다른 회계·기금 간의 자원 재배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9) 2006년 재정용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중진 재정용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용자특별회계로부터 승계되는 기능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하여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을 신설하였다.

(단위: 백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재원의 재배분 기능은 총괄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데, 총괄계정은 정부 내 타 회계·기금으로부터 잉여재원을 예수하여 재원이 부족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공공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예수잔액은 31조 9,236억원, 예탁잔액은 1,014조 9,77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예수·예탁 잔액(예상)]

구분	회계/기금명(계정)	잔액(억원)	구분	회계/기금명(계정)	잔액(억원)
예 수 잔 액	교도작업특별회계	739	예 탁 잔 액	일반회계	6,581,630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	11,771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8,635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42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8,86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017
	우체국예금특별회계(손익)	35,73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816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	10,75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	1,469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	8,600		공공자금관리기금(용자)	2,700
	국유재산관리기금	21,359		고용보험기금	103,049
	국제교류기금	1,040		공적자금상환기금	300,157
	군인복지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25,007
	군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	-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	50,170
	기술보증기금	1,950		남북협력기금	42,840
	농지관리기금	21,226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3,000		대외경제협력기금	17,006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	1,500		문화재보호기금	916
	복권기금	1,653		방송통신발전기금	13,09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사학진흥기금	5,435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12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1,16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6,180
	석면피해구제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38,717
	수산물전기금	500		외국환평형기금	2,641,179
	신용보증기금	-		응급의료기금	5,875
	임금채권보장기금	1,000		정보통신진흥기금	21,79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6,0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8,300
	전력산업기반기금	2,800		축산발전기금	8,820
	주택도시기금(주택)	140,3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9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	-		군인복지기금	55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000		청소년육성기금	171
				영화발전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587
				기후대응기금	7,327
				원자력기금	120
합 계		319,236	합 계		10,149,772

주: 2022년 기금운용계획,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때의 예상 잔액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4-3. 분석의견

가. 종합 분석: 회계·기금 지출 사업 감액 시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공자기금 예수금 연계 조정 필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타 회계·기금에 편성된 지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회계·기금의 자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지출 사업비 감액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과 재정 절감을 통한 국가 재정 건전화라는 감액 취지를 고려하여 전입금 또는 예수금 축소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회계·기금에 편성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 소요분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을 예수하게 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 예수금 규모가 증가할 경우 재정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수반하여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규모는 2018년 300.4조원에서 2022년 610.8조원(전망)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는 금액 역시 2021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는 일반회계 자체의 재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액 증가 때문이기도 하나, 일반회계에서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가 감소하면 공자기금 예수 규모 역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회계 → 타 회계·기금	465,618	453,343	457,869	562,184	670,875
공자기금 → 일반회계	200,000	150,000	343,000	1,028,000	882,000
공자기금 → 타 회계·기금	602,127	295,625	444,345	632,637	573,757

자료: 기획재정부

반대로 특정 회계·기금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 재원 소요 역시 감소하게 된다. 당초 부족한 재원 소요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정부 재정을 전입하거나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출 소요 감소분만큼 전입금 또는 예수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사업비 감액을 통해 일반회계의 전출 부담을 완화하고 공자기금 예수를 축소함으로써 정부 재정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이나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안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발생한 재원의 구체적인 정리 방안까지 결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축소하는 대신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기금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의 일부를 통화금융기관 또는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여유자금 운용 규모 확대에 배분하였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2020년 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 증액과 지출 감액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연계하여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축소에 사용하지 않고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하였다.¹⁰⁾

10) 수입 증액과 지출 감액의 합인 4,037억 8,500만원 중 2,450억은 향후 회수 가능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사용하였고, 1,187억 8,500만원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최근 3년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기금 감액 자원 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기금명	수입증액	지출감액	지출증액	확보 재원	전입금 등 감액	여유자금 확대
'22	대외경제 협력기금	-	△80,000	-	80,000	△65,800	14,200
'21	대외경제 협력기금	-	△55,707	-	55,707	△55,000	707
'20	관광진흥개발기금	-	△52,800	13,614	39,186	-	39,186
	주택도시기금	3,185	△400,600	245,000 ¹⁾	158,785	△40,000 ²⁾	118,785

주: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임

2) 계정간 전입금임

1.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어 있는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각 연도 예산안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 경우 지출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만큼 일반회계 자원의 투입 규모와 공자기금 예수 상환 의무는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감액 취지와는 달리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회계·기금에 편성된 사업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여유자금 운용 규모 확대 또는 다른 지출 사업 증액에 사용하기 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공자기금 예수금 축소로 연계하여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나. 일반회계와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1)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회계·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기금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이 과도할 경우 정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계·기금의 경우 우선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수입구조 개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체수입 확대가 불가능할 경우 회계·기금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한 지출구조조정 또는 회계·기금 간 통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재정 부담 및 내부거래의 구조적 복잡성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자체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사업비 지출 소요는 증가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기금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¹⁾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¹²⁾ 동 기금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다.¹³⁾

그런데 순애기금 수입으로 계상되는 친일 환수 재산 중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은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고, 잔여 재산 매각의 어려움 등으로 2018년 자체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2018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지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11)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2.10. pp.61~65 참조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순애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현황			지출현황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¹⁾	여유자금회수	
2017	35,710	0	16,164	51,874
2018	5,282	54,686	83,053	143,021
2019	4,589	76,203	116,843	197,635
2020	7,712	76,689	77,492	161,893
2021	11,239	80,826	74,970	167,035
2022	7,587	88,848	41,373	137,808
2023(안)	7,818	92,651	78,749	138,767

주: 1)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1. 총계 기준

2.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22년과 2023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처 각 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손자녀 생활지원금이 사실상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재원을 그대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금 지출 소요는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동 기금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곡증권정리기금은 독자적 수입원과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내부거래만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기금의 잔존부채 처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내부 거래 복잡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양곡관리법」¹⁴⁾에 따라 1993년까지 양곡수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양곡증권, 차관양곡 등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설치된 계정성 기금이다.

그런데 해당 기금은 2010년까지 양곡증권 부채와 차관양곡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부채 약 3.9조원은 모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이다. 이에 동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중 상환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 받거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상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 사업비 지출은 전혀 없는 가운데 정부내부거래가 수입과 지출의 대

14)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공자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 추가 예수금으로 구성된 내부거래 수입 역시 증가하였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현황			지출현황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¹⁾	여유자금회수	사업비·운영비	정부내부지출 ²⁾	여유자금운용
2019	2,676	405,180	27,885	0	405,180	30,653
2020	1,428	1,235,186	30,653	0	1,237,631	29,636
2021	496	195,455	29,636	0	179,279	46,308
2022	287	691,534	35,230	0	678,856	48,195
2023(안)	287	1,093,402	48,195	0	1,122,169	19,715

주: 1)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임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임.

2) 정부내부지출은 양곡증권정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임.

1. 총계 기준

2.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22년과 2023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로부터 예수 또는 전입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 사업 수행을 위한 존치 필요성 없이 정부 내부거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금 잔존부채 청산을 위한 중장기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내부거래의 복잡성 해소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금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자체 세입원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동 회계의 자체 세입 확대 방안을 포함한 자원구조와 별도의 특별회계 운용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⁵⁾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혁특회계”라 한다)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¹⁶⁾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15)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2.10. pp.75~79 참조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거점도시를 건설하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에 신설된 특별회계이다.

혁신도시 이전 재원은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여 조달하는데, 2019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어 매각 대상 종전 부동산이 추가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혁특회계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정부 내부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혁특회계 사업비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있으며, 공자기금 예수금은 다시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여 상환하는 순환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혁특회계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현황			지출현황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¹⁾	기타	사업비·운영비	정부내부지출 ²⁾	기타
2019	75,454	186,005	16,871	7,277	225,340	0
2020	6,817	338,529	45,713	47,910	319,775	0
2021	1,374	351,870	23,373	80,048	287,164	0
2022	1,294	34,668	7,713	24,980	18,695	0
2023(안)	74	34,203	1,642	19,387	16,532	0

주: 1)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임.

2) 정부내부지출은 혁특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임.

1. 총계 기준

2.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22년과 2023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혁특회계는 자체 세입원이 부족한 가운데 사업비 또한 2023년도 예산안 기준 193억 8,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혁특회계 세입 확대 방안을 포함한 재원구조와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검토 필요

세계잉여금이란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세계잉여금은 해당 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세입 추계 과정에서 세계잉여금이 증액될 경우 해당 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잉여금 예산 증액과 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필요성을 검토한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의 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각 계정 세출예산 집행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 증액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⁷⁾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하 “세종계정”)으로 계정이 구분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5조18)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의 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안은 각각 220억 4,600만원, 46억 3,900만원이다. 이는 2021년도 결산 결과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2년도 결산 결과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먼저 세입 측면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말 기준 제주계정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78.1%이며, 세종계정의 수납률은 83.3%로, 이러한 추이가 유지되는 경우 예산액보다 과소수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2022년 8월말 기준 제주계정의 집행률은 84.2%, 세종계정의 집행률은 61.4%로 집행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최근 2년간의 불용액을 고려하면 202년도에도 각 계정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7)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2.10. pp.89~92 참조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세종계정 2022년도 예산상 세입과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결산	2022 예산(A)	2022.7. 수납(B)	예산대비 수납률(B/A)
제주계정	240,167	270,408	211,271	78.1
세종계정	63,769	71,602	59,653	83.3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세종계정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예산(A)	2022.8. 집행(B)	예산대비 집행률(B/A)	불용액	
				2020	2021
제주계정	269,271	226,847	84.2	6,095	18,164
세종계정	71,602	43,931	61.4	9,639	3,411

자료: 기획재정부

종합해 보면,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은 세입 측면에서 수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 측면에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추이를 점검하여 불용액 발생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계정의 수납추이와 집행추이를 바탕으로 전년도세계잉여금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연계하여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각 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자체수입과 보전수입을 제외한 세입부족분으로 책정되는데, 2023년도의 경우 제주계정 2,328억 5,400만원, 세종계정 508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둘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2022년도 농어촌특별세 초과수납분 규모가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농어촌특별회계 전년도 세계잉여금 규모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 세입원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세계잉여금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연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⁹⁾

19)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0. pp.27~29 참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9조²⁰⁾는 농특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예산에 계상된 규모보다 더 많이 수납될 경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는데, 2023년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년도 세계잉여금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6,754억 6,100만원이 감소한 4,345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2020년부터 증권거래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이 증가하면서 수납액이 증가하여 2020년 약 1조 5,885억원, 2021년 약 2조 5,097억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²¹⁾에 따르면 2022년도의 수납액은 7조 4,414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어, 약 7,612억원의 초과수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산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농어촌특별세		
	예산 ¹⁾ (A)	수납 (B)	초과수납(B-A)
2019	4,179,900	3,918,234	△261,666
2020	4,671,111	6,259,604	1,588,493
2021	6,390,300	8,899,997	2,509,697
2022	6,680,200	7,441,400 ²⁾	761,200
2023	6,988,000	-	-

주. 1) 예산은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2) 기재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른 전망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증권거래대금 및 부동산 거래실적 등 자산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농어촌특별세 수납실적이 전망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일반회계전입금을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21) 기획재정부,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 보도자료, 2022.8.30.

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1)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 규모 관리 필요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가 확대될 경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목표한 예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사업 재검토 등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신규로 예수하는 금액은 2020년 전년 대비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국세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와 여러 차례 반복된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신규 예수 규모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조 1,693억원 감액(39.6%)된 46조 6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연도별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신규예수 현황]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2회추경	
150,000	343,000	1,028,000	882,000	761,759	911,917	460,066

주: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2022년의 경우에도 당초 76조 1,759억원의 신규 예수를 계획하였으나 두 차례의 추경 편성 등으로 예수 규모는 91조 1,9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나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할 경우 2023년 예수 규모 역시 정부의 계획보다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확대하는 경우 정부 재정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목표한 예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회계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사업 재검토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순환구조 개선 필요

일부 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을 위하여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는 순환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회계·기금의 자체수입 확대 또는 잔존 부채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²²⁾ 그런데 동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정부내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²³⁾,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 중 상환기관 도래분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하는 순환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공자기금 예수 및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수		7,650	2,784	2,030	5,486	2,370
상환	원금	7,650	2,784	2,030	5,486	2,370
	이자	820	636	580	570	461
잔액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자료: 통일부

전술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특별회계²⁴⁾와 양곡증권정리기금²⁵⁾ 역시 수입액의 대부분이 정부내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상환을 위해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있다.

22)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3)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체 수입액 1조 8,004억원 중 1조 7,070억원(94.8%)이 정부내부거래이다.

24)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체 수입액 1조 1,418억 8,400만원 중 1조 934억 200만원(95.8%)이 정부내부거래이다.

25)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체 수입액 359억 1,900만원 중 342억 300만원(95.2%)이 정부내부거래이다.

[혁신도시 특별회계 공자기금 예수 및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수		-	147,903	149,029	319,800	271,400
상환	원금	30,000	200,000	200,000	300,000	268,000
	이자	32,174	28,850	25,340	19,975	19,164
잔액		938,000	885,903	834,932	854,732	858,132

자료: 국토교통부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자기금 예수 및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수		45,716	44,716	42,716	41,716	40,716
상환	원금	15,775	3,700	3,000	11,405	1,000
	이자	1,609	1,108	1,051	971	793
잔액		45,716	44,716	42,716	41,716	40,716

자료: 국토교통부

이처럼 상환기한이 도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는 순환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불필요한 내부거래를 통해 정부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회계·기금의 자체수입 확대 및 잔존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내부거래 관련 분석

첫째,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초과하는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초과하는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⁶⁾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인 7,802억 9,700만원과 기후대응기금 지출재원 부족분 19억 5,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구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1,076,635	763,154	1,222,255	459,101	60.2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1,076,635	763,154	780,297	17,143	2.2
지출재원 부족분 총당	-	-	441,958	441,958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기후대응기금 지출재원 부족분 명목으로 편성한 4,419억 5,800만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²⁷⁾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기준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으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편성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²⁸⁾

26)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2.10. pp.52~56 참조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28) 참고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3항은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지 않음에도 복권기금에서 전출되는 금액의 일부를 여유자금 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를 이관함으로써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줄이고, 해당 여유자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⁹⁾

202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복권수익금 중 1,099억 5,700만원을 전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해당 전입금 중 870억 4,700만원(79.2%)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229억 1,000만원(20.8%)은 여유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최근 3회계연도 연속으로 복권기금 전출금 중 일부를 여유재원 명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복권기금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 사용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복권기금 전출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전입금 활용계획	
		사업소요	여유자금 소요
2021	116,159	94,176	21,983
2022	130,527	101,244	29,283
2023(안)	109,957	87,047	22,91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사업비 규모가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기금 순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연 도	2021결산	2022추정	2023추정
자산(A)	40,216	91,576	128,880
부채(B)	-	-	-
순자산(A-B)	40,216	91,576	128,8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2.10. pp.25~29 참조

이처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복권기금 수익금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적립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복권수익금 배분·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여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줄이고, 과학기술 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복권수익금 일부를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4. 소결

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보한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입 확대 또는 지출 절감 등을 통해 재원 여력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하는 주된 목적은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과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한 사업에 재배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회 심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세출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확보한 재원을 보다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거나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의 정리 방향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의 정리 방안은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출 규모가 감액된 기금이 사업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정부 재정을 전입할 계획이 있었던 경우 해당 전입금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일반회계 재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 지출 규모 축소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 운용의 장기적인 효율화 관점에서 보면 여유자금 운용이 그 자체로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입 확대와 지출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확보된 재원의 정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연계하여 감액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인지, 보다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기금의 장기적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예산

안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재정운용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단순화 필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구조는 「국가재정법」이 제정·시행된 2007년 1개 일반회계, 16개 특별회계, 61개 기금에서 2022년 1개 일반회계, 20개 특별회계,³⁰⁾ 68개 기금³¹⁾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재정법」 제정 시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타당성 심사를 거치되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³²⁾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나 기금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³³⁾

30) 2020년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가 19개에서 20개로 증가하였다.

31) 2020년 5월 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변경되어 2020회계연도에는 두 기금이 중복으로 계상됨에 따라 기금의 숫자는 총 68개이다.

3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3)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 이후 특별회계는 16개에서 20개로, 기금은 61개에서 68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잡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재정법」 제정 시 목적과 상이한 것이다. 향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회계·기금의 재구조화를 통해 내부거래를 최소화하고 재정구조를 단순화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현 황

(1) 유사·중복 사업의 정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법령상의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미국 감사원(GAO)은 법률¹⁾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유사·중복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유사·중복을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분절, 유사 및 중복으로 유형화하고 있다.²⁾

[중복적인 정부활동의 유형(GAO)]

유형	정의	
분절 (Fragmentation)	동일한 영역의 국가적 목적 달성에 다수의 기관 혹은 조직이 관련되어 있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상황	
유사 (Overlap)	여러 부처나 프로그램이 비슷한 목표를 갖거나,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실행하거나,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발생	
중복 (Duplication)	두 개 이상의 부처나 프로그램이 동일한 활동을 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수혜자에게 제공할 때 발생	

자료: GAO, GAO-22-105301 자료를 재구성

강만원 예산분석관(kmw@assembly.go.kr, 6788-3740)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최해인 예산분석관(chi0121@assembly.go.kr, 6788-4648)

1) 「공공부채의 법정상한 인상(Increasing the statutory limit on the public debt)」, PUBLIC LAW 111-139—FEB. 12, 2010. 이 법은 공공부채의 법정상한을 인상하면서, PAYGO 원칙의 복원(TITLE I) 및 중복으로 낭비되는 정부지출을 제거하기 위해 감사원(GAO)으로 하여금 정부지출의 중복성을 조사하고 사업 통폐합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TITLE II)하도록 하고 있다.

2) GAO, Additional Opportunities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Annual Report), 2022. 5.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감사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공 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에서 공공 부문의 ‘유사’와 ‘중복’의 개념을 정의하고, 발생원인을 환경적·행태적·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감사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중복’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이 “대부분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유사’는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³⁾

공공 부문에서 유사·중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①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의 과잉 대응이나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 등에 따른 ‘환경적 요인’, ② 공공기관 자체의 조직 개인주의나 부처 할거주의 등에 따른 예산 극대화 및 조직 늘리기 등으로 인한 ‘행태적 요인’, ③ 부처 간 기능 중첩, 임무 분절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 부문 유사·중복 발생 원인(감사연구원)]

구분	내용
환경적 요인	신정부 출범에 따라 부처가 과잉 대응하거나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도 잘 조율되지 못할 경우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아짐
행태적 요인	공공기관 자체의 조직 개인주의나 부처할거주의 등 행태적 요인으로 유사·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복이나 사각지대, 조직 간 갈등 야기 등의 현상 발생 가능
구조적 요인	부처 간 기능 중첩, 또는 임무 분절 등 공공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로 유사·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동일 기능에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여러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유사·중복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자료: 감사연구원, 「공공 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2013, pp.25~2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조직이 정책 대상과 수단에 따라 병렬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경제·사회·기술적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으며, 한 부처 내에서도 정책 대상별 부서와 정책 수단별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부처 간·부처 내 유사·중복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감사연구원, 「공공 부문 유사·중복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2013, p.22

(2)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

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방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주요 재정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R&D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방안’,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등을 두어 사업유형별·지원대상별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있다.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예시)]

제도	대상사업	평가주체	내용	근거
신규사업 유사·중복 사전점검	신규	기재부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점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재정사업 심층평가	전체	기재부	집행 시 유사·중복 사업 심층평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사회보장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R&D	과기정통부	예산안 편성 시 유사·중복 사업 조정 내역 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지능정보화기본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일자리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설·변경 시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중소기업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중소기업기본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유사·중복 사업 현황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평가주체를 통해 사업유형별·지원대상별 유사·중복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결과 일부 사업들의 경우 부처 내·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17개 부처의 총 25개 세부(내역)사업(1,664억 1,000만원)이 부처 내·부처 간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사·중복성 비교대상 사업이 동일 부처 내 존재하는 경우(부처 내)는 총 26건 중 10건(961억 5,600만원)이었으며, 비교대상 사업이 다른 부처 사업인 경우(부처 간)는 11건(632억 8,500만원)이며, 비교대상 사업이 부처 내 사업과 타 부처 사업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4건(69억 6,900만원)이었다.

[2023년도 유사·중복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부처 내		부처 간		부처 내·부처 간		합계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합계	10	96,156	11	63,285	4	6,969	25	166,4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통일부 등 4개 부처에 각 2건씩 8건, 감사원·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에 각 1건씩 12건이다.

유사·중복 사업의 예산안 규모 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 674억 1,5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0억 9,500만원, 문화재청 217억 6,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139억원 순이었다.

[2023년도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부처 내		부처 간		부처 내·부처 간		합계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과기부	2	9,000	2	19,845	1	4,250	5	33,095
고용부	1	1,674	1	3,522	0	0	2	5,196
국토부	2	3,950	0	0	0	0	2	3,950
농림부	0	0	2	13,900	0	0	2	13,900
통일부	0	0	0	0	2	1,804	2	1,804
감사원	0	0	1	297	0	0	1	297
교육부	0	0	0	0	1	915	1	915
인권위	0	0	1	102	0	0	1	102
금융위	0	0	1	1,024	0	0	1	1,024
기재부	0	0	1	2,500	0	0	1	2,500
문화재청	0	0	1	21,762	0	0	1	21,762
문체부	1	1,500	0	0	0	0	1	1,500
법무부	0	0	1	333	0	0	1	333
산업부	1	4,837	0	0	0	0	1	4,837
여가부	1	1,900	0	0	0	0	1	1,900
중기부	1	67,415	0	0	0	0	1	67,415
해수부	1	5,880	0	0	0	0	1	5,880
합계	10	96,156	11	63,285	4	6,969	25	166,4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나. 분석의견

(1) 총평

2023년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 ③ 사업 간 차별성 강화, ④ 중복 지원 배제, ⑤ 사업 간 연계 추진 등 유사성 및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수 및 예산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신규 추진 재검토	통합 추진 필요	차별성 강화 필요	중복 지원 배제 필요	사업간 연계 필요	합계
사업수	5	6	7	2	5	25
예산안	12,923	10,867	90,267	14,102	38,251	166,4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먼저, ①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과 중복성이 높아 **신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는 ‘반도체설계구현인재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금융위원회)’ 등 5건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3년 예산안	분석내용
신규 추진 재검토	과기부	반도체설계구현인재양성	5,845	교육부 ‘반도체특성화대학’의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과 중복 우려
	금융위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1,024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과 유사하므로 기존 사업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 고려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설계구현인재양성 사업은 학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의 설계·제작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나, 교육부에서 ‘반도체특성화대학’을 통해 학부 1~4학년생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육성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초기창업패키지’와 유사하므로 별도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전 초기창업분야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사업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산업통상자원부)’,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등 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 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3년 예산안	분석내용
통합 추진 필요	산업부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4,837	재직자·미취업자 대상 단기 인력 양성으로 부처 내 2개 사업과 차별성 부족
	문화부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1,500	해외에서 현지 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과 매칭하는 등의 업무는 기존사업인 ‘해외거점 운영’에서 수행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은 반도체 분야의 재직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인력양성이라는 점에서 부처 내 ‘시스템반도체설계실무인력양성’ 및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과 교육대상·교육내용의 차별성이 부족하여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사업은 해외에서 현지 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과 매칭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인 ‘해외거점 운영’과 유사하므로, 기존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등 동 사업의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유사·중복 해소를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및 내용의 차별성을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는 ‘창업중심대학(중소벤처기업부)’, ‘모빌리티활성화지원(국도교통부)’ 등 7건이 있다.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3년 예산안	분석내용
차별성 강화 필요	중기부	창업중심대학	67,415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신설내역 사업이나, 기존 내역사업들과의 차별성 부족
	국토부	모빌리티활성화지원	2,950	‘모빌리티’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자율차·드론 등 기존사업과 중복 우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주관기관이 대학인 과제를 별도로 분리하여 내역사업 형태로 신설한 것이나, 다른 내역사업인 ‘예비·초기·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에서 대학이 주관인 과제가 선정될 경우 등 내역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기존 내역사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여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은 ‘모빌리티’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부처 내 ‘자율자동차상용화’, ‘드론교통산업활성화’ 등 기존사업과 목표 및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별화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지원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는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프츠분야 인권증진(국가인권위원회)’ 등 2건이 있다.

[중복 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3년 예산안	분석내용
중복 지원 배제	과기부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14,000	교육부 사업과 대학의 반도체 분야 장비 구축 지원 측면에서 중복, 중복 구축 사전 배제 방안 마련 필요
	인권위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102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와 역할 중복에 대한 지적 지속.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한 중복성 해소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은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과 대학의 반도체 분야 장비 구축 지원 측면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비의 중복 구축을 사전에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 역할 중복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 간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문화재청)’, ‘돌봄마을 조성(농림축산식품부)’ 등 5건으로 나타났다.

[사업 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3년 예산안	분석내용
연계 추진 필요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사업	21,762	동 사업 및 문체부 ‘테마관광 거점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 두 부처간 연계를 통해 효과적 홍보 방안 및 사업 추진 필요
	농림부	돌봄마을 조성	9,000	보건복지부 사업과 고령층,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복지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가능성 검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문화재청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테마관광 거점 조성(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되므로, 두 부처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청와대 및 인근 권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편의 제고 사업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돌봄마을 조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공 분야에서의 유사·중복이 적절하게 잘 작동할 경우 경쟁을 촉진하여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과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할 경우 정부 전체적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중복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⁴⁾

그러나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2%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등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중복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곳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기술되는 ‘(2)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과 ‘(3)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4) 부처 내·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사성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들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유사·중복성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일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유사·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는 중복 지원 사업 중 대응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면 전체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유사·중복 해소 방안별 주요 사업]

(단위: 개)

구분	사업수	부처	주요사업
신규 추진 재검토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설계구현인재양성, 인공지능반도체고급인재양성
		금융위원회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통일부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통합 추진 필요	6	법무부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감사원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홍보
차별성 강화 필요	7	기획재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후대응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사업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활성화지원, MaaS Station 구축
중복 지원 배제 필요	2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간 연계 필요	5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돌봄마을 조성
		고용노동부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구축
합계	25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2) 부처 내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10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2건씩이고,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는 각 1건씩이다.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 예산안	
과기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7,000	AI반도체 Farm 구축 및 실증	7,000	차별성 강화필요
과기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2,000	고성능컴퓨팅지원	15,000	통합추진 필요
국토	모빌리티활성화지원	2,950	자율자동차상용화	3,600	차별성 강화필요
			드론교통산업활성화 지원	16,039	
국토	MaaS Station 구축	1,000	환승센터 구축지원	13,161	차별성 강화필요
해양	어촌활력증진지원	5,880	어촌신활력 증진 유형2	44,250	차별성 강화필요
중소	창업중심대학	67,415	예비·초기· 창업도약패키지	198,385	차별성 강화필요
산업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 인력양성	4,837	시스템반도체설계실 무인력양성	3,500	통합추진 필요
			반도체아카데미구축	2,300	
문체	마켓플레이스 비즈 매칭 에이전트 운영	1,500	해외거점 운영	10,173	통합추진 필요
고용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구축	1,674	조선업 희망센터	5,000	사업간 연계 필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35,600	
여성	가족정책 홍보	1,900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1,781	통합추진 필요
합계		96,156	합계	355,789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70억원)은 광주 AI집적단지에 AI반도체의 시험검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AI응용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른 신규 사업인 ‘AI반도체 Farm 구축 및 실증’ 사업(70억원)과 사업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등의 측면에서 유사하여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⁵⁾

[AI반도체 대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비교]

구분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AI반도체 Farm 구축 및 실증
세부사업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사업목적	국산 AI반도체 적용 확대	국산 AI반도체 초기시장 수요창출
지원내용	광주 AI데이터센터를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AI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AI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국산 AI반도체 제작 업체 (3~4개사)	국산 AI반도체 제작 업체 (3~4개사)
지원기간	2023년~2024년(2년) ※ 2024년은 세부사업 종료시점	2023년~2025년(3년)
구축장소	광주 AI데이터센터	공모를 통해 민간 기업 선정 예정
총사업비	200억원 (국비 140, 지방비 60)	200억원 (국비 100%)
2023예산안	70억원	70억원
전담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NIPA)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 pp.21~24 참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2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공공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존 사업인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서 차별성이 부족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 및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 비교]

구분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신규)	고성능컴퓨팅 지원 (기존)
지원목적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공공분야에서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AI 제품·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연구 및 서비스 개발
사업내용	민간 상용 <u>초거대 AI 모델 이용 지원</u>	민간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및 <u>초거대 인공지능 API 서비스 활용 지원</u>
사업기간	2023~계속	2017~계속 ※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2022~)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기업
2023	과제수	100개
	단가	2,000만원
	계획액	20억원
사업수행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 pp.83~86 참조

③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29억 5,000만원)은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민관이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빌리티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자율자동차상용화’, ‘드론교통산업활성화’ 등 기존사업의 목표, 역할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⁷⁾

[국토교통부 기존 모빌리티 사업 중 유사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 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모빌리티활성화지원	2,950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	250	- 민관 합동 미래 모빌리티 포럼 구성 및 운영 - 산업변화에 따른 제도 전반 재설계등 정책연구
모빌리티 특화도시조성	2,700	모빌리티혁신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자율자동차상용화	3,600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350	자율차 확산 및 모빌리티서비스 모델의 선진화를 위해 민간에서 개발하는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서 비스 실증 지원
상용화 정책연구	500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이슈분석 및 정책개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평가위탁	175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및 근거데이터 검증 등
드론교통산업활성화지원	16,039	
UAM Team Korea 사업지원	350	민관정책공동체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산업 활 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
연구용역	500	K-UAM 로드맵 이행을 위한 운영체계연구 등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2.10, pp.117~122 참조

④ 국토교통부의 ‘MaaS Station’ 사업(10억원)은 광역교통 중심지에 기존 철도·버스 외 전기·수소차, PM⁸⁾, UAM⁹⁾ 등 멀티 모빌리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MaaS Station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수립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인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과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하고, 기존 사업 추진 시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구축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⁰⁾

[MaaS Station 및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 비교]

구분	Maas Station (신규)	환승센터 구축지원 (기존)
사업목표	新모빌리티(전기·수소차, UAM 등) 활용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교통수단 간 연계 및 원활한 환승 활동을 위한 환승센터 구축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식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보조
국고보조율	50%	(환승센터) 30%,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50% (복합환승센터) 70%
2023년 예산안	10억원	131억 6,100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약어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9) UAM이란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의 약어이다.

1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2.10, pp.123~125 참조

⑤ **해양수산부의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58억 8,000만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종료 이후에도 어촌지역 소멸 대응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연안·어촌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과 2023년 신규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모두 혁신어촌조성 지원 사업의 후속사업이며 사업목적과 대상, 효과 등이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¹⁾

[어촌활력증진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비교]

구분	어촌활력증진	어촌신활력증진
목적	다양한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관계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어촌의 활력 제고	생활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신규·생활인구 증대
주체	지방자치단체 + 민간앵커조직	민·관 공동시행 (지자체 + 민간조직*) * 앵커조직, 민간투자자 등
규모	6개소('22~'25) *시범사업	300개소('23~'30)
보조율	70%	(유형1) 50% (유형2/유형3) 70%
사업 범위	어항 중심의 생활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생활권* * 1개의 생활권은 5~10개 마을 포함	
수혜자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0, pp.87~93 참조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 사업(674억 1,500만원)은 전국의 권역별 역량 우수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인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주관기관이 대학인 과제를 별도로 분리하여 내역사업 형태로 신설한 것이나, 다른 내역사업인 예비·초기·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서 대학이 주관인 과제가 선정될 경우 신규 내역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기존 내역사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여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창업중심대학 및 예비·초기·창업도약패키지 사업 비교]

구분	창업중심대학(신규)	예비·초기·창업도약패키지(기존)
세부사업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사업화지원
목표	대학 發 창업지원 모델 창출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
주관기관	대학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창업도약기업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창업도약기업
2023년 예산안	674억 1,500만원	1,983억 8,5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0, pp.229~232 참조

⑦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인프라활용현장인력양성’ 사업(48억 3,700만원)은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직자 및 미취업자(대학원생 포함)를 대상으로 반도체 생산설비 및 제조장비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 사업과 ‘시스템반도체설계실무인력양성’,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사업은 반도체 분야의 재직자 및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교육내용 및 대상의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³⁾

[2023년 예산안의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의 교육방식]

구분	교육기관	교육방식	양성인력	강사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대학	대학별 구축 반도체 설비를 활용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별 3~5일)	반도체 공정인력	대학교수 및 강사
시스템반도체설계 실무인력양성	대학	반도체 설계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공통·심화·실습 과정	설계인력	대학교수 및 기업재직자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반도체 산업협회	산업계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젝트 기반 이론 및 실습 교육 (대학생 4개월, 재직자 1주일)	반도체 공정 · 설계인력	기업 내 현업 강사, 기업 출신 고경력 강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0, pp.26~30 참조

⑧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사업(15억원)은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비즈니스를 위한 현지 맞춤형 네트워크 확보 및 지원을 위해 해외거점국에 비즈매칭 에이전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비록 이 사업이 해외에서 현지 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과 매칭하는 등의 업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동 업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 ‘해외거점 운영’ 사업(101억 7,300만원)으로 수행이 가능하므로 이 사업의 예산은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국내 콘텐츠기업의 해외비즈니스 지원 관련 사업 현황]

구 분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사업	해외거점 운영 사업
사업내용	에이전트 선발	해외거점 운영
주요업무	· 현지 콘텐츠 바이어를 마켓플레이스*에 유치하고 마켓플레이스의 전시상품을 홍보 *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수출기업들의 상시 비즈니스,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 <u>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비즈매칭 운영 지원</u>	· 글로벌 콘텐츠 거점기지를 활용한 수출정보, 마케팅, 네트워킹 등 현지진출 지원 - 해외 진출 업체 비즈니스 자문, <u>해외 바이어와 비즈매칭 업체 주선</u> ·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산콘텐츠·기업에게 현지 진출 종합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주요사업 현지 연계 추진 및 유관기관 교류·협력 · 국내기업 현지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u>콘텐츠 홍보관 운영</u> 등
2023 예산안	· 1,500백만원 : 해외거점 15개소×2명×50백만원	· 10,173백만원 : 해외거점 15개소×678.2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0, pp.129~131 참조

⑨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구축’ 사업(16억 7,400만원)은 최근 구인수요가 30% 이상 급증하거나, 감소한 업종 중 적극적 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업종(반도체·조선)을 특별 지원하는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신설하려는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이 ‘조선업 희망센터’ 및 신규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일부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도 있으므로, 타 사업과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⁵⁾

[산업 기반 고용지원 관련 고용노동부 주요사업 비교]

구분	업종별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위기지역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¹⁶⁾ (23 신규)
사업내용	- 근로환경 개선 등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 해당 업종 주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산업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복합적 구인 애로요인 파악 및 실무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원 - 전국단위 온라인 채용설명회, 채용행사 등 광역 단위 채용지원	- 1:1 취업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훈련 - 조선업종 특화 전문인력 양성 - 조선업 취업박람회 개최, 전국투어 조선업 채용설명회 등 취업 촉진사업	- 반도체, 조선업, 뿌리산업, 농촌 등 지역주력 산업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 업종별 근로조건·환경 개선 지원 - 직업훈련 강화 - 대상(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별 맞춤형 취업 지원 ※ 중앙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관서와 협업(정보교류 등) 수행
2023년 예산안	- 2개소(조선·반도체) 구축 총 16억 7,400만원	- 거제 센터 40억원 - 울산동구 센터 10억원	- 356억원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2.10, pp.162~165 참조

⑩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홍보’ 사업(19억원)은 보편적 가족 지원정책, 가족서비스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이미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을 통해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가족정책과 관련한 홍보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가족정책 홍보 관련 사업 현황]

사업	가족정책 홍보 ¹⁾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내용	- 가족정책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등	- 주요정책 기획홍보(정책 홍보 영상 및 캠페인 등)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주요 정책 매체(일간지, 라디오, TV, 버스외벽 광고 등) 활용 홍보 - SNS 채널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2023년 예산안	19억원	17억 8,100만원

주: 1)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여성가족위원회)」, 2022.10, pp.214~217 참조

(3) 부처 간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11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2건씩이고, 문화재청·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감사원·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는 각 1건씩이다.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 예산안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 예산안	
과기	반도체설계구현인재 양성	5,845	교육	반도체특성화대학	48,000	신규 추진 재검토
과기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	14,000	교육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56,010	중복 배제
농림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4,800	LH	귀농/귀촌 공공주택 사업	-	사업간 연계 필요
농림	돌봄마을 조성	9,100	복지	장애인 복지시설	25,367	사업간 연계 필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50,053	
문화재	청와대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21,762	문체	청와대 권역 관광자 원화	1,100	사업간 연계 필요
고용	고령자인재은행	3,522	복지	노인일자리사업	1,418,076	차별성 강화필요
금융	핀테크 창업지원 프 로그램	1,024	중기	초기창업패키지	198,385	신규 추진 재검토
기재	온실가스 국제감축	2,500	산업	온실가스국제감축	6,350	차별성 강화필요
			환경	온실가스국제감축	10,350	
감사	감사기구 역량강화 (ODA)	297	KOICA	공공감사관리사업	147	통합추진 필요
법무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333	경찰	임시안전숙소	682	통합추진 필요
				신변안전조치	32	
인권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102	문체	스포츠윤리센터	7,268	중복 배제
합계		63,285	합계		1,821,8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설계구현인재양성’ 사업(58억 4,500만원)은 학부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의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신규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생 1~4학년을 반도체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48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와 별개로 학부 3~4학년생을 대상으로 ‘반도체설계구현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가 2023년부터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통해 학부생에 대한 반도체 교육과정 전반을 지원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⁸⁾

[반도체설계구현인재양성 및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 비교]

구분	반도체설계구현인재양성	반도체특성화대학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세부사업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
사업기간	2023~2028년(6년)	2023~2031년(9년)
지원내용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본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실무교육 및 채용연계 교육 - 설계툴 및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인건비 등 지원	대학별 반도체 특성화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 기자재 구축비용 등 지원
지원대상	1개 컨소시엄 - 교육전문기관과 대학으로 구성	연간 6개교씩 4년간 24개교 선정
교육대상	학부 3~4학년생	학부 1~4학년생
교육인원	연간 300명씩 총 1,780명	연간 300명씩 총 6,000명
지원규모	'23년 58.5억원, 6년간 480억원	연간 평균 80억원, 5년간 400억원
교육기간	2년	4년
전담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8)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 pp.25~32 참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140억원)은 대학 또는 출연연구소의 반도체 분야 노후·공백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장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및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560억 1,000만원)을 통해서 대학의 반도체 분야 장비 구축에 재원이 집중될 예정이라는 점, 교육부의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통해 구축될 장비의 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통해 구축할 장비의 일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비의 중복 구축을 사전에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국립대학 반도체 기자재 구입 예산안 중 과기부 구축대상 장비 포함 사례]

(단위: 백만원)

대학명	장비명	장비비용		
		국고	자부담	합계
서울과기대	PECVD(플라즈마화학증기증착장비)	1,383	117	1,500
부경대		300	0	300
부산대		200	0	200
서울과기대	스퍼터장비	1,200	0	1,200
창원대	고주파스퍼터링시스템	400	0	400
한국교원대	초고진공스퍼터시스템	350	0	3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9)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 pp.33~36 참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48억원)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층을 대상으로 단독·쉐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귀농·귀촌인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하고, LH 역시 공급호수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면에서 지원대상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수요를 고려한 사업지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귀농·귀촌 주택개발 관련 사업 간 비교]

사업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사업 수행자	농림축산식품부	LH공사
사업 내용	■ 귀농·귀촌 청년(만 40세 미만) 임대주택 제공	■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건설
선정(계획) 지역	충북괴산, 충남서천, 전남고흥, 경북상주, 경남밀양	전남보성, <u>경북상주</u>
입주요건	■ 관외지역 거주 ■ 청년 세대주	■ 모집 공고일 기준 관외(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중 ■ 일부 청년 우선공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0, pp.23~26 참조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돌봄마을 조성’** 사업(91억원)은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장,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교육센터 등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제공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이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나 노령층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등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²¹⁾

[3개 사업 간 비교]

사업명	돌봄마을 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확충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주 대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시설 이용 장애인	시설 이용 노인
2023 예산안	91억원	253억 6,700만원	500억 5,300만원
제공 서비스	▪ 의료·복지 시설 ▪ 농장을 통한 돌봄·교육 등	▪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대상층에 휴식공간 제공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0, pp.39~43 참조

⑤ 문화재청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217억 6,200만원)은 2022년 5월부터 전면 개방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의 시설조경관리, 개방운영, 관람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관광 거점 조성(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청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홍보물 제작 사업은 두 사업 간 연계하여 추진하고 교통편의 제고 사업은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중 홍보, 교통편의 제고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테마관광 거점 조성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소관 부처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내용	· 청와대 개방운영 12,312 - 관람만족도 제고 2,350	· 홍보 마케팅 550
	· 홍보물 제작 500 · 청와대 관람 셔틀버스 임차 운행 250 · 관람객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100 · 청와대 개방 프로그램 운영 1,000 · 청와대 산책로 등 탐방로 운영 500	· 청와대 관광 안내 책자 등 홍보물 제작 100 · 관람객 교통편의 증진 200 · 방한상품 연계 마케팅 및 참여이벤트 100 · 웹사이트 운영 150

자료: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0, pp.164~167 참조

⑥ 고용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 사업(35억 2,200만원)은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고령자인재은행의 이용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에 해당하고, 알선 일자리가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대상과 내용이 유사·중복되므로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지에 맞게 참여자의 취업역량 제고 등에 집중하는 등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²³⁾

[고령자 일자리 관련 사업 현황]

구분	고령자인재은행	노인일자리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지원목적	고령자 취업알선 기능 강화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고령자	만 65세 이상 초고령자 (사회서비스형 일부유형, 민간형 60세 이상)
지원내용	- 고령자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직업상담 및 재취업상담 -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공익활동형: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사회참여활동(공공시설 봉사 등) ②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 보육시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 ③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실버카페, 택배운송, 식료품 제조판매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노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 (취업알선행) 고령자의 민간기업(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등) 취업 알선
운영기관	YWCA,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2023년도 예산안	35억 2,200만원	1조 4,180억 7,6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2.10, pp.192~196 참조

⑦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창업지원**’ 사업(10억 2,400만원)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기술내재화 지원금(인건비, 기술이전비, 지식재산권 출원·보호비 등) 및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핀테크 초기기업들의 외부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초기창업패키지’와 유사하므로 별도로 핀테크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 초기창업분야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초기창업패키지와 비교]

구 분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초기창업패키지
소관(주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윈스톱 창업지원	유망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대상	3년 이내 창업기업	3년 이내 창업기업
분야	핀테크 분야	일반분야*, 그린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 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드 론·개인이동수단 등 **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이차 전지, 자원순환·에너지재활용, CCUS
지원내용	- 기술 내재화 지원금: 평균 <u>7,000만원(최대 1억원)</u> - 핀테크 특화프로그램(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 핀테크지원사업 연계(금융테스트베드, 핀테크보안지원,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평균 <u>7,000만원(최대 1억원)</u> - 특화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전문성 활용
운영기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창업진흥원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2.10, pp.131~137 참조

⑧ **기획재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25억원)은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발굴, 국제감축사업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동일한 국가적 목적 달성에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경우 부처 간 사업중복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부족이나 부처 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과 관련된 각 부처가 각각의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부처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후대응기금)		
소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사업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필요한 감축실적 확보		
사업내용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기반 조성, 감축사업 지원, 금융지원·ODA 사업과 연계	산업·에너지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기반 조성, 감축사업 지원	폐기물 등 환경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기반 조성, 감축사업 지원
전담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KOTRA	한국환경공단
2023-2026 투자계획	28,000	73,400	101,400
2023 계획안	2,500	6,350	10,350
계획안 산출내역	·사업발굴(19억원) -대규모사업 16억원 -소규모사업 3억원 ·전담기관 운영비(4억원) ·국내외기관 역량강화교육 등 ·구축방식 지원모델 개발(2억원)	·감축실적 확보(60억원) -감축사업 60억원 ·국제감축 기반조성(3.5억원) -사업발굴, 협약체결 등	·감축실적 확보(100억원) -감축사업 84억원 -타당성조사 16억원 ·국제감축 기반조성(3.5억원) -사업발굴, 협약체결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부위원회)」, 2022.10, pp.57~60 참조

⑩ 감사원의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사업(2억 9,700만원)은 개발도상국 내 감사원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진 감사제도를 전파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감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기존 감사교육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위탁받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공감사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양 사업은 사업목적, 연수내용 및 연수과정 등이 유사하고 연수 주체 또한 감사원(감사교육원)으로 동일하므로, 재원을 달리하여 유사 사업을 2개 부처에서 중복하여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²⁶⁾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ODA) 및 공공감사 관리 사업(ODA) 비교(2021년 기준)]

구분	감사기구 역량강화 사업 (2021년 기준, 단년도)	공공감사 관리 사업 (2019~2021년 다년도)
대상	몽골, 라오스, 몰디브, 르완다 등	탄자니아, 르완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실시방법	2021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추진	2021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추진
예산	1억 4,800만원	3,198만원 (‘23년 1억 4,700만원)
교육기간	7일(초청 연수시 14일)	9일~21일
교육대상	최고감사기구의 관리자급 직원	각국 최고감사기구 또는 중앙부처 자체감사기구 소속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육과정 프로그램	Module I. 한국의 감사제도 소개	Module I. 한국감사원 일반론
	Module II. 감사원의 감사활동	Module II. 한국 감사원의 감사활동
	Module III. 수원국의 감사활동	Module III. 한국공공기관 소개 및 견학
	-	Module IV. 한국문화의 이해 등 Module V. 국별보고 및 Action Plan

자료: 감사원 및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법제사법위원회)」, 2022.10, pp.126~128 참조

⑪ **법무부의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사업(3억 3,300만원)은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등을 한 자에 대한 안전가옥 제공 등 신변보호 조치, 범죄신고자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검찰청과 경찰청의 신변 보호 관련 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 등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는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높게 나타나 검찰청이 운영하는 안전가옥은 2020년 이후 이용자가 없어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동 사업을 유사사업에 통합하거나 운영 주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²⁷⁾

[법무부 및 경찰청의 신변 보호 관련 사업 개요]

구분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임시안전숙소 사업	신변안전조치 사업
소관	법무부	경찰청	경찰청
'23년 예산안	3억 3,300만원	9억 6,000만원	3,200만원
이용인원	'21년 0명, '22.8월말 0명	'21년 6,569건, '22.8월말 3,602건	'21년 110건, '22.8월말 37건
근거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등
대상	범죄신고자 및 피해자, 친족 등	범죄피해 발생 후 추가 피해 우려되거나 임시숙소 필요한 자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증인 등

자료: 법무부,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법제사법위원회)」, 2022.10, pp.81~85 참조

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1억 200만원)은 스포츠인권의 현실태를 파악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권고를 통해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 역할 중복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리구제 실적 또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 간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²⁸⁾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분야 조사기관 비교]

기관 (소관부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성격	독립적 국가기관(법정부 기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
주요 업무	1.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3.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 4.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스포츠 분야 인권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실행지침 수립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사 권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인권침해·비리 사건조사, 직권조사 등
조사에 따른 조치	인권위에서 직접 체육단체, 교육청 등 징계 요구 ¹⁾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문체부장관에게 징계 요구
정책권고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책제안

주: 1)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거부방해 등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자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8)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 2022.10, pp.34~38 참조

(4) 부처 내·부처 간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사업과 다른 부처 사업 동시에 유사·중복인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4건으로, 통일부 2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는 각 1건씩이다.

[부처 내·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 예산안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3 예산안	
과기	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	4,250	과기	시스템반도체융 합전문인력양성	9,500	신규 추진 재검토
			산업	반도체특성화대 학원	9,000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915	교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5,300	사업간 연계 필요
			고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1,018	
통일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350	통일	정책연구개발	371	신규 추진 재검토
			출연 기관	한국은행, KDI, 통일연구원 등	-	
통일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1,454	통일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추진	484	신규 추진 재검토
				북한인권기록센 터 운영	736	
			인권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지원	188	
합계		6,969	합계		46,5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2. 1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반도체고급인재양성’ 사업(42억 5,000만원)은 AI반도체 설계 및 SW역량을 확보한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을 신규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 사업인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양성’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인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사업과 교육내용이나 교육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AI반도체가 시스템반도체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I반도체 분야 인력양성만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⁹⁾

[3개 사업 비교]

구분	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양성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세부사업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지원내용	AI반도체 대학원 설치·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 인력양성센터 설치·운영 지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 지원
교육대상	대학 석·박사 인력	대학 석·박사 인력	대학 석·박사 인력
교육분야	AI반도체 설계, AI반도체 SW 특화 커리큘럼 도입	AI반도체(서울대), IoT30)반도체(성균관대), 바이오반도체(포스텍), 자동차반도체(연세대), iEoT31)반도체(중앙대)	자동차, 로봇, 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 시스템반도체 교육
참여형태	대학, 기업 협력	대학·기업 컨소시엄	대학·기업 컨소시엄
총사업비	495억원	497억원	450억원
2023예산안	42.5억원	95억원	90억원
전담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9)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 pp.25~32 참조

30)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31) 지능형사물에너지(intelligent Energy-of-Things: iEoT)

②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9억 1,500만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학력보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향상, 학력보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의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령, 수요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업 간 연계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²⁾

[장애인 교육 지원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 지원, 지역사회 적응 능력 강화, 장애인의 사회적 안정 및 행복 추구,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유도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공모 및 운영을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장애인 (2023년 3,000명)	장애인 (2022년 24,058명)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2023년 11,000명)
2023년 예산안	9억 1,500만원	53억원	210억 1,800만원
사업시행기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2.10, pp.62~67 참조

③ 통일부의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3억 5,000만원)은 정부와 북한경제 연구자 간 종합적 소통체계로서 북한경제 연구 포럼 운영, 북한경제에 대한 연례적 평가 및 구조적·심층적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에 편성된 북한경제 연례 평가 및 북한경제 중장기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기존 통일부가 수행 중인 정책연구 사업과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한국은행 및 정부출연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내역 사업으로 편성·운영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 있었다.³³⁾

[북한 경제연구 포럼 운영 사업과 유사 정책연구과제 목록]

구분	정책연구과제	용역수행기관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 북한경제 연례 평가(23년 100백만원)	-
	- 중장기 기초연구(23년 100백만원)	-
통일부 다른 세부사업 내 정책과제(2022)	- 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	한반도경제협력원
	- 북한 경제 분석을 위한 대체 데이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행	-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 경제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북한 수출입단가 지수 측정 : 북중무역데이터를 중심으로	
	-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 실태와 평가	
	- 북한의 장기경제성장률 추정	
정부출연기관	- KDI 북한경제리뷰(월간)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 2021 통계로 본 북한의 경제, 사회상	
	- 2020/2021 The DPRK Economic Outlook(매년)	
	- 북한 재정금융 부문의 현황 분석	통일연구원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연구수행)
	- 북한 재정금융 부문의 제도 변화가 거시경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경제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기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3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2.10, pp.63~67 참조

④ 통일부의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14억 5,400만원)은 유엔 등 국제기구, 국내외 NGO 등의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교육자료 개발, 인권자료 개발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등 사업내용은 통일부의 기존 사업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의 예산 조정이나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³⁴⁾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 내 사업 및 국가인권위 사업 현황]

구분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신규)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추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지원
소관	통일부	통일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목적	북한과 직접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자발적 인권개선 노력 견인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수립 및 추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및 구체적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주요 내용	- 북한-국제사회/민간 협력을 통한 인권 기술 협력 지원 - 인권보고서 작성	- 정책 추진체계 운영 및 정책개발 자문 - 민관협력을 통한 공감대확산, 국제사회 협력 - 콘텐츠, 참고자료 개발 등	-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및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 - 북한인권 실태 및 인권 관련 각종 국내외 문헌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 유엔인권사무소와 관련기관간 협력 강화 - 국제인권기준의 북한 인권 분야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교류 - 북한인권 관련 국제 협력 강화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자료집 제작 - 유엔 조약기구 및 UPR 북한보고서 작성
수행 방법	민간보조 (국제기구, INGO 등)	직접수행	직접 수행	직접 수행
'23 예산	1,454백만원 (남북협력기금)	484백만원 (일반회계)	736백만원 (일반회계)	188백만원 (일반회계)

자료: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2.10, pp.73~76 참조

가. 신규사업 현황

신규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예산이 계상된 적이 없는 세부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 사업, 내역사업이 분리되어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등이 신규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사업의 실질적 의미를 고려하여 통계조사 사업 등과 같이 일정주기로 반복되는 사업, 회계·기금 간 이관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예산안이 처음 편성되었다고 해도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기로 한다.²⁾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신규사업 수(세부사업 기준)는 건축 재정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56개가 감소한 363개이며, 규모(총지출 기준)는 전년 대비 9조 6,996억원 감소한 3조 2,394억원으로, 2023년 총지출 639조원의 0.5% 수준이다.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A)	2023(안) (B)	증감 (B-A)
신규사업 수	343	495	481	490	619	363	△256
신규사업 규모	95,267	35,340	41,773	41,188	129,390	32,394	△96,99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신규사업의 정의)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②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2)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기금 간 거래, 금융성기금 사업 등도 신규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2023년도 363개의 신규사업은 총 37개 부처에 반영되었다.³⁾

사업 수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50개), 기획재정부(36개), 보건복지부(26개), 해양수산부(25개) 등의 순이다.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방사청이 패키지핵심기술(R&D)(6,635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1조 788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5,769억원), 국토교통부(4,073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83억원) 등의 순이다.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사업규모 기준]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수	2023 예산안
방위사업청	12	1,078,816
금융위원회	3	576,928
국토교통부	50	407,3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	358,393
산업통상자원부	50	167,076
기획재정부	36	135,435
보건복지부	26	126,499
해양수산부	25	98,361
행정안전부	10	39,489
산림청	5	34,800
중소벤처기업부	9	31,644
문화재청	1	21,762
농림축산식품부	8	21,674
문화체육관광부	6	17,063
환경부	5	12,786
관세청	2	12,236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122
국방부	2	10,674
교육부	5	8,958
해양경찰청	4	7,66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6,004
농촌진흥청	2	5,786
경찰청	3	5,712
법무부	1	5,323

3) 총 58개 기관 중 여성가족부, 병무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21개 기관은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없다(신규 사업으로 제출하여도 성격상 신규로 볼 수 없는 사업 제외).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수	2023 예산안
소방청	3	5,300
조달청	2	5,199
고용노동부	1	4,629
외교부	3	4,417
대법원	1	3,829
질병관리청	3	3,568
기상청	1	3,150
원자력안전위원회	2	3,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500
대통령경호처	1	1,000
행복청	3	700
특허청	1	522
국민권익위원회	1	114
총 계	363	3,239,46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회계·기금별 신규사업 현황

2023도 신규사업의 회계·기금별 현황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23개 사업에 2조 1,553억원이, 특별회계는 77개 사업에 5,785억원이, 기금은 63개 사업에 5,05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가 24개 사업에 3,205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766억 7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292억 7,300만원) 등의 순이다.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대환보증 대위변제 1개 사업에 2,273억원이 편성되어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629억 4,000만원), 기후대응기금(595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547억 6,300만원), 주택도시기금(400억원) 등의 순이다.

4) 2023년도 전체 특별회계는 11개, 기금은 14개이다.

[회계 · 기금별 신규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수	2023 예산안
일반회계	223	2,155,304
특별회계	77	578,590
교통시설특별회계	24	320,55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	176,60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	29,27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	17,73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	10,974
환경개선특별회계	3	7,755
양곡관리특별회계	1	7,100
조달특별회계	2	5,199
우편사업특별회계	1	2,17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	7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522
기금	63	505,574
신용보증기금	1	223,731
국유재산관리기금	17	62,940
기후대응기금	17	59,500
전력산업기반기금	9	54,763
주택도시기금	3	40,000
정보통신진흥기금	7	28,93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	11,586
원자력기금	2	6,620
국민건강증진기금	1	5,000
과학기술진흥기금	1	5,000
방송통신발전기금	1	2,4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	2,100
국민체육진흥기금	1	2,00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	1,000
총 계	363	3,239,46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3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3년도 신규사업 중 예산안 규모 기준 상위 10개 사업의 규모는 총 1조 9,710억원으로 전체 신규사업(3조 2,394억원)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패키지핵심기술(R&D) 사업(6,635억 8,600만원)이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도약계좌)(3,527억 7,200만원)], 방위사업청의 전용기술-II(R&D)(3,377억 800만원) 등의 순이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3 예산안
1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패키지핵심기술(R&D)	663,586
2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출연 (청년도약계좌)	352,772
3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전용기술-Ⅱ(R&D)	337,708
4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대환보증 대위변제	223,731
5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종-청주고속도로건설	100,269
6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건설	78,38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자율)	63,241
8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울산외곽고속도로건설	57,256
9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건축	49,746
10	해양수산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어촌신활력증진	44,390
합 계				1,971,08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202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①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 준비 여부, ②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③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등 사전 준비 여부 검토

신규사업은 사업과 관련된 사전 준비가 내실 있게 수행되어야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근거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2023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법적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⁵⁾(3,527억 7,200만원)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지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정 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관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다 른 청년자산형성 상품과 달리 청년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 예산투입의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고,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10년간 운영되는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총 재정규모와 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효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기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금리수준 및 지급구조와 그에 따른 예 산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조속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⁶⁾(443억 9,000만원)은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여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 수준 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대규모 어촌· 어항개발사업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동일한 규모(3조원)로 추진하는 내용이나, 어촌뉴딜 300 사업에 따른 효과가 아직 검증·분석되지 않았으므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수 요·사업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22.10., pp.104~116.

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10., pp.94~98.

3. 국토교통부의 ‘충간소음 성능보강’ 사업⁷⁾(300억원)은 기축 주택의 충간소음 차단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용자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는 무이자로 대출하고, 중위소득 80% 초과 150% 이하이면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는 1.8%의 금리로 융자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서 주택도시시기금으로 소음저감매트 구입 비용을 융자하는 것은 「주택도시시기금법」의 주택사업 용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R&D)⁸⁾(97억 5,000만원)의 내역사업인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 전달체계, 바이오 클러스터에 기반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및 생태계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개인 의료데이터를 제공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에는 데이터의 직접 전송이 금지되고 있어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실증하는 동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외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접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국토교통부의 ‘충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⁹⁾(80억원)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8월에 발표한 「공동주택 충간소음 개선방안」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자가 충간소음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시공 시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융자대상인 리모델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수요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실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2.10., pp.57~63.

8)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10., pp.88~93.

9)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2.10., pp.64~68.

6.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¹⁰⁾(71억원)의 내역사업인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은 쌀가루를 활용하는 제조업체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가루쌀 재배면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쌀가루를 활용한 제품개발·홍보 지원 등 가공·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7.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¹¹⁾(61억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유사한 사업을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증료 지원 조건·방법·절차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8.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구축’ 사업¹²⁾(40억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청정수소 생산 및 국내 도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출자 사업이다. 블루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시범 내역사업은 2022년 9월 현재 사업 참여기관 간 사업모델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사업참여 추가 기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LNG 가격 상승에 따른 블루수소 생산의 경제성 문제로 민간 기업 참여유인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10., pp.21~22.

1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2.10., pp.49~52.

1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2.10., pp.107~113.

9. 환경부의 ‘도립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¹³⁾(30억 3,100만원)은 상습 침수지역인 도립천 일대의 홍수량 분산을 위해 지류인 도립천의 물을 본류인 한강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대심도 지하방수로를 설치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이므로,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방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 사업¹⁴⁾(15억원)은 전국의 원전부지를 대상으로 다수기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울부지를 대상으로 다수기 PSA 모델을 개발하고, 부지리스크를 정량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R&D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고리부지 원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과 모델을 동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다수기 규제방법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여 신규 사업 추진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11. 농촌진흥청의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 사업(R&D)¹⁵⁾(12억 7,500만원)은 발농업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발농업기계화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발농업기계화와 관련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발농업기계화율은 파종·정식 작업이 12.2%, 수확 작업이 31.6%에 불과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발농업기계화율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1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2.10., pp.58~63.

1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2.10., pp.197~201.

1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10., pp.141~144.

(2)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예산안 산출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편성되고 있는 등 예산 절감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23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정부에서 사업을 철회하거나, 연차별 재정 소요 및 실질적인 사업기간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의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사업¹⁶⁾(497억 4,600만원)은 대통령의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정부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계획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환경부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¹⁷⁾(163억 4,500만원)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녹색활동 관련 민간자본 발행 시 이차를 보전해 주고, 환경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책임투자자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구축·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과 금리 인상 추이, 2022년 연말까지의 녹색채권 발행 추이 등을 검토하여 녹색채권 발행액 규모를 재산정함으로써 동 사업을 통한 정부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1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부위원회 소관)」, 2022.10., pp.65~66.

17)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2.10., pp.84~9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사업¹⁸⁾(103억 5,000만원)은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내용이다. 동 사업의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후보과제 중 타 부처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된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ISP 수립 대상인 과제 등을 제외할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제한적이므로 사업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4. 환경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¹⁹⁾(103억 5,000만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국내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설비 투자비, 운영비 등)를 투자하고, 확보된 감축실적을 정부가 획득하여 NDC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양자협정 체결을 비롯한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환경부는 향후 사업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 사업²⁰⁾(100억 4,600만원)은 기업이 수요를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이 1:1로 공동 투자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수요에 대응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예산안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1차년도 지원과제수와 사업비를 확대하여 편성하였으나, 민간기업의 공동투자 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연차별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2022.10., pp.73~78.

19)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2.10., pp.94~100.

2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2.10., pp.18~21.

6.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²¹⁾

(100억원)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국내 반도체 수요와 연계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5개 분야의 반도체칩 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R&D 사업이다.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시스템반도체 사업에서 수요와 연계한 R&D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사업에 비해 과제당 지원액이 크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기술개발 과제의 특성 및 기존 유사 사업의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사업²²⁾(100억원)은 정부의 출자와

민간 재원 등을 혼합해 사회적 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조직 및 사업체 등에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특성상 투자에 따른 기준수익률을 1% 이상으로 책정하는 등 동 사업의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체투자처인 채권의 수익률이 A-등급 기준 6.24%에 달하는 등 현재 시장상황 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8.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²³⁾(56억 3,000만

원)은 민·관·연 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규제혁신 추진체계 및 덩어리 규제개선의 세부 내용에 관한 홍보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및 타 부처 사업 예산으로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조직인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및 담당 부처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 발굴·검토 등 심사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이 가능하므로, 규제혁신추진단 홍보예산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2.10., pp.31~36.

22)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10., pp.63~68.

2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2022.10., pp.15~21.

9. 법무부의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²⁴⁾(53억 2,300만원)은 국가적·사회적·업무 증거적 가치가 높은 법무기록의 독자적 보존·관리 및 활용·서비스 등을 위한 법무부 기록관 건립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도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은 실제 준공 이후 운영 가능 기간보다 과도한 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고 일부 운용비 적용 산식에 있어서 실소요 면적 대비 과다한 면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기반 구축’ 사업²⁵⁾(25억원)은 데이터·서비스의 API 연결·활용을 위한 API 활용 인프라를 마련하고, API의 개발·개방을 위한 활용 인프라의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계획안에 ISP 수립 비용과 인프라 시범 구현 비용을 함께 반영하였는데, 이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ISP 제도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11. 중소벤처기업부의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²⁶⁾(15억 1,300만원)은 의약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에 연구개발 인프라와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는 1년(12개월) 소요분이 편성되었는데, 본격적인 사업단 운영과 홈페이지 시스템 설치는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2.10., pp.69~72.

2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2022.10., pp.79~82.

2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2.10., pp.243~247.

(3)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연계 필요성 검토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재정누수 방지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존 사업 등과의 사업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23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타 기관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한 사업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 문화재청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²⁷⁾(217억 6,200만원)은 2022년 5월부터 전면 개방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의 시설조경관리, 개방운영, 관람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것이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테마관광 거점 조성(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되므로, 홍보물 제작 사업(5억원)은 연계하여 추진되고 교통편의 제고 사업(2억 5,000만원)은 통합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²⁸⁾(140억원)은 대학·연구소의 공공팹 CMOS 공정 장비를 고도화하고, 팹 간 연계를 지원하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공공분야 팹을 활용한 설계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다.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은 대학·연구소 등 공공팹의 노후·공백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나, 교육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및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통해 대학의 반도체 분야 장비 구축에 재원이 집중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장비의 중복 구축을 사전에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10., pp.164~167.

28)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2022.10., pp.33~36.

3.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²⁹⁾(70억원)은 수소버스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내 운송사에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를 보조하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은 지자체 구입 수소버스에 대해 환경부·지자체에서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 지원대상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 보조 목적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활성화지원’ 사업³⁰⁾(29억 5,000만원)은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민관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모빌리티의 개념 및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미래모빌리티포럼, 연구주제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운영·결정되거나 기존 모빌리티 관련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기반조달연계혁신제품사업화’ 사업³¹⁾(27억원)은 공공분야의 수요와 연계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조달 연계 R&D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사한 내용의 조달 연계 R&D 사업을 기존 사업 종료 시점에 신규 추진하여 기존 사업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유사 사업이 반복 추진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의 성과를 반영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9)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2.10., pp.186~190.

3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2.10., pp.117~122.

3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2.10., pp.121~123.

6. 기획재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³²⁾(25억원)은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발굴, 국제감축사업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관장부처 외에 기획재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의 전문성 부족이나 부처 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7.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사업³³⁾(20억원)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목표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보조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제품을 개발 및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된 돌봄로봇 사업의 사업화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돌봄로봇 사업 결과 활용과 연계하여 계획된 2개 실증과제를 먼저 추진하여 실증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³⁴⁾(2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첨단 혁신서비스를 개발·확산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동 사업은 기존사업인 ‘고성능컴퓨팅 지원’ 사업과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서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부위원회 소관)」, 2022.10., pp.57~60.

3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2.10., pp.124~126.

3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2.10., pp.83~86.

9. 국토교통부의 ‘MaaS Station 구축 시범’ 사업³⁵⁾(10억원)은 광역교통 중심지에 기존 철도·버스 외 전기·수소차, PM, UAM 등 멀티 모빌리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MaaS Station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수립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기존 세부사업인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과 사지원대상·방식 등이 유사하므로 통폐합하여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3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22.10., pp.123~125.

1. 현 황

가. 개 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은 기존에 국가재정으로 건설·운영해 왔던 도로·철도·항만 및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종류이다.¹⁾ 1994~2021년간 517개 BTL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BTL 사업에 따른 투자 규모는 33.4조원에 이른다.²⁾

BTL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되,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학교·병원·군생활관 등 수익성이 낮아 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기 곤란한 시설의 경우 BTL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BTL은 민간의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므로, 시설비·임대료에 대한 정부지급금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³⁾

안태훈 예산분석관(matins10@assembly.go.kr, 6788-4747)

- 1)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투자비 회수방법에 따라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이 대표적이다.
- 2) 기획재정부, 「2021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22, p.6.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소관 부처를 살펴보면, 교육부와 국방부는 매년 BTL 한도액을 신청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도 BTL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소관 부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부	○	○	○	○	○	○	○
국방부	○	○	○	○	○	○	○
환경부	○	○	○			○	○
고용노동부	○	○		○	○		
경찰청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자료: 각 연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현황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2~203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BTL 사업 중 2022년 5월 31일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202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는 16조 5,680억원으로 전망된다.⁴⁾

4) 이 중 2022년 및 2023년 정부지급금은 2022년 예산 및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고,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정부지급금은 추계한 전망치이다.

[2022~203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65,680	14,688	16,826	17,134	17,146	17,183
국가사업	130,431	11,052	13,182	13,463	13,450	13,486
- 임대료	109,938	9,309	11,129	11,447	11,429	11,429
- 운영비	20,489	1,744	2,054	2,016	2,020	2,057
국고보조	35,249	3,635	3,644	3,671	3,697	3,697
- 임대료	35,249	3,635	3,644	3,671	3,697	3,697
- 운영비	-	-	-	-	-	-

(단위: 억원)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17,213	17,188	16,935	16,321	15,047
국가사업	13,516	13,492	13,264	13,053	12,471
- 임대료	11,417	11,369	11,098	10,907	10,406
- 운영비	2,096	2,123	2,165	2,147	2,066
국고보조	3,697	3,696	3,671	3,268	2,576
- 임대료	3,697	3,696	3,671	3,268	2,576
- 운영비	-	-	-	-	-

주: 국고에서 지급되는 정부지급금만을 대상으로 집계(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지급금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31년 재정 관련 자료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2022, p.3.

다. 2023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BTL 한도액은 BTL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633억원(2.6%) 증가한 2조 4,98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그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1,905억원(17.2%)이 감소한 9,20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1조 4,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7억원(20.7%) 증가하였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한도액 합계의 20% 이내)은 국가사업과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한도액 합계의 약 5%에 해당하는 1,1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2.7%) 증가하였다.

[2023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

(단위: 억원, %)

구분	2022(A)	2023(B)	증감(B-A)	(B-A)/A
총한도액	24,354	24,987	633	2.6
국가사업	11,106	9,201	△1,905	△17.2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12,089	14,596	2,507	20.7
예비한도액	1,159	1,190	31	2.7

자료: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3년도 한도액안은 교육부 등 4개 부처에서 총 41개 사업에 대해 편성되었다. 이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의 한도액이 총 7,578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으며, 국방시설에 5,315억원, 완충저류시설에 3,736억원, 대학시설 3,597억원, 하수관거시설 3,282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 289억원 순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부처별·시설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세부편성내역]

(단위: 억원)

구분	부처명	시설유형	사업명	한도액안
국가사업	교육부	대학시설	국립대 기숙사 4개	1,327
			국립대 시설개선 9개	2,270
	국방부	국방시설	태능 교육시설 등 8개	5,315
	경찰청	공공보건의료시설	경찰병원	289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환경부	완충저류시설	창원시 산업단지	3,736
		하수관거시설	대구 등 3개	3,282
	교육부	교육시설	서울 5교 등 15개	7,578

자료: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라.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의 정부지급금

2023년 BTL 한도액안에 포함된 41개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부지급금은 총 4조 5,206억원(임대료 3조 5,930억원, 운영비 9,276억원)이며, 이 중 국고지원 규모는 2조 7,211억원(임대료 2조 4,542억원, 운영비 2,669억원)으로 전망된다.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대상사업의 정부지급금 전망]

(단위: 억원)

사업명	총 정부지급금 예상액			국고지원 예상액		
	임대료	운영비	계	임대료	운영비	계
국립대 기숙사 4개	2,029	1,121	3,150	2,029	0	2,029
국립대 시설개선 9개	3,513	1,802	5,315	3,513	1,802	5,315
태능 교육시설 등 8개	8,743	642	9,385	8,743	642	9,385
경찰병원	446	225	671	446	225	671
창원시 산업단지	5,163	865	6,028	3,614	0	3,614
대구 등 3개	4,829	368	5,197	2,835	0	2,835
서울 5교 등 15개	11,207	4,253	15,460	3,362	0	3,362
합계	35,930	9,276	45,206	24,542	2,669	27,211

자료: 각 부처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대상사업의 국고지원율]

(단위: %)

사업명		국고지원율	
		임대료	운영비
국립대 기숙사 4개		100	0
국립대 시설개선 9개		100	100
태능 교육시설 등 8개		100	100
경찰병원		100	100
창원시 산업단지		70	0
대구 등 3개	대구시	30	0
	의정부시, 여주시	70	0
서울 5교 등 15개		30	0

자료: 각 부처

2.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 필요

첫째, 일부 민간투자대안(PFI)의 추정 낙찰률이 BTL 사업의 최근 낙찰률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BTL 사업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대안(PFI) 낙찰률을 최근 BTL 사업의 낙찰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을 BTL 방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이하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받아야 하고,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 중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분석'과 정부 재정사업 대비 BTL 사업의 비교우위 여부를 판단하는 VfM 분석은 BTL 한도액 편성의 타당성·적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은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할 경우 경제적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으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VfM 분석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fM 분석은 민간이 시행하는 BTL 사업(민간투자대안, PFI)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재정사업(정부실행대안, PSC)의 실제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둘 중 소요비용이 더 적은 방식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⁵⁾

그 과정에서 PFI의 경우 PSC 공사비⁶⁾에 유사 'BTL 사업의 낙찰률'(이하 '실시협약률'⁷⁾)인 'PFI 적용률'⁸⁾을 곱하여 실제 소요비용을 추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PFI 적

5)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은 정부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6) PSC 공사비는 추정공사비(설계가 기준)에 PSC 낙찰률을 곱한 값이다.

7) 실시협약률은 'BTL 사업의 고시금액' 대비 '실시협약금액' 비율이며, PFI 공사비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PFI 적용률'과 동일하다.

8) 'PFI 적용률'은 'BTL 사업의 고시금액' 대비 '실시협약금액' 비율이며, 'BTL 사업의 낙찰률'로도 정의된다. BTL 사업의 고시금액은 추정공사비(설계가 기준)에 PSC 낙찰률을 곱한 값인 PSC 공사비이므로, 다음의 공식이 성립된다.

$$PFI \text{ 적용률} = \frac{BTL \text{ 사업의 실시협약금액}}{BTL \text{ 사업의 고시금액}} = \frac{\text{추정공사비} \times PFI \text{ 낙찰률}}{\text{추정공사비} \times PSC \text{ 낙찰률}} = \frac{PFI \text{ 낙찰률}}{PSC \text{ 낙찰률}}$$

용률이 저평가되어, 최근 높아진 BTL 사업의 실시협약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23년도 부처별·시설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PFI 적용률]

(단위: %)

부처명	시설유형	사업명	PFI 적용률	PFI 적용률 설정기준
교육부	대학시설	국립대 기숙사 4개	97.87	'17년~'21년(5년간) 교육부 BTL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
		국립대 시설개선 9개		
	교육시설	서울 5교 등 15개		
국방부	국방시설	태능 교육시설등 8개	97.86	'10~'21년 국방부 BTL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
환경부	완충저류시설	창원시 산업단지	-	민간제안 임대료 적용
	하수관거시설	여수, 의정부		
		대구	93.98	하수관로정비 BTL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
경찰청	공공보건 의료시설	경찰병원	96.37	BTL 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 ('07~'17년 의료, 교육, 병영, 국방)

자료: 각 사업별 적격성조사 보고서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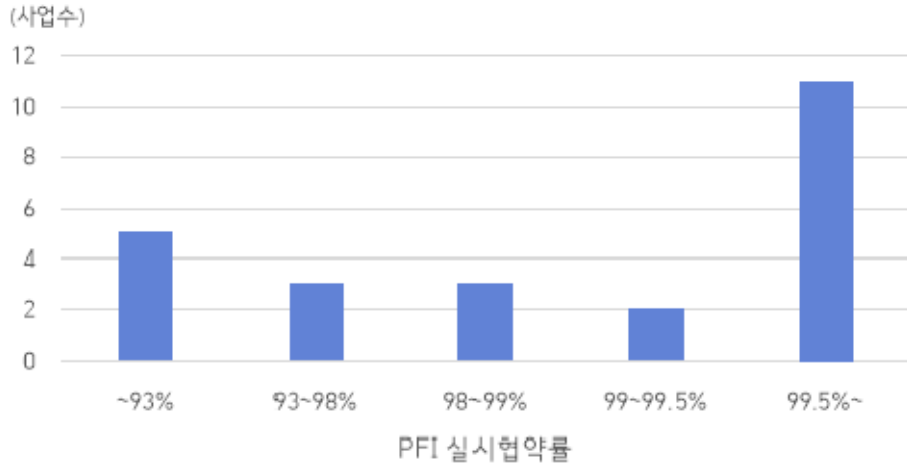
예를 들어, 대학시설 BTL 사업은 최근 5년간 교육부 BTL 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값인 97.87%를 PFI 적용률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0~2021년 자료, 경찰청은 2007~2017년 자료에 근거하여 PFI 적용률을 채택하였다.

국방부의 실시협약률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실시협약률은 99.5% 이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시협약률 분포가 정규분포 형태를 취한다면, PFI 적용률은 실시협약률의 평균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포가 우편향되어 있으므로, 평균값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국방시설 BTL 사업의 최근 5년간 실시협약률 평균은 99.03% 수준이나, PFI 적용률은 97.86%로 설정하여 최근 실시협약률보다 약 1.17%p 낮게 설정되었다.⁹⁾

$$PFI \text{ 낙찰률} = PSC \text{ 낙찰률} \times PFI \text{ 적용률}$$

9) 이는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2017년(91.4%)의 실적을 포함하여 PFI 적용률을 산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BTL 사업 PFI 실시협약률 분포도('10~'21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추정 낙찰률(PFI 적용률)이 최근 낙찰률(실시협약률)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PFI의 정부부담액을 과소평가하여 BTL 방식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PSC 공사비 산정시 적용하는 낙찰률(PSC 낙찰률)은 모든 BTL 사업에 대해 턴키(Turn Key) 낙찰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턴키발주가 부적절한 2023년 BTL 사업에 대한 PSC 낙찰률은 적정 발주방식의 낙찰률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fM 분석은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을 위해 'PSC 낙찰률'에 턴키 낙찰률을 적용하고, 'PFI 낙찰률'을 아래 [표]와 같이 'PSC 낙찰률'에 'PFI 적용률'¹⁰⁾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VfM 분석에 적용하는 PFI 낙찰률은 BTL 대상사업의 추정 턴키 낙찰률에 PFI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¹¹⁾ PFI 낙찰률은 PSC 낙찰률에 PFI 적용률을 곱한 값이므로, 항상 PSC 낙찰률보다 낮게 산정된다.

10) 사업별 BTL 한도액은 PSC 낙찰률을 적용한 '총사업비의 추정치'이므로, PFI 적용률은 BTL 사업의 추정낙찰률이다.

11) BTL 한도액은 설계가에 PSC 낙찰률을 반영한 총사업비이므로, BTL 사업의 낙찰률은 PFI 적용률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VfM 분석 과정에서 PFI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PFI 낙찰률은 PSC 낙찰률에 PFI 적용률을 곱한 값이다.

[2023년도 시설유형별 BTL 적격성 검토시 적용 낙찰률]

(단위: %)

구분	부처명	사업명	낙찰률		
			PSC (턴키)	PFI	
				적용률	낙찰률 ¹⁾
국가 사업	교육부	국립대 기숙사 4개	95.24	97.87	93.21
		국립대 시설개선 9개			
	국방부	태능 교육시설 등 8개	95.27	97.86	93.23
	경찰청	경찰병원	95.24	96.37	91.78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환경부	창원시 산업단지	93.57	-	민간제안
		여수, 의정부 하수관거			
		대구 하수관거		93.98	87.94
	교육부	서울 5교 등 15개	95.24	97.87	93.21

주: 1) PFI 낙찰률=PSC낙찰률 × PFI적용률

자료: 각 사업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보고서

그런데 2023년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들은 재정사업으로 발주시 턴키 및 대안 발주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으므로, PSC 낙찰률은 턴키 낙찰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주방식을 종합심사제¹²⁾(추정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간이종합심사제(추정공사비 100~500억원 미만 공사) 혹은 턴키(Turn Key)¹³⁾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재정사업을 종합심사제로 발주할 경우, 종합심사제의 예상낙찰률은 86.98%이므로 PSC 공사비는 PFI 공사비보다 약 10% 낮아질 수 있다.

12) 종합심사제는 선 설계후 시공사 선정시 입찰금액심사(재정단) 및 공사수행능력평가(평가교육과) 후 최종 낙찰자 선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최저가 낙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13)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입찰 방식이며, 턴키 발주 대상 공사는 200억 이상 사업 중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된다.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들의 가능한 발주방식 및 예상 낙찰률]

(단위: %)

구분	예상 낙찰률	비고
종합심사제	86.98	시설본부 건설계획과 자료
턴키방식	98.82	시설본부 민자사업과 자료
민자사업(BTL)	96.70	98.82%(턴키 낙찰률) × 97.86%(PFI적용율)

자료: 국방부

VfM 분석 지침¹⁴⁾이 PSC 낙찰률을 턴키 낙찰률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근거는 2000~2007년 자료를 사용하여 2009년에 시행된 연구인 「공공투자사업의 입찰제도와 생애주기비용: 도로사업을 중심으로」(2009)의 연구결과이다. 동 연구는 PSC의 경우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턴키 및 대안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 연구는 2006년 이후 본격화된 총사업비관리의 설계변경 증액 억제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PSC 낙찰률 선정에 참고된 연구보고서는 도로공사에 한정된 보고서이므로,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인 건축공사 등에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¹⁵⁾

1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시설사업기 본계획작성요령·표준 실시협약안」, 2010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2011.3, pp.I-13~14.

- 정부실행 사업의 경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산제약 및 행정절차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거나 물량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PSC의 경우 PFI에 비해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를 위험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심사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 총사업비 변동이 발생하는 데, 2000년~2007년 사이에 추진된 203개 사업(턴키 및 대안입찰로 확인된 사업 제외)을 분석한 결과 착공 후 총사업비는 평균 31.52% 증가하였고 이 중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은 27.55%로 조사(KDI, “공공투자사업의 입찰제도와 생애주기비용: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2009.11.)되었음.
- 정부실행대안의 경우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턴키 및 대안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함
- 턴키대안공사는 사업비의 총액이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워 총사업비 증액 위험이 이미 비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로 인해 낙찰률이 높게 형성됨.

15) 기획재정부는 BTL 민자사업의 경우 설계·시공·자금조달·운영 위험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턴키는 설계·시공 위험을, 종합심사제, 간이종합심사제는 시공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종합낙찰제, 간이종합낙찰제는 발주 범위, 위험 분담 등이 상이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VfM 분석은 가능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재정사업대안(PSC)과 민자사업대안(PFI)을 상대 비교하는 것이므로, 건설단계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수주자가 부담하

국방부 종합심사제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PSC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2023년 BTL 한도액에 포함된 사업 대부분이 VfM 미흡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3년 BTL 한도액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적정한 PFI 적용률과 PSC 낙찰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VfM 분석을 위한 할인율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재정지출의 현재가치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BTL 사업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할인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대비 BTL 사업의 비교우위 여부를 판단하는 VfM 분석은 PSC와 PFI에 대한 정부부담액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다. PFI에 대한 정부부담액이 PSC의 대한 정부부담액보다 작을 경우, 해당 사업은 BTL 추진의 적격성(VfM)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PSC와 PFI에 대한 정부부담액은 지출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출 시기 차이에 따른 보정을 위해 PSC와 PFI에 대한 정부부담액은 현재가치로 산정된다.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사용되는데, 과도한 할인율은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VfM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사업추진 유형별로 재원조달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 재정사업방식은 건설기간에 세출예산으로 건설비를 조달한다. 반면, PSC는 세출예산이 아닌 '5년 만기 국고채'로 건설비를 조달하고, 5년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PFI는 BTL 사업자가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AA-'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로 조달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는 턴키를 참조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추진 유형별 자원조달 방식]

구분	자원조달 방식	
	건설비(재정지출 조건)	운영비
일반재정사업	세출예산(건설기간)	세출예산
PSC	5년 만기 국고채(5년 후 일시상환)	
PFI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AA-(20년 간 분할상환)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시설 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표준 실시협약안」, 2010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2011. 03.을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추진 유형에 따라 재정지출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추진 유형별 정부부담액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현재가, 불변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례분석을 위해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인 경찰병원의 정부부담액을 비교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사업추진 유형별 경찰병원 정부부담액은 경상가와 현재가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업추진 유형별 경찰병원 정부부담액]

(단위: 억원)

구분	재정사업				PFI	
	일반		PSC ¹⁾			
	경상가	현재가	경상가	현재가	경상가	현재가
2024	12,928	11,542	-	-	-	-
2025	14,760	12,687	235	202	-	-
2026	6,484	5,363	1,203	995	2,158	1,785
2027	1,060	844	1,670	1,330	3,248	2,588
2028	1,073	823	1,682	1,290	3,259	2,500
2029	1,085	801	14,623	10,800	3,271	2,416
2030	1,097	780	16,232	11,543	3,283	2,335
2031	1,110	760	6,999	4,793	3,295	2,256
2032	1,122	740	1,122	740	3,307	2,180
2033	1,135	721	1,135	721	3,319	2,107
2034	1,148	702	1,148	702	3,332	2,036
2035	1,161	683	1,161	683	3,344	1,968
2036	1,174	665	1,174	665	3,357	1,902
2037	1,188	648	1,188	648	3,370	1,838
2038	1,201	631	1,201	631	3,383	1,777
2039	1,215	614	1,215	614	3,396	1,717
2040	1,229	598	1,229	598	3,409	1,660
2041	1,243	583	1,243	583	3,423	1,605
2042	1,257	567	1,257	567	3,436	1,551
2043	1,271	553	1,271	553	3,450	1,499
2044	1,286	538	1,286	538	3,464	1,450
2045	1,301	524	1,301	524	3,478	1,401
2046	435	173	435	173	1,161	462
합계	56,963	42,540	60,010	39,895	67,141	39,035

주: 1) PSC는 국고채 5년물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5년 후 상환한다는 가정으로 분석됨. 따라서 PSC 자금투입은 사업시행 5년 후에 집중됨.

2) 현재가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3.86% 적용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추가분석)」, 2022. 8.을 바탕으로 재작성

아래 [표]에 따르면, 정부부담액은 경상가를 기준으로 ‘일반재정사업 < PSC < PFI’이며, 현재가의 경우 ‘일반재정사업 > PSC > PFI’이다. 즉, 경상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일반재정사업’의 유형으로 경찰병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현재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PFI 방식이 합리적이다.

[사업추진 유형별 정부부담액의 경상가 및 불변가(경찰병원)]

(단위: 억원)

구분	일반재정사업		PSC		PFI
경상가	56,963	<	60,010	<	67,141
현재가	42,540	>	39,895	>	39,035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추가분석)」, 2022. 8.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현상은 할인율이 아래 [표]와 같이 ‘5년 만기 국고채’ 및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AA-’의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의2¹⁶⁾은 BTL 사업에 대한 재무적 할인율을 실질(불변) 2.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실질 할인율에 물가상승률을 더하여 3.86%을 경상 기준 재무적 할인율로 사용하였다.

[채권 수익률 및 할인율(경찰병원)]

(단위: %)

구분	5년 만기 국고채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AA-	할인율
금리	1.82	2.09	3.86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추가분석)」, 2022. 8.을 바탕으로 재작성

할인율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게 되면, 원금상환 시기가 늦어질수록 채권 조달비용

16)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의2(재무적 할인율) <신설 2018.3.29.>

① 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 판단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2.5%를 적용하고, 혼합형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형 부분은 4.5%, 임대형 부분은 2.5%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20.2.10.>

② 재무적 할인율은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할인율 조정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국가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의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따라서 VfM 분석과 같이 높은 할인율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 사업의 재원은 국고채 혹은 민간투자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PSC는 낮은 금리의 단기일시상환대출, PFI는 높은 금리의 장기분할상환대출과 유사하므로, 높은 할인율을 사용하여 높은 금리의 장기분할상환대출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¹⁷⁾

넷째, VfM 분석에서는 PSC 재원을 5년 만기 국고채로 조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발행되는 국고채의 만기가 다양화되고 차환을 통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PSC의 정부부담액 흐름을 5년 만기 원리금 상환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한 시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에서 PSC는 5년 만기 국고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을 해야 하지만, PFI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기간에 걸쳐 지출되는 정부부담액의 경상규모는 PFI가 PSC보다 높은 상황 이더라도 PFI에서 발생하는 현금지출흐름은 PSC에 비해 먼 미래에 발생하게 되므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때 소요되는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는 PFI가 PSC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2012년에는 아래 [표]와 같이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가 5.96년이었으므로, 5년 만기 국고채로 PSC 자금을 조달한다는 가정은 타당할 수 있었다.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기말기준)]

(단위: 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5.96	6.5	7.11	7.62	8.3	9.06	10.03	10.64	11.31	11.67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국채」, 2022.3, p.20.

그러나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1.67년에

17) 기획재정부는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의 적정수준을 성장률, 금리상황 등 경제변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적용 중인 BTL사업의 재무적 할인율은 2008년 이후 저금리 기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여 기준명목 6.0%→변경실질2.5%로 인하한 것으로, 최근 금리인상 기조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 재무적 할인율 수준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르고 있다. 장기 국고채 발행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장기 국고채 발행 잔액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PSC 자금을 5년 만기 국고채로 조달한다는 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채 발행 잔액]

(단위: 조 원,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년물 (비중)	-	-	-	-	-	-	-	12.5 (1.5)
3년물 (비중)	58.5 (13.3)	64.1 (13.2)	62.1 (12.0)	51.1 (9.3)	47.2 (8.3)	47.4 (7.8)	62.7 (8.6)	82.3 (9.8)
5년물 (비중)	103.0 (23.5)	110.7 (22.8)	108.0 (20.9)	109.5 (20.0)	104.2 (18.4)	99.3 (16.2)	109.1 (15.0)	117.7 (14.0)
10년물 (비중)	170.1 (38.8)	179.9 (37.1)	189.0 (36.6)	198.5 (36.3)	195.1 (34.4)	208.4 (34.1)	240.9 (33.1)	257.9 (30.6)
물가 (비중)	8.4 (1.9)	9.1 (1.9)	11.0 (2.1)	10.5 (1.9)	9.4 (1.7)	9.2 (1.5)	8.5 (1.2)	6.7 (0.8)
20년물 (비중)	77.2 (17.6)	88.1 (18.2)	98.2 (19.0)	108.3 (19.8)	117.5 (20.7)	124.8 (20.4)	136.7 (18.8)	145.3 (17.2)
30년물 (비중)	21.0 (4.8)	12.1 (11.1)	47.5 (9.2)	67.6 (12.4)	90.2 (15.9)	115.8 (18.9)	158.1 (21.8)	205.9 (24.4)
50년물 (비중)	-	-	1.1 (0.2)	1.3 (0.2)	3.4 (0.6)	6.7 (1.1)	10.8 (1.5)	15.4 (1.8)
계	438.3	485.1	516.9	546.7	567.0	611.5	726.8	843.7

자료: 기획재정부, 「2021 국채」, 2022.3, p.171.

또한 5년물 국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차환(refinancing)을 통해 원금 지급을 이연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 방안까지 고려하였을 때에는 PSC의 원리금 상환이 더 늦어지게 되므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PSC의 재원조달을 반드시 5년 만기 국고채로 하고 만기시 일시상환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PSC의 다양한 정부부담액 지출방식을 고려하여 VfM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¹⁸⁾

18) 기획재정부는 PFI의 경우 임대료 지급일정(20년 내외) 등을 감안해 장기상환을 가정하고 있으나, PSC는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기간이 평균 5년 내외이므로 실제 자금투입 일정 등을 감안시

나. VfM 분석 결과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업의 추진 적정성 검토 필요

VfM 분석 결과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측의 입장을 반영한 ‘민간투자 실행대안’¹⁹⁾을 구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VfM 분석에서 민간투자 적격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실행대안에 근거하여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BTL은 여수시 충무동, 한려동 등 동지역 일원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안은 1,244억원이며,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79,706m, 맨홀펌프장 30개소 및 배수설비 7,104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제안 BTL이다.

동 사업에 대한 KDI 공공투자센터의 VfM 분석결과에 따르면, PSC 정부지급금 현재가는 1,131억원, PFI 정부지급금 현재가는 1,206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VfM금액은 △75억원, VfM비율은 △6.62%로 민자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량적 VfM 결과와 정성적 VfM 결과를 종합할 때, 본 민간투자사업은 “민자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²⁰⁾

PSC 재원은 국고채 5년물을 통해 조달함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19)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2, p.120)에 따르면, ‘민간투자 실행대안’은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결과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작성된 ‘기준안’이다. 반면, VfM 분석에서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 실행대안은 주무관청이 향후 적정 사업규모를 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다.

2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021년도 제안서검토 보고서, 2022.8, p.268.

[VfM 분석 결과(여수시 하수관로정비 BTL)]

(단위: 백만원, %)

구분	PSC	PFI	비고
1. 국고채 발행액 대상(경상)	140,915	-	
2. 총 정부부담액(경상)	165,097	214,194	
액면상환액	140,915	-	
금융비용	8,487	-	
운영비용	15,695	-	
시설임대료	-	190,078	
운영비 부담금	-	24,781	
제세공과금	-	△665	
3. 총 정부부담액의 현재가	113,069	120,555	
4. VfM 금액		△7,485	(PSC-PFI)
5. VfM 비율		△6.62	(PSC-PFI)/PSC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021년도 제안서검토 보고서, 2022.8, p.263.

VfM 분석 결과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측의 입장을 반영한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²¹⁾ 그런데 여수시는 VfM 분석에서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감도 분석’²²⁾을 통하여 민간투자 적격성의 확보 가능성을 분석한 실행대안²³⁾에 근거하여 BTL 한도액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보고서에서 “민간투자 실행대안은 주무관청이 향후 적정 사업규모를 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

2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2년도 타당성분석 연구보고서, 2012.4, p.120.

22)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사업비, 운영비, 건설이자율을 변경하여 VfM이 확보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분석이다.

2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2년도 타당성분석 연구보고서, 2012.4, p.120.

고 있다.²⁴⁾ 따라서 실행대안에 근거하여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실행대안 마련 근거는 아래 [표]와 같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VfM 분석에서 적격성이 없는 경우에도 실행대안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행대안 마련 근거]

구분	적격성이 있을 경우	적격성이 없을 경우
민간투자법	×	×
민간투자법 시행령	○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	○
세부요령	○	○

자료: 관련 법률 및 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첫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는 실행대안 작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²⁵⁾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2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021년도 제안서검토 보고서, 2022.8, p.269.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실행대안 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BTL은 추진이 불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자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1,301억원으로 제안하였다.²⁶⁾ 그런데 동 사업의 BTL 한도액은 실행대안에 근거하여 산정된 1,244억원이다. BTL 한도액은 총사업비이므로, 제안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BTL 한도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동 사업이 BTL 한도액에 대한 국회 승인을 받아 추진된다면, 최초 민간제안서는 유효한 제안서로 보기 어렵다.

동법은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민간제안 총사업비가 한도액보다 클 경우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²⁷⁾

둘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행대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0항²⁸⁾은 주무관청이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여기서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

2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021년도 제안서검토 보고서, 2022.8. p.2.

27)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 제9조제6항에서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중이며, 시행령 제7조제8항은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중 하나로 전문기관의 제안서 검토 시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에 대한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민간투자법」 제9조제6항이 ‘민간투자 실행대안’에 대한 명확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더라도, ‘판례 2015다34444’에 따르면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9) 동 시행령 제7조제10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주무관청이 사업추진을 위한

른 내용'은 동 시행령 제7조제8항³⁰⁾의 실행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동 조항의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제2항제3호 및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2, p.120)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실행대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실행대안은 '사업추진 기준'이 아니라 '향후 사업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제2항제2호³¹⁾는 '적격성 판단'을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제2항제3호³²⁾는 '민간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였는데, 최초 제안자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제안내용이 공고내용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최초 제안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9조제4항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⑧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제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타당성분석)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2. 적격성 판단 :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3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타당성분석)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이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가능한 부대부속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 혹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실행대안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VfM 분석 결과에서 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에 따라 작성된 실행대안이 갖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이하 “세부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요령은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결과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측의 입장을 반영한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VfM 분석에서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실행대안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적격성의 확보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면서, 민간투자 실행대안은 주무관청이 향후 적정 사업규모를 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실행대안은 ‘사업추진 기준’이 아니라 ‘향후 사업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간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³⁾

33)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제2항제3호 및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2. p.120)에서 민간투자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실행대안이 ‘사업추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이 제시한 민간투자 실행대안 등을 기초자료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정 사업규모, 사용료, 수익률 등을 사업추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사업별 정량적 VfM 분석 재검토

사업별 정량적 VfM 분석을 재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BTL 한도액안 40개 사업들을 BTL로 추진시 정부부담액이 최대 3,175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정량적 VfM 분석³⁴⁾ 결과 외에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BTL 사업별로 한도액 승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 절에서 제시한 주요 검토사항들을 고려하여 2023년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들에 대한 VfM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VfM 분석을 위해 사용한 정부부담액 산정 재무모델이 필요하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동 재무모델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만을 활용하여 2023년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들에 대한 VfM을 재검토하였다.³⁵⁾

본 분석은 국고채 만기, PFI 적용률, PSC 낙찰률 및 재무적 할인율에 따른 VfM 민감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³⁶⁾에 대해 4가지 변수들의 적용 조건에 따른 VfM을 산정하였다. 4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사업별로 9개 Case를 분석하였다.

3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2, p.98.

적격성 판단은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량적 VfM 분석은 정부 입장에서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총비용을 현재가치화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정성적 VfM 분석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성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량적 VfM 분석 결과에 정성적 Vf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민간투자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35) 기획재정부는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이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VfM을 확보한 사업이며, PCS 낙찰률, 재무적할인율 등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상기 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36) 여수시 하수관로정비 BTL은 정부의 VfM 분석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업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023년 BTL 한도액안에 포함된 40개 사업들에 대한 VfM 분석 결과 합계]

(단위: 억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23,958	23,473	485	2.02
Case 1	국고채권(10년)			22,660	23,473	△813	△3.59
Case 2	국고채권(20년)			20,427	23,473	△3,046	△14.91
Case 3	○	×	×	23,958	23,558	400	1.67
Case 4	×	○	×	22,921	23,473	△551	△2.41
Case 5	×	×	○	28,813	30,646	△1,833	△6.36
Case 6	○	○	×	25,954	27,192	△1,238	△4.77
Case 7	○	×	○	28,813	30,760	△1,946	△6.76
Case 8	×	○	○	27,585	30,646	△3,061	△11.10
Case 9	○	○	○	27,585	30,760	△3,175	△11.51

주: 1) Case 1 : 정부안에서 국고채권(5년)만 국고채권(10년)으로 변경

2) Case 2 : 정부안에서 국고채권(5년)만 국고채권(20년)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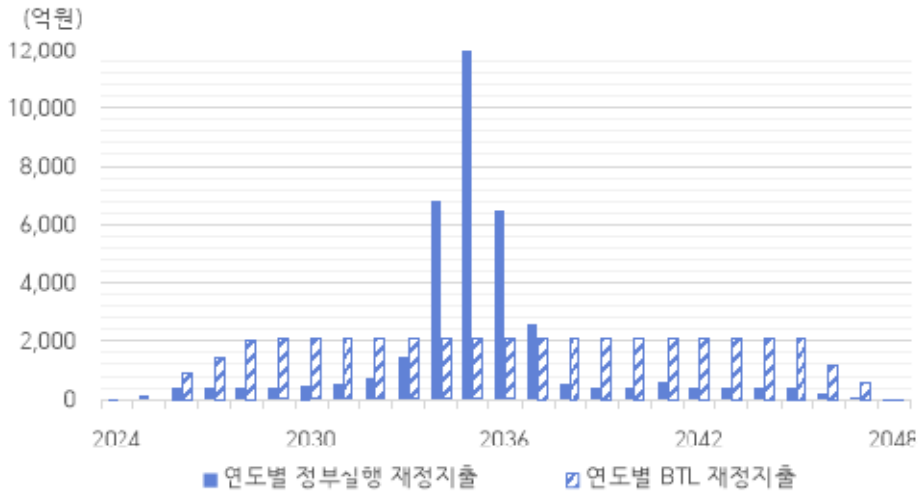
3) Case 3~9 : 정부안에서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을 변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정부는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을 BTL로 추진할 경우 현재가치 기준으로 485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VfM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PSC 재원조달 방식을 국고채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할 경우,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을 BTL로 추진한다면 재정지출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81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고채 20년물 조건에서는 재정지출이 3,046억원 증가한다. PFI 적용률, PSC 낙찰률 및 재무적 할인율을 수정할 경우, BTL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3,175억원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을 모두 추진할 경우, 연도별 PSC 및 PFI 정부부담액은 아래 [그림]과 같다. PSC 재원을 국고채 10년물로 조달할 경우, 2033년까지 정부부담액은 BTL로 추진할 경우 더 많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 추진에 따른 연도별 정부부담액]



주: PSC 재원은 국고채 10년물로 조달

자료: 2023년 BTL 한도액 사업별 적격성 분석 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사업별 정량적 VfM 분석을 재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BTL 한도액안 40개 사업들을 BTL로 추진시 정부부담액이 최대 3,175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33년까지 정부부담액은 BTL로 추진할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업별 정량적 VfM 분석에 적용된 변수값을 변경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2023년 BTL 사업별 한도액 승인 여부는 정량적 VfM 분석 결과 외에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국방부 소관 사업 VfM 분석 재검토

(1) VfM 재검토 기준

가. PFI 적용률

국방부는 PFI 적용률을 2010~2021년에 국방부가 고시하고 협약한 24개 BTL 사업의 고시금액 대비 평균 실시협약금액비율 97.86%로 채택하였다.³⁷⁾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인 2017년 이후 고시된 BTL 사업의 실시협약률 평균 99.03%를 PFI 적용률로 사용한다.

[2017년 이후 고시된 BTL 사업의 실시협약률]

(단위: %)

사업명	고시일	협약일	실시협약률
육군 고성 병영	'17.12.22	'18.11.28	99.50
육군 간성 병영	'17.12.22	'19.01.08	99.80
육군 광명·파주 병영	'18.12.22	'19.11.14	99.90
육군 고양·양주 병영	'18.12.27	'19.11.29	98.68
고성(18) 병영	'18.12.5	'19.11.29	99.96
육군 방공학교 교육	'19.12.27	'20.12.15	99.80
육군 문산·파주 병영	'20.12.23	'21.12.27	99.70
육군 춘천·화천 병영	'20.12.23	'21.12.27	93.00
육군 구미·진영 병영	'20.12.23	'21.12.27	99.98
육군 3사관학교 교육	'20.12.23	'21.12.27	99.93
실시협약률 평균			99.03

자료: 국방부

3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 육군 논산 관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2022. 8, p.21.

나. PSC 낙찰률

국방부는 PSC 낙찰률을 2012년~2021년 국방부에서 집행한 유사 턴키시설 21개 사업의 실적자료 평균인 95.27%로 채택하였다.³⁸⁾

그러나 국방부는 2023년 한도액 대상 BTL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주방식을 종합심사제(추정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간이종합심사제(추정공사비 100~500억원 미만), 턴키(Turn Key)로 발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재정사업을 종합심사제로 발주할 경우, 종합심사제의 예상낙찰률은 86.98%이므로 PSC 공사비는 PFI 공사비보다 약 10% 낮아질 수 있다.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들의 가능한 발주방식 및 예상 낙찰률]

(단위: %)

구분	예상 낙찰률	비고
종합심사제	86.98	시설본부 건설계획과 자료
턴키방식	98.82	시설본부 민자사업과 자료
민자사업(BTL)	96.70	98.82%(턴키 낙찰률) × 97.86%(PFI적용률)

자료: 국방부

또한 최근 3년간 준공한 국방부 소관 건축공사의 총사업비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³⁹⁾ 낙찰률은 85.20%, 시공중 총사업비 증가율은 2.64%이다. 낙찰률과 총사업비 증가율을 합하여도 87.84% 수준이다. 따라서 PSC 낙찰률은 종합심사제 입찰방식을 적용한 낙찰률 87.84%로 설정하여, VfM 분석을 수행한다.

3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 육군 논산 관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2022. 8, p.21.

39) 부대개편1차(52사단 개편)은 시공중 총사업비 증가율이 △24.25%로 극단 값을 보이므로, PSC 낙찰률 산정 자료에서 제외

[최근 3년간 준공한 건축공사 총사업비 관리 현황(국방부)]

(단위: %)

사업명	사업유형	낙찰률	시공중 총사업비 증가율
국군수도병원 보강	리모델링	85.20	0.28
작전지휘부 시설교체(서울)	작전시설	79.92	4.93
작전지휘부 시설교체(강릉)	작전시설	80.74	3.21
703특공연대 관사 신축	주거시설	83.28	5.79
26사단 관사신축(캠프남블)	주거시설	82.49	1.03
3군단 직할부대 관사 신축	주거시설	84.64	2.97
11사단 관사 신축	주거시설	80.86	10.05
21사단(2사단) 관사 신축	주거시설	81.82	6.28
18년 착수 관사 신축(육군 12사단)	주거시설	85.07	17.87
18년 착수 관사 신축(해병대 9여단)	주거시설	85.71	0.93
부대개편1차(52사단 개편)	업무시설	94.10	△24.25
부대개편1차(55사단 개편)	업무시설	85.41	2.28
부대개편2차(51사단 167여단)	업무시설	84.77	7.12
부대개편2차(56사단 219여단)	업무시설	81.59	1.33
부대개편2차(특임여단)	업무시설	103.25	△14.34
오산기지영외탄약고이전	저장시설	87.80	6.25
부대개편3차(51사단 168여단)	업무시설	74.06	0.00
부대개편3차(홍천병원)	의료시설	102.05	△11.07
부대개편3차(3군지여단총포차량정비대대)	업무시설	85.03	2.62
평균(부대개편1차(52사단 개편) 제외)		85.20	2.64

자료: 국방부

다. 재무적 할인율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2-123호)은 VfM 분석을 위해 PSC과 PFI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고,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BTL의 경우 2.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불가상승률을 반영한 재무적 명목 할인율로 3.86%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05)는 최근 수 년간 5년 만기 국채유통수익율의 평균수준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을 할인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재무적 명목할인율을 국방부가 제시한 국고채 5년물 이자율 1.82%⁴⁰⁾에 아래 [표]의 장기프리미엄 평균 0.225%(C-A)을 가산한 2.045%로 설정한다.⁴¹⁾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평균)]

(단위, %, %p)

구분	국고채권 5년(A)	국고채권 10년(B)	A-B	국고채권 20년(C)	C-A
평균	1.985	2.185	0.200	2.210	0.225
2022	3.077	3.159	0.082	3.119	0.042
2021	1.719	2.067	0.348	2.135	0.416
2020	1.233	1.499	0.266	1.610	0.377
2019	1.589	1.700	0.111	1.711	0.122
2018	2.308	2.502	0.194	2.477	0.169

자료: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http://ktbinfo.or.kr/>>

40) 각 사업별 VfM 분석은 국고채 5년물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4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BTL『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2005.12, p.110.

최근 수 년간 5년 만기 국채유통수익율의 평균수준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을 할인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분석 결과

본 분석은 국고채 만기, PFI 적용률, PSC 낙찰률 및 재무적 할인율에 따른 VfM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에 대해 4가지 변수들의 적용 조건에 따른 VfM을 산정하였다. 4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사업별로 9개 Case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아래 [표]와 같다.

[VfM 분석 재검토 기준(국방부)]

(단위: %)

구분	정부안	국회예산정책처안
PSC 자금조달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PFI 적용률	97.86 (‘10~’21년 평균)	99.03 (최근 5년 평균)
PSC 낙찰률	95.27 (‘12~’21년 평균 턴키 낙찰률)	87.84 (종합심사제 예상 낙찰률)
할인율	3.86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2.045 (국고채 5년물 이자율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

① 태능 교육시설

태능 교육시설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에 교육관(1동), 교육생 숙소(1동), 다목적체육관(1동) 합계(3동) 연면적 21,606㎡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730억원이다.

국방부는 교육생 생활관 노후화 정도 및 문제점으로 ❶ 1971년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화로 인한 외벽 균열 등 안전 문제, ❷ 난방시설, 배관 노후로 열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❸ 여성 생도 수 증가에 따른 여성 필수시설 부족의 문제점을, 을지강당(문화예술관)은 ❶ 1973년 신축 이후 49년 경과하여 시설물 유지보수가 지속발생하고, ❷ 환기설비 기능 저하로 공연 시 관람객 불편 초래, 음향효과 저하, ❸ 무대조명설비 노후에 따른 행사 간 제한 사항 발생 등의 문제점을, 종합체육관(관창체육관) 시설은 1966년

기증받은 시설로서 내부 바닥재 파손과 등기구, 냉난방시스템, 위생시설 등 노후에 따른 보수 소요 지속 발생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본 사업시설 노후화 정도에 따른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본 시설들은 신축 후 50년여 경과되었음을 감안할 시, 신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342백만원(VfM 비율 0.48%)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9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338~△12,813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71,442	71,100	342	0.48
Case 1	국고채권(10년)			67,099	71,100	△4,001	△5.96
Case 2	국고채권(20년)			59,784	71,100	△11,316	△18.93
Case 3	○	×	×	71,442	71,780	△338	△0.47
Case 4	×	○	×	66,677	71,100	△4,423	△6.63
Case 5	×	×	○	83,947	90,297	△6,350	△7.56
Case 6	○	○	×	66,677	71,780	△5,103	△7.65
Case 7	○	×	○	83,947	91,191	△7,244	△8.63
Case 8	×	○	○	78,378	90,297	△11,919	△15.21
Case 9	○	○	○	78,378	91,191	△12,813	△16.35

② 장성 교육시설

육군 장성 교육시설(상무대) BTL 사업은 특기병생활관(기갑, 화생방, 공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BTL 한도액은 480억원이다. 동 사업은 교육·병영시설문화 개선의 국방부 정책결정에 따라 전문 기술병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군 고효율화를 도모하고, 숙련된 기술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375백만원(VfM 비율 0.78%)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9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72~△8,972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48,039	47,664	375	0.78
Case 1	국고채권(10년)			45,168	47,664	△2,496	△5.53
Case 2	국고채권(20년)			40,338	47,664	△7,326	△18.16
Case 3	○	×	×	48,039	48,111	△72	△0.15
Case 4	×	○	×	44,914	47,664	△2,750	△6.12
Case 5	×	×	○	57,184	61,873	△4,689	△8.20
Case 6	○	○	×	44,914	48,111	△3,196	△7.12
Case 7	○	×	○	57,184	62,468	△5,284	△9.24
Case 8	×	○	○	53,496	61,873	△8,377	△15.66
Case 9	○	○	○	53,496	62,468	△8,972	△16.77

③ 서화천 관사/간부숙소

동 사업은 2022년 부대개편계획에 따라 15사단 영내 관사 90세대 및 간부숙소 190실을 신축하여 부족한 주거시설 해소와 전방지역 군인가족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463억원이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16,223㎡(관사 8,936㎡, 간부숙소 7,287㎡)이다. 국방부는 2021년말 기준으로 노후·협소·부족한 관사는 총 217세대이며, 노후·협소·부족한 간부숙소는 총 255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290백만원(VfM 비율 0.63%)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9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36~△8,726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46,077	45,787	290	0.63
Case 1	국고채권(10년)			43,315	45,787	△2,472	△5.71
Case 2	국고채권(20년)			38,667	45,787	△7,120	△18.41
Case 3	○	×	×	46,077	46,213	△136	△0.30
Case 4	×	○	×	43,072	45,787	△2,715	△6.30
Case 5	×	×	○	55,013	59,604	△4,591	△8.34
Case 6	○	○	×	43,072	46,213	△3,142	△7.29
Case 7	○	×	○	55,013	60,178	△5,166	△9.39
Case 8	×	○	○	51,453	59,604	△8,151	△15.84
Case 9	○	○	○	51,453	60,178	△8,726	△16.96

④ 동화천 간부숙소

동 사업은 간부숙소 2동 720실 및 지하 주차장 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BTL 한도액은 903억원이다. 국방부는 2022년 부대개편에 따라 2,391실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현재 1,484실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상 907실이 부족하다고 제시하면서 2023년~2027년 기간 동안 720실 확보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1년 현재 간부 숙소 부족으로 월세 및 2인실에 3인이 거주하고 있는 현황과 열악한 전방 근무자들의 현황⁴²⁾을 제시하며, 간부 숙소 신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686백만원(VfM 비율 0.77%)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9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60~△17,16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88,587	87,901	686	0.77
Case 1	국고채권(10년)			83,202	87,901	△4,699	△5.65
Case 2	국고채권(20년)			74,131	87,901	△13,770	△18.57
Case 3	○	×	×	88,587	88,747	△160	△0.18
Case 4	×	○	×	82,675	87,901	△5,226	△6.32
Case 5	×	×	○	106,112	115,104	△8,992	△8.47
Case 6	○	○	×	82,675	88,747	△6,072	△7.34
Case 7	○	×	○	106,112	116,239	△10,127	△9.54
Case 8	×	○	○	99,075	115,104	△16,029	△16.18
Case 9	○	○	○	99,075	116,239	△17,164	△17.32

42) 개인 숙소가 없어 개인 사물 보관 장소 부재, 작전 후 퇴근, 휴가 시 동료 숙소, 숙박업소에서 휴식을 취함, 전방지역에 가족이사 회피로 기혼 별거 간부 증가 등

⑤ 부평 관사

동 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관사 36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BTL 한도액 안은 936억원이다. 국방부는 최근 인천지역의 전세시세 폭등(4년 평균 1.26억원 상승)으로 간부들의 경제적 부담(개인부담 평균 월 448,443원)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관사(893세대)가 전용면적 79㎡ 미만의 협소시설이며, 협소관사 중 모든 부대개편이 완료되는 2026년 기준 669세대는 건립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이므로, 동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1,065백만원(VfM 비율 1.12%)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9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70~△17,636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95,160	94,095	1,065	1.12
Case 1	국고채권(10년)			89,567	94,095	△4,528	△5.06
Case 2	국고채권(20년)			80,144	94,095	△13,951	△17.41
Case 3	○	×	×	95,160	94,990	170	0.18
Case 4	×	○	×	89,007	94,095	△5,088	△5.72
Case 5	×	×	○	114,510	123,634	△9,124	△7.97
Case 6	○	○	×	89,007	94,990	△5,983	△6.72
Case 7	○	×	○	114,510	124,814	△10,304	△9.00
Case 8	×	○	○	107,178	123,634	△16,456	△15.35
Case 9	○	○	○	107,178	124,814	△17,636	△16.45

⑥ 논산 관사

동 사업은 ‘국방개혁2.0 부대개편’ 관련 간부 정원 증가에 따른 부족한 관사를 신축하여 군 가족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군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며, BTL 한도액은 569억원이다. 2025년 기준으로 총 소요 세대수는 1,358세대이며, 기보유 1,206세대를 제외한 246세대가 부족 세대수이다. 그러나 기보유 1,206세대 중 노후 관사 158세대를 포함하면 404세대가 향후 개선에 소요 세대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427백만원(VfM 비율 0.74%)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9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00~△10,780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57,684	57,257	427	0.74
Case 1	국고채권(10년)			54,298	57,257	△2,959	△5.45
Case 2	국고채권(20년)			48,594	57,257	△8,663	△17.83
Case 3	○	×	×	57,684	57,784	△100	△0.17
Case 4	×	○	×	53,989	57,257	△3,268	△6.05
Case 5	×	×	○	69,200	74,879	△5,679	△8.21
Case 6	○	○	×	53,989	57,784	△3,795	△7.03
Case 7	○	×	○	69,200	75,587	△6,388	△9.23
Case 8	×	○	○	64,807	74,879	△10,071	△15.54
Case 9	○	○	○	64,807	75,587	△10,780	△16.63

⑦ 철원 간부숙소

본 사업은 부대개편이 완료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부족한 간부숙소를 확충하고, 노후·협소한 간부숙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805억 원이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894억원, 건축연면적은 24,662㎡(간부숙소 20,072㎡, 지하주차장 4,590㎡)이며, 수용인원은 610명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667백만원(VfM 비율 0.85%)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9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70~△15,23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78,239	77,572	667	0.85
Case 1	국고채권(10년)			73,499	77,572	△4,073	△5.54
Case 2	국고채권(20년)			65,519	77,572	△12,053	△18.40
Case 3	○	×	×	78,239	78,309	△70	△0.09
Case 4	×	○	×	73,043	77,572	△4,529	△6.20
Case 5	×	×	○	93,502	101,579	△8,077	△8.64
Case 6	○	○	×	73,043	78,309	△5,266	△7.21
Case 7	○	×	○	93,502	102,571	△9,068	△9.70
Case 8	×	○	○	87,336	101,579	△14,243	△16.31
Case 9	○	○	○	87,336	102,571	△15,234	△17.44

⑧ 유성 관사

본 사업은 기존 노후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간부(118세대 168명)와 그 가족의 근무여건 보장, 대전 권역의 숙소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BTL 한도액 안은 429억원이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5,673백만원, 건축연면적은 19,763㎡(9동/4층, 200세대)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417백만원(VfM 비율 0.95%)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9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3~△8,123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43,682	43,265	417	0.95
Case 1	국고채권(10년)			41,121	43,265	△2,144	△5.21
Case 2	국고채권(20년)			36,805	43,265	△6,460	△17.55
Case 3	○	×	×	43,682	43,669	13	0.03
Case 4	×	○	×	40,899	43,265	△2,366	△5.78
Case 5	×	×	○	52,576	56,847	△4,271	△8.12
Case 6	○	○	×	40,899	43,669	△2,770	△6.77
Case 7	○	×	○	52,576	57,381	△4,805	△9.14
Case 8	×	○	○	49,258	56,847	△7,588	△15.41
Case 9	○	○	○	49,258	57,381	△8,123	△16.49

나. 교육부 소관 사업 VfM 분석 재검토

(1) VfM 재검토 기준

가. PFI 적용률

교육부는 PFI 적용률을 2017~2021년까지 추진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 완료된 9개 사업의 고시액 대비 협약사업비 비율 97.87%로 채택하였다.⁴³⁾ 본 분석에서도 동일한 97.87%를 PFI 적용률로 사용한다.

[최근 5년간 BTL사업 PFI 적용률 산정근거(교육부)]

(단위: 억원, %)

연도	사업명	고시액	협약 총사업비	협약 비율
2016	전남대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125	125	99.76
	인천대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396	394	99.50
	강원대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324	314	96.91
2017	전북대 외 1교 생활관 리모델링 임대형 민자사업(BTL)	406	394	97.04
2019	강릉원주대 생활관 리모델링 임대형 민자사업(BTL)	239	229	95.82
2020	경북대학교 신축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454	441	97.00
	한국교원대학교 신축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473	473	99.92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428	407	95.00
	군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399	398	99.90
평균				97.87

자료: 교육부

4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 강원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 의견」, 2022. 8, p.23.

나. PSC 낙찰률

교육부는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의 공사비 낙찰률 적용기준 변경안(공공투자관리센터, 2014.7.)에 따라 PSC 낙찰률을 95.24%로 설정하였다.⁴⁴⁾

그러나 교육부는 2023년 한도액 대상 BTL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추정가격에 따라 입찰방식⁴⁵⁾으로 경쟁입찰, 적격심사, 종합심사 채택할 수 있으며, 공사비 규모별로 예상 낙찰률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공사비 규모별 예상 낙찰률(교육부)]

구분	예상 낙찰률
100억 미만	91% 수준
100억 이상 300억 미만	88% 수준
300억 이상	종합심사제가 적용으로 균형가격 (최상위, 최하위 제외 한 입찰 평균가격)에 근접한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로 사업별 낙찰율이 상이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률 분석결과 '21년~'22년 건축공사 평균 낙찰율은 88% 수준

자료: 교육부

또한 최근 3년간 준공한 교육부 소관 건축공사의 총사업비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낙찰률은 87.73%⁴⁶⁾, 시공중 총사업비 증가율은 1.79%이다. 낙찰률과 총사업비 증가율을 합하면 89.53% 수준이므로, 종합심사제 입찰방식을 적용한 PSC 낙찰률은 89.53%로 설정한다.

4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 강원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 의견」, 2022. 8, p.23.

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경기도교육청 수성고 외 2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2022.5, p.43.

45) 입찰방식 : 추정가격 300억 미만 (경쟁입찰, 적격심사) / 추정가격 300억 이상 (경쟁입찰, 종합심사)
- 최저가 낙찰은 2016년 이후 폐지됨

46) 국제컨벤션센터 신축 제외

[최근 3년간 준공한 건축공사 총사업비 관리 현황(교육부)]

(단위: %)

사업명	사업유형	낙찰률	시공중 총사업비 증가율
창조학술정보관 신축	도서관	87.07	2.62
국제컨벤션센터 신축	교육시설	81.82	28.40
디지털 도서관 신축	도서관	84.68	0.48
농업생명과학관 신축	강의동	89.71	6.56
융합교육정보관 개축	강의동	88.45	2.25
약학대학 재건축	약학관	88.14	1.79
미래도서관 신축	도서관	86.47	△0.87
글로벌교육스포츠센터 신축	체육관	89.46	1.52
창조융합연구동 신축	교양강의동	87.89	0.00
평균(국제컨벤션센터 신축 제외)		87.73	1.79

자료: 교육부

다. 재무적 할인율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2-123호)은 VfM 분석을 위해 PSC과 PFI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고,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BTL의 경우 2.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무적 명목 할인율로 3.86%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05)는 최근 수 년간 5년 만기 국채유통수익율의 평균수준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을 할인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재무적 명목할인율을 교육부가 제시한 국고채 5년물 이자율 1.82%에 장기프리미엄 0.225%를 가산한 2.045%로 설정한다.⁴⁷⁾

4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BTL『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2005.12, p.110.

최근 수 년간 5년 만기 국채유통수익율의 평균수준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을 할인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분석 결과(대학 기숙사, 시설개선)

본 분석은 국고채 만기, PFI 적용률, PSC 낙찰률 및 재무적 할인율에 따른 VfM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에 대해 4가지 변수들의 적용 조건에 따른 VfM을 산정하였다. 3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사업별로 5개 Case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아래 [표]와 같다.

[VfM 분석 재검토 기준(교육부)]

(단위: %)

구분	정부안	국회예산정책처안
PSC 자금조달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PFI 적용률	97.87 (‘17~’21년 평균)	좌동
PSC 낙찰률	95.24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7.)	89.53 (종합심사제 예상 낙찰률)
할인율	3.86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2.045 (국고채 5년물 이자율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

① 강원대(기숙사)

본 사업은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기숙사 확충을 통해 수용률을 제고하고, 노후된 기숙사 개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317억원이다. 기존 시설은 1개동으로 2인 1실 기준 326명 수용 가능(연면적 4,816.1㎡)하며, 강원대는 이를 300실(600명 수용 가능한 규모), 연면적 12,186㎡로 이전개축 하고자 한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586백만원(VfM 비율 1.39%)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891~△4,491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42,294	41,708	586	1.39
Case 1	국고채권(10년)		40,403	41,708	△1,305	△3.23
Case 2	국고채권(20년)		37,217	41,708	△4,491	△12.07
Case 3	○	×	40,817	41,708	△891	△2.18
Case 4	×	○	50,635	53,056	△2,421	△4.78
Case 5	○	○	48,918	53,056	△4,138	△8.46

② 전복대(기숙사)

동 사업은 비교적 최근 건립된 BTL 생활관과 본 검토 대상인 재정 생활관(평화관 (1988년 준공: 34년 경과) 등 3동) 간의 내부 시설 및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노후화된 기존 생활관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은 268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6,800㎡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601백만원(VfM 비율 1.61%)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642~△3,686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37,316	36,715	601	1.61
Case 1	국고채권(10년)		35,720	36,715	△995	△2.79
Case 2	국고채권(20년)		33,029	36,715	△3,686	△11.16
Case 3	○	×	36,073	36,715	△642	△1.78
Case 4	×	○	45,333	47,547	△2,214	△4.88
Case 5	○	○	43,876	47,547	△3,671	△8.37

③ 제주대(기숙사)

본 사업은 노후 생활관의 안정성 확보 및 사용불편 요소를 해소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은 221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2,005㎡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594백만원(VfM 비율 1.64%)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411~△2,938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36,243	35,649	594	1.64
Case 1	국고채권(10년)		34,927	35,649	△722	△2.07
Case 2	국고채권(20년)		32,711	35,649	△2,938	△8.98
Case 3	○	×	35,238	35,649	△411	△1.16
Case 4	×	○	43,934	45,385	△1,451	△3.30
Case 5	○	○	42,767	45,385	△2,618	△6.12

④ 충북대 외 1교(기숙사)

본 사업은 충북대 기숙사 신축 및 전주교육대학교 기숙사 개축사업이다. BTL 한도 액안은 342억원이며, 사업규모는 각각 연면적 7,308㎡, 5,796㎡이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은 오송캠퍼스로 이전하였으나, 학생 기숙시설이 없어 개신캠퍼스 생활관 이용 또는 오송 자취생활로 학생 불편이 심화되었다. 또한 의과대학 의예과가 오송캠퍼스로 추가 이전 예정으로 오송캠퍼스에서 정주하는 학생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 기숙 시설 신축이 필요하다.

개축 대상인 전주교육대학교의 명학관(1999년)은 2인 1실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23년 경과되었으며, 사생실 내 석면철거, LED전등 교체와 외관 치장벽돌보강을 하였으나, 식당동(1977년)에 명학관을 수평 증축하여 층고가 낮아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불가하고, 옥상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 수도배관 노후화로 인한 녹물 발생, 단열성능 저하 등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613백만원(VfM 비율 1.28%)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976~△4,852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47,985	47,372	613	1.28
Case 1	국고채권(10년)		45,948	47,372	△1,424	△3.10
Case 2	국고채권(20년)		42,520	47,372	△4,852	△11.41
Case 3	○	×	46,396	47,372	△976	△2.10
Case 4	×	○	57,646	60,278	△2,632	△4.57
Case 5	○	○	55,799	60,278	△4,479	△8.03

⑤ 전북대(시설개선)

동 사업은 전북대학교 체육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안은 447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9,600㎡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679백만원(VfM 비율 1.16%)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361~△6,472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58,717	58,038	679	1.16
Case 1	국고채권(10년)		56,051	58,038	△1,987	△3.55
Case 2	국고채권(20년)		51,566	58,038	△6,472	△12.55
Case 3	○	×	56,677	58,038	△1,361	△2.40
Case 4	×	○	71,542	75,345	△3,803	△5.32
Case 5	○	○	69,134	75,345	△6,211	△8.98

⑥ 전남대(시설개선)

동 사업은 현재 AI융합대학에는 3개학과(부)와 6개의 융합전공이 재학하고 있으나 향후 2년 이내로 교수 40명, 대학원생 100명, 학부생 800명 수준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인원을 수용할 공간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 액안은 255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0,200㎡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448백만원(VfM 비율 1.28%)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721~△3,61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34,883	34,435	448	1.28
Case 1	국고채권(10년)		33,368	34,435	△1,067	△3.20
Case 2	국고채권(20년)		30,821	34,435	△3,614	△11.72
Case 3	○	×	33,714	34,435	△721	△2.14
Case 4	×	○	41,946	43,934	△1,988	△4.74
Case 5	○	○	40,588	43,934	△3,346	△8.24

⑦ 경북대(시설개선)

본 사업은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을 개축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안은 365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기준으로 개축 12,005㎡, 철거 10,485㎡ 이다. 사회과학대학은 건물 노후화('83년) 및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2차례 부분적인 건물 신축('99, '10)으로 대처했으나, 열악한 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660백만원(VfM 비율 1.33%)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001~△5,177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49,603	48,943	660	1.33
Case 1	국고채권(10년)		47,425	48,943	△1,518	△3.20
Case 2	국고채권(20년)		43,766	48,943	△5,177	△11.83
Case 3	○	×	47,942	48,943	△1,001	△2.09
Case 4	×	○	59,445	62,263	△2,818	△4.74
Case 5	○	○	57,520	62,263	△4,744	△8.25

⑧ 부산대(시설개선)

본 사업은 양산캠퍼스 다목적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안은 254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0,000㎡이다. 현재 양산캠퍼스는 5개 대학(원)이 소재(의과대학, 간호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한전문대학원)하고 교수 550여명, 학생 2,800여명의 소속 규모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530백만원(VfM 비율 1.45%)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675~△3,53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36,573	36,043	530	1.45
Case 1	국고채권(10년)		35,058	36,043	△985	△2.81
Case 2	국고채권(20년)		32,509	36,043	△3,534	△10.87
Case 3	○	×	35,368	36,043	△675	△1.91
Case 4	×	○	44,004	45,874	△1,870	△4.25
Case 5	○	○	42,603	45,874	△3,271	△7.68

⑨ 부경대(시설개선)

본 사업은 학생회관을 증개축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은 345억원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기준으로 증개축 14,000㎡, 철거 11,491㎡이다.

부경대는 거점대학 수준의 학생 수에 비해 학생회관시설이 타 국립대학 대비 현저히 부족하지만, 기존 학생회관의 주변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 노후로 구조 안전의 확보가 어려워 수직·수평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 학생회관이 준공 30년 이상 경과하여 내외 균열, 외부마감재 탈락, 내부누수 등 시설노후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환경개선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640백만원(VfM 비율 1.36%)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927~△4,88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47,161	46,521	640	1.36
Case 1	국고채권(10년)		45,101	46,521	△1,420	△3.15
Case 2	국고채권(20년)		41,637	46,521	△4,884	△11.73
Case 3	○	×	45,594	46,521	△927	△2.03
Case 4	×	○	56,533	59,193	△2,659	△4.70
Case 5	○	○	54,715	59,193	△4,478	△8.18

⑩ 공주대(시설개선)

본 사업은 학생복지관을 증개축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안은 162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기준으로 증개축 6,500㎡, 철거 4,098㎡이다.

공주대는 학생복지관 및 글로벌인재관이 준공된 지 약 40년 경과되어 시설물의 빠른 노후화 진행으로 학생의 시설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생식당은 공주사범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1991년)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시설로 급식시설 현대화 및 확장이 절실하며, 학생 복지 제고를 위해 학생복지관 개축 추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357백만원(VfM 비율 1.72%)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371~△2,221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20,791	20,434	357	1.72
Case 1	국고채권(10년)		19,828	20,434	△606	△3.05
Case 2	국고채권(20년)		18,213	20,434	△2,221	△12.19
Case 3	○	×	20,063	20,434	△371	△1.85
Case 4	×	○	24,986	26,210	△1,224	△4.90
Case 5	○	○	24,140	26,210	△2,070	△8.58

⑪ 안동대(시설개선)

본 사업은 자연생명과학2호관, 인문학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은 211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기준으로 자연생명과학2호관 8,309㎡, 인문학관 5,236㎡이다.

안동대는 준공 후 30~40년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연구시설 기능 최적화 및 쾌적한 수업환경 제공, 시설 안전성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의 내구성 증진 및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수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442백만원(VfM 비율 1.50%)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477~△2,918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29,473	29,031	442	1.50
Case 1	국고채권(10년)		28,220	29,031	△811	△2.88
Case 2	국고채권(20년)		26,113	29,031	△2,918	△11.18
Case 3	○	×	28,554	29,031	△477	△1.67
Case 4	×	○	35,548	37,147	△1,599	△4.50
Case 5	○	○	34,479	37,147	△2,667	△7.74

⑫ 한국교통대(시설개선)

본 사업은 의왕캠퍼스 본관동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안은 130억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기준으로 증축 2,000㎡, 리모델링 4,604㎡이다.

한국교통대는 의왕캠퍼스 본관동이 1988년에 준공되어 34년 경과 된 노후 건축물로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AI·데이터공학부 조직개편 및 AI 교통응용전공 신설로 2022년부터 신입생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3,000㎡)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349백만원(VfM 비율 1.85%)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287~△1,765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18,906	18,557	349	1.85
Case 1	국고채권(10년)		18,088	18,557	△469	△2.59
Case 2	국고채권(20년)		16,792	18,557	△1,765	△10.51
Case 3	○	×	18,270	18,557	△287	△1.57
Case 4	×	○	22,904	23,882	△978	△4.27
Case 5	○	○	22,217	23,882	△1,665	△7.49

⑬ 서울과기대(시설개선)

본 사업은 하이테크관을 개축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안은 280억원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기준으로 개축 12,500㎡, 철거 8,300㎡이다.

서울과기대는 교원·대학원생 등 연구인력 증가 및 첨단·연구 활성화에 따른 신규 연구공간 확보 및 연구공간의 개선·표준화가 필요하므로,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증개축하여 공간 확보 및 미래지향적인 연구공간 확충 및 공동실험동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472백만원(VfM 비율 1.21%)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786~△3,995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38,862	38,390	472	1.21
Case 1	국고채권(10년)		37,196	38,390	△1,194	△3.21
Case 2	국고채권(20년)		34,395	38,390	△3,995	△11.61
Case 3	○	×	37,604	38,390	△786	△2.09
Case 4	×	○	46,955	49,258	△2,303	△4.90
Case 5	○	○	45,489	49,258	△3,768	△8.28

(4) 분석 결과(그린스마트)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은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전국 학교시설에 대하여 개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규격화된 학교공간을 재구조화, 미래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제로에너지 친환경 그린 학교 및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교를 결합한 융합형 뉴딜 방식의 미래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아래 [표]와 같다.

[VfM 분석 재검토 기준(교육부)]

(단위: %)

구분	정부안	국회예산정책처안
PSC 자금조달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PFI 적용률	97.87 (‘17~’21년 평균)	좌동
PSC 낙찰률	95.24 (공공투자관리센터, 2014.7.)	89.53 (종합심사제 예상 낙찰률)
할인율	3.86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2.045 (국고채 5년물 이자율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

① 서울 5교

본 사업은 서울에 위치한 대조초, 백운초, 양천초, 흑석초, 행당초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1,322억원이다. 동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대조초 외 2교’, ‘흑석초 외 1교’로 분리하여 시행되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각각 879백만원(VfM 비율 1.09%), 721백만원(VfM 비율 1.04%)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각각 △2,393~△10,391백만원, △2,150~△9,15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대조초 외 2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80,663	79,784	879	1.09
Case 1	국고채권(10년)		76,462	79,784	△3,322	△4.34
Case 2	국고채권(20년)		69,393	79,784	△10,391	△14.97
Case 3	○	×	77,391	79,784	△2,393	△3.09
Case 4	×	○	95,471	101,419	△5,948	△6.23
Case 5	○	○	91,670	101,419	△9,749	△10.64

[VfM 분석 재검토 결과(흑석초 외 1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69,389	68,668	721	1.04
Case 1	국고채권(10년)		65,708	68,668	△2,960	△4.50
Case 2	국고채권(20년)		59,514	68,668	△9,154	△15.38
Case 3	○	×	66,518	68,668	△2,150	△3.23
Case 4	×	○	82,003	87,278	△5,275	△6.43
Case 5	○	○	78,667	87,278	△8,611	△10.95

② 부산 3교

본 사업은 부산에 위치한 부산서중, 사하중, 내성중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은 632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566백만원(VfM 비율 0.81%)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2,005~△9,541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69,671	69,105	566	0.81
Case 1	국고채권(10년)		65,903	69,105	△3,202	△4.86
Case 2	국고채권(20년)		59,564	69,105	△9,541	△16.02
Case 3	○	×	67,100	69,105	△2,005	△2.99
Case 4	×	○	82,218	87,825	△5,607	△6.82
Case 5	○	○	79,232	87,825	△8,592	△10.84

③ 대구 4교

본 사업은 대구에 위치한 대구화원초, 대구구지초, 대구소프트웨어마스터교, 대구효신초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412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482백만원(VfM 비율 1.01%)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425~△6,133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47,609	47,127	482	1.01
Case 1	국고채권(10년)		45,142	47,127	△1,985	△4.40
Case 2	국고채권(20년)		40,994	47,127	△6,133	△14.96
Case 3	○	×	45,702	47,127	△1,425	△3.12
Case 4	×	○	56,376	59,906	△3,530	△6.26
Case 5	○	○	54,163	59,906	△5,743	△10.60

④ 인천 1교

본 사업은 인천소방고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230 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215백만원(VfM 비율 0.85%)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664~△3,458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25,268	25,053	215	0.85
Case 1	국고채권(10년)		23,899	25,053	△1,154	△4.83
Case 2	국고채권(20년)		21,595	25,053	△3,458	△16.01
Case 3	○	×	24,389	25,053	△664	△2.72
Case 4	×	○	29,798	31,838	△2,040	△6.85
Case 5	○	○	28,777	31,838	△3,061	△10.64

⑤ 광주 1교

본 사업은 동운초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은 193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188백만원(VfM 비율 0.87%)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618~△2,897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21,701	21,513	188	0.87
Case 1	국고채권(10년)		20,551	21,513	△962	△4.68
Case 2	국고채권(20년)		18,616	21,513	△2,897	△15.56
Case 3	○	×	20,895	21,513	△618	△2.96
Case 4	×	○	25,658	27,352	△1,694	△6.60
Case 5	○	○	24,722	27,352	△2,630	△10.64

⑥ 대전 2교

본 사업은 대전충남여중, 대전와동초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은 230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268백만원(VfM 비율 1.08%)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679~△3,406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24,799	24,531	268	1.08
Case 1	국고채권(10년)		23,429	24,531	△1,102	△4.70
Case 2	국고채권(20년)		21,125	24,531	△3,406	△16.12
Case 3	○	×	23,852	24,531	△679	△2.85
Case 4	×	○	29,211	31,182	△1,971	△6.75
Case 5	○	○	28,112	31,182	△3,070	△10.92

⑦ 울산 1교

본 사업은 울산공업고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517 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461백만원(VfM 비율 0.82%)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543~△7,802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55,965	55,504	461	0.82
Case 1	국고채권(10년)		52,886	55,504	△2,618	△4.95
Case 2	국고채권(20년)		47,702	55,504	△7,802	△16.35
Case 3	○	×	53,961	55,504	△1,543	△2.86
Case 4	×	○	65,912	70,535	△4,623	△7.01
Case 5	○	○	63,582	70,535	△6,953	△10.94

⑧ 경기 6교

본 사업은 경기도에 위치한 수성고, 부천북초, 희망대초, 포천초, 관양중, 성남제일초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은 1,049억원이다. 동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수성고 외 2교’, ‘포천초 외 2교’로 분리하여 시행되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각각 674백만원(VfM 비율 0.99%), 563백만원(VfM 비율 1.09%)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각각 △2,103~△9,005백만원, △1,457~△6,532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수성고 외 2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68,268	67,594	674	0.99
Case 1	국고채권(10년)		64,660	67,594	△2,934	△4.54
Case 2	국고채권(20년)		58,589	67,594	△9,005	△15.37
Case 3	○	×	65,491	67,594	△2,103	△3.21
Case 4	×	○	80,700	85,915	△5,215	△6.46
Case 5	○	○	77,475	85,915	△8,440	△10.89

[VfM 분석 재검토 결과(포천초 외 2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51,737	51,174	563	1.09
Case 1	국고채권(10년)		49,093	51,174	△2,081	△4.24
Case 2	국고채권(20년)		44,642	51,174	△6,532	△14.63
Case 3	○	×	49,717	51,174	△1,457	△2.93
Case 4	×	○	61,321	65,054	△3,732	△6.09
Case 5	○	○	58,974	65,054	△6,079	△10.31

⑨ 강원 1교

본 사업은 강릉중앙고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220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211백만원(VfM 비율 0.91%)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728~△3,307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23,302	23,091	211	0.91
Case 1	국고채권(10년)		21,991	23,091	△1,100	△5.00
Case 2	국고채권(20년)		19,784	23,091	△3,307	△16.71
Case 3	○	×	22,363	23,091	△728	△3.25
Case 4	×	○	27,411	29,334	△1,922	△7.01
Case 5	○	○	26,320	29,334	△3,014	△11.45

⑩ 충북 1교

본 사업은 충주성남초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174 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169백만원(VfM 비율 0.90%)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569~△2,608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18,688	18,519	169	0.90
Case 1	국고채권(10년)		17,652	18,519	△867	△4.91
Case 2	국고채권(20년)		15,911	18,519	△2,608	△16.39
Case 3	○	×	17,950	18,519	△569	△3.17
Case 4	×	○	22,012	23,535	△1,522	△6.92
Case 5	○	○	21,157	23,535	△2,378	△11.24

⑪ 충남 3교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연무대기계공고, 논산동성초, 당진고에 대한 그린스 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529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943백만원(VfM 비율 1.45%)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415~△7,52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65,253	64,310	943	1.45
Case 1	국고채권(10년)		62,098	64,310	△2,212	△3.56
Case 2	국고채권(20년)		56,786	64,310	△7,524	△13.25
Case 3	○	×	62,895	64,310	△1,415	△2.25
Case 4	×	○	77,649	81,776	△4,127	△5.31
Case 5	○	○	74,909	81,776	△6,867	△9.17

⑫ 전북 2교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덕진중, 영광중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229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252백만원(VfM 비율 1.04%)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726~△3,418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24,234	23,982	252	1.04
Case 1	국고채권(10년)		22,866	23,982	△1,116	△4.88
Case 2	국고채권(20년)		20,564	23,982	△3,418	△16.62
Case 3	○	×	23,256	23,982	△726	△3.12
Case 4	×	○	28,473	30,464	△1,991	△6.99
Case 5	○	○	27,337	30,464	△3,127	△11.44

⑬ 전남 5교(578)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순천여고, 소라초, 여수미평초, 목포서부초, 무안중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은 578억원이다. 동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순천여고 외 2교', '목포서부초 외 1교'로 분리하여 시행되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각각 456백만원(VfM 비율 1.15%), 291백만원(VfM 비율 1.30%)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각각 △1,025~△5,547백만원, △627~△2,95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순천여고 외 2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39,680	39,224	456	1.15
Case 1	국고채권(10년)		37,442	39,224	△1,782	△4.76
Case 2	국고채권(20년)		33,677	39,224	△5,547	△16.47
Case 3	○	×	38,199	39,224	△1,025	△2.68
Case 4	×	○	46,610	49,846	△3,236	△6.94
Case 5	○	○	44,891	49,846	△4,955	△11.04

[VfM 분석 재검토 결과(목포서부초 외 1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22,383	22,092	291	1.30
Case 1	국고채권(10년)		21,173	22,092	△919	△4.34
Case 2	국고채권(20년)		19,138	22,092	△2,954	△15.43
Case 3	○	×	21,465	22,092	△627	△2.92
Case 4	×	○	26,410	28,084	△1,674	△6.34
Case 5	○	○	25,344	28,084	△2,740	△10.81

⑭ 경북 4교(689)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 위치한 양학초, 안동서부초, 영주제일고, 영주여중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689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583백만원(VfM 비율 0.82%)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2,070~△10,435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70,744	70,161	583	0.82
Case 1	국고채권(10년)		66,638	70,161	△3,523	△5.29
Case 2	국고채권(20년)		59,726	70,161	△10,435	△17.47
Case 3	○	×	68,091	70,161	△2,070	△3.04
Case 4	×	○	82,938	89,138	△6,200	△7.48
Case 5	○	○	79,855	89,138	△9,282	△11.62

⑮ 경남 5교(574)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문선초, 회원초, 덕찬초, 함포초, 양학초, 반성중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며, BTL 한도액안은 574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605백만원(VfM 비율 0.97%)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402~△8,577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62,658	62,053	605	0.97
Case 1	국고채권(10년)		59,236	62,053	△2,817	△4.76
Case 2	국고채권(20년)		53,476	62,053	△8,577	△16.04
Case 3	○	×	60,651	62,053	△1,402	△2.31
Case 4	×	○	73,833	78,857	△5,024	△6.80
Case 5	○	○	71,502	78,857	△7,355	△10.29

다. 환경부 소관 사업

(1) VfM 재검토 기준

가. PFI 적용률

환경부 소관 BTL 한도액안 사업들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성된다. 민간제안사업은 창원, 여수, 의정부 사업이며, 동 사업들은 민간제안사업이므로 PFI 적용률 대신 민간제안 임대료를 사용한다. 대구 BTL 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이므로, 대구광역시 동 사업의 PFI 적용률을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평균 낙찰률(실시협약률) 93.98%로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⁴⁸⁾

그런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평균 낙찰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⁴⁹⁾ 본 분석에서도 자료 불충분으로 PFI 적용률을 93.98%로 사용한다.

나. PSC 낙찰률

지방자치단체들은 PSC 낙찰률을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의 공사비 낙찰률 적용기준 변경안(PIMAC, 2014.7.)에 따라 93.57%으로 채택하였다.⁵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은 2023년 한도액 대상 BTL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별 발주방식 및 예상 낙찰률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4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 대구광역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2022.6, p.5.

49)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 대구광역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2022.6, p.8.

5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 대구광역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의견」, 2022.6, p.15.

[2023년 BTL 한도액안 대상사업별 예상 낙찰률(환경부)]

지자체	사업명	발주방식	입찰방식	예상낙찰률
대구광역시	2023년 대구광역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일반입찰 또는 일괄입찰방식	경쟁입찰	87.5%
의정부시	2023년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일괄입찰방식	경쟁입찰	95.0%
여주시	2023년 여주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종합심사낙찰제	경쟁입찰	79.0%
창원시	창원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일괄입찰방식 또는 종합심사낙찰제	경쟁입찰	87.5%

주: 발주방식 및 입찰방식은 건설기술심의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상낙찰률은 타 발주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참여자의 투찰 가격 등에 따라 변동됨
자료: 환경부

최근 3년간 준공한 환경부 소관 건축공사의 총사업비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낙찰률은 85.66%⁵¹⁾, 시공중 총사업비 증가율은 2.29%이다. 낙찰률과 총사업비 증가율을 합하면 87.95% 수준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PSC 낙찰률을 87.95%로 설정한다.

51)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제외

[최근 3년간 준공한 상하수도사업 총사업비 관리 현황(환경부)]

(단위: %)

사업명(총사업비명)	사업유형	낙찰률	시공중 총사업비 증가율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	상하수도	89.00	1.76
구미권(Ⅰ)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상하수도	83.10	△6.12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상하수도	84.50	8.33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상하수도	86.00	21.76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상하수도	79.30	2.43
울산 회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상하수도	92.40	5.05
평균(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제외)		85.66	2.29

자료: 환경부

다. 재무적 할인율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2-123호)은 VfM 분석을 위해 PSC과 PFI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고,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BTL의 경우 2.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무적 명목 할인율로 3.86%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05)는 최근 수 년간 5년 만기 국채유통수익율의 평균수준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을 할인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⁵²⁾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재무적 명목할인율을 사업별로 제시된 국고채 5년물 이자율에 장기프리미엄 0.225%를 가산하여 설정한다.

5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BTL『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2005.12, p.110.

최근 수 년간 5년 만기 국채유통수익율의 평균수준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을 할인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분석 결과

본 분석은 국고채 만기, PSC 낙찰률 및 재무적 할인율에 따른 VfM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에 대해 4가지 변수들의 적용 조건에 따른 VfM을 산정하였다. 4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사업별로 5개 Case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아래 [표]와 같다.

[VfM 분석 재검토 기준(환경부)]

(단위: %)

구분		정부안	국회예산정책처안
PSC 자금조달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PFI 적용률		93.98(대구)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평균 낙찰률) 민간제안(창원, 의정부, 여수)	좌동
PSC 낙찰률		93.57 (PIMAC, 2014.7.)	87.95 (최근 3년간 준공한 상하수도사업의 낙찰률 및 총사업비 증가율 합계)
할인율		창원, 여수 3.62(민간제안) 의정부 3.66(민간제안) 대구 3.86(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별로 제시된 국고채 5년물 이자율에 장기프리미엄 0.225%을 가산
	국고채 이자율	창원 1.29 대구 1.82 의정부 1.39 여수 1.21	좌동

자료: 사업별 적격성조사 및 검토의견 보고서

① 창원시 산업단지(민간제안사업)

본 사업은 창원국가산단과 마산자유무역지구, 봉암공업단지를 대상산단으로 하여 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수계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은 3,736억원이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제안방식 BTL이며, 사업규모는 완충저류시설 118,800㎡, 차집관로 41.2km, 펌프장 14개소 등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22,122백만원(VfM 비율 6.07%)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5,670~△45,049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364,644	342,522	22,122	6.07
Case 1	국고채권(10년)		339,638	342,522	△2,884	△0.85
Case 2	국고채권(20년)		297,473	342,522	△45,049	△15.14
Case 3	○	×	348,192	342,522	5,670	1.63
Case 4	×	○	456,943	474,027	△17,084	△3.74
Case 5	○	○	436,664	474,027	△37,363	△8.56

② 대구 하수관거

동 사업은 대구광역시 구,달서천 일원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 액안은 910억원이며,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89,083m, 배수설비 4,041개소, 유지관리 시스템 1식이다.

대구광역시는 구,달서천 일원이 공업지역에 인접한 합류식 주거지역으로, 달서천/북부 처리시설의 통합이전에 따른 용량 축소 등으로 인해 분류화 사업을 통한 불명수 저감, 유입 하수량 조정 등이 필요하며, 하수관 결함으로 관리기능 상실, 지반침하 발생, 토양 및 공공수역으로 공장폐수 유출이 우려되어 관로정비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4,292백만원(VfM 비율 4.74%)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239~△11,615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90,612	86,320	4,292	4.74
Case 1	국고채권(10년)		86,175	86,320	△145	△0.17
Case 2	국고채권(20년)		78,505	86,320	△7,815	△9.96
Case 3	○	×	86,081	86,320	△239	△0.28
Case 4	×	○	107,863	114,138	△6,275	△5.82
Case 5	○	○	102,522	114,138	△11,615	△11.33

③ 의정부 하수관거(민간제안사업)

본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녹양동, 기능동 일원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안은 1,128억원이며,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78,554m, 배수설비 7,658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제안 BTL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1,781백만원(VfM 비율 1.74%)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5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620~△22,557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102,325	100,544	1,781	1.74
Case 1	국고채권(10년)		97,640	100,544	△2,904	△2.97
Case 2	국고채권(20년)		85,132	100,544	△15,412	△18.10
Case 3	○	×	99,924	100,544	△620	△0.62
Case 4	×	○	124,955	144,274	△19,319	△15.46
Case 5	○	○	121,717	144,274	△22,557	△18.53

라. 경찰청 소관 사업 VfM 분석 재검토

(1) VfM 재검토 기준

가. PFI 적용률

경찰청은 PFI 적용률을 아래 [표]의 자료를 바탕으로 BTL 사업의 낙찰률(실시협약률) 평균인 96.37%로 설정하였다.⁵³⁾ 그러나 경찰청의 PFI 적용률은 최근 높아진 BTL 사업의 낙찰률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경찰청 소관 BTL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2019년에 99.9%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19년 경찰청 소관 BTL 사업의 평균 낙찰률 99.9%를 PFI 적용률로 사용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균 낙찰률, PFI 적용률]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학시설 (교육부)	평균 낙찰률	91.4	99.5	-			99.1	98.1	98.4	97.6	99.6	97.0	96.7		
	2020년 PFI 적용률	97.91% (최근 5년 2014~2018년까지 추진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기준 8개 사업 기준 평균)													
병영시설	평균 낙찰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9.1	89.9	98.1	95.5	96.5	-	-	84.6	96.5	99.6	96.7	-	99.5	
	2020년 PFI 적용률	95.18% (2009~2017년까지 추진된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기준 22개 사업 기준 평균)													
보육시설 (경찰청)	평균 낙찰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	-	-	-	-	-	-	99.8	-	-	-	-	99.9
	2020년 PFI 적용률	96.35% (2011~2015년 추진된 주요 국방, 교육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기준 평균)													

자료: 각 부처

5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 의견」, 2022.6, p.21.

나. PSC 낙찰률

경찰청은 PSC 낙찰률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업무 가이드 라인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의 공사비 낙찰률 적용 기준 변경안(2014.07)”에 따라 건축 낙찰률 95.24%를 적용 채택하였다.⁵⁴⁾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PSC 낙찰률로 국방부 사업에 적용한 종합심사제 예상 낙찰률 87.84%를 사용한다.

다. 재무적 할인율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2-123호)은 VfM 분석을 위해 PSC와 PFI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고,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BTL의 경우 2.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무적 명목 할인율로 3.86%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05)는 최근 수 년간 5년 만기 국채유통수익율의 평균수준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을 할인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재무적 명목할인율을 경찰청이 제시한 국고채 5년물 이자율 1.82%에 장기프리미엄 0.225%을 가산한 2.045%로 설정한다.⁵⁵⁾

5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분석에 대한 검토 의견」, 2022.6, p.21.

5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BTL『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2005.12, p.110.

최근 수 년간 5년 만기 국채유통수익율의 평균수준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을 할인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분석 결과

본 분석은 국고채 만기, PFI 적용률, PSC 낙찰률 및 재무적 할인율에 따른 VfM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 BTL 한도액안 사업들에 대해 4가지 변수들의 적용 조건에 따른 VfM을 산정하였다. 4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사업별로 9개 Case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아래 [표]와 같다.

[VfM 분석 재검토 기준(경찰청)]

(단위: %)

구분	정부안	국회예산정책처안
PSC 자금조달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PFI 적용률	96.37 (‘10~’21년 평균)	99.9 (최근 5년 평균)
PSC 낙찰률	95.24 (PIMAC 2014.07)	87.84 (국방부 기준 적용)
할인율	3.86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2.045 (국고채 5년물 이자율에 장기프리미엄을 가산)

경찰병원 사업은 의료연구복합센터 증축(연면적 11,956.1㎡)과 신·구별관 리모델링 (연면적 1,467.6㎡)을 통해 기존시설의 재배치 및 재활치료시설, 의학연구소,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등의 시설을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BTL 한도액안은 289억원이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VfM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 사업의 VfM을 860백만원(VfM 비율 2.16%)으로 분석하였으나, Case 1~9 분석 결과에서는 VfM이 101~△4,885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경찰청은 동 사업을 BTL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fM 분석 재검토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분석 기준 적용 여부			VfM(불변가)			
	PFI 적용률	PSC 낙찰률	할인율	PSC(A)	PFI(B)	A-B	(A-B)/A
정부안	-			39,895	39,035	860	2.16
Case 1	국고채권(10년)			38,175	39,035	△860	△2.25
Case 2	국고채권(20년)			35,289	39,035	△3,746	△10.61
Case 3	○	×	×	39,895	39,794	101	0.25
Case 4	×	○	×	38,153	39,035	△882	△2.31
Case 5	×	×	○	48,061	49,933	△1,872	△3.90
Case 6	○	○	×	38,153	39,794	△1,641	△4.30
Case 7	○	×	○	48,061	50,924	△2,863	△5.96
Case 8	×	○	○	46,039	49,933	△3,894	△8.46
Case 9	○	○	○	46,039	50,924	△4,885	△10.61

가. 현 황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이행 및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재원을 집중 배분하는 한편,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필수소요 충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출 재구조화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또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통·폐합, 제도 정비 등을 통한 사업규모 축소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중점과제에 재투자하는 재원의 재배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정부는 국채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존 예산으로 신규 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까지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고,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부터 정부는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한편, 2021년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역할을 확대함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강조되었다.

[정부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 추이]

구 분	주요 방향	제시규모
2015년도 예산안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 발굴(5년간 7조원 내외 재정 여력 추가 확보) - 유사중복 통폐합: 2015년 300개 이상 정비 추진	
2016년도 예산안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2016년 300여개 사업 통폐합을 통해 낭비요인 제거	연 2조원

구 분	주요 방향	제시규모
	-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우선순위 및 저성과 80여개 사업 예산 50% 이상 삭감 또는 폐지,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운용평가 실시 및성과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 등	
2017년도 예산안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사업, 성장동력 확충, 신규사업 소요 등에 재투자	
2018년도 예산안	◦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안정적 재정건전성 관리 - 차질없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자원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양적 지출 구조조정: zero-base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낭비성 지출 구조조정 - 질적 구조조정: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 등	△11.5조원
2019년도 예산안	◦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지출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조정 - 양적 지출구조조정 : 2018년 구조조정 사업 감액수준 유지(△10.4조원) 및 성과평가 결과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절감(△2.0조원) - 질적 지출구조조정: 「지출혁신 1.0」 33개 과제를 예산안 반영하고 재정혁신 추진을 위해 재정지출구조 전환 및 재정운용시스템 개선 추진(「지출혁신 2.0」)	△12.4조원
2020년도 예산안	◦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 - 내실 있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각 부처별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여 절감된 재원을 신규 중점 분야에 재투자	
2021년도 예산안	◦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전략적 자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투자 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조정하여 저순위 사업을 감축·폐지하고 한국판 뉴딜 등 중점분야에 재투자 - 관행적 보조사업 중 사업유지가 불필요한 사업 폐지·축소 -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의 경비 절감을 통한 고통분담	재량지출의 10% 수준
2022년도 예산안	◦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절감재원을 핵심사업에 재투자하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 -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감액하여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 등	△12조원 +α

자료: 각 연도 예산안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 기존 접근방식에서 나아가 “민간역량 활용 + 공공부문 효율화” 방향 아래 전략적으로 4대 유형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역량을 활용한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집행부진·성과점검 등을 통한 재정 투자 효율화, 코로나19 관련 한시지출의 정상화, 경상경비 절감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슬선수범으로 분류된다.

[2023년도 지출 재구조화 내용 및 주요 사례]

유 형	방향 및 주요 내용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①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 민간중심 전환 - (노인일자리) 단순노무 공공형 축소, 사회서비스·민간형 확대 - (창업지원) 정부·공공 직접 선정에서 민간·대학 참여 연계 확대
	② 정책금융 직접용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 민간 조달 가능 고신용층 직접용자는 이차보전 전환
	③ 산업·디지털 인프라, 민간시장 구축 방지 위해 선택과 집중 -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스마트공장 구축 민간주도로 전환
재정 투자 효율화	④ 현장의 실소요 점검 등 통한 지원 적정화 -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은 지원수준 적정화
	⑤ 여건변화 반영 등 투자중점 전환 및 우선순위 조정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식을 저감장치 부착에서 조기폐차로 전환
	⑥ 사업목적 달성 제고 위한 추진체계·지원방식 개편 - 일학습병행센터 중 기능중복인 센터들은 공동센터로 통폐합
한시지출 정상화	⑦ 코로나19 방역소요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상화
공공부문 슬선수범	⑧ 저성과 위원회 조직 정비 및 공공부문 고통분담 강화 - 재정수반 위원회(246개) 통폐합(통합 48개, 폐지 33개) - 장차관급 이상 10% 반납, 4급 이상 동결, 5급 이하 1.7% 인상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2022. 8.) 보도자료

나. 분석의견¹⁾

(1) 정부 - 민간 역할 재정립에 따른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창업사업을 민간·대학 참여 등을 통해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융자 대신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재원 조달을 확대 하며, 산업·디지털 인프라 여건이 성숙한 분야를 민간으로 전환하여 민간시장 구축을 방지하고자 하는 등 민간과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 - 민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출 재구조화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사업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기존 창업지원 사업중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를 구분하여 신설된 사업으로, 기존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내역사업간 구조를 복잡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²⁾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³⁾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7억원이 감액된 3,83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내역사업으로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동 사업내에서 예비창업자·창업초기기업·창업도약기업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을 신설한 이유로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 이하에서 분석한 대상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발표자료, 「2022~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선정·분류한 것이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10, pp. 229~232

3) 코드: 일반회계 5132-302

[2023년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73,689	432,824	432,824	383,110	△49,714	△11.5
·예비창업패키지	100,246	98,289	98,289	74,880	△23,409	△23.8%
·초기창업패키지	100,260	92,540	92,540	64,305	△28,235	△30.5%
·창업도약패키지	102,000	90,040	90,040	59,200	△30,840	△34.3%
·혁신분야창업패키지	135,000	136,050	136,050	101,395	△34,655	△25.5%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14,733	15,905	15,905	15,915	10	0.1%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21,450	0	0	0	0	0
·창업중심대학	0	0	0	67,415	67,415	순증

주: 1) 수정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현행 사업추진체계에 따르더라도 대학에서도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도 기존사업에 따라 대학이 주관기관으로서 지원하는 대학 발 창업기업 87개사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상 등 세부사업이 다양한 내역사업들로 추진되는 만큼 각 내역사업간의 차별화, 총괄 조정기능 마련 등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업력별로 지원하는 현 체계에서 주관기관별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사업의 체계화 측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금융 제공방식을 직접용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지출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용자사업의 일부가 이차보전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차보전 전환 대상사업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⁴⁾

2022년 동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액 직접융자 방식으로 공급되었으나, 2023년에는 신성장 기반자금 사업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Net-Zero 유망지원자금이 일부 이차보전으로 전환되었으며,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의 수출기업 글로벌화 사업이 전액 이차보전으로 전환되어 총 74억 5,500만원의 계획액으로 4,970억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3%p씩 보전할 계획이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계획 (A)	2023년					
		융자(B)	이차 보전 (C)	이차보전 공급량 (D)	공급 합계 (E=C+D)	비중 (D/E)	계획액 (F=B+C)
■ 신성장기반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990,000	845,000	1,200	80,000	925,000	8.6	846,200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600,000	535,000	1,200	80,000	615,000	13.0	536,200
- Net-Zero 유망기업자금	120,000	45,000	1,200	80,000	125,000	64.0	46,200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기업글로벌화	250,000	-	3,855	257,000	257,000	100.0	3,855
■ 합계	1,960,000	1,425,000	7,455	497,000	1,922,000		1,432,45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내 지원사업별로 동일하게 12억원의 이차보전 재원을 배정하여 각각 8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인데, 내역사업별로 자금의 전체 공급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대상기업 비중이 다르며⁵⁾, 혁신성장지원자금의 경우에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신용과 담보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 지원요건이 없는 일반적인 자금대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가능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차보전 공급량을 타 사업에 비해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10, pp. 202~211

5)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전체 자금공급규모의 8.6%가,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13.0%가, Net-Zero 유망기업자금의 경우 64.0%가 이차보전대상이 된다

한편, 수출기업글로벌화 사업의 경우 지원액 전액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유망한 기술을 가졌으나 민간 금융시장에서 선별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정책대상 기업의 신용도 수준에 따른 이차보전 전환목표 및 관련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② 국토교통부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⁶⁾에서 이전 연도의 사업비 편성추이와 여유자금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적정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중금리와 정책금리간의 차이만큼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직접 용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3,666억 200만원이 증액된 7,515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차보전 사업 예산안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A)	2023년 예산안(B)	B-A	(B-A)/A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4,753	23,824	19,071	401.2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취급분	117,381	191,083	73,702	62.8
디딤돌대출 은행 취급분	21,151	109,352	88,201	417.0
버팀목대출(중기취업임차보증금 제외) 은행 취급분	3,852	23,485	19,633	509.7
버팀목대출(중기취업임차보증금) 은행 취급분	237,839	400,065	162,226	68.2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은행 취급분	0	3,769	3,769	순증
계	384,976	751,578	366,602	95.2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1,903억원

6) 코드: 주택도시시기금 1042-401

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2. 10, pp. 92~96

규모였고, 2021년에 3,388억원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 계획안은 7,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95.2% 증액 편성하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23년도 계획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9조 6,876억원⁸⁾에 이르고 있어 자금 여력이 있다고 보인다.

[최근 5년간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계획액]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안)
사업비 ¹⁾	190,287	250,507	338,758	384,976	751,578
전년 대비 증가율	-	31.6	35.2	13.6	95.2

주: 1) 당초 계획안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이차보전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직접 용자방식과 유사한 규모의 정책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총지출 규모가 축소되어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장점은 있으나, 이차보전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지출로서 지속가능성이 낮고⁹⁾ 장기적으로는 이차보전액의 누적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즉, 이차보전액의 규모가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심사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③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은 2021~2022년 집행현황을 감안할 때 2023년 예산안 상 이차보전을 통한 용자규모 목표치가 과다하게 예측된 측면이 있다.¹⁰⁾

환경부의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¹¹⁾은 최신 방지사설 설치 촉진 및 효율적

8) 사업성기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규모가 정부 전체 기금 중 가장 규모가 크고, 2021년도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47.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전체 68개 기금 중 여유자금이 가장 크므로 동 기금에서 용자사업 용도로 지출할 자금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다.

9) 이차보전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용자 재원이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변경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비용으로 지출되어 장기적으로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속적인 재원의 보충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1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Ⅱ」, 2022. 10, pp. 124~129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1~2022년 동안 용자사업¹²⁾으로 진행되다가 2023년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차보전 사업 운영 시 적은 재정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에 용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며, 2022년 3월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교체를 위한 용자 수요조사¹³⁾ 결과에 따라 1,800억원(6개사*300억원) 용자 제공을 목표로 이차보전률 2%p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도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이차보전금(320-05) : 3,600백만원
· 6개사×30,000백만원 x2%(금리차) = 3,600백만원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21~2022년 용자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기업이 대출집행을 지연함에 따라 2021년 예산의 실집행률은 42.9%(2,000억원 중 857억원 집행), 2022년 9월 기준 예산 실집행률은 18.5%(1,100억원 중 204억원 집행)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한 해의 용자승인금액 및 대출집행액이 1,800억원을 초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14 내역사업

12) 17개 시중은행을 통한 담보대출방식으로 진행되며, 동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용자취급은행과의 사전상담을 선행(환경정책자금 용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제출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13) 참고로 2021년 동 사업의 지원가능 대상은 중소·중견 미세먼지 대량배출 사업자 중 시멘트업체 9개 사였으나, 2022년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정제품 제조업(대기업 포함) 4개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청정대기 전환 시설자금 사업 신청 및 지원내역(2021~2022.9)]

(단위: 억원, %)

연도	용자 신청 및 승인				자금 집행				이월액 실집행 (B)	누적 실집행 (A+B)
	신청 기업수	용자 신청금액	지원 기업수	용자 승인금액	예산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2021	5개 업장 (18개 설비)	1,191 (59.5)	5개 업장 (16개 설비)	1,143 (57.1)	2,000 (100.0)	857 (42.9)	28,435 (14.2)	85,907 (43.0)	257	1,113
2022.9	4개 업장 (9개 설비)	745 (67.7)	4개 업장 (9개 설비)	742 (67.7)	1,100 (100.0)	204 (18.5)	미정	미정	-	204

주: 1. 2022년 지원 기업 중 3개 기업은 2021년 신청 기업과 중복됨

2. 괄호 안은 각 해 예산 대비 비율임

자료: 환경부

또한, 동 사업의 2021년 이월예산 284억원¹⁴⁾ 및 2022년 예산 1,100억원으로 집행될 시 2023년의 실 수요는 584억원¹⁵⁾으로 산출된다. 즉, 2022년 3월 기준 용자 수요와 2021~2022년 진행 중인 동 용자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년 예산안 상 용자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재정 투자 효율화로 인한 정책 효과성 등 검토

정부는 사업별로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소요를 현장 수요 및 재정평가 결과 등을 통해 재점검하여 재정투자 규모를 적정화하고, 지출 효율화를 위해 투자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등 재정 투자 효율화를 통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재정 투자 효율화로 인해 정책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지, 적정 규모로 조정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21년도 이월 승인 건 총 11개사 28,388백만원 중 10개사가 25,657백만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1개 사가 2,731백만원을 포기하였다.

15) 1,968억원-284억원-1,100억원

첫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공제 플러스(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비해 기업의 기여비율을 낮추고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축소하였는데, 장기재직을 촉진하려는 제도 목적달성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시행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¹⁶⁾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18년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돈마련 정책으로 기업의 부담비율과 가입기간을 장기간인 5년으로 정하여 2018년 도입되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1년에 일몰되는 한시사업이었으나 2022년 1년 일몰연장되었고, 2023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공제 플러스” 사업을 설계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과 기업이 건의한 부분을 반영하여 청년재직자공제 플러스(안)의 가입대상을 축소하고, 가입기간과 적립금 규모도 축소하였다 또한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주체간 차등분담 구조에서 균등구조로 개편하면서, 청년재직자, 기업, 정부간 납입 비율이 변화하였다.

1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 10, pp.223~228

[청년재직자 공제제도 개편내용]

구 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공제 플러스(안)
가입대상	기업	중소·중견기업 (유흥업종 제외)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청년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15~34세)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15~34세)
가입기간		5년	3년
납입금액· 비율	청년재직자	720만원 (24%)	600만원 (33.3%)
	기업	1,200만원 (40%)	600만원 (33.3%)
	정부	1,080만원 (36%)	600만원 (33.3%)
적립금액		5년간 3,000만원 이상	3년간 1,800만원 이상
시행일		2018.6.1	2023년
사업기간		2022년 까지	2023년 부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청년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제도의 합목적성 달성에는 일부 저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할 핵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목적상 수혜자인 기업이 상당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에도 기업의 공제부금 부담률이 낮아지도록 계획하였다.

다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본 목적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되는 목돈을 기반으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입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입요건을 연 3,6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청년가입자의 연소득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 청년근로자 위주로 임금보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나, 본 사업의 취지가 유능한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높아 높은 임금을 받는 핵심 인력이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종합적으로, 청년재직자공제 플러스(안)은 이전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볼 때 사업 수혜자의 수용성을 높인 측면은 있으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 비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단일유형으로 개편함에 따라 사업효과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개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자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⁷⁾

고용노동부의 일경험프로그램은 2021~2022년에 2가지 유형(체험형, 인턴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체험형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직무의 폭이 좁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인턴형의 경우 참여자들이 원하는 기업으로의 매칭이 쉽지 않은 문제 등 현장의 수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23년에는 단일유형인 훈련연계형으로 개편될 예정이며, 수당구조는 참여자 1인당 최대 420만원, 기업은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급액 규모가 5배 커지는 것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일경험프로그램 및 수당 지급방식 개편 전후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체험형	인턴형	훈련연계형
목표인원	0.75만명	1.75만명	1.7만명
참여자 성격	실습생(참여협약)	근로자(근로계약)	실습생(참여협약)
운영내용	직무체험	직무수행	직무체험 外 현장체험, 과제 등 세부프로그램
지원방식	참여수당 (운영기관→참여자)	기업지원금 (운영기관→기업→참여자)	참여수당 (운영기관→참여자)
참여자수당	①체험형: 1일 2.2만원 × 최대 30일 (최대 66만원) ②인턴형: 기업지원금 191만원* × 최대 3개월 (최대 573만원) * 기업이 참여자에 임금 지급		140만원 × 최대 3개월 (최대 420만원) * 참여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이수여부는 상관 없음
멘토링수당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50만원 × 최대 3개월 (최대 1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사업운영방식 및 수당 지급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기업은 제공 과정과 무

1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2. 10, pp. 151~154

관하게 멘토링 수당 월 50만원을 받게 되며 참여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 실습생’으로 참여계약을 맺게 되므로, 직무수행보다는 직무체험 및 교육, 멘토링 등 관리가 용이한 과정을 제공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또한 기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출석)만 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매달 14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므로, 직무 실습 보다는 체험 위주의 과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인다.

즉, 일경험프로그램의 취지는 일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직무 수행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 과정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 취업촉진 지원과정이 아닌 수당 수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목적이 변질되어 사업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단일유형 개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여자 및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사업의 실제 수요에 근거한 지원규모가 여전히 과다한 측면이 있다.¹⁸⁾

정부는 전기차 대비 지원차종 및 충전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요가 낮은 측면을 고려하여 수소승용차 보급목표를 실수요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소승용차 보급 예산을 0.3조원 감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상 수소승용차 보급목표는 2022년 27,650대에서 2023년 16,000대로 감소한다. 그러나 2023년 수소승합차 700대, 수소화물차 100대, 수소청소차 120대 등¹⁹⁾ 전년대비 보급목표를 크게 증가하였다.

18)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2. 10, pp. 39~44

19)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차종별로 성능 및 주행거리 등을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소차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단일 차종에 지원되고 있어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물량	단가	물량	단가	
전기차	승용차	164,500	6	215,200	5	지자체·민간보조
	승합차	2,000	70	3,000	70	지자체보조
	화물차	41,000	14	48,000	14	지자체보조(소형)
				100	50	지자체보조(중형)
				7,000	14	민간보조(소형)
수소차	승용차	27,650	22.5	16,000	22.5	지자체보조
	승합차	300	150	400	210	저상(시내버스)
		40	200	300	260	고상(광역버스)
	화물차	6	250	100	250	지자체보조
	청소차	4	720	120	720	지자체보조

주: 1. 전기승용차는 지자체보조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 보급계획 대수를 합한 숫자임

2. 수소차는 2022년도 본예산 목표 기준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수소승용차 외에도 상대적으로 수소차의 보급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며 수소버스(저상, 고상)와 수소화물차, 수소폐기물청소차의 경우 상용화 초기 단계²⁰⁾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2023년 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인 바,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수소차 보급 예산 및 물량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 [수소차 출시(계획) 현황]

구분	승용	시내버스	광역버스	화물
사진				
차종명	넥쏘	일렉시티 FCEV	유니버스 FCEV	엑시언트
연료용량	6.3kg	35kg	35kg	42kg
주행거리	609km	474km	-	-
출시	'18년 3월	'19년(시범), '20년(양산)~	'22년 7월~	'21.11월(시범), '22.5월~(양산) '22.12월~(청소차, +특장)

자료: 환경부

넷째,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방식을 저감장치 부착에서 조기폐차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예산상 계획 물량과 실제 수요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고 사업 참여유인 또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²¹⁾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경유차 대상 저감장치부착(DPF) 지원 사업은 사업 여건 및 수요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물량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조기폐차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 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등급 경유차 지원 물량은 9만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지원 물량은 1만대 등 총 10만대를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및 2023년 조기폐차 지원 단가 및 대수]

(단위: 천원, 대)

구분	년도	지원 단가 (국비+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원율	지원대수
5등급 경유차	2022년	1,600	960	640	60%	340,000
	2023년	1,600	800	800	50%	250,000
4등급 경유차	2023년	4,000	2,000	2,000	50%	90,000
비도로용 건설기계	2023년	3,730	1,865	1,865	50%	10,000

자료: 환경부

그러나 실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출한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요청 대수는 64,210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참여요청 대수는 4,494대로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지원 물량과는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2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2. 10, pp. 17~22

[2023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단가 및 대수]

(단위: 대, 천원, %)

구분		4등급 경유차 운행대수 ¹⁾	시범사업 참여요청 대수 및 예산(국비)			
			신청대수	지원단가	전체예산	운행대수 대비 신청비율
4등급 경유차	총계	844,493	64,210	2,000	128,420,000	7.6
	수도권	323,846	32,200	2,000	64,400,000	9.9
	수도권 외	520,647	32,010	2,000	64,020,000	6.1
구분		건설기계 (‘04 이전) 운행대수	시범사업 참여요청 대수 및 예산(국비)			
			신청대수	지원단가	전체예산	운행대수 대비 신청비율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총계	85,854	4,494	1,865	8,381,310	5.2
	수도권	24,965	2,420	1,865	4,513,300	9.7
	수도권 외	60,889	2,074	1,865	3,868,010	3.4

주: 1) 4등급 경유차 운행대수는 2022년 5월 기준

자료: 환경부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²²⁾ 등에 근거하여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운행 제한을 비롯한 별도의 규제 조항이나 조기폐차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신청 또한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2023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지출의 정상화 달성 여부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적정수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지출규모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 중 질병관리청의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률 및 입원치료율 등을 파악하여 예산규모를 추가적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²³⁾

질병관리청의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²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²⁵⁾에 따라 1급 감염병 등 일부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격리입원 또는 재택치료 중인 내·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소요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959억 7,300만원이 감액된 13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2. 10, pp. 160~163

24) 코드: 일반회계 6131-303의 내역사업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2. 제42조에 따른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2023년도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감염병예방관리	5,334,986	78,166	863,581	27,307	△836,274	△96.8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59,413	23,988	809,425	13,452	△795,973	△98.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내감염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내국인이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받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²⁶⁾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 예산으로 확진자의 본인부담금 부분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지원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부분과 ‘건강공단부담금’ 부분을 더해 단가 산정을 높게 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 예산안

세부산출내역]

○ (내국인 치료비) 10,320백만원

= 10,000명(日 확진자) x 98%(내국인) x 5%(입원률) x 116천원 x 365일(1년) x 50%(보조율)

○ (외국인 치료비) 2,638백만원

= 10,000명(日 확진자) x 2%(외국인) x 5%(입원률) x 723천원 x 365일(1년)

자료: 질병관리청

그러나 국내 외국인 인구의 건강보험 가입비율이 63.2%에 달하고 있으므로 단가가 과도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다.²⁷⁾

26) 2022년 9월 기준 전액지원 국가는 56개국, 일부지원 국가는 57개국으로 2021년말 기준 전액지원 국가는 61개국, 일부지원 국가는 60개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7) 예산산출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중 63.2%는 공단에서 부담할 것이므로 11만 6,000원, 36.8%는 72만 3,000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면 되므로 가중평균하면 33만 9,000원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국내 외국인 인구	건강보험 가입자 수	비율
2021년	1,956,781	1,237,278	63.2

주: 2021년 말 기준, 등록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은 1,093,891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475,945명, 단기체류외국인은 386,945명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또한, 입원치료율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치료자 수의 비율인 5%를 내·외국인 동일하게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의 중증화율 및 사망률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령대별 입원률도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60세 이상 비율은 25.7%이나, 국내 외국인 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12.1%²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입원치료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입원치료율 및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감안하여 외국인 격리입원 치료비 예산을 감액²⁹⁾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4) 공공부문 솔선수범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

정부는 저성과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인건비·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재원 절감분을 더 마련할 수 있는바, 위원회 조직 정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위원회 정비계획상 폐지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23년도 예산안에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정부 내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단 및 특별대책위원회의 업무를 2023년 중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³⁰⁾

2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년 12월호

29) 재산정한 외국인 단가는 원래 산정한 단가의 47% 수준이므로 13억원 정도(△13억 3,800만원)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입원치료율을 감안하면 추가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말 현재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단순 자문 성격 등의 사유로 불필요한 246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총 27건의 일괄 개정 법률안³¹⁾을 제출(2022. 9. 30.)하였다. 정비 계획상 특별대책위원회는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대상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 미 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 예산도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은 특별대책위원회가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로 분류되어 폐지위원회로 선정되었으나 법률상 존속기간인 2024. 2. 14.까지 이므로 현 체제를 유지한 후 2024년에 연장없이 폐지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2022. 9. 2.)에 법률상 근거가 있더라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된 정부위원회 운영 예산은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³²⁾ 또한, 실제 2022년 특별대책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대면 회의 2회, 영상회의 2회, 서면회의 7회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특별대책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종합계획의 이행점검·평가와 관련된 분과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개최되는 등 심의를 위한 회의체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이 정부 내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기획단 및 특별대책위원회의 업무를 2023년 중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2022. 10, pp. 26~29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27건

32) 일례로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되어 개정안이 2022. 9. 30.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동 위원회 운영 예산은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되어 있다.

가. 현 황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¹⁾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결산심사 결과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7회계연도 1,833건에서 2018회계연도에 1,356건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2019회계연도와 2020회계연도에는 각각 1,667건과 1,88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1회계연도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비심사보고서 상의 시정요구건수는 총 1,274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022년 10월말 기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시정요구 건수가 더 추가될 수 있다.²⁾

국회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편성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결산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 내용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feedback)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사업의 문제점이 적기에 개선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거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4651)
이선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최해인 예산분석관(chi0121@assembly.go.kr, 6788-4648)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022년 10월 말 기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시정요구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심사 결과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정요구	1,833	1,356	1,667	1,881	1,274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함

2. 2021회계연도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시정요구 건수는 제외되었음

자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하 분석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분석한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은 총 270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① 집행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 ② 예산 추계 문제를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요구한 경우, ③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규모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④ 관련 법령 미비·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그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을 요구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1) 집행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을 시정요구한 경우

예산 편성 이후 사업 계획의 부실한 수립,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한 지연, 중복·유사 사업과의 충돌 등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과다한 이월, 불용 및 이·전용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집행 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한 경우는 총 6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주요 사업별 시정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연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기획재정부]						
대개도국 차관	관행적인 연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을 지양할 것	12896	12668	12556	13296	22.1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 여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 할 것	9,284	9,280	11,408	18,403	61.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	직매장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950	22258	31652	36683	15.9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비 실효성을 개선 필요 등 사업집 행에 차질 없도록 지도점검 주의	52190	51440	52571	26603	△46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향후 실소요액을 감안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	5,179	6,047	37835	58092	53.5

주: 2021, 2022 예산은 각각 제2회 추경예산(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2021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 소관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기저리의 차관 형태의 유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대개도국차관 세부사업 중 아시아차관과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 등의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사업규모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자체변경하는 등 부적절한 자체변경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 집행률이 저조한 세부사업의 집행률을 제고시키고, 관행적인 연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지양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럼에도 2023년 예산안에서 2022년 2차추경예산 대비 약 2,724억원(22.1%) 증액되었고, 특히 2021회계연도 기준 집행률이 낮은 내역사업들의 예산 증액 규모가 상당한 점은 국회의 지적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산 규모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행정안전부의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부산, 대전, 창원 등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의 기념건축물 건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사업의 실집행이 매우 부진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 점이 확인되어, 국회는 행정안전부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2022년의 경우에도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37.0%로 사업지연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2023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21개월 계획의 공사를 상당 기간 단축하여야 전액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실집행 부진이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각 사업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농촌사회적가치 확산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직매장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1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에서는 직매장 유형 중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센터의 실집행률이 15.7%로 나타나는 등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부터 복합센터 지원사업 공모 시 사업기간을 신청자가 선택하는 방식에서 2년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

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2.10., pp.44~51

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2.10., pp.52~55

으나, 예산안에 사업비의 연부율을 설정하지 않고, 신청자의 연차별 신청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역에 따라 2년차에 비해 1년차 사업비를 더 많이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차년도에는 주로 설계비가 집행되고 2021년 선정된 복합센터의 1차년도 사업 실행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면, 1년차 연부율을 2년차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연부율 조정이 필요하다.⁵⁾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2019~2021년의 사업비 실행행률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회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는 한편 실행행률 개선을 위해 사업기간 및 연부율 등을 현실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기존 연부율에 따른 예산액을 대부분 편성하였는데, 연내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행률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⁶⁾

국토교통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 신규노선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 집행이 부진한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행률을 제고하고, 향후 실소요액을 감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2022년 8월 말 기준 경기도로부터 국토교통부로 노선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노선 이관 및 준공영제 도입에 시일이 소요되어 실행행률이 여전히 부진하므로,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추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를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⁷⁾

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0., pp.39~43

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0., pp.87~93

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2.10., pp.126~132

(2) 예산 추계 문제를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시정요구한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거 실적 변화, 사업소요 증감, 외부 환경 변화 등 사전에 예상 가능하였던 요소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결과 부정확한 추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시정요구한 경우는 총 109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주요 사업별 시정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연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정운영 관리	정책연구비(260-02)의 적정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 및 불용 최소화 필요	200	24	500	500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교정시설 공공요금의 연례적 이·전용 등 완화 위해 지난 연도 공공요금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0293	11803	11200	11867	5.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 센터 운영	소비자 상담 감소 원인 파악, 예산 추 계의 정확성 제고,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필요	3,189	2,328	2,589	2,564	△1.0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클라우드 전환가능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물량을 대상으로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필요	57000	57000	17893	34293	△88

주: 2021, 2022 예산은 각각 제2회 추경예산(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2021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국정운영관리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 등 국정운영 수행평가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회운영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동 사업의 정책연구비(260-02목) 예산 집행이 12%만 이루어졌으므로, 예산 편성 시 적정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2023년도 국정운영관리 사업 예산안에 정책연구비는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평균적인 집행실적(최대 2억원 이하) 및 2022년 8월말 기준 집행액은 20.5%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⁸⁾

법무부의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은 수용자의 물품 구입비, 급식비 등 직접비용과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의 연례적·전용 및 예비비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지난 연도의 공공요금 단가와 사용량, 수용인원 추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용 문제를 완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2023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에 편성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 대비 64억 1,700만원 증액된 1,184억 3,700만원으로, 2022년도 예상 집행액 1,251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동 사업은 2022년도에 이어 2023년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이·전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사업은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피해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회 정부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비자 상담건수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여 불용액이 크게 발생(2021년 예산현액 29억 8,900만원 중 6억 6,100만원)하였으므로, 소비자 상담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25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상담실적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상담위탁 수당이 여전히 높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2년도 하반기 상담실적과 최근 연도 상담건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8)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2.10. pp.8~9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인 행정·공공기관 노후 장비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전에 사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2021년 계획(430개)대비 70.2%인 302개의 시스템만 전환되었으며, 부적절한 사업 설계로 인한 예산 불용에 유의하고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전환 가능한 적정물량을 대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444억원 감액된 34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1~2022년 미전환 물량이 다량 발생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있으므로, 사전조사 및 기관협의를 통해 확보된 실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연차별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¹⁰⁾

(3)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

예산 사용 규모에 비해 저조한 사업성과가 문제되어, 국회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는 총 1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주요 사업별 시정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연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법제체]						
법제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국민참여단 의견의 채택률 및 반영률이 저조하므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논 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 강구	1,383	1,300	1,493	1,380	△7.9

9)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2022.10, pp.79~82.

1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2.10, pp.32~34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환경부]						
수소차 보급	차종, 충전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한 실제 수소차 수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비 확보 여부와 수소차 출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5500	22010	4455	63400	39.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 운영방식과 집행상황 고려하여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13555	90324	11620	80382	△308

주: 2021, 2022 예산은 각각 제2회 추경예산(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2021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제처 소관 법제정비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인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입법예고안을 대상으로 쉬운 문장 및 용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법제처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부처에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법령안에 반영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21년에 국민참여단 의견 23,805건 중 207건만 법제처에서 채택되었고 법령에 124건 반영되어 반영률이 0.5%에 불과하므로, 법제처는 동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과 같은 사업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 사업의 지속여부 검토를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¹⁾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무공해 친환경차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21년 기준으

1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2.10., pp.105~107

로 수소버스의 실적이 저조(예산집행 45.8%, 차량보급 30.0%)하므로, 환경부는 실제 수소차 수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수소차 보급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788억 9,500만원 증액된 6,33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수요 부족 등으로 예산의 집행 및 실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여 왔으므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및 물량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²⁾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2021년에 체험형과 인턴형으로 운영되었는데, 체험형의 실적이 저조(예산집행 21.9%, 인원지원 28.8%)하고 인턴형은 제1회 추경에서 목표인원이 증원(6,000명→2만명)되면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운영방식과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에 운영방식을 단일유형(훈련연계형)으로 변경하고 전년 대비 358억 4,800만원 감액된 80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취업역량이 상이한 참여자를 단일유형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효과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개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자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³⁾

(4) 관련 법령 미비·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그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 또는 부족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발생하였거나, 예산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였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에 따라 국회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는 총 82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주요 사업별 시정요구 내용과 그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연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2.10., pp.39~44

1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2.10., pp.151~154

(단위: 백만원, %)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21년 청년정책 추진단 운영)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에 근 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3,065	3,535	4,113	9,243	124. 7
[보건복지부]						
취약지 등 전문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 운영 사업 의 예산의 적정 소요를 산출하여 편성할 것	1,595	320	934	1,168	25.1

주: 2021, 2022 예산은 각각 제2회 추경예산(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2021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은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은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¹⁴⁾

보건복지부의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법률 미비로 설계비가 전액 불용됨에 따라 예산의 적정 소요를 산출하여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예산안에 설계비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법안 소위 심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¹⁵⁾

14)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2.10., pp.22~25

15)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2.10., pp.77~81

참고자료. 2021회계연도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 중 예산조정 관련 유형별 건수(270건)

(1) 집행 과정상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 등을 시정요구한 경우(61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대통령경호처]						
총액 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업무우수직원 격려금을 최근 3년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5,692	5,257	5,766	6,319	9.6
[법무부]						
처내 형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편성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9,659	5,985	61,923	48,509	△21.7
외국인본부 기본경비(총액)	5급 승진시험 관련 예산의 연례적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것	675	584	663	663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연례적으로 집행실적 부진한 특정업무 경비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573	1,356	1,427	1,535	7.6
검찰청 시설운영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예산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70,057	72,058	74,095	82,424	11.2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소요기간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편성 필요	4,056	3,247	7,850	7,678	△2.2
보호관찰활동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을 현실화하여 편성하고, 예산 집행을 제고 필요	12,780	12,149	12,714	14,002	10.1
[감사원]						
감사활동 경비	연도말 계약 체결과 예산 이월 및 불용 문제 해소 위한 면밀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필요	20,162	20,162	17,509	17,078	△2.5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대법원]						
재판일반 경비지원	직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예산 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	42,770	40,654	39,799	40,376	1.4
국선 변호료지원	국선변호료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 행하고 적정 예산안을 편성할 것	61,567	58,133	61,000	65,329	7.1
[기획재정부]						
통일기반 조성	통일기반조성 연구용역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계획적으로 편성	907	435	875	808	△7.7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 계추진 (예비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집행 할 것	442	246	262	-	순감
대개도국 차관	관행적인 연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지 양할 것	1,258,196	1,226,668	1,230,556	1,502,976	22.1
[조달청]						
조달정보화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소요기간을 면 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29,005	29,089	27,818	26,608	△4.3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불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인건비 편성 필요	81,075	73,588	81,294	83,727	3.0
[교육부]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총 사업기간 내 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94,252	94,252	431,527	421,158	△2.4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66,900	166,900	127,500	127,500	-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방부]						
특수피복	하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02,100	162,396	210,509	245,949	16.8
증/특식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는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예산편성 기준 재정립 등 필요	136,787	123,060	157,627	151,797	△3.7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지원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도별 연부액을 설정하여 이월 최소화	20,026	16,284	178,945	128,939	△27.9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정책추진	포상금 집행시기를 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 등 필요	236	203	236	293	24.2
전자정부 국가간 협력강화 (정보화)	추가적인 이월이나 일정 변경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	4,264	4,264	4,252	5,628	32.4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운영 (정보화)	실제 소요, 집행 실적을 반영해 예산을 적정히 편성할 것	13,366	13,332	15,205	8,591	△43.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규모 사업 편성 후 실집행되지 못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 및 불필요 예산 편성 없도록 주의할 것	245,047	244,977	239,614	199,353	△16.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9,284	9,280	11,408	18,403	61.3
책임운영 기관제운영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 및 실집행을 고려한 정확한 예산 편성	447	416	462	462	-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경찰청]						
현장수사 활동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 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	1,656	682	3,528	3,528	-
도로교통 공단출연금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설립 예산을 집 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액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977	452	9,467	7,438	△2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관리 (내역사업)	향후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예산집 행 실적을 개선할 것	179	114	226	554	145.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광주 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	실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예산을 적절한 규모로 편성	1,142	571	9,673	9,586	△0.9
(총괄) 국고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개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 적극적 사업 추진 등 실집행률 개선	-	-	-	-	-
(총괄) 연말 집중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 예산 편성 및 집행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적 예산을 편성 및 집행	-	-	-	-	-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농림축산식품부]						
(총괄)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 대상 사업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재해대책비(용자), 축사시설 현대화,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용자), 원예시설현대화(용자),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반려동물인프라구축,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	-	-	-
(총괄) 추경 사업 집행 실적 제고 필요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의 예산 반영 및 집행 실적 제고 필요 대상 사업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지원 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	-	-	-	-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	직매장 지원 사업의 실효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950	22,258	31,652	36,683	15.9
[해양수산부]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연안정비)	매년 발생하고 있는 당해연도 예산액 수준의 이월액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	36,039	62,893	40,110	38,351	△4.4
마리나 항만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시 사전절차 대비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6,494	6,028	15,333	8,789	△42.7
어촌뉴딜 300	사업비 실효행률 개선 필요 등 사업집행에 차질 없도록 지도점검 주의	521,949	514,420	523,571	286,603	△45.3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평가를 보다 내실화할 것	707,799	707,799	840,956	937,563	11.5
킨텍스 3단계 건립	향후 총사업비 적정 반영 및 불필요한 추가 지연 지양	20,000	20,000	14,500	14,500	-
[특하청]						
해외국유 특허관리	관련 비용을 편성하여 미지급분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113	113	113	113	-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사업기간 지연 개선	실제 사업주기에 부합하도록 연도별 예산 액 조정	185,964	186,559	430,689	210,612	△95.2
소상공인 지원(융자)	기금 자체변경 시 연내 집행가능성 및 사업추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560,000	376,096	350,820	300,000	△14.5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향후 사업 소요 기간에 맞는 적정예산을 반영	15,000 24,200	15,000 24,200	15,500 500	29,530 6,100	90.3 1,120.0
중소기업모태 조합출자	자펀드 결성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 고, 향후 추경을 통한 예산증액은 연내 결정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107,000	107,000	520,000	313,500	△39.7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강화	실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상황이므로 예 산 편성 및 집행을 개선할 것	143,266	142,840	170,348	150,615	△11.6
의료기술 시험연수원 구축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	5,609	2,199	5,579	4,483	△19.6
재난치유 복합센터 건립 (내역사업)	적정 소요 기간을 산정 및 적정 사업비 규모를 검토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할 것	1,350	274	4,335	5,065	16.8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질병관리청]						
바이오위해 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R&D)	R&D 사업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이 가능한 만큼의 예산만 편 성	650	511	650	650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실질적 수요나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검 토하여 보급계획 물량을 현실화하고 예 산 규모를 조정	4,000	2,200	2,000	2,000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상 못한 사유로 사업 지연되는 경우 가 많아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 및 집 행관리 철저	17,301	9,461	5,357	5,058	△5.6
수열 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 및 사업관리 철저	5,040	805	1,100	7,740	603.6
[고용노동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내역사업)	향후 유사한 사업의 예산편성 시 관련 사업으로의 수요 분산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편성할 것	136,596	129,794	495,900	40,050	△91.9
해외취업 지원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 므로 적절한 예산 편성 필요	62,625	60,088	55,074	46,786	△15.0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토교통부]						
일반국도 건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절차를 충 분히 고려하여 예산 편성	1,415,102	1,289,877	1,367,571	1,406,307	4.3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보조금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31,400	23,520	21,000	13,600	△35.2
스마트 공동물류센 터건립지원	집행 가능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 성	5,870	4,000	3,025	2,740	△9.4
일반철도 건설	집행 가능성, 계획 수립 소요 기간 고 려한 적정 예산 편성	120,900	120,900	219,380	472,677	115.5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향후 실소요액을 감안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	5,179	6,047	37,835	58,092	5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체 건설사업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및 불필요한 이·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11,609	380,501	379,745	163,661	△56.9
정책 연구비	예산 편성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395	279	415	394	△5.1

주: 2021, 2022 예산은 각각 제2회 추경예산(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2021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예산 추계 문제를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시정요구한 경우(109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과거 수납실적 및 내역을 고려하여 추 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기타 경상이전 수입및 기타잡수입)	41	584	140	240	71.4
국정운영 관리	정책연구비(260-02)의 적정 소요를 면 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 및 불용 최소 화 필요	200	24	500	500	-
시설관리 및 개선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 공사의 감리비 등 필요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반영 필 요	6,563	5,936	4,793	5,171	7.9
[국회]						
전자도서관 운영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 확보 노력 필요	26,512	25,199	25,186	27,364	8.6
기관운영 기본경비	퇴직금 소요 예산의 정밀한 추계 필요, 과다 전용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406	1,358	1,773	1,884	6.3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법무부]						
국제형사 협력지원	국제기구 파견방식 변경에 따른 국제 부담금 규모의 변동을 고려한 예산 조 정 필요	2,641	2,241	2,509	2,509	-
검찰업무 정보화	계약액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 산 편성 필요	34,191	36,924	32,778	30,968	△5.5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교정시설 공공요금의 연례적 이·전용 등 완화 위해 지난 연도 공공요금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 필 요	102,913	118,073	112,020	118,437	5.7
기금예탁 이자수입	최근의 수납실적 및 수입전망 등을 고 려한 합리적 세입예산 산정 필요	1,781	553	2,022	1,824	△9.8
기타 경상이전 수입 등	매년 세입이 예측되는 항목들은 해당 비목 계상 필요	-	120	-	103	순증
교정시설 장비 운용 및 현대화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는 실시설계비 가 아닌 기본조사설계비 편성 및 집행 필요	79,655	65,689	106,108	107,682	1.5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최근 3년간 집행액이 예산액의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하므로, 사업소요를 고려 하여 예산 편성 필요	821	790	807	839	4.0
검찰활동	신규 예산 편성 시 합리적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333,046	329,033	329,998	340,940	3.3
[법제체]						
인건비	합리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정·현원차에 따른 인 건비 불용 최소화 필요	22,430	20,058	22,109	22,339	1.0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감사원]						
기본경비	면밀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지방관사 임차료 예산 편성 필요	12,737	11,717	13,197	13,510	2.4
적극행정 지원	재심의 처리 국내여비 집행실적 제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48	227	366	357	△2.5
[헌법재판소]						
재판자료 확충	간행물에 대한 필수 수요를 재검토하여 물량 최소화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416	357	406	425	4.7
헌법재판 연구원 기본경비	헌법재판연구원 기념사업과 유사한 기 념사업을 실시할 때는 면밀한 예산 수 요 분석에 따라 예산안에 반영하여 사 업의 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사를 받을 것	710	674	451	474	5.1
[대법원]						
토지대여료	수납물 제고를 위해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 필요	839	146	908	918	1.1
변상금	수납물 제고를 위해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 필요	235	68	247	247	-
등록 기본경비	청사 관리 및 건물유지 사업 소요액을 예측·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5,058	4,330	5,033	5,058	0.5
일반회계 전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과 다 편성 문제 개선 및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 필요	95,701	29,181	50,305	170,211	238.4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및 성과지표 추가 필요	8,193	4,810	7,478	7,742	3.5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가보훈처]						
보훈병원 진료, 위탁 병원진료, 제대군인 의료지원	적정 진료단가 반영 및 진료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622,853	649,171	640,396	659,729	3.0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환경개선	심사보고서 인쇄비의 적정 예산 반영 노력 필요	284	257	291	366	25.8
한국 소비자원 출연	한국소비자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 한 적정 출연금 편성 필요	47,350	47,350	50,341	50,853	1.0
소비자상담 센터 운영	소비자 상담 감소 원인 파악, 예산 추 계의 정확성 제고,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필요	3,189	2,328	2,589	2,564	△1.0
[금융위원회]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코넥스시장 현황 및 신규기업의 상장 추이를 고려한 사업 예산 조정 필요	1,235	362	748	378	△49.5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총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	-	-	-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수납액 규모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 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5,121,987	5,121,987	5,478,077	1,272,464	△76.8
[국민권익위원회]						
기타경상 이전수입	합리적인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예산 편성 및 연례적 미수납 해결 방안 마련 필요	369	393	389	663	70.4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외교부]						
면허료 및 수수료	여권세입 감소와 국제교류기금 수입금 감소를 반영하여 세입 등을 추계할 것	78,039	20,859	131,859	130,810	△0.8
베트남 (ODA)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8호선 건설사 업의 연도별 사업 예산 소요에 대해 면 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27,227	23,753	31,334	35,329	12.7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개선	여권세입감소와 국제교류기금 수입금 감소를 반영하여 세입 등 추계 필요	77,498	76,558	101,762	87,640	△13.9
국제교류 기금	수입계획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기금운용의 예측가능성 높일 것(법정부 담금)	36,000	8,966	68,814	69,595	1.1
[통일부]						
건물대여료	세입 편성의 정확성 제고 대책 마련 필 요	388	50	297	161	△45.8
기타재산 수입	예산 여유자금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 고, 운영수익률을 추계에 반영하는 지 표 개선 필요	24,695	978	1,877	2,330	24.1
국내통일 기반조성	통일왓수다 출연료가 제작 예산 범위 내 에서 편성·집행되도록 주의	2,622	2,508	2,849	2,696	△5.4
북한이탈 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 주민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감소 추세를 감안 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필요	33,865	14,823	28,005	20,981	△25.1
		15,036	10,667	13,623	12,854	△5.6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과거 인력운영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 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48,898	43,098	47,287	47,503	0.5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방부]						
의무장비 획득	면밀한 소요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 필 요	48,516	42,483	37,956	37,191	△2.0
교육용탄약	정확한 탄종별 소요량을 산출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 편성 필요	339,876	314,624	234,405	183,361	△21.7
기본피복	품목별 소요량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을 편성하고 과도한 조달물량 축소 지 양	401,446	379,689	377,464	374,810	△0.7
군배상금	군소음배상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관 행 개선	169,220	171,067	65,020	10,016	△84.6
정훈문화 활동	최근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예 산편성 필요	997	784	997	844	△15.3
[행정안전부]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예측을 통 해 예측가능한 사유에 의한 불필요한 예 산조정 최소화 필요	986	577	9,493	1,083	△88.6
중앙행정 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클라우드 전환가능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물량을 대상으로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필요	57,000	57,000	178,693	34,293	△80.8
재난대책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도로시설 등의 피해액 산정기준 및 복구지원 단가를 현 실에 맞게 조정할 것	842,500	842,500	100,035	150,035	50.0
한국섬 진흥원 지원사업	실제 소요보다 많은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예산 규모의 면밀한 검토 필요, 근거가 부족한 수의계약 체결 주의	-	2,149	5,719	5,620	△1.7
국민안전 의식 선진화	비목별 실제 소요 및 집행실적 반영 등 적정 규모로 예산 편성, 편성 이후에는 세목 조정 범위 최소화	5,538	3,452	4,841	5,237	8.2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경찰청]						
중앙학교 인건비	교직원 및 임교인원을 정밀하게 예측하 여 적정 수준 예산 편성, 과도한 불용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	43,066	32,637	34,002	35,672	4.9
방위비 인건비	의무경찰대 보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43,066	38,891	19,796	3,093	△844
교통과학 장비관리	실제 운영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설치대 수를 정확히 추계 필요	118,817	112,665	107,053	117,631	9.9
교통과학 장비관리	예산 편성 시 적정 수준의 단가 반영, 이동식 단속장비의 폐기예정 수량 및 신규장비 수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장비유형별 적정 수량을 예산 편성시 반영할 것					
적정 세입 예산 편성	과소편성으로 인한 재정부운의 비효율 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세입예산 반영 필요(전년도세계잉여금,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1,674	11,626	9,448	14,010	48.3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관서별 소요 경비를 더욱 면밀하게 검 토하여 예산액을 조정할 것	3,875	2,185	3,581	2,620	△268
[소방청]						
중앙소방 학교 운영	비목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 과도한 세목조정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614	3,118	3,106	3,442	10.8
지진대비· 대응 역량강화	각 단계별 사업 진행상황 고려하여 적 정 예산 편성,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19	391	7,089	11,225	58.3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인사혁신처]						
면허료 및 수수료	실제 응시인원의 추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수납률 저조 개선	1,915	1,445	1,725	1,389	△19.5
공무원연금 기금(총괄)	면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 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	-	-	-
퇴직수당	예상 퇴직자 수·퇴직수당 단가의 면밀 한 예측으로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2786788	2216637	2529821	2741776	8.4
국가시험 시행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14,123	15,743	14,021	13,911	△0.8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기본경비	실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안 편성 필요	3,200	2,767	3,019	3,389	12.3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양, 자산취득 소요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8,636	27,468	90,570	42,089	△53.5
[문화재청]						
문화재행정 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	정확한 수요파악을 통한 예산 편성, 불 합리한 예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543	551	425	2,427	471.1
영녕릉 보존정비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조정이 발생 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954	2,903	3,225	3,020	△6.4
궁궐문화재 관리운영	정확한 수요파악을 통한 예산 편성, 불필요한 예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6,240	23,592	24,192	25,858	6.9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사체 처리지원	예산편성 단계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4,989	6,446	13,955	9,769	△30.0
정부양곡 관리비	관련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실효성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383,299	318,442	374,956	348,112	△7.2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농촌진흥청]						
기타경상 이전수입	수납액 증가추이를 반영한 예산 편성, 집행잔액 최소화, 환수금 발생 방지 노 력 필요	4,154	9,651	7,550	8,500	12.6
[산림청]						
한국임업 진흥원 지원	기관의 최근 수입 동향 등을 면밀히 분 석하여 적정 규모 세입예산 편성 노력	26,272	26,272	27,892	24,934	△10.6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영세·소기업 시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청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070	1,062	1,070	1,857	73.6
폐광대책비	전년도 미지급금과 차년도 소요예산액 을 포함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63,304	63,304	44,848	122,515	173.2
에너지 바우처	관련 기관과 면밀하게 소통하여 예산 편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143,605	143,605	230,556	182,421	△20.9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융자)	사업방식과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 로 재검토하여 사업성과 개선방안 마 련 필요	326,000	326,000	270,100	263,334	△2.5
[특허청]						
책임운영기 관사업수입	법적·기술적 변화, 경기예측 변수들을 세입 예측 모형에 포함하여 책임운영기 관 사업수입 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	542,488	592,060	588,340	621,105	5.6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촉진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국회 부대의견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홍보비 증액·집행하지 않 도록 할 것	2,915	2,914	11,474	9,454	△17.6
스마트 슈퍼 확산 사업	신규사업 계획 수립·추진시, 시범사업 및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 필요	9,964	9,964	35,000	31,300	△10.6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지원	단말기 보급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추계 및 시행계획 마련 필요	13,560	13,560	10,200	9,400	△7.8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급 인원 및 평균 이용시간 증가 추세를 고려한 적 정 예산 편성 필요	4,649	9,648	9,005	21,925	143.5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한 재원의 적시 마련 확보 필요	1,771,100	2,901,000	3,693,167	6,693,032	△81.2
장애수당 (기초)	매년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를 편성하 고 있으므로 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80,021	87,612	81,633	142,943	75.1
아동발달 지원계좌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추진 실적 반영 을 통한 세심한 추계로 불용액 발생 최 소화	25,038	25,038	55,445	49,900	△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별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 황 및 검사소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교부하도록 할 것	8,785	8,707	7,904	8,445	6.8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 편성	628,225	617,357	433,448	470,480	8.5
어린이통학 차량 LPG차 전환지원	계획 물량을 현실화하여 예산 규모 조 정, 타 세부사업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필요성 및 추진방향 검토	21,000	15,956	12,000	9,000	△25.0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지자체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 편성, 지방비 확보 등 사업집행 관리 철저	507,161	395,024	148,378	126,042	△15.1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장의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파 악하여 적정 규모 예산 편성	7,593	7,277	3,901	3,677	△5.7
[기상청]						
선진예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공공요금의 연례적인 이·전용 및 세목 조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적정 소요를 반영할 것	6,396	6,318	6,078	9,872	62.1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인원에 대한 면밀한 예산 추계 필요	810,347	773,805	1,046,594	1,076,405	2.8
진폐위로금 지급	지급소요 감소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	89,349	76,256	88,106	86,415	△1.9
근로감독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 검토, 비목별 소요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이 ·전용 등 최소화	11,033	10,769	11,059	10,975	△0.8
고용유지 지원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존 관련 사업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 을 세밀하게 추계할 것	137,282	130,740	598,058	197,374	△67.0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적정 수준 추계를 통해 주거 급여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	1,987,925	206,492	2,181,925	257,266	17.9
제로에너지 건축 신산업 육성	면밀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안 편 성 필요	4,614	4,614	4,154	3,999	△3.7
기타민간용 자원금회수	주택기금 도시계정의 기타민간용자원금 회수 수입 계획 다시 추계 필요	-	291,881	51,014	290,772	470.0
민간임대 (용자)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통해 기금운 용계획이 불필요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	1,714,750	1,718,909	1,653,981	1,708,844	3.3
다가구매입 임대 (출·용자)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통해 기금운 용계획이 불필요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	640,890	887,285	9,155,950	607,600	△33.6
국토안전 관리원 출연	수입결산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 체 수입 예산의 과소계상 지양	46,394	46,394	60,504	61,075	0.9
건설공사 품질시험	품질검사 대행기관 평가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	722	716	756	1,061	40.3
교통사고 예방지원	정책 변경으로 예산 소요 변동이 예상되 는 경우 적정 예산 편성 필요	4,391	3,520	4,570	5,434	18.9
교통안전 공단출연	수입 증감 요소를 면밀히 추계하여 수 입 계상, 출연금 예산의 적정 규모 편 성 필요	71,620	71,620	74,202	80,269	8.2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화물자동차 보유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단가를 면밀히 산정하여 예산 편성	796	717	788	1,076	36.5
일반공항 시설관리	배상금 및 반환금에 대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전용 최소화	854	5,950	257	257	-
일반국도 건설 지원	배상금 예산안 편성시 진행 중인 소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추계	81,301	185,740	66,335	121,080	82.5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향후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추계할 것	113,200	94,359	91,168	65,920	△27.7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운 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대출예상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과다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0,776	653	12,690	11,470	△9.6
첨단도로 교통체계	지자체의 사전 준비상황과 사업 추진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 및 교부	517,910	516,236	532,442	503,549	△5.4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지자체의 사업 수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 편성 필요	19,291	18,661	15,600	28,233	81.0

주: 2021, 2022 예산은 각각 제2회 추경예산(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2021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18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 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지원	성인지의무교육 예산 적정규모 편성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253	221	253	253	-
[법제처]						
법제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쓰기)	국민참여단 의견의 채택률 및 반영률이 저조하므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논 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 강구	1,383	1,300	1,493	1,380	△7.9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개선	정책연구용역 이월 집행 최소화, 연구 과제 조기발굴 및 연구용역 건수 대비 높은 예산산정 자제	2,700	1,874	2,592	2,638	1.8
전문재판 운영	IP5 국가와의 교류 예산의 적극적 집행 필요 및 적정 예산안 편성	4,701	3,779	3,856	3,884	0.7
[감사원]						
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 규 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348	227	366	357	△2.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융차지원	어려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융차 조건 완화, 융차 규모 확대 등 을 검토	894,000	894,000	549,000	440,100	△30.8
[특허청]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해외 지재권 특허출원 지원사업은 신청 대비 지원이 57.4%에 불과, 지원기업 의 자부담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 포기 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 예산 편성	21,784	21,662	25,534	24,761	△3.0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 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시설 확충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이행을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3차 장기요양기 본계획에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기 관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104,602	104,045	61,990	50,053	△19.3
다함께 돌봄사업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지표 마련을 통하여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 할 것	43,702	36,656	48,781	57,994	18.9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 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 산을 편성할 필요	957,200	957,200	1,049,233	1,170,247	4.5
[환경부]						
수소차 보급	차종, 충전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한 실제 수소차 수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 지방비 확보 여부와 수소차 출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등	365,500	229,010	454,505	638,400	39.4
하수처리 수재 이용사업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목표를 고 려하여 사업 목적, 예산편성 기준, 성과 지표 등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할 것	34,461	29,629	29,449	46,861	59.1

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 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 운영방식과 집행상황 고려하여 향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138,555	90,324	116,230	80,382	△30.8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출생아 수 감소 추이, 사업신청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예산 편성 노 력 및 제도 활용률 제고 필요	12,532	6,904	7,050	7,050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지원가능한 수준의 목표와 예산 설정 및 관리감독 강화	2,914	985	2,768	2,301	△16.9
고용창출 장려금	유사 예산 편성 시 고용유지기간을 설 정하거나 양질의 기업으로 사업 대상을 한정할 것	704,779	655,376	686,888	139,504	△79.7
업종별 재해예방	향후 유사 예산 편성 시 사업 분야의 적 절성 등을 고려하고 중도퇴사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점검할 것	69,571	80,301	91,386	131,530	43.9
[국토교통부]						
광역 BRT 구축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 여 예산 편성	14,085	12,323	15,643	12,859	△17.8

주: 2021, 2022 예산은 각각 제2회 추경예산(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2021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관련 법령 미비·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그에 따른 예산 규모 조정을 시정요구한 경우(82건)

(단위: 백만원, %)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국회]						
공무직 근로자 명절상여금 인상 필요	국회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
사무처 인건비	의원 보좌직원 운전겸임수당 증액과 행정사무 업무 관련 겸임수당 신규편성을 위한 예산 편성 노력	333,578	321,772	335,094	339,948	1.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 증진	장애인 인권 현안 관련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필요	637	473	547	547	-
[법무부]						
인권교육	임차료 집행 단가를 적정화, 임의지출 지양 등 예산 적정 편성·집행 노력	219	143	199	214	7.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법제 선진화	예산편성 시 심의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 지양 필요	3,409	3,348	3,219	3,271	1.6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국외여비의 연례적 편성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1,022	878	763	743	△2.6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 협력지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검사 파견 부담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7,291	5,990	8,004	8,115	1.4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의 동시 계상 지양 필요	12,869	10,052	19,938	22,360	12.1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법제체]						
법령정보 제공	연례적 일반수용비 세목조정 자제, 면밀한 제작 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시부터 홍보영상 제작비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반 영하도록 개선	1,925	1,877	2,143	1,950	△9.0
[대법원]						
본부 운영지원, 재판일반 경비지원	동 사업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집행하 는 것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기 관운영 기본경비사업에 편성·집행	91,263	88,458	95,170	99,937	5.0
등기소 신증축	등특 예산으로 사법역사문화 교육관 공 사비 집행 지양, 일반회계 예산 편성·집 행방안 강구	23,356	22,772	16,892	17,382	2.9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22년 임차료를 '21년 예산을 이월하 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므 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하는 집 행 필요	13,084	12,936	11,540	17,362	50.5
등기업무 전산화	콜센터 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상담사의 업무능률 향상 및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적절 예산 확보를 통해 상담사의 이직률 최소화	44,668	41,935	43,677	41,532	△4.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21년 청년정책 추진단 운영)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에 근 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3,065	3,535	4,113	9,243	124.7
대테러 센터 운영	교육영상 제작 사업 예산 편성·집행 시 일반연구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편성하 여 집행할 것	853	837	881	886	0.6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국가보훈처]						
교통시설 이용 지원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시설 이용 감면액 전액을 운송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 력할 것	10,404	10,385	17,511	10,729	△38.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 지원시스템 운영	내역변경으로 홍보예산 사용 지양 및 필 요한 홍보 예산 등을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	1,123	1,293	1,824	1,820	△0.2
[관세청]						
고용부담금 예산의 연례적 전용·집행 지양 필요	연례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미편성 또는 과소편성하고 전용·집행한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 향후 적정 예산 편성 등 대 책을 마련할 것	-	171	-	52	순증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당초 예 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추진 재발 방지 필요 등	2,448	2,063	2,448	1,648	△32.6
[교육부]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및 질 제고를 위 하여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적극 적으로 확보할 것	5,081	4,987	2,948	7,554	156.2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 으므로 보완방안 검토 및 집행실태 검토 를 통해 합리적 수준 예산 조정·편성	20,500	20,500	14,500	14,500	-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외교부]						
일반회계 및 기금(총괄)	향후 국격에 맞는 외교활동과 국제무상 원조 등을 위해 적정 예산확보	-	-	-	-	-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 집행	6,361	4,606	4,007	3,777	△5.7
재외동포 재단 출연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사업의 안정성 및 영속성을 위해 별도 사업 예산 편성· 집행	62,480	62,480	62,020	55,608	△10.3
[통일부]						
경협기반 (무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정상화에 대비 하여 조직 및 예산 규모 검토, 남북연 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준비 및 이 를 위한 국민공감대 확보를 위한 사업 을 추진	311	148	311	311	-
[국방부]						
병영생활관	조달청, 기재부와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필요	185,311	144,792	133,404	355,251	166.3
[방위사업청]						
230mm급 다련장	3차 양산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연으 로 '23년 예산안 반영에 차질, 조기 전 력화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161,849	154,801	162,808	41,663	△74.4
자항기뢰	시설 외부 감리용역을 감안하여 예산 편 성하였으나 시설본부 자체감리 결정으로 감리비 예산액의 90%를 불용, 관련 법 령 숙지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42,968	52,689	48,017	32,169	△33.0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행정안전부]						
고객만족 관리 및 이미지제고	동일 목적의 사업비는 동일한 세부사업 을 통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1,629	1,585	1,613	1,657	2.7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적정 수요 예측 통한 예산 편성으로 당초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	20,693	20,766	21,973	37,548	70.9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43,040	43,040	3,476	9,165	163.7
동원자원 관리	비목의 성질에 맞는 예산 편성을 통해 예 산집행 시 세목 조정을 최소화	657	617	659	660	0.2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정보화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에 따라 정보화사업 유형의 세부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적절하게 집행하도 록 주의	456	449	356	374	5.1
[경찰청]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예산 규정·지침에 맞는 예산 편성·집 행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 울일 것	12,882	12,754	4,837	5,282	9.2
경비경찰 활동	예산 규정·지침에 맞는 예산 편성·집 행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 울일 것	46,956	45,233	53,023	55,605	4.9
진료업무 운영관리 (일반수용비)	예산 규정·지침에 맞는 예산 편성·집 행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 울일 것	21,845	21,899	22,517	22,553	0.2
진료업무 운영관리 (보상금)						
의경운영 및 관리 (위로금)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자체조사 등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지침등에 맞는 예 산 편성,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 필요	66,297	62,712	43,805	7,827	△82.1
의경운영 및 관리 (기타운영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침등에 맞는 예산 편성,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경고 등 조치 필요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인사혁신체]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전문상담사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을 통 해 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	1,572	1,521	1,590	2,094	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역량강화	예산집행 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 수첩 제작· 배부 사업을 편성·집행않도록 주의	890	627	845	803	△5.0
[문화재청]						
문화재청 소관 예산 및 기금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할 것	-	-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 이차보전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대비해 농업자금이 차보전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필요	297,514	244,744	280,299	451,942	61.2
식품외식종합 자금(융자)	집행이 저조한 내역사업의 예산을 실효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	195,800	183,153	213,800	144,633	△32.4
한국농수산대 학 교육운영	집행잔액, 불용예산액 등 예산 전용조정 을 통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 추진 재발 방지 필요	22,247	19,704	23,043	23,441	1.7
[농촌진흥청]						
시험연구활동지 원(R&D)	행사성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필요예산 을 철저히 수립하여 부적절 집행 사례 재발방지노력	8,997	8,634	8,420	9,043	7.4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운영	치유농업사 시험 관련 필요 예산 적시 편성,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관리 필 요	32,372	32,768	35,794	37,019	3.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적정규모의 재원 마련 노력, 대체작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 안 모색 필요	22,986	63,278	35,345	43,788	23.9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 업(R&D)	지역특화작목 사업비 편성 적극 노력, 연구행정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	18,200	18,197	17,262	18,200	5.4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산림청]						
산림재해 대책비	일반연구비의 75%를 산림재해지역 실태조사와 관련이 없는 연구과제에 집행한 것은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	180,000	185,426	50,000	20,000	△60.0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운영)	세목 조정을 통해 당초 편성되지 않은 단발성 행사사업 추진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 저해 우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0,099	10,010	13,293	11,963	△10.0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연도말에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0,099	10,010	13,293	11,963	△10.0
산지관리	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이를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9,463	4,818	5,236	6,361	21.5
산림 정책 개발	세목 조정을 통해 신규용역사업(12건)을 추진한 것은 예산 편성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향후 다른 사업예산 추계 미흡으로 인한 재원 충당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244	3,116	3,394	4,044	19.2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해양수산부]						
국가필수 선대제도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적정 수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 련 예산 확보에 노력	5,769	5,769	5,669	6,545	15.5
연안여객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설치가 쉽고 간편한 새로운 교통약자 편 의시설을 발굴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 정부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 등 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편의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012	1,012	556	500	△10.1
국제수산물 협상 및 대응	당초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시급성을 이 유로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하고, 중요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단계 부터 미리 반영하여 집행할 것	4,911	3,476	4,310	4,204	△2.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 위원회운영	지속적으로 회의장 임차가 필요한 경우 비목의 용도에 맞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임차료를 편성할 것	82	82	64	59	△7.8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예산 (A)	2023 예산안 (B)	증감률 (B-A)/A
		예산	결산			
[보건복지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 운영 사업 의 예산의 적정 소요를 산출하여 편성할 것	1,595	320	934	1,168	25.1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지침 제작 예산을 반영할 것	120,070	123,890	151,915	178,219	17.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2년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예산을 연내 집행하고, 전담인력 미충원 및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등 대책을 마 련하여 차년도 적정 예산을 확보 노력	6,668	6,668	8,918	7,325	△17.9
음주폐해 예방관리	음주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인식 변화, 음주친화적 환경을 건강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에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1,311	1,255	1,311	1,255	△4.3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사가 배치 기준에 맞게 지역별 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여건 개선 및 적정 예산 확보 방안 마련	145,938	143,200	155,146	160,978	3.8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안내책자 배포 등 연례적인 사업 수 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경우, 예산 편 성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목 적에 맞게 집행할 것	21,167	21,130	25,110	28,514	13.6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계시스템의 안정 적 운영과 적극적인 확산 추진을 위해 충 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 되도록 개선할 것	300	300	461	279	△39.5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하도록 주의하 고 필요한 사업이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69	656	3,452	3,495	1.2
[환경부]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폐기물적정 처리추진 센터 운영)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잔여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타 용도 집행 지양	2,776	2,776	2,776	2,776	-
국토환경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할 것	2,460	2,854	5,733	4,456	△22.3
환경교육 강화	환경체험교육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필요 예 산을 반영할 것	17,597	15,618	24,656	16,592	△32.7
[기상청]						
아태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 (R&D)	APEC기후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6,002	6,002	6,002	6,267	4.4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방재기상지원관 고용 및 보수 체계를 개 선하고 관련 예산 별도 편성 등을 노력 할 것	29,121	22,632	30,369	31,273	3.0

사업명(또는 시정요구내용)	시정요구 요약	2021		2022	2023	증감률 (B-A)/A
		예산	결산	예산 (A)	예산안 (B)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적용부과 지원	특정 사업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항을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24,675	24,652	24,421	27,768	13.7
[국토교통부]						
국토공간 정보정책 지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구용역을 분리 발 주하지 않을 것,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 규 용역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	3,047	2,916	4,387	3,978	△9.3
국가기본도 제작	당초 예산편성 내역에 없는 용역을 추가 로 발주하지 말 것	93,053	88,393	93,231	137,629	47.6
국토조사 및 지명	예산 편성근거대로 과업을 수행하고 세 부사업 간 과도한 내역변경 지양,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용역을 추진하지 않 도록 주의	3,107	2,862	2,798	3,153	12.7
기계설비 산업발전 지원	당초 예산편성 내역에 없는 신규사업 추 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주의	905	800	7,700	2,910	△62.2
교통시설 특별회계	계정간 전출이 필요한 경우 교통시설특 별회계법에 명확한 근거를 둘 것	47,714	-	-	-	-
도시정책 종합연구	비목 성격에 맞는 예산 편성, 도시 새뜰 마을사업을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 편성	676	530	850	850	0.0
노후기반시설성 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당 국비보조액을 상향하고 지원대 상 지자체 수를 늘리기 위해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것	2,000	2,000	2,500	2,500	-
수소물류 시스템구축	현재 단년도 사업비 편성방식이나 2개 년도 편성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검토	8,000	8,000	9,000	9,000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수립·집행되는 사업 은 총액계상에서 제외 검토	860,526	844,752	917,388	969,151	5.6
도로유지 보수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수립·집행되는 사업 은 총액계상에서 제외 검토	664,406	658,319	773,342	783,391	1.3

주: 2021, 2022 예산은 각각 제2회 추경예산(기금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2021 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공공기관의 현황

(1) 공공기관의 개념과 연혁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자·투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에 따른 요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동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²⁾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및 변동 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동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세부적인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

구분	내용	예시
1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일 것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2호	정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할 것	한국환경공단, 한국마사회 등
3호	정부지분 $\geq 50\%$ 또는 $30\% \leq$ 정부지분 $\leq 50\%$ 이면서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 보유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호	정부 및 1~3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분 $\geq 50\%$ 또는 $30\% \leq$ 정부지분 $\leq 50\%$ 이면서 사실상 지배력 보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호	1~4호 기관 지분 $\geq 50\%$ 또는 $30\% \leq$ 지분 $\leq 50\%$ 이면서 사실상 지배력 보유	강원랜드 등
6호	1~4호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김정훈 예산분석관(haste0408@assembly.go.kr, 6788-468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 지정
(이하 생략)

다음으로 공공기관 법제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적극적인 공기업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 정부기업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및 독립채산제를 확립하고자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다³⁾. 따라서 당시의 공공기관 법제는 주로 정부기업⁴⁾과 정부투자기관⁵⁾을 중심으로, 공공요금의 결정,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회계와 결산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1980년대 들어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1983년)하여 관련 법률을 일원화 하였다⁶⁾.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는, 이미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조직을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여 집행기능을 전문화하는 등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⁷⁾

3) 최용진, 「공기업법제의 변천과 차기정부의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3권제4호, 2012.11., 371면.

4) 「기업예산회계법」(법률 제928호, 1961. 12. 31., 제정)
제2조(정부기업의 정의) 본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교통사업, 통신사업, 전매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5)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법률 제1119호, 1962. 8. 13., 제정)
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의 5할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속재산중 그 재산의 5할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
3. 한국은행
②전항제1호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과 동항제2호에 규정된 귀속기업체는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법률 제3690호, 1983. 12. 31., 제정)
부칙 제2조 (법률의 폐지)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7) 제11대 국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안(의안번호 110516, 정부 제출) 제안이유

1990년대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 강화,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 구조의 개선 및 효율화 등 공공기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⁸⁾까지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기업의 분류(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의 분류(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의 개념,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및 경영 공시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이 갖추어졌으며, 이후 13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공기관 관련 법제 연혁]

구분	내용
1960년대	「예산회계법」(1961), 「기업예산회계법」(1961),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
1970년대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1980년대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폐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
2000년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폐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주: ()은 제정연도

8)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법률 제7057호, 2003. 12. 31.,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주무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의 유형과 지정 현황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및 자체수입액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되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의 관리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된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유형별 지정 및 구분 기준]

유형		구분기준	기관 예시	운영방향
공기업	시장형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민간기업 수준 자율보장 · 내부견제시스템 강화
	준시장형	·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 자율성을 확대하되, 공공성을 감안하여 외부감독 강화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위탁집행형	·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 주무부처 정책과 연계성 확보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교병원	· 성과관리, 업무효율성 중시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이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이다. 2021년도에 비하여 기관의 신설, 지정요건 충족 등으로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개이고, 기관해산 또는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은 총 2개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

구분	'21년	'22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6	-			-
■ 시장형	15	15	-			-
■ 준시장형	21	21	-			-
② 준정부기관	95	94	△1		△1	
■ 기금관리형	13	13	-			
■ 위탁집행형	82	81	△1		△1	
③ 기타공공기관	218	220	+2	+3	△1	
계	349	350	+1	+3	△2	-

주: 2021년의 경우 연초에는 350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었으나,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조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수는 349개로 변동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1.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기관 목록]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해제 사유
신규 (+3)	복지부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
	산업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기타공공기관)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기타공공기관)	21년 설립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
해제 (△2)	문체부	아시아문화원	기관 해산(22.1.17.)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요건 미달 (정부지원액 비중 50% 미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1.

나. 202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1) 총계

공공기관은 교통, 에너지, 보건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출연, 보조, 출자 등의 예산 지원을 하거나 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 또는 법령상 독점적 사업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순지원수입(정부지원 예산)⁹⁾이란, 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출연금¹⁰⁾, 출자금¹¹⁾, 보조금¹²⁾, 부담금¹³⁾, 이전수입¹⁴⁾, 위탁수입¹⁵⁾, 기타수입¹⁶⁾으로 구분하여 집계되고 있다.

정부순지원수입은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공공기관의 수입이므로, 보조 또는 기금 전입 자금의 단순 전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지 않는 자금과 민간으로부터

- 9) 정부순지원수입은 국가 재정(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직접 지원되는 금액으로 수입 지출 총괄표의 정부 직접지원, 간접지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사업수입(법령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수입)일지라도 정부 재정보로부터의 수입이면 정부순지원수입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 지침」).
- 10) 출연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1) 출자금은 정부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출자하는 금액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출자 등이 있다.
- 12)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보조금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 13)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등이 있다.
- 14) 이전수입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수입으로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이전수입을 통하여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 15) 위탁수입은 법령에 해당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 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으로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운송사업 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사업 수입,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국가어항관리 수입 등이 있다.
- 16)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의 이자 등 운용수익

터의 전입액 등 정부 외 주체가 지출하는 수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정부순지원수입은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고 공공기관이 순수하게 집행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파악·분석하는데 보다 유용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정부순지원수입의 유형별 구분]

구분	내용
출연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수입액
출자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자금 수입액
보조금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수입액
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수입액
이전수입	정부 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
위탁수입	정부와 직접 체결한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액
기타수입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의 이자, 부대수입 등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¹⁷⁾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총 298개로 집계되었으며,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총 112.4조원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2023년도 전체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2022년도 예산(607.7조원) 대비 5.2%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또한 2022년도 예산 대비 3.5%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2022년도(17.9%)와 유사한 상황이다.

17)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또는 예산안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른 경영공시 항목 중 수입 및 지출 현황(24번)의 정부순지원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350개 공공기관(2022년 10월 기준, 부설기관 제외)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정리하였다.

- ① 정부 세출예산안 또는 기금 지출계획안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취합하였다.
- ② 공공기관이 지원받는 위탁사업 지원 등 현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일부 수입은 추정금액을 제출받아 작성하였다. 따라서 2023년도에 실제 집행되는 예산 내역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정부순지원수입과 정부세출세부사업명이 각각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일반회계, 다른 기금 등)로부터 기금에 지원(전출)되는 세출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④ 정부순지원수입 중 기타수입은 정부가 직접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2023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비중]

(단위: 조원, %, %p)

구분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기관 정부지원 총 예산(안)(a)	116.8	108.7	112.4	3.8	3.5
정부 총지출(b)	600.9	607.7	639.0	31.4	5.2
비중(a/b)	19.4	17.9	17.6	△0.3	△1.7

주: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2022.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예산안 주요내용'(2022.8.30.),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규모 및 증감 현황

① 예산안 총 규모 상위 20개 기관

2023년 정부지원 예산안의 총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37조 1,305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 8,543억원), 공무원연금공단(5조 6,491억원), 국가철도공단(5조 6,256억원), 한국장학재단(5조 736억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제도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주요 지원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7조 16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9조 1,494억원),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로부터의 전입금(5조 6,491억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출연금(5조 5,713억원),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4조 5,664억원)이다.

정부지원 예산안 상위 20개 공공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90조 6,568억원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합계(112조 4,358억원)의 80.6%에 달한다.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상위 20개 공공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소관 부처	기관명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99,693	314,701	371,30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17,351	130,589	138,543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42,375	47,906	56,491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57,143	56,618	56,256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44,638	52,144	50,736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38,101	53,382	43,37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33,665	35,657	35,068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25,492	28,982	31,353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20,565	23,963	16,440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9,819	10,954	12,64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7,998	12,566	12,18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9,407	9,877	10,90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684	9,827	10,40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7,829	8,836	9,949
환경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8,786	10,048	9,355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2,670	2,391	8,95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59,836	30,363	8,545
과학기술정보 통신부/행정안전 부 공동관리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9,846	14,599	8,470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7,152	8,595	7,97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6,493	8,551	7,799

소관 부처	기관명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20개 기관 계(a)		928,543	870,549	906,742
전체 공공기관 합계(b)		1,167,990	1,086,767	1,124,358
비중(a/b) ¹⁾		79.5	80.1	80.6

주1: 표에 따른 상위 20개 기관의 비중은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상위 20개 기관에 해당하는 값으로, 2021 결산 및 2022 본예산 기준 각각의 상위 20개 기관은 표에 따른 기관과 일치하지 않음. 2021 결산 및 2022 본예산 기준 상위 20개 기관의 비중은 각각 82.2%(21) 및 80.5%(22)로 2023년의 비중과 유사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예산안 증액 규모 상위 5개 기관

2022년 예산과 비교하여 증액 규모가 큰 5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조 6,605억 원 증가), 공무원연금공단(8,585억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7,954억원 증가), 서민금융진흥원(6,562억원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2,884억원 증가)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5조 6,201억원 증가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국가로부터의 전입금이 8,585억원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에서 4,65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서 2,350억원의 보전금이 증가하였다. 그 외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3,126억원 증) 및 청년도약계좌(3,526억원 신규) 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800억원 증) 등이 주요한 증가 내역이다.

[정부지원 예산안 증액 규모 상위 5개 공공기관 예산안]

(단위: 억원, %)

소관 부처	기관명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99,693	314,701	371,305	56,605	18.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42,375	47,906	56,491	8,585	17.9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17,351	130,589	138,543	7,954	6.1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2,670	2,391	8,953	6,562	274.5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360	276	3,160	2,884	1045.2
계		462,449	495,863	578,452	82,590	16.7

주: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예산안 감액 규모 상위 5개 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의 감액 규모가 큰 5개 기관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은행이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 사업에서 2조 2,402억원이 감액(사업 종료)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차 사업(다가구매입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총 9,82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공사 일정 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등의 사업에서 총 7,523억원이 감액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경우 행정공공기관노후장비통합및클라우드전환 사업(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물량 감소)과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사업(데이터구축 종 수 감축)에서 총 5,051억원이 감액되었고,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뉴딜펀드 출자 사업의 조성규모 및 재정지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3,800억원이 감액되었다.

[정부지원 예산안 감액 규모 상위 5개 공공기관 예산안]

(단위: 억원, %)

소관 부처	기관명	2021 결산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59,836	30,363	8,545	△21,818	△71.8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¹⁾	38,101	53,194	43,371	△9,823	△18.5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20,565	23,963	16,440	△7,523	△31.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9,846	14,599	8,470	△6,129	△42.0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31,875	7,300	3,500	△3,800	△52.1
계		260,223	129,419	80,326	△49,093	△37.9

주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상의 2022년도 정부순지원수입은 3조 9,49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022년도 (본예산) 순지원수입은 5조 3,194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는 실제 편성된 예산이 아닌 예상 소요액을 기재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기관유형별·지원유형별 현황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을 기관 및 정부지원의 유형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 및 지원 유형별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보조금	부담금	위탁수입	이전수입	출연금	출자금	계
공기업 (시장형)	155 (12.1)	-	133 (10.4)	-	-	994 (77.6)	1,281 (100)
공기업 (준시장형)	8,680 (11.4)	-	2,385 (3.1)	-	920 (1.2)	64,011 (84.2)	75,996 (10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046 (0.7)	-	678 (0.1)	440,505 (94.3)	18,568 (4.0)	4,100 (0.9)	466,897 (100)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171,174 (37.7)	18,262 (4.0)	27,013 (6.0)	39,913 (8.8)	197,448 (43.5)	180 (0.04)	453,990 (100)
기타공공기관	22,491 (17.8)	1,080 (0.9)	6,865 (5.4)	3,749 (3.0)	88,509 (70.1)	3,500 (2.8)	126,194 (100)
계	205,546 (18.3)	19,342 (1.7)	37,074 (3.3)	484,167 (43.1)	305,445 (27.2)	72,785 (6.5)	1,124,358 (100)

주: 1.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괄호 안은 기관유형에서 지원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행 합계에 대한 비중)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시장형 공기업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가 가장 적은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예산안의 대부분은 출자금(77.6%)이다. 출자금 예산 994억원은 한국석유공사에 전액 출자될 예정이며, 유전개발사업 및 석유비축사업에 974억원,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에 20억원이 출자될 예정이다.

② 준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또한 정부지원 예산안 중 출자금의 비중이 전체의 84.2%로 가장 높았다. 출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통합공공임대출자, 행복주택출자,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등 4조 1,973억원), 한국도로공사(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 함양-울산 고속도로건

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건설 등 1조 6,440억원),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 지원, 광역상수도 안정화 등 4,285억원), 한국철도공사(수송차량 구입, 도시철도 노후차량 구입 등 704억원) 등 6개 기관에 편성되어 있다.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수입이 정부지원 예산의 거의 대부분(94.3%)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 또는 기금의 전입금 형식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37조 265억원), 공무원연금공단(5조 6,491억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1조 900억원), 근로복지공단(1,26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789억원) 등 7개 기관이 전입금 형식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주로 출연금(43.5%)과 보조금(37.7%)으로 정부지원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출연금은 국가철도공단(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등 5조 6,256억원),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지원 등 5조 657억원), 한국국제협력단(ODA 사업 등 1조 20억원),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9,949억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등 8,470억원) 등 총 46개 기관에 19조 7,44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등 11조 6,412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시장경영혁신지원 등 7,922억원), 한국산업 인력공단(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등 6,733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등 4,697억원) 등 총 44개 기관에 17조 1,17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⑤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또한 주로 출연금(70.1%)과 보조금(17.8%)으로 정부지원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출연금은 국방과학연구소(방위사업정책지원 등 3조 1,353억원), 학교법인한국폴리

텍(대학운영 지원 등 3,470억원),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 등 2,669억원),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 등 2,281억원) 등 총 118개 기관에 8조 8,509억원이 편성되었다.

보조금은 대한체육회(3,932억원), 중소기업유통센터(1,170억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080억원) 등 총 73개 기관에 2조 2,491억원이 편성되었다

(4)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 예산안의 비중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정부지원수입(직접지원수입, 간접지원수입) 외에도 부대수입, 차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순지원수입(정부지원 예산)은 공공기관 총수입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공공기관의 총수입구조]

구분		수입명
정부지원수입	직접지원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간접지원	사업수입, 독점수입, 부대수입
정부지원 외 수입		기타사업수입, 기타부대수입, 차입금, 기타

주: 정부지원 외 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기타부대수입은 기타사업수입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을 의미함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 총지출에 대응되기 때문에 총수입액은 해당 공공기관의 연도별 사업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지원 예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공기관의 총수입을 비교하면 각 공공기관의 총수입에서 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 예산이 공공기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예산 기준 13.8%로, 2021년 결산 기준치인 15.4%에 비하여 약 1.6%p 감소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13~15% 정도를 정부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이러한 비율이 전년 대비 1.6%p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 예산 비중 현황(2021~2022)]

(단위: 억원, %, %p)

공공기관 유형	2021년 결산			2022년 본예산			정부지원 예산의 비중변화 (F-C)
	정부지원 예산(A)	총수입 (B)	비중 (C=A/B)	정부지원 예산(D)	총수입 (E)	비중 (F=D/E)	
공기업 (시장형)	1,324	1,708,246	0.1	1,259	2,049,296	0.1	-
공기업 (준시장형)	72,694	888,738	8.2	92,572	1,058,605	8.7	0.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91,873	1,823,611	21.5	401,040	1,871,770	21.4	△0.1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558,350	1,791,326	31.2	465,563	1,646,390	28.3	△2.9
기타공공기관	143,749	1,364,470	10.5	126,334	1,274,705	9.9	△0.6
계	1,167,990	7,576,392	15.4	1,086,767	7,900,766	13.8	△1.6

주: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자체사업수입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¹⁸⁾하게 되므로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고, 그에 따라 총수입 중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의 위탁관리나 정부업무의 위탁집행이 주요 사업임에 따라 총수입 중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총계의 측면에서 정부지원 예산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대부분 유형의 공공기관에서 총수입 중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에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지원 예산이 증가한 후 2022년도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8) 공기업 지정요건

- 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다. 202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총괄 분석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첫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규모는 총 112.4조원으로 2022년 예산 108.7조원 대비 3.8조원(3.5%)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규모가 70조 내외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 95.7조, 2021년에 116.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4131-317)의 2021년도 계획액은 601억 4,6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13조 7,911억원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4131-325)의 경우에도 2021년도 계획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2조 4,263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이후 2022년 및 202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각각 108.7조원 및 112.4조원으로, 2021년도 정부지원 예산 116.8조원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2016~2023)]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예산	2023 예산안
공공기관 정부지원 총 예산(안)(a)	67.7	69.6	69.8	76.6	95.7	116.8	108.7	112.4
정부 총지출(b)	384.9	406.6	434.1	485.1	549.9	600.9	607.7	639.0
비중(a/b)	17.6	17.1	16.1	15.8	17.4	19.4	17.9	17.6

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과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탁수입 등 추가적인 증가 요인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후에도 위탁수입 등 추가적인 증가요인이 있어, 총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 규모는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추가적인 수탁계약 체결, 보조금 교부 등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사업시행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예산안 확정 후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산림청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사업에 2021년 당초 예산으로 40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안 확정 이후 추가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평가시험', '산림복지통계실 태조사' 사업 등을 수탁하였고, 이에 정부로부터 23억 4,7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2021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부지원 사업 추가 수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당초 2021년 예산 반영 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40,883
	소계(a)	40,883
추가 수탁사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평가시험	251
	산림복지통계 실태조사	362
	산림복지 민간분야 장애인 신규 직무개발	19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 개발(세부연구)	326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190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교육(숲체험과정)	319
	2021년 교정공무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50
	2021년 해양경찰 산림치유 프로그램(위탁교육)	7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산림교육 위탁	48
	2021년 국립하늘숲추모원 운영·관리 위탁	511
	2021년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박람회 위·수탁	200
	소계(b)	2,347
총합계(a+b)		43,230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즉,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증
가요인이 있으므로,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예산안의 분야별 재정투입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도 유사한 방향으로 변동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의 분야별 재정투입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2023년 예산의 기초를 건전재정 기초로 전
환하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마련으로 국정과제 이행¹⁹⁾,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19) 정부 국정과제: ① 병 봉급 인상(82만원→130만원) ②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도입(월 70만원) ③ 청
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급, ④ 청년도약계좌 도입(청년 월 40~70만원, 정부매칭 최대

강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핵심 정책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 예산안의 분야별 지출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교육 분야’, ‘R&D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²⁰⁾에서 지출 증가가 나타난 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SOC 분야’에서 지출 감소가 나타났다.

[2022년 및 2023년 예산(안)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총 지출	607.7	639.0	31.4	5.2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8.9	4.1
2. 교육	84.2	96.1	12.0	14.2
3. 문화·체육·관광	9.1	8.5	△0.6	△6.5
4. 환경	11.9	12.4	0.5	3.9
5. R&D	29.8	30.7	0.9	3.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5.6	△18.0
7. SOC	28.0	25.1	△2.8	△10.2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0.6	2.4
9. 국방	54.6	57.1	2.5	4.6
10. 외교·통일	6.0	6.4	0.4	7.3
11. 공공질서·안전	22.3	22.9	0.5	2.4
12. 일반·지방행정	98.1	111.7	13.6	13.9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2022.8.30.)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정부의 2023년도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에 따라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도 2022년 대비 증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소상공인 부실 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한 출자)

⑥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저장버스 확대 등)

20) 다만,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는 재원이 중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측면에서 다른 분야를 검토하였다.

[분야별 정부지원 예산안 변동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분야	기관명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감	
					B-A	(B-A)/A
지출 증가	보건· 복지· 고용	국민연금공단	314,701	371,305	56,605	18.0
		국민건강보험공단	130,589	138,543	7,954	6.1
		공무원연금공단	47,906	56,491	8,585	17.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9,877	10,900	1,023	10.4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8,836	9,949	1,113	12.6
	교육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4,226	5,013	787	18.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3,223	3,470	247	7.7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917	1,006	89	9.7
	R&D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2,019	2,228	209	10.3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1,242	1,377	135	10.8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1,526	1,686	159	10.4
	농림· 수산· 식품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3,297	4,118	820	24.9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1,473	1,725	252	17.1
지출 감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30,363	8,545	△21,818	△71.8
		한국산업은행	7,300	3,500	△3,800	△52.1
	SOC	한국도로공사	23,963	16,440	△7,523	△31.4
		국가철도공단	56,618	56,256	△363	△0.6
		한국산업단지 공단	5,063	4,098	△965	△19.1
	문화· 체육· 관광	한국관광공사	4,299	4,108	△191	△4.4
		국제방송교류재단	483	382	△102	△21.0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지출이 증가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의 공공기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착²¹⁾을 위한 영세·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강화 등에 따라 국민연금공단²²⁾,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예산 대비 787억원 증가 하였는데, 이는 교육정보보호사업의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또한 대학운영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원 예산안도 247억원 증가하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지원 예산안이 89억원 증가하였다.

R&D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관련 정부지원 예산안에 신규 과제가 다수 추가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 ‘공존지능형 메타봇 기술 개발 사업’ 등의 신규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안이 209억원 증가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는 ‘청정수소 생산-저장 및 탄소저감 모니터링 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스마트 센싱 및 디지털 의료공정 핵심기술 개발’ 등의 신규 과제가 추가되면서 135억원의 정부지원 예산안이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3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대비 820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식품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확산 사업의 확대 및 쌀가루산업화지원 사업의 신설 등에 기인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도 252억원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정부 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2023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대비 2조 1,818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 사업이 종료된 것에 기인한다. 한국산업은행 또한 뉴딜펀드 출자 및 녹색금융 출자 사업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2022년 예산 대

2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4.1월부터 50인 이상 →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22)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정부순지원수입(정부지원 예산)으로 인식한다.

비 3,800억원 감액되었다.

SOC 분야 또한 정부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감액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23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대비 7,523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도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 등의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안이 363억원 감액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또한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등의 예산안이 감액됨에 따라 965억원의 정부지원 예산안이 감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살펴보면,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2023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이 2022년 예산 대비 191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4264-319)의 내역사업인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의 조성 기간(1년→2년) 및 연차별 지원 금액 변경에 기인하고 있다.

2023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분야별 분석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고용 분야

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 사업 관리 철저 필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백신 생산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구축사업’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생산세포주(백신의 기초소재)의 특성분석 및 품질관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GMP기반의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은 공사비(31억원) 및 장비비(30억원)로 편성되었는데, 설계 전 절차의 지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도 공사비 예산안 또한 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동 사업의 진행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23년 배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²³⁾

23)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② 대중소공동훈련지원 사업 공동훈련센터의 신규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 투자 비율 확대 필요

대중소공동훈련지원 사업은 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이 설립한 공동훈련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공동훈련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보면 공동훈련센터의 연차가 오래될수록 인건비 및 운영비에 사용되는 비중이 높고, 시설·장비비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에 사용되는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차가 오래된 공동훈련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이 주로 경상적 경비로 사용되고, 신규 장비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할 경우 시설·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신규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보조금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⁴⁾

③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 예산 보증료 수입의 적정한 추계를 통한 편성 필요

근로복지기금 내 중소기업계정의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사업은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많은 경우, 해당 차액을 중소기업계정에서 보전하는 예산으로 2023년도에 237억 1,600만원[= 37,720백만원(총지출) - 14,004백만원(자체수입)]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자체수입 계획(140억 4백만원)의 세부 내역인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보증료 수입) 계상을 위해 추정한 용자 계획안과 실제 2023년도 계획안으로 편성된 용자 계획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제보다 보증료 수입이 과소 추정되어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편성된 용자계획안을 반영하여 보증료 수입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이에 따라 조정되는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또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²⁵⁾

p.96~101 참조

24)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41~147 참조

25)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33~136 참조

2. 교육 분야

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의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은 해산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운영비, 채무 변제)을 용자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학교법인 청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의 세부 산출근거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산된 학교법인 중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법인 3개교를 대상²⁶⁾으로, 각 학교에 대해 ① 청산절차 운영비 1억 5천만원과 ② ‘2022년 3개 폐교대학의 평균 채무액’인 34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 지원대상인 청산이 미완료된 3개 학교는 모두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담보가액이 될 자산 및 변제해야 할 채무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교육부의 해산명령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2023년 지원 대상 학교 중 일부는 소송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학 역시 청산절차 진행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2023년 예산안 집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3년 청산 절차를 진행할 폐교 대학의 용자수요를 좀 더 면밀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현재 지원대상 학교의 청산절차 진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⁷⁾

② 서울대학교병원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 관리 철저 필요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은 배곧서울대학교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의 의료 공백 해소,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설계비 10.4억원, 공사비 34.2억원 등 총 52.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 건립 사업의 2022년 10월까지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37.5%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사발주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 총사업비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의

26) 교육부는 동 사업비를 활용하여 향후 발생하는 신규 폐교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7)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L, 2022. 10., p.109~117 참조

결과에 따라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이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현재 ① 부처 간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② 2022년 내 기본계획 확정·고시 완료, ③ 2023년 1월부터 6개월 내 설계·공사업체 입찰공고, 기본설계 진행 및 심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단계를 마무리하여야 우선시공 분 공사 착수 및 17.5%의 기성률을 진행하여 143억원의 공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동 사업이 지연되어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2~2023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²⁸⁾

3. 문화·체육·관광 분야

①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2년에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199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사업이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3,150백만원)은 관광단지 내 하수처리장 건립사업(1단계)에 대한 2차년도 공사비(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 공사) 내역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2022년도 공사비 예산은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2023년도 예산안 또한 연내에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2023년도 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⁹⁾

②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의 전제 조건인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의 조속한 마련 필요

청와대 사랑채 전면 개편 사업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현재 전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를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개편함으로써, 청와대 권역 관광 안내 및 편의시설 제공 등을 통해 청와대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마련하려는 사업이다.

그러나 청와대 사랑채 개편(안)에 따라 산출된 2023년도 예산(안) 70억원은 문화

28)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2022. 10., p.103~108 참조

29)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5~8 참조

체육관광부가 현 시점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 개편(안)에 따라 추정한 예산이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의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기간, 소요액 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은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에 따라 청와대의 운영주체, 운영방식, 공간성격,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과 이에 대한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의 수립이 지연될 경우 동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동 사업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청와대 자체운영계획을 국회 심의기간 동안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⁰⁾

4. 환경 분야

① 입찰 담합 조정결정금 수익을 고려한 4대강 사업 부채상환계획 마련 검토 필요

수자원공사지원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7조 9,780억원)에 소요된 채권 발행에 따른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 15.4조원 중 국가재정으로 7.4조원을 부담하고, 8.0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우선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채무 원금(7조 9,780억원)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70% 수준(5조 5,480억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30%(2조 4,300억원)를 부담하며, 관련 발생 금융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참여 17개 건설사 간 입찰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확인됨에 따라, 2014년 3월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건설사로부터 2,364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납부 받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입 2,364억원의 활용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여, 4대강 사업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¹⁾

30)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4~18 참조

② 환경부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안 편성 재검토 필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녹색경제활동 확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 등 중견·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의 주 내용은 중견·중소기업의 녹색경제활동 관련 회사채(이하 “녹색채권”)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신용도가 낮고 녹색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과 금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녹색채권 발행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수요조사조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다.

녹색채권은 일반채권 대비 발행조건이 까다롭고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채권 발행체계를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도입 시,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많지 않거나 공모 신청 기업 수가 계획에 미달함에 따른 예산 미집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안 규모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녹색채권 발행규모 추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²⁾

31)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07~113 참조

32)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14~123 참조

5. R&D 분야

①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안 검토 필요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은 한국형 중이온가속기(Rare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line experiments; 이하 “RAON”)를 건설·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동 사업은 최초 사업 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와는 달리 RAON의 구축 과정에서 사업 기본계획이 4차례 변경되면서 사업이 순연되었고, 2022년도 예산 또한 시험시설 용량과 전문인력 부족, 세부 추진계획 미확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 체결 지연에 따라 2022년 9월 기준 실행행률이 0%인 상황이다.

따라서 중이온가속기 선행 R&D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³⁾

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의 기업 매칭 계획 및 협의 구체화 필요

초격차 기술 확보 민간-출연연 개방형 R&D 사업(이하 “개방형 R&D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양자기술 도약을 위해 민간·대학·출연(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양자기술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양자기술 산업화의 초석이 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과정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개방형 R&D 사업에서의 기업 매칭에 대해서 특정 기업의 참여와 매칭 부담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고,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 또한 미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방형 R&D 사업에서의 기업 매칭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업과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⁴⁾

33)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L, 2022. 10., p.154~159 참조

34)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L, 2022. 10., p.160~163 참조

6. 농림·수산·식품 분야

①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필요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은 쌀가루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활용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쌀가루 제품개발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산출내역에 따르면 15개 제품에 대하여 쌀가루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2억원의 8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10월~11월 중에 관련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출단가, 지원 업체 수,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는 설명인데, 이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운영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국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자격, 지원 요건, 지원제품의 종류, 산출단가 등에 대한 상세자료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선행 조건인 개발 수요조사 및 분질미의 공급 계획 등에 대한 상세 자료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구체적인 운영방향 등이 담긴 세부계획을 예산심의 기간 동안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³⁵⁾

② 농식품시설현대화 및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시설자금 사업, 사업 성격의 유사점을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식품 제조업체나 가공업체의 품질향상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현대화나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 사업이고, 시설자금 사업은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자 사업이다.

2개의 사업은 지원 자격과 용자한도에서만 다소 차이날 뿐 농식품 업체의 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고,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35)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45~47 참조

2개의 사업 모두 실행이 저조한 사유는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사업 신청이 감소하거나 기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하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더 낮은 금리로 실시하고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사업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행이 저조하고, 사업내용도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없는 시설자금 예산(48억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2개의 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⁶⁾

③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목적 달성을 고려한 적정 이익금 활용방안 마련 고려 필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계의 장기불황과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재무를 보면 2020년 및 2021년도에 금융상품 평가이익(투자 영업수익)이 급등하면서 각각 2조 5,825억원과 4조 1,80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18년 말 대비 6조 6,109억원 증가한 6조 3,726억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 발생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하여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이익이 당기순 이익에 반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는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 등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대규모의 평가이익(미실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당 이익금 활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상의 주주 이익 배당과 관련한 기준 마련 등 동 기관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적정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⁷⁾

36)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II」, 2022. 10., p.39~44 참조

37)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59~66 참조

7. 국방 분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의 운영 보완 필요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은 국군 병사 및 전역예정자에게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SW·AI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자기개발과 전역 이후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병사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SW, AI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이하 “맞춤형 온라인 교육”이라 한다)과 ② 장병들이 데이터분석, 정보처리기사 등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맞춤형 온라인 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과정을 듣고자 하는 군 장병이 나라사랑포털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레벨테스트를 거쳐 입문·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방식인데, 동 교육과정과 사업시행기업에 따라 수료율의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성과 평가 및 면밀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³⁸⁾

(3) 실집행이 저조한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관리 필요

실제 집행기관인 공공기관에서의 예산 집행이 저조하여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실집행 제고를 위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예산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액을 공공기관으로 교부하는 부분을 집행이라 하고, 해당 교부액을 수령하여 공공기관에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을 실집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 집행실적은 예산 중 공공기관으로 교부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공공기관으로 교부되어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38)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L, 2022. 10., p.138~142 참조

실집행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예산 사업의 경우 정부의 집행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추진된 정도인 공공기관의 실집행을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실집행률을 조사하고, 집행이 저조한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며, 사업기간과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에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사업 중 사업비(2022년도 예산 기준) 10억원 이상이면서 2022년 8월말 기준 집행률이 1% 미만인 사업은 30개 기관, 52개 사업으로 집계되었다.

[2022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사업 중 사업비 10억원 이상,
집행률 1% 미만인 사업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 8. 기준			2023 예산안	집행부진사유
		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강원대학교 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3,730	3,730	0	4,197	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 지연
경북대학교 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2,619	2,619	0	5,005	교육용 기자재 구입 검토 지연
국가 철도공단	강릉-제진 철도건설	115,800	115,800	0	282,822	설계 진행 중에 따른 공사 미착수
	남부내륙철도	54,100	54,100	0	168,600	23년 설계 완료 후 용지비 집행 예정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43,800	43,800	0	157,600	설계용역 및 턴키 발주 일정 조정
	도담-영천 복선전철	290,400	178,500	0	233,833	복선화 결정('21.12)에 따른 보완설계 및 공사 발주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40,500	40,500	7	6,000	2023년 계약 체결 예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3,000	3,000	0	127,559	감사원 감사 진행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지연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 8. 기준			2023 예산안	집행부진사유
		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포항-삼척 철도건설	179,400	179,400	0	23,156	민원(지장물 이설 등) 등으로 인한 후속공종 지연
	대전-옥천 광역철도	3,000	3,000	0	2,000	선행사업 수요예측 재조사로 인한 일정 지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3,488	3,488	20	4,430	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진행 중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료공공성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7,800	7,800	0	1,855	기본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 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0,390	10,390	55	19,744	자격심사 등 업무처리 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킨텍스 3단계 건립	14,500	14,500	0	14,500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상위부처에서 전액 미교부
부산항만공사	물류기업유치지원	1,142	1,142	0	1,030	10월 설계 착수금 집행 예정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0	48,000	0	0	2022년 9월 말 상품 출시 후 집행 예정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7,992	7,992	0	5,215	사업 일정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등에 따른 지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1,663	1,663	0	2,147	서울대학교와의 부지선정 협의 지연
인천항만공사	물류기업유치지원	1,500	1,500	0	2,500	4분기 설계준공 후 준공금 지급 및 공사계약 추진 예정
전북대학교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8,281	8,281	0	6,383	4분기 집행 예정
제주대학교병원	국립대병원 지원	4,260	4,260	0	0	입찰 진행 중
한국가스공사	KOGAS인재개발원 투자보조금	3,300	3,300	0	0	사업 연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	4,246	4,246	2	1,694	건축일정 조정에 따른 사업 지연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2. 8. 기준			2023 예산안	집행부진사유
		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한국관광공사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2,966	2,966	0	805	몽골: 코로나로 인한 사업중단, 설계도서 변경 및 인허가 지연 으로 '20, '21년 예산 우선 사용 스리랑카: 국가부도사 태에 따른 합의서 체 결 지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식량작물소비기반구축	0	1,600	0	2,000	예산 미교부로 인한 집 행 부진(연말 집행 예 정)
한국농어촌 공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 원[용자]	6,870	6,870	0	8,000	용자기업 심사결과 적 격자 없음
한국도로공사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	1,000	1,000	0	0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
한국산업 단지공단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1,200	1,200	0	2,000	사업비 교부 전 단계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130,000	130,000	0	50,000	4분기 금융약정 체결 예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국민임대출자	212,360	112,360	0	176,702	유형변경 등 사업취소 분 정산으로 전액 상 계처리
한국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2,655	3,935	10	0	9월 준공금 집행 예정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14,250	14,250	6	24,250	대출실행에 따른 이차 보전 집행시기에 따라 하반기 집행예정

주: 실집행은 2022년 8월말 기준

자료: 각 기관별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분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례적인 수시연구사업비 이월액 발생 과다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비는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비 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각 기관별로 기본연구비의 10~30% 범위에서 수시연구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회 소관 기관의 수시연구사업비 결산 현황을 보면 일부 기관에서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시연구사업비의 총액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수시연구사업비의 편성비율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⁹⁾

②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PIS펀드 투자실적 제고 필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이하 “PIS펀드”) 조성 사업은 대규모 자금 소요 및 투자회수의 장기화로 민간에서의 자발적 자금조성이 어려운 해외인프라사업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성격의 자금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예산안은 PIS펀드의 모태펀드(6,000억원) 조성을 위한 정부 재정출자 약정 금액 1,500억원 중, 2022년 예산까지 출자되고 남은 미출자금액 50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2019년 정부 예산 출자를 통해 6,000억원의 모태펀드 조성을 바탕으로 총 1.5조원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에 따라 2022년 7월말 현재 4,000억원의 미 결성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동 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 출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부적인 투자 집행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⁰⁾

39)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 2022. 10., p.17~23 참조

40)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86~190 참조

③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공구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강릉에서 제진 간 111.7km의 단선 전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안은 공사비 2,250억원, 용지비 200억원, 부대비 37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설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1년 실집행률은 36.5%에 불과하고, 2022년 또한 9월 기준 실집행률은 12.9%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절차의 소요 일정 및 전년도 이월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3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¹⁾

④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 공사 지연 일정을 감안한 공사비 예산 조정 필요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 사업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경기남부 지역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공사비 157억 5,900만원과 시설부대경비 6억 4,600만원을 합한 16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도 공사비는 전액 2022년도로 이월되었고, 2022년도 예산 또한 8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5%, 공정률은 11.4%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편성된 공사비 중 일정부분은 2023년도로 이월될 전망이다.

따라서 2023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공사비 예산은 2023년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²⁾

41)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67~172 참조

42)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II」, 2022. 10., p.148~1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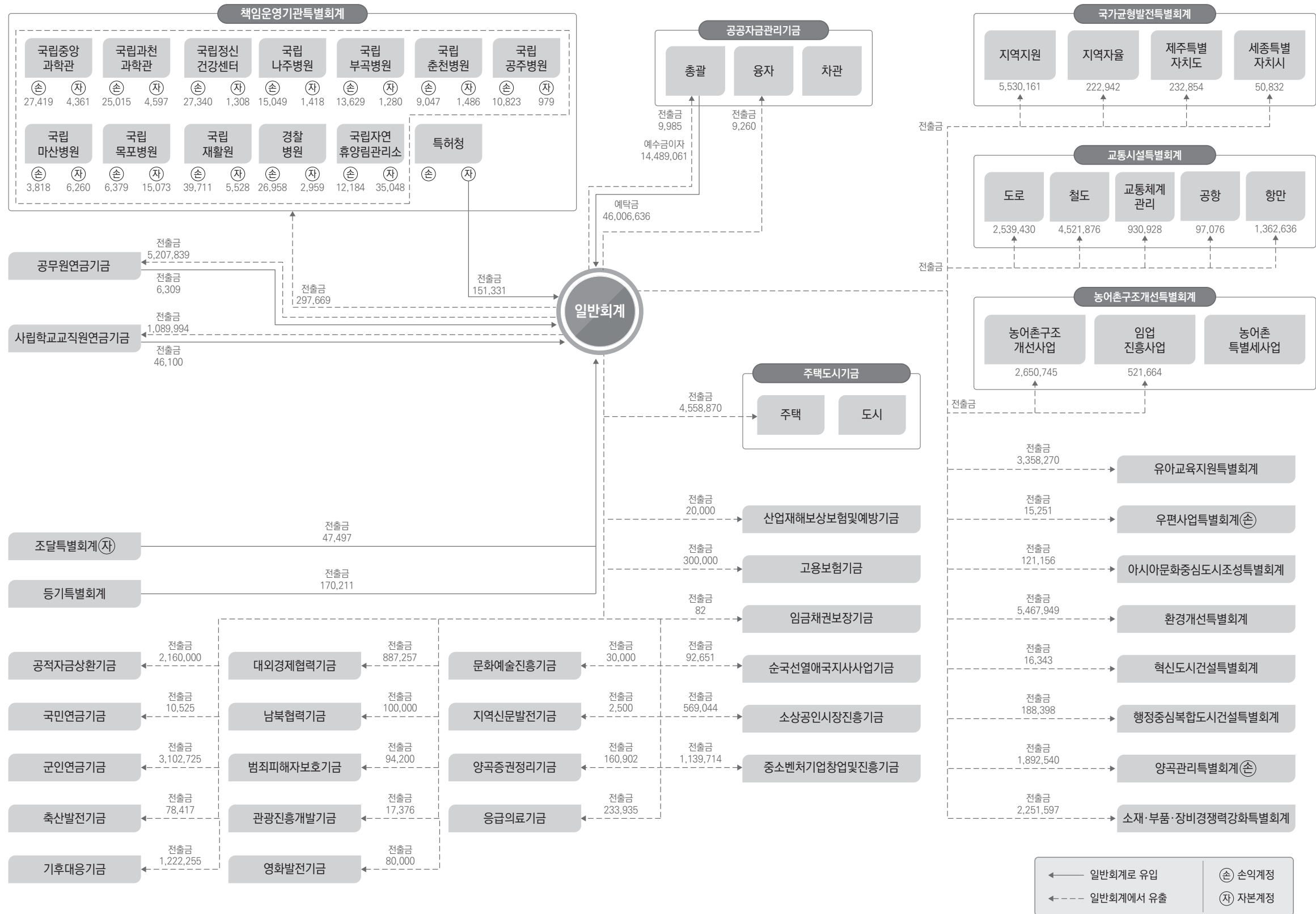
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의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사업은 민간 소형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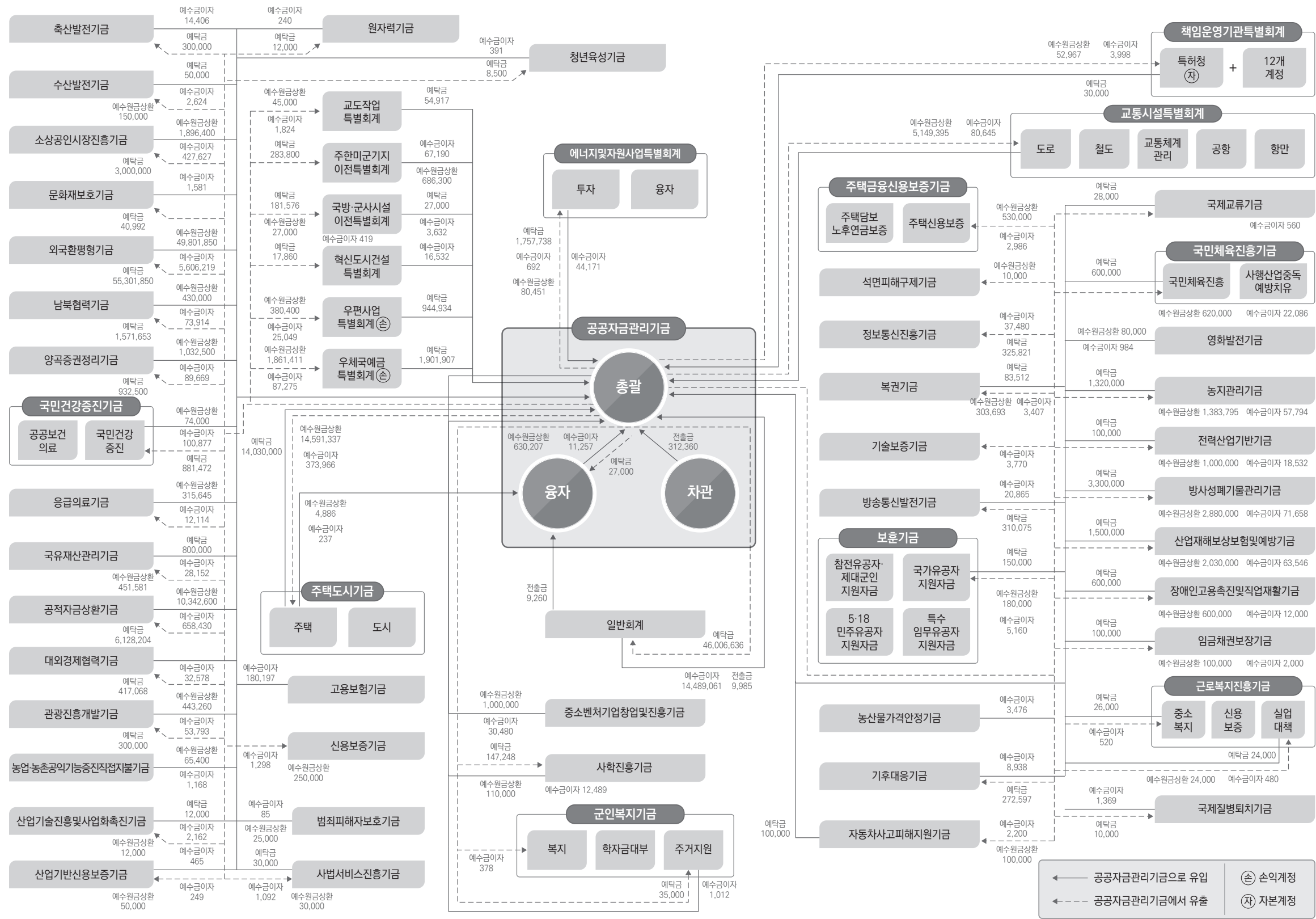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 18억원(설계비, 감리비 및 부대비) 중 7억 5,700만원만을 집행하여 10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2년 현재 예산현액 147억 4,300만원 중 약 1백만원 만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발사장 구축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행위허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기타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어 예산의 이월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3년 예산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인·허가 결과 및 보완사항, 적정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³⁾

43)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L, 2022. 10., p.175~180 참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타 회계·기금 간 거래 흐름도



2022회계연도 공자기금과
타 회계·기금간 거래 흐름도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85-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20-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